

북한의 SDGs 이행 현황 및 지표 분석

최규빈 | 최원근 | 김형렬 | 문경연 | 윤인주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북한의 SDGs 이행 현황 및 지표 분석

연구책임자

최규빈(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최원근(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형렬(서울대학교 교수)

문경연(전북대학교 교수)

윤인주(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연구지원

윤훈희(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KINU

북한의 SDGs 이행 현황 및 지표 분석

통일준비 및 북한사회개발 이슈와 연계된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행 지표개발 및 역량 구축(2/3년차)

KINU 연구총서 22-04

| | |
|--------|---|
| 발행일 | 2022년 12월 30일 |
| 저자 | 최규빈, 최원근, 김형렬, 문경연, 윤인주 |
| 발행인 | 고유환 |
| 발행처 | 통일연구원 |
| 편집인 | 인도협력연구실장 |
| 등록 | 제2-02361호 (97.4.23) |
| 주소 |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
| 전화 |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6 |
| 홈페이지 | https://www.kinu.or.kr |
| 기획·디자인 | 주디자인여백플러스(02-2672-1535) |
| 인쇄처 | 주디자인여백플러스(02-2672-1535) |
| ISBN | 979-11-6589-098-8 93340 |
| 가격 | 16,000원 |

© 통일연구원, 2022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북한의 SDGs 이행 현황 및 지표 분석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Contents 차례

요약 17

Chapter I

서론 25

- 1. 연구 목적 27
- 2. 문제 제기 31
- 3. 연구 방법 및 내용 36

Chapter II

북한의 SDGs 수용과 이행 현황 41

- 1.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43
- 2. 북한 VNR의 특성과 SDGs 세부목표 및 지표 수용 현황 72
- 3. 북한의 SDGs 이행: 글로벌 개발의제의 지역화 87

Chapter III

분야별 SDGs 지표 현황 분석 91

- 1. 인간과 사회발전 분야 93
- 2. 번영과 경제발전 분야 194
- 3. 환경과 생태계 분야 214

Chapter IV

북한의 VNR 분석을 통한 SDGs 지표역량강화 방안 모색 — 261

- 1. 북한 VNR 추진의 함의 ————— 265
- 2. 북한 VNR 지표 종합 분석 ————— 277
- 3. 북한 VNR 지표역량강화 우선순위 도출 ————— 287
- 4. 소결 ————— 326

Chapter V

결론 ————— 329

- 1. 요약 ————— 331
- 2. 정책적 시사점 ————— 338

참고문헌 ————— 355

최근 발간자료 안내 ————— 369

| | |
|---|-----|
| 〈표 II-1〉 2030 의제 및 SDGs에 대한 북한의 입장 | 54 |
| 〈표 II-2〉 북한의 주요 부문별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 제시 | 57 |
| 〈표 II-3〉 북한의 SDGs 이행 및 VNR 준비 관련 국제회의 | 59 |
| 〈표 II-4〉 VNR 참여국 연도별 현황(2016~2022) | 73 |
| 〈표 II-5〉 SDGs와 NDGs의 내부 연계 | 76 |
| 〈표 II-6〉 유엔과 북한의 SDGs 세부목표 및 지표 수용 비교 | 80 |
| 〈표 II-7〉 북한 SDGs 데이터 가용도 | 83 |
| 〈표 II-8〉 북한 SDGs 데이터 가용도 범주화 | 84 |
| 〈표 III-1〉 SDG 1 세부목표와 지표 | 95 |
| 〈표 III-2〉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SDG 1 지표 수집 가능성 | 97 |
| 〈표 III-3〉 SDG 1 지표 현황 및 관리기구와 북한의 지표 보유 현황 | 99 |
| 〈표 III-4〉 K-SDG 1 세부목표와 지표 | 101 |
| 〈표 III-5〉 유엔과 북한의 SDG 1 비교 | 102 |
| 〈표 III-6〉 북한의 VNR에서 제시된 SDG 1 지표 현황 | 106 |
| 〈표 III-7〉 북한의 SDG 1 수용 현황 | 108 |
| 〈표 III-8〉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주요 자연재해 및 피해 (2012~2021) | 111 |
| 〈표 III-9〉 북한과 유사한 1인당 GDP 국가들의 빈곤율 | 114 |
| 〈표 III-10〉 SDG 3 세부목표와 지표 | 116 |
| 〈표 III-11〉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SDG 3 지표 수집 가능성 | 118 |
| 〈표 III-12〉 SDG 3 지표 현황 및 관리기구와 북한의 지표 보유 현황 | 120 |
| 〈표 III-13〉 K-SDG 3 목표, 세부목표 및 지표 | 123 |
| 〈표 III-14〉 유엔과 북한의 SDG 3 비교 | 124 |
| 〈표 III-15〉 북한의 SDG 3 지표별 달성 현황 | 128 |

| | |
|---|-----|
| 〈표 III-16〉 북한의 VNR에서 제시된 SDG 3 지표 현황 | 128 |
| 〈표 III-17〉 북한의 SDG 3 수용 현황 | 132 |
| 〈표 III-18〉 SDG 4의 세부목표와 지표 | 138 |
| 〈표 III-19〉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SDG 4 지표 수집 가능성 | 141 |
| 〈표 III-20〉 아시아태평양 지역 SDG 4 이행지표의 목표(2021년) | 141 |
| 〈표 III-21〉 SDG 4 지표 현황 및 관리기구와 북한의 지표 보유 현황 | 143 |
| 〈표 III-22〉 K-SDG 4 세부목표와 지표 | 146 |
| 〈표 III-23〉 북한의 국가발전목표(NDGs)와 SDG 4 | 151 |
| 〈표 III-24〉 유엔과 북한의 SDG 4 비교 | 153 |
| 〈표 III-25〉 북한의 SDG 4 세부목표와 소관기관 | 155 |
| 〈표 III-26〉 북한의 SDG 4 이행 우선순위와 계획 | 156 |
| 〈표 III-27〉 북한의 SDG 4 지표 현황과 추세 | 157 |
| 〈표 III-28〉 북한의 VNR에서 제시된 SDG 4 지표 현황 | 158 |
| 〈표 III-29〉 북한의 SDG 4 수용 현황 | 160 |
| 〈표 III-30〉 북한의 SDG 4 지표 미공개·부재 보완 방향 | 167 |
| 〈표 III-31〉 SDG 5의 세부목표 및 지표 | 169 |
| 〈표 III-32〉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SDG 5 지표 수집 가능성 | 171 |
| 〈표 III-33〉 아시아태평양 지역 SDG 5 지표의 목표(2021년) | 172 |
| 〈표 III-34〉 SDG 5 지표 현황 및 관리기구와 북한의 지표 보유 현황 | 173 |
| 〈표 III-35〉 K-SDG 5 세부목표와 지표 | 176 |
| 〈표 III-36〉 유엔과 북한의 SDG 5 비교 | 181 |
| 〈표 III-37〉 북한의 SDG 5 세부목표와 소관기관 | 183 |
| 〈표 III-38〉 북한의 SDG 5 이행 우선순위와 계획 | 184 |
| 〈표 III-39〉 북한의 SDG 5 지표 현황과 추세 | 185 |
| 〈표 III-40〉 북한의 VNR에서 제시된 SDG 5 지표 현황 | 186 |
| 〈표 III-41〉 북한의 SDG 5 수용 현황 | 187 |

| | |
|--|-----|
| 〈표 III-42〉 북한의 SDG 5 지표 미공개·부재 보완 방향 | 193 |
| 〈표 III-43〉 SDG 10의 세부목표 및 지표 | 195 |
| 〈표 III-44〉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SDG 10 지표 수집 가능성 | 198 |
| 〈표 III-45〉 아시아태평양 지역 SDG 10 지표의 목표(2021년) | 199 |
| 〈표 III-46〉 SDG 10 지표 현황 및 관리기구와 북한의 지표 보유 현황 | 199 |
| 〈표 III-47〉 K-SDG 10 세부목표와 지표 | 202 |
| 〈표 III-48〉 유엔과 북한의 SDG 10 비교 | 205 |
| 〈표 III-49〉 북한의 SDG 10 세부목표와 소관기관 | 206 |
| 〈표 III-50〉 북한의 SDG 10 이행 우선순위와 계획 | 207 |
| 〈표 III-51〉 북한의 SDG 10 지표 현황과 추세 | 208 |
| 〈표 III-52〉 북한의 VNR에서 제시된 SDG 10 지표 현황 | 208 |
| 〈표 III-53〉 북한 SDG 10 수용 현황 | 209 |
| 〈표 III-54〉 북한의 SDG 10 지표 미공개·부재 보완 방향 | 214 |
| 〈표 III-55〉 SDG 6 세부목표와 지표 | 216 |
| 〈표 III-56〉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SDG 6 지표 수집 가능성 | 217 |
| 〈표 III-57〉 SDG 6 지표 현황 및 관리기구와 북한의 지표 보유 현황 | 219 |
| 〈표 III-58〉 K-SDG 6 목표, 세부목표 및 지표 | 221 |
| 〈표 III-59〉 유엔과 북한의 SDG 6 비교 | 222 |
| 〈표 III-60〉 북한의 SDG 6 지표별 달성 현황 | 224 |
| 〈표 III-61〉 북한의 VNR에서 제시된 SDG 6 지표 현황 | 225 |
| 〈표 III-62〉 안전한 식수/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위생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2017년) | 226 |
| 〈표 III-63〉 북한의 SDG 6 수용 현황 | 228 |
| 〈표 III-64〉 SDG 14 세부목표와 지표 | 232 |
| 〈표 III-65〉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SDG 14 이행지표 수집 가능성 | 235 |
| 〈표 III-66〉 아시아태평양 지역 SDG 14 이행지표의 목표(2021년) | 236 |

| | |
|--|-----|
| 〈표 III-67〉 SDG 14 지표 현황 및 관리기구와 북한의 지표 보유 현황 | 237 |
| 〈표 III-68〉 K-SDG 14 세부목표와 이행지표 | 240 |
| 〈표 III-69〉 북한의 SDG 14 세부목표와 소관기관 | 241 |
| 〈표 III-70〉 북한의 NDGs와 SDG 14 | 242 |
| 〈표 III-71〉 북한의 SDG 14 이행 우선순위와 계획 | 243 |
| 〈표 III-72〉 북한의 SDG 14 지표 현황과 추세 | 245 |
| 〈표 III-73〉 북한이 발표한 SDG 14 지표 현황 | 246 |
| 〈표 III-74〉 북한의 해양생태계 관련 보호구역 현황 | 246 |
| 〈표 III-75〉 북한의 람사르 습지 지정 현황(2018년) | 247 |
| 〈표 III-76〉 북한의 최근 대규모 간척 추진 현황 | 248 |
| 〈표 III-77〉 북한의 SDG 14 수용 현황 | 254 |
| 〈표 III-78〉 북한의 SDG 14 지표 미공개·부재 보완 방향 | 260 |
| 〈표 IV-1〉 NDGs 주요 목표와 SDGs 목표 연계 | 267 |
| 〈표 IV-2〉 SDGs 목표별 NDGs 연계 | 267 |
| 〈표 IV-3〉 북한의 SDG 2~16 지표별 주요과제 | 273 |
| 〈표 IV-4〉 HLPF 2021 연례주제 및 중점 SDGs | 276 |
| 〈표 IV-5〉 SDSN MCR 평가목표 및 HLPF 중점목표 대비 국별 VNR 우선목표 일치성 | 276 |
| 〈표 IV-6〉 북한 SDG 지표 신뢰성 및 지속성 평가 | 280 |
| 〈표 IV-7〉 북한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우선 중점분야 | 287 |
| 〈표 IV-8〉 식량안보 측면에서 추가 역량강화 필요 지표 | 290 |
| 〈표 IV-9〉 재난위기관리 측면에서 추가 역량강화 필요 지표 | 292 |
| 〈표 IV-10〉 인권 측면에서 추가 역량강화 필요 지표 | 294 |
| 〈표 IV-11〉 빈곤 측면에서 수립 및 측정 필요 지표 | 295 |
| 〈표 IV-12〉 식량안보 측면에서 수립 및 측정 필요 지표 | 297 |
| 〈표 IV-13〉 재난위기관리 측면에서 수립 및 측정 필요 지표 | 297 |

| | |
|--|-----|
| 〈표 IV-14〉 인권 측면에서 수립 및 측정 필요 지표 | 298 |
| 〈표 IV-15〉 농업 측면에서 추가 역량강화 필요 지표 | 303 |
| 〈표 IV-16〉 공중보건 측면에서 추가 역량강화 필요 지표 | 304 |
| 〈표 IV-17〉 깨끗한 물과 위생 측면에서 추가 역량강화 필요 지표 | 308 |
| 〈표 IV-18〉 에너지 측면에서 추가 역량강화 필요 지표 | 309 |
| 〈표 IV-19〉 인프라 측면에서 추가 역량강화 필요 지표 | 310 |
| 〈표 IV-20〉 환경 측면에서 추가 역량강화 필요 지표 | 312 |
| 〈표 IV-21〉 농업 측면에서 수립 및 측정 필요 지표 | 315 |
| 〈표 IV-22〉 공중보건 측면에서 수립 및 측정 필요 지표 | 316 |
| 〈표 IV-23〉 깨끗한 물과 위생 측면에서 수립 및 측정 필요 지표 | 318 |
| 〈표 IV-24〉 에너지 측면에서 수립 및 측정 필요 지표 | 320 |
| 〈표 IV-25〉 인프라 측면에서 수립 및 측정 필요 지표 | 321 |
| 〈표 IV-26〉 환경 측면에서 수립 및 측정 필요 지표 | 322 |

Figures

그림 차례

| | |
|--|-----|
| 〈그림 I-1〉 연구추진체계도(2021~2023) | 39 |
| 〈그림 II-1〉 세계 및 권역별 SDGs 데이터 가용도 | 85 |
| 〈그림 II-2〉 북한 SDGs 지표 가용도 | 86 |
| 〈그림 II-3〉 SDG별 북한의 지표 가용도, 2021 | 87 |
| 〈그림 III-1〉 북한 동해 수역 입어 제3국 어선의 조업 현황 | 250 |
| 〈그림 IV-1〉 북한의 SDG 목표 이행 현황 | 272 |

약어표

| | | |
|-----------|---|----------------------|
| CBD | Convention on Biodiversity | 생물다양성협약 |
| CEDAW |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
| CRPD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장애인 권리협약 |
| CSD |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 |
| DESA/FFDO | DESA Financing for Development Office | 개발재무실 |
| DRM | Disaster Risk Management | 재난위험대응 |
| ECOSOC | Economic and Social Council | 유엔경제사회이사회 |
| FAO | 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 유엔식량농업기구 |
| 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 | 외국인직접투자 |
| GAVI | 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zation | 세계백신면역연합 |
| GDP | Gross Domestic Product | 국내총생산 |
| GFS | gravity fed water supply system | 중력식 급수 시스템 |
| GNI | Gross National Income | 국민총소득 |
| HLPF | High-Level Political Forum | 고위급정치포럼 |
| HPC | Humanitarian Programme Cycle | 인도주의 사업주기 |
| HRP | Humanitarian Response Plans | 인도적 대응계획 |
| IAEG-SDGs | Inter-Agency and Expert Groups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dicators | SDG 지표 관계기관 전문가그룹 |
| IASC |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 인도적 지원기관 간 상임위원회 |
| ICAO |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국제민간항공기구 |
| ICM | Integrated Coastal Management | 연안통합관리계획 |
| IHR |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 국제보건규정 |
| ILO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국제노동기구 |

| | | |
|--------|--|----------------------|
| IMF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국제통화기금 |
| IMO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국제해사기구 |
| IOM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 국제이주기구 |
| IRENA |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 국제재생에너지기구 |
| ITU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국제전기통신연합 |
| IUCN |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 국제자연보전연맹 |
| IUU |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 불법·비보고·비규제 |
| IWRM |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 통합수자원관리 |
| MDGs |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 새천년개발목표 |
| NDGs | National Development Goals | 국가발전목표 |
| NPT |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 핵확산금지조약 |
| NTF | National Task For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국가테스크포스 |
| OCHA |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 |
| 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공적개발원조 |
| OECD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경제협력개발기구 |
| OHCHR |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
| OHI | Ocean Health Index | 해양건강성지수 |
| PEMSEA | Partnerships in Environmental Management for the Seas of East Asia | 동아시아해역환경관리 협력기구 |
| PIACC | 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 국제성인역량조사 |
| PISA |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 국제학생성취도 평가 |
| 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지속가능발전목표 |
| SDR |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 지속가능발전보고서 |
| SDSN |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 지속가능발전해법 네트워크 |

| | | |
|------------|---|------------------------|
| TC | Technical Committee | 기술위원회 |
| TIMSS | 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 |
| UNAIDS |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 유엔에이즈계획 |
| UNCCA | UN Common Country Analysis | 공동 국가 분석 |
| UNCED |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유엔환경개발회의 |
| UNCSD |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 유엔지속가능한 발전 정상회의 |
| UNCT | United Nations Country Team | 유엔국가팀 |
| UNDAF | United Nations Development Assistance Framework | 유엔개발지원프레임워크 |
| UN DESA |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 유엔경제사회국 |
| UN DOALOS | United Nations 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 유엔해양법국 |
| UNDP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 유엔개발계획 |
| UNDRR |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 |
| UNDS | United Nations Development System | 유엔개발시스템 |
| UNECE |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 유엔유럽경제위원회 |
| UNEP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 유엔환경계획 |
| UNEP-WCMC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World Conservation Monitoring Centre | 유엔환경계획 세계보전감시센터 |
| UN ESCAP |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 유엔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 |
| UNESCO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
| UNESCO-IHP | UNESCO International Hydrological Program | 유네스코 정부 간 수문프로그램 |

| | | |
|--------------|--|------------------|
| UNESCO-UIS |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 유네스코 통계국 |
| UN FCCC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유엔기후변화협약 |
| UNFPA |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 유엔인구기금 |
| UN - Habitat |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 유엔인간정주계획 |
| UNHCR |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 유엔난민기구 |
| UNICEF |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 | 유엔아동기금 |
| UNIDO |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
| UNODC |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 유엔마약범죄사무소 |
| UNSC | 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 | 유엔통계위원회 |
| UNSD |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 유엔통계국 |
| UNSDCF |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Cooperation Framework | 유엔지속가능발전 협력프레임워크 |
| UNSDG |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roup | 유엔지속가능발전그룹 |
| UNSF | United Nations Strategic Framework | 유엔전략계획 |
| UNSIAP | United Nations Statistical Institute for Asia and the Pacific | 유엔아시아태평양 통계연구소 |
| UN Women |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 유엔여성기구 |
| UNWTO | United Nations World Tourism Organization | 유엔세계관광기구 |
| VNR | Voluntary National Review | 자발적국가검토 |
| WFP | World Food Programme | 세계식량계획 |
| WHO | World Health Organization | 세계보건기구 |
| WSSD |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 |
| WTO | World Trade Organization | 세계무역기구 |



북한의 SDGs 이행 현황 및 지표 분석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동참을 선언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2021년 7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보고한 VNR을 중심으로 북한의 세부목표 및 지표를 검토하는 데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 담론은 경제 성장만으로는 오늘날의 세계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경제 발전, 사회적 발전, 자연의 보호라는 세 가지 중추적 요인이 상호 연계되어 있는 만큼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극단적 빈곤과 기아로부터의 해방, 새천년개발목표 종료에 맞춰 새로운 전환 필요에 따라 국제사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국제사회의 새로운 개발의제로 합의한다.

북한은 2015년 9월 ‘포스트 2015 개발의제’ 동참을 공식화한 이후 국제사회와 다각적인 의사소통을 해왔고 2021년 7월 SDGs 이행에 관한 VNR을 실시함으로써 SDGs의 이행 방향과 체계, 지표 설정 및 이행 현황 등을 공식적으로 보고하였다. 북한의 SDGs의 수용은 국제사회와의 대외관계, 내부의 경제발전전략, 북한 개발협력의 진화에 따른 컨센서스(consensus)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이다. 북한은 다년간의 국제사회와의 교류와 의사소통을 통해 개발 규범에 대한 이해를 넓혀갔고 SDGs가 북한의 경제발전5개년전략(2016~2020) 달성 및 사회주의강국건설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부합하다는 전략적 판단을 갖고 수용하였다. 지속

가능한 발전의 수용과 SDGs의 이행은 유엔 대북사업의 추진을 위해 그동안 북한이 유엔과 협력해 왔던 전략프레임워크에 기반한 과정이자 결과인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북한의 2030 의제 이행은 북한이 국제사회가 합의한 개발의 보편적 접근 방식과 핵심 가치 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동시에 북한식으로 변용하는 일련의 현지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례이다. 올해 2년차 연구에서 주목하는 주요 영역별 평가는 아래와 같다.

인간과 사회발전 분야에서 올해 검토한 목표는 SDG 1 빈곤퇴치, 3 건강과 웰빙, 4 양질의 교육, 5 성평등이다. 북한은 SDG 1 빈곤퇴치를 자체적인 NDG 1 인민생활 수준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수용하였다. 북한은 SDG 1의 13개 지표 가운데 7개를 수용했지만, 빈곤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의나 기준을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은 근본적인 한계로 볼 수 있다. 북한의 VNR 보고서에는 5개의 지표만이 실제 현황이 나타나 있어 북한 당국이 지표의 이행을 위한 실질적 역량과 의지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SDG 3 건강과 웰빙과 관련된 세부목표와 지표들을 성실하게 NDG에 수용하였다. 다만 북한의 보건·의료 현실상 대부분의 자료들이 전산망 등을 통해 취합되는 것이 아니라 인력에 의존하거나 관료적 행정체계를 거쳐 수집되기 때문에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현실이다. SDG 4 양질의 교육과 5 성평등의 경우 유엔 SDGs에서 설정한 지표의 목적과 의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빈번히 확인되기는 하나,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에 맞춘 자료를 제공하고 일부 지표를 채택함으로써 국제사회의 SDG를 이행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또한 북한은 SDG 4와 5의 성과들을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 선전의 측면에서 적극 활용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번영과 경제발전 분야에서는 SDG 10 불평등 완화가 검토되었다. 유엔 SDG 10은 국가 내·국가 간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한 반면 북한은 인민 대중의 권리 및 역할 보장으로 변형하여 수용하였다. 북한의 SDG 10에는

1개의 세부목표와 1개의 세부지표만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유엔 SDG 10의 대다수의 세부목표와 지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북한 사회가 공식적으로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SDG 10에 북한 체제의 국제사회에서의 정당성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향후 SDG 10의 이행지표 관련 데이터를 생산해내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과 생태계 분야에서는 두 개의 목표를 검토하였다. 북한은 SDG 6 깨끗한 물과 위생의 분야에서 한 개의 지표를 추가하고 두 개의 지표를 수정한 점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지표들을 SDG 6의 글로벌 기준에 맞게 수용했다. 다만 북한의 VNR 보고서에서 SDG 6의 실제 이행 현황을 단 두 개의 지표로만 제공하고 있다. 북한이 VNR 보고서에서 실질적인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북한은 VNR 보고서에서 SDG 14를 해안·바다·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으로 정의했고 10개 세부목표 중 여섯 가지를 수용했다. 글로벌 지표 중 북한의 여건에 맞지 않는 지표는 삭제하고 나머지 일부는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에 따라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거나 글로벌 지표가 북한의 실정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해양보호구역의 비율(14.5.1)을 제외하면 데이터가 부재한 상황으로 관련 지표에 관한 정보를 생산할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연구는 SDGs 17개 목표와 세부지표의 신뢰성 및 지속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북한의 VNR과 유엔 SDSN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북한이 제시한 세부지표에서 정확성 제고를 위해 추가적인 역량강화가 필요한 지표 47개와 지속적인 측정을 위해 역량강화가 필요한 지표 63개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북한의 식량안보, 재난위기관리, 인권 증진이 북한의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기존 지표 중 역량강화가 필요한 지표와 함께 새롭게 개발이 필요한 지표들을 선별

하였다. 또한 북한의 NDG와 연계되며 VNR에서 제시된 중점분야인 농업, 건강과 웰빙, 깨끗한 물과 위생, 에너지, 인프라, 환경 분야에서 역량강화가 필요한 지표 및 신규로 개발이 필요한 지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북한에게 SDG 목표와 수립한 지표에 대한 데이터 측정 및 역량강화가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2차년도 연구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다년간의 대북지원 경험 및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ODA 사업을 통해 축적한 경쟁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북한의 발전전략이 국제사회가 함께 합의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긴밀히 연계되도록 다리(bridge builder)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유엔 SDGs 이행이 2030년까지이며, 북한이 자신들의 새로운 경제발전5개년계획(2021~2025)에 SDGs를 긴밀하게 통합한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SDGs는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 차원에서도 유의미한 의제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식의 SDGs’가 보편적 개발의제와 조화될 수 있도록 북한 당국과 더 많은 소통과 대화를 하고 필요한 지식공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데이터의 정확도, 가용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역량강화는 필수적이다. 국내외 사회경제적 위기에 맞물려 북한이 자체적으로 부족한 통계 역량을 제고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표 측정 및 관리를 위한 국제 협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북한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관련 지표 개발과 측정을 요구하는 한편 국제협력을 통해 관련된 지식공유 및 기술협력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요 목표와 관련하여 보다 창의적이며 구체적인 협력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올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북한의 SDGs 이행을 위해서는 ① 빈곤 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② 북한의 의료체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의 개선, ③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교육 관련 지표 추가 확보, ④ 여성의 인권 향상과 역량강화 도모,

⑤ 인프라 재건 및 생태계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 모색, ⑥ 북한 농촌의 낙후성과 도농격차 극복을 위한 남북한 협력 및 공동 관심사를 활용한 지표 설정, ⑦ 해양보호구역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끝으로 한국 정부는 유엔과 북한 간의 차기 전략계획 수립 과정 및 이후 이행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유엔 차원의 대북 사업은 UNCT를 중심으로 북한 당국과의 긴밀한 협의와 합의하에 진행된다. 2023년부터는 새로운 사업 주기가 시작되고 차기 전략계획은 북한의 2030 의제 달성에 있어 중요한 시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대북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지속적인 자연재해 등으로 SDG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에서 SDGs가 정권의 정당성과 지속성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지 아니면 세계적인 불평등, 환경위기, 평화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차원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실현, 지구 보호, 사회적 포용 증진의 방향으로 설정될지는 전적으로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 다만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발전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는 북한의 취약계층이 인권과 자유,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북한 사회가 지속가능한 인간개발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발전목표, 북한 역량강화, 지표, 현지화



Analysis of SDGs Implementation and Indicators in the DPRK

Choi, Gyubin et 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s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the DPRK has expressed its intention to participate in a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o review the DPRK's goals, targets, and indicators based on its July 2021 Voluntary National Review (VNR)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Since officially stating that it would partak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in September 2015, the DPRK has been communicating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various channels. In addition, it provided an official report on its plans and systems for the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establishment of indicators, and SDGs progress by conducting the July 2021 VNR. The DPRK's adoption of the SDGs was a result of a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the DPRK's external relations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ternal economic development

strategies, and a consensus resulting from the evolution of its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ies between the UN and DPRK. This study focuses on that,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2030 Agenda, the DPRK has not only been showing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of the universal approaches toward the core values of development agreed upon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ut has also been localizing them, i.e., transforming them into DPRK-style SDGs. In this study, the reliability and continuity of the DPRK's 17 national SDGs and indicators are evaluated, and the indicators for which additional capacity building is required to improve accuracy are identified. In addition, considering the DPRK's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status, indicators requiring additional refinement and therefore DPRK capacity building are identified to address the urgency of humanitarian assistance and the DPRK's VNR focus areas. Considering that the DPRK has announced its plan to incorporate the SDGs into its 2021~2025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it is expected that achieving the SDGs will be regarded as an important component in the DPRK's development strategies. This study reports on the need for the DPRK to continuously develop and measure the relevant indicators and argues for the necessity of seek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devising various knowledge-sharing and technical assistance measures.

Keywords: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DPRK Capacity Building, Indicators, Localization

I. 서론

최규빈(통일연구원)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서론

1.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동참을 선언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2030 의제)’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2021년 7월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 발전목표) 이행을 보고한 VNR(Voluntary National Review, 자발적 국가검토)을 통해 공개한 세부목표 및 지표를 분석하는 데 있다.

유엔에서 제시한 2030 의제 및 17개의 SDG 목표는 모든 형태와 차원의 빈곤을 종식시키고 사회경제적 포용을 정립하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전 지구적 기획이라 할 수 있다. 국제사회가 이러한 목표를 공동으로 달성하고자 한 노력은 이미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새천년개발 목표)를 통해 시도된 바 있지만, MDGs는 남반구와 북반구의 원조 의제로 대다수의 목표들이 개도국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특히 빈곤 감축 문제에 집중하였다.^{1/} 그렇지만 2030 의제는 보다 더 광범위한

^{1/} Sakiko Fukuda-Parr, “From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hifts in purpose, concept, and politics of global goal setting for development,” *Gender & Development*, vol. 24, no. 1 (2016), pp. 44~45.

목표와 세부목표를 제시하고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 모두가 공동의 행동과 노력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2/}

유엔이 2015년 9월 2030 의제로서 15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공개하였지만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근대의 개발 담론에서 상당기간 중요하게 논의되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1980년대 말 브룬트란트 보고서(the Brundtland Report)로 알려진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논의되면서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기 시작했다.^{3/} 이 보고서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미래세대로 하여금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한다.^{4/}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장 중요한 인식적 토대는 사회와 공동체의 발전이 경제성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며 어떠한 행위라도 경제적이고 사회적이며 환경적인 측면이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5/} 지속가능한 발전은 이제 국제원조기구의 캐치프레이즈이자 개발 및 환경 행동가들의 전문용어가 되었을 뿐 아니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발전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6/}

지속가능한 발전은 바람직한 결정을 내리거나 전략을 조정하기 위해 지리적이고 제도적인 국경을 초월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7/} 빈곤 감축, 불평등 완화, 기후 위기 대응은 한 정부나 특정 지역을 넘어서는

2/ *Ibid.*, pp. 44~47.

3/ Tracey Strange and Anne Bayley, *Sustainable Development: Linking Economy, Society, Environment* (Paris: OECD, 2008), p. 24.

4/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ur Common Future”,” UN Doc. A/42/427 (4 August 1987), p. 54.

5/ *Ibid.*, p. 25.

6/ Justice Mensah, “Sustainable Development: Meaning, History, Principles, Pillars, and Implications for Human Action: Literature Review,” *Cogent Social Sciences*, vol. 5, no. 1 (2019), p. 1.

7/ Tracey Strange and Anne Bayley, *Sustainable Development: Linking Economy, Society, Environment*, p. 26.

도전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해야 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는 규범적인 전망(a normative outlook)을 담게 된다.^{8/} 즉 지속가능한 발전은 사회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목표를 설정하고 전 지구적 차원의 노력을 동원하는 총체적 프레임워크(a holistic framework)의 특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9/} 이런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 사회, 환경 세 가지 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인간, 주거지, 경제체제가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10/} 유사한 맥락에서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는 지적 탐구 차원에서 볼 때 지속가능한 발전 등장에서 세계경제, 글로벌 사회, 지구의 물리적 환경이라는 세 가지 복잡한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음을 지적한다.^{11/}

지속가능한 발전은 지속성(sustainability)에 대한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12/} 지속가능성이 처음 논의된 1980년대에는 제3세계 국가들에서의 부채의 위기, 경제성장 중심 목표가 초래한 환경 부하로 인해 자원 고갈, 환경오염, 종 다양성의 보존이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13/} 개발학 차원에서 지속성을 염두하는 것은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을 위해 경제적으로 건강하고 생태적이며 사회적인 제도를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8/ Jeffrey D. Sachs, *The Age of Sustainable Developmen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5), p. 3.

9/ *Ibid.*

10/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Doc. A/RES/70/1 (25 September 2015), p. 3; Tracey Strange and Anne Bayley, *Sustainable Development: Linking Economy, Society, Environment*, pp. 25~26.

11/ Jeffrey D. Sachs, *The Age of Sustainable Development*, p. 3.

12/ 유엔이 2030 의제에서 지속가능성(sustainable)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 William Easterly, "The SDGs Should Stand for Senseless, Dreamy, Garbled," *Foreign Policy*, September 28, 2015.

13/ Paul B. Thompson and Patricia E. Norris, *Sustainability: What Everyone Needs To Kno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1), p. 15.

의미한다.^{14/} 이는 자본의 축적과 산업화가 발전으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저항이며, 기술의 발전을 통한 경제적 성장으로 사회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근대화 이론을 넘어서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15/} 특히 아마티아 센(Amartya Sen)은 발전이 경제 성장과 낙수 효과(trickle-down effect)에 의한 분배가 아닌 자유의 확장이며 개인의 삶의 실현을 위한 역량의 확대라고 주장한다.^{16/}

나는 발전을 일인당 GNP(국민 총생산) 증대, 산업화 촉진, 기술적 진보, 사회적 현대화 같은 무생명의 편익성을 확대하는 과정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물론 이런 성과는 중요하다-때때로 지극히 중요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이런 성과의 가치는 관련된 사람들의 삶과 자유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선택에 책임을 지는 성인의 경우엔 그 궁극적 초점이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일들을 마땅히 할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맞춰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자유의 확대는 발전의 한 구성 요소다.^{17/}

센은 발전 논의에 있어 성장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의 전환을, 국가안보 개념에서는 포착할 수 없는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문화의 영역의 중요성을, 인간의 결핍과 필요뿐 아니라 인간 삶에서 펼칠 수 있는 역량의 폭을 확대시키는 방식의 중요성을 환기하였다.^{18/} 지속가능한 발전은 유한한 생태계의 한계 내에서 사회경제적 활동이

14/ Justice Mensah, "Sustainable Development: Meaning, History, Principles, Pillars, and Implications for Human Action: Literature Review," p. 5.

15/ *Ibid.*, p. 4.

16/ 아마티아 센 지음, 이상호·이덕재 옮김, 『불평등의 재검토』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9), p. 48.

17/ 아마티아 센 지음, 정미나 옮김, 『세상은 여전히 불평등하다』 (파주: 21세기북스, 2018), pp. 134~135.

18/ 위의 책, pp. 206~210.

세대 내와 세대 간에 효율적이고 공평한 자원 분배가 이루어질 것을 강조한다.^{19/} 이러한 문제 의식하에 발전은 현 세대와 더불어 다음 세대의 필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세대 간’ 개념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으로 폭넓게 수용되었다.^{20/} 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적 지지가 북한 사회 저변에서 포착되고 있는 것인가? 빈곤 탈출과 식량 안보가 여전히 절실하고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경제, 사회, 환경의 연계와 상호의존을 바탕으로 복합적 접근을 지향하는 글로벌 발전 규범은 북한에게 적지 않은 도전과 난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문제 제기

주목되는 점은 북한이 2030 의제 및 SDGs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사를 표명했고 SDGs의 핵심 과정이라 할 수 있는 VNR 프로세스에 2021년 7월 참여해 2030 의제 실행에 대해 보고한 것이다. 사실 북한은 SDGs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의제로 채택되기 이전인 2000년대 초반부터 관련된 국제사회의 주요 논의에 참여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성과 전 지구적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2001년 제56차 유엔총회에서 신선호 북한 대사는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은 과학과 기술에 달려있으며 선진국은 후진국의 발전계획을 지원해야 함을 언급하였고,^{21/} 2011년 제66차 유엔총회에서는 국제

19/ Jeffrey D. Sachs, *The Age of Sustainable Development*, p. 5.

20/ *Ibid.*, p. 5.

21/ UN Doc. A/C.2/56/SR.7 (3 October 2001), pp. 5~6.

협력과 교류가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정하고 공평한 경제관계가 수립되어야 할 것을 역설하였다.^{22/} 2015년 9월 2030 의제가 공식적으로 채택된 ‘포스트 2015 발전의제 채택을 위한 유엔 정상회의(United Nations Summit for the Adoption of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에서 북한은 “세계를 개조, 변혁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반영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2030 의제”를 채택하였음을 분명히 하였다.^{23/}

북한은 지속가능한 발전 및 SDGs의 핵심 원칙과 특성에 대해 나름의 방식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들은 상술한 국제 사회의 주요 논의들과 크게 유리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2016년 5월 UN ESCAP(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유엔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제 72차 총회에서 북한 대표는 경제, 사회, 환경인 지속가능한 발전의 3개의 축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24/} 북한은 같은 해 10월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평양국제토론회를 개최하여 “환경보호가 나라의 경제발전의 지속성을 담보하며 인간의 복리증진과 후대들을 위한 중요한 사업”임을 확인하였다.^{25/} 2017년 5월 제70차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강하국 보건상은 2030 의제는 “우리 세대뿐 아니라 후대들의 유족한 생활을 담보하는 세계를 건설할 것을 공약한 인류공동의 행동강령”임을 밝히기도

22/ UN Doc. A/C.2/66/SR.5 (5 October 2011), p. 4.

23/ “we have adopte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contains more specific goals to reshape and transform the world,” UN Doc. A/70/PV.12 (27 September 2015), p. 5.

24/ UNESCAP, “72nd Session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15 to 19 May 2016, <<https://www.unescap.org/commission/72>> (Accessed June 20, 2022).

25/ “지속적발전에 관한 평양국제토론회 진행,” 『로동신문』, 2016.10.7.

하였다.^{26/}

다만 2000년대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발언한 내용과 2021년 7월 VNR 보고서를 고려해 볼 때 북한 내에서 글로벌 규범의 수용과 변용이 동시에 일어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VNR 보고서에서 북한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SDGs의 기본 원칙과 주요 개념들에 대해서는 수용하면서 유엔의 SDGs를 북한의 NDGs(National Development Goals, 국가발전목표)에 통합시켰다고 밝혔다. 이러한 부분은 이미 예견된 것일 수 있다. 북한은 2030 의제에서 제시된 목표들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정책에 부합된다고 보고 지지를 표명”했기 때문이다.^{27/} 북한의 VNR 보고서는 글로벌 SDGs를 자신들의 법률과 규정에 근거, 북한에 특화된 SDGs (the country specific SDGs)를 수립했음을 명시했다.^{28/} 사회주의 강국건설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도록 유엔 SDGs를 자신들의 NDGs에 연계시켰으며 정부의 우선순위에 따라 95개 세부목표와 132개 지표를 선별하여 구성하였음을 밝혔다. 유엔이 제시한 169개 세부목표와 247개 지표 가운데 세부목표의 56.2%, 지표의 53.2%를 수용한 것이다.

이뿐 아니라 목표 자체를 변형하거나 수정하여 국제사회가 애초에 의도한 목표 설정과는 거리가 있는 부분도 확인된다. 또한 이행 수준을 과시 혹은 과장하거나 한계를 인정하는 점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교육, 보건, 양성평등에 관련한 목표들에 대해서는 ‘오래전

26/ “우리 나라 보건대표단 단장 세계보건기구총회 제70차회의 전원회의에서 연설,” 『로동신문』, 2017.5.27.

27/ “우리 나라 외무상 유엔본부에서 열린 지속개발목표달성에 관한 고위급토론회에서 연설,” 『로동신문』, 2016.4.23.

28/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June, 2021), p. 18,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282482021_VNR_Report_DPRK.pdf> (Accessed June 6, 2022).

달성', '놀라운 진전', '대부분 달성'으로 평가하지만 재해재난이나 낮은 기술 수준에 있어서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인프라의 현대화는 표준(standard) 상태가 아니며, 도농격차가 존재하고, 해양생태계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해양환경 모니터링 관련 지표 측정은 수준에 미치지 못함을 자인하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과연 북한이 제시한 SDG 지표들이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김병연은 VNR 보고서에서 북한이 공개한 경제성장 관련 수치들을 의도적으로 부풀린 것은 아니지만 틀린 통계에 기반한 수치들을 그대로 인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29/} 같은 맥락에서 대북 제재 이후 기간의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누락되어 최근 변화를 추정할 수 있는 통계가 많지 않고 경제 상황 변화를 북한이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함으로 인한 자료의 왜곡 가능성도 존재한다.^{30/}

북한이 최근 통계 역량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제한적이거나 글로벌 기준에 맞는 통계자료를 제공하고자 노력한 점은 긍정적이다. 실제 북한은 당 차원에서 통계사업의 역량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 북한은 2019년 10월 “경제발전실태를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정확히 분석평가 할 수 있게 지표들을 검토하고 더욱 확대하며 통계의 과학성과 객관성, 시기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일원화 통계체제의 우월성을 발양시켜나갈” 것을 환기하였다.^{31/} 또한 2021년

29/ 김병연, “김정은은 북한을 모른다,” 『중앙일보』, 2021.7.2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10138#home>> (검색일: 2022.6.5.).

30/ 최구빈·홍제환, “북한의 SDGs 이행 동향: ‘자발적 국별 리뷰(VNR)’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1-22, 2021.7.20.), <<https://www.kinu.or.kr/pyxis-api/1/digital-files/a0774f72-dded-4c48-aaf9-451f3fdbc200>> (검색일: 2022.6.5.), p. 10.

3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통계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나서는 몇가지 문제》 발표50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에서 새로운 5개년계획 수행을 위해 통계사업 범위 확대, 선진적인 통계 데이터 취합, 계산, 분석 기법을 적극 도입할 것을 강조하였다.^{32/}

그렇지만 통계 수치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공개된 데이터도 많지 않기에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다. 북한이 글로벌 지표를 도입하지 않는 실질적인 이유는 해당 목표에 대한 북한의 상황이 열악하거나 해당 지표의 데이터 수집 역량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33/} 특히 제시하지 않은 지표의 경우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에 따른 의도적 미고려, 북한의 통계 역량으로 인한 자료 및 산출 방안 부재 혹은 불명확, 통계 이용이 가능하나 미공개, 글로벌 지표 적용의 부적합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공개한 지표에 대해서는 정확성 및 수집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공개하지 않은 지표들에 대해서는 이유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들은 국제사회의 보편 의제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북한이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탈’인지 혹은 내재화 과정에서 일어난 불가피한 혹은 자연스러운 ‘통합’인지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SDGs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 윌리엄 이스털리(William Easterly)는 국제사회의 실행계획이 과연 실천을 가져왔는지, 계획자들이라 할 수 있는 주체가 과연 정당한 주체(the right actor)인지, 실행계획으로 SDGs가 유일한 대안인지에 대한 성찰을 요구한다.^{34/} 그의 비판은 계획자의 ‘We’가 아닌 실행자인 ‘They’의 시각이 중요

고전적로작 《사회주의통계사업을개선강화할데 대하여》 발표 20돛 기념보고회 진행, 『로동신문』, 2019.10.22.

32/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경제작전토의심화, 『로동신문』, 2021.1.31.

33/ 김부연, “북한의 SDGs 지표 평가 및 역량강화 방향,”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발표자료, 2022.2.16.).

34/ William Easterly, “The Trouble with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Current History*, vol. 114, no. 775 (2015), pp. 322~324.

함을 일깨운다. 또한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에 매몰되기보다 이들의 ‘자유’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한다.^{35/}

이런 차원에서 SDGs의 연구는 글로벌 계획자와 실천의 주체로서 대상자의 종합적인 시각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담론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계획자의 역할 및 의미를 폄하하지 않으면서 발전의 주체는 국가 혹은 사회이며 이들의 시각과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분명히 할 것은 2030 의제는 자발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 개별 국가의 “정책적 재량과 리더십을 존중”하고 국가 현실, 역량, 발전의 수준이 다름을 인정한다는 점이다.^{36/} 즉 북한이 글로벌 SDGs를 이행하는 ‘북한식’의 방식 자체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원칙과 합의는 북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인식과 SDGs 이행의 실태를 치밀하게 분석할 때 더욱 명료해질 것이다.

3. 연구 방법 및 내용

가. 연구 방법

이 연구는 북한의 SDGs 인식과 VNRs 검토를 위한 질적 연구를 기반으로 하되 다양한 양적 지표와 국제기구가 공개한 수치와 통계 자료들을 적극 활용한다. 북한이라는 대상은 평화공존과 협력의 대상이면서도 통일과 통합 과정의 대상이기도 하다. 북한을 바라보고

^{35/} *Ibid.*, p. 324.

^{36/}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Doc. A/RES/70/1 (25 September 2015), p. 27, p. 31.

분석하는 시각에는 다양한 인식의 편차가 있어 왔고 이는 북한 연구 방법론의 논쟁과도 결부되어 있다.^{37/}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북한 사회를 자신들의 설정한 이념과 논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 으로부터의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내재적 접근과 글로벌 발전 담론의 보편적 특성을 바탕으로 ‘밖’에서 들여다보는 외재적 접근 모두가 필요하다고 전제한다.^{38/} 이런 측면에서 이 연구는 여전히 논쟁적이지만 글로벌 발전 규범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외생적 환경과 이를 국가 단위에서 수용하며 현지화하고 있는 한 대상으로서의 북한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와 긴장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북한이 지속가능한 발전 담론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북한의 주요 법령, 노동신문 등을 활용하고 북한이 유엔총회를 비롯해 다자기구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한 연설과 성명(statement)을 검토한다. 또한 개별 SDGs를 검토함에 있어 북한의 내부 제도와 정책, 실태 등을 분석한 2차 자료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의 SDGs의 이행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양적 지표(quantitative indicators)를 검토한다. 이 같은 작업은 북한이 SDGs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다양한 세부목표와 지표의 신뢰성 및 수집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글로벌 시각에서 객관적인 검토 과정이 수반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유엔 차원의 공식 보고서(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Report, Asia and the

37/ 최원규, “북한연구방법론 논쟁에 대한 성찰적 접근,”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북한연구방법론』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3), p. 10.

38/ 여기서는 내재적 접근과 외재적 접근을 이분법적으로 인식하거나 ‘방법론’ 차원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접근태도’라는 입장에서 검토함을 밝힌다. 고유환, “북한연구방법론의 쟁점과 과제,” 『통일과 평화』, 제11집 1호 (2019), p. 11.

Pacific SDG Progress Report)와 기타 공신력을 갖고 있는 보고서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북한을 포함하여 기타 개별 국가의 VNR 보고서를 검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지표, 북한의 VNR 보고서에서 공개한 지표, 한국의 K-SDGs의 지표들을 살펴보고 해당 지표에 대한 유사성과 차이점을 확인한다.^{39/}

끝으로 이 연구는 단일 사례연구(the single case study)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및 유엔 기구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북한 SDGs 사례가 보여주는 특징을 글로벌 차원의 보편적 맥락과 연계 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나. 연구 범위와 내용

이 연구는 ‘통일준비 및 북한사회개발 이슈와 연계된 SDGs 이행 지표개발 및 역량 구축’이라는 주제로 3년 동안 진행되는 연구에서 2년차 연구이다. 1년차에서는 SDGs 목표 분야를 ① 인간과 사회 발전, ② 번영과 경제발전, ③ 환경과 생태계, ④ 평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네 가지로 구분하여 각 영역에 해당하는 10개의 SDGs 목표에 대한 소개와 북한의 지표 현황을 검토하였다. 2021년 1차 년도에서 검토한 목표는 SDG 2 기아종식, SDG 8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SDG 9 사회기반시설, 산업화 및 혁신, SDG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SDG 7 모두를 위한 에너지 보장, SDG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SDG 13 기후변화 대응, SDG 15 육상생태계, SDG 16 평화, 정의와 제도, SDG 17 글로벌 파트너십이었다.

2차년도에서는 1차년도에서 검토되지 못했던 나머지 SDG 7개 목표에 대한 현황과 북한이 VNR 보고서에서 공개한 세부목표 및

39/ 정부(환경부)는 제4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2021~2040)을 수립하고 K-SDGs (2020)를 마련하여 17개 목표, 119개 세부목표, 236개 지표를 확정함.

지표들을 분석하고 전체 목표 및 세부지표에 대한 신뢰성과 지속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3차년도에는 1~2차년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인도적 위기 극복과 개발협력을 위해 SDGs 이행 차원에서 필요한 역량강화 방안을 도출하고 SDGs 기반의 국제·남북 협력 계획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1-1 연구추진체계도(2021~2023)



출처: 저자 작성.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Ⅱ장에서는 북한의 SDGs 이행 현황을 검토한다. 북한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해 왔는지, 그리고 SDGs 세부목표와 지표의 수용 현황은 어떠한지를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 VNR의 특성을 도출하고 SDGs 세부목표 및 지표의 수용과 변용을 확인하고 지표의 가용 현황을 진단한다.

제Ⅲ장은 분야별 SDGs 지표 현황을 분석한다. 2022년 2차년도에는 SDG 1 빈곤퇴치, SDG 3 건강과 웰빙, SDG 4 양질의 교육, SDG 5 성평등, SDG 6 깨끗한 물과 위생, SDG 10 불평등 완화, SDG 14 해양생태계 7개 목표에 대한 지표 현황 분석을 진행한다. 2022년 2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년도 연구 틀을 유지하되, 7개 목표와 지표를

분석하여 총 17개 목표와 지표에 대한 실태 파악을 완료하고자 한다.

제IV장은 북한의 VNR 분석을 통해 SDGs 지표역량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1차년도와 2차년도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전체 17개 목표에 대해 측정역량강화가 필요한 지표를 총괄적으로 검토한다. 북한의 경제 및 사회발전 상황을 고려하여 인도주의적 지원의 시급성과 북한의 VNR 중점분야 해결을 위해 추가 역량강화 및 개발이 필요한 지표들을 선별한다.

끝으로 제V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지표 현황, 지표역량강화 방안을 종합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북한이 차기 VNR을 할 수 있고 2030년까지 2030 의제를 계속 이행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 정부 및 국제사회의 협력 방향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II. 북한의 SDGs 수용과 이행 현황

최규빈(통일연구원)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북한의 SDGs 수용과 이행 현황

1.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적 논의

2015년 9월 27일 ‘포스트 2015 발전의제 채택을 위한 유엔정상회의 (United Nations Summit for the Adoption of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에서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은 다음과 같이 발언한다.

유엔창립 70돐을 맞는 시기에 광범한 유엔성원국들의 의사와 념원을 반영한 《2015년 이후 개발의정》이 채택된 것은 유엔 력사에서 의의 있는 일이다. 이번에 채택한 《2015년 이후 개발의정》은 세계적 범위에서 빈궁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개발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 사회가 기울여온 끊임없는 노력의 산물이다.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 평등호혜적인 경제협조와 협력을 활발히 해나갈 것이며 《2015년 이후 개발의정》의 실현을 위한 국제적인 흐름에 적극 합류 해나갈 것이다.^{40/}

40/ “우리 나라 대표단 단장 《2015년 이후 개발의정》 채택을 위한 유엔수뇌자회의에서 연설,” 『로동신문』, 2015.9.30.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가 함께 약속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주류 담론을 수용하고 2023 의제를 이행할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그동안 북한이 자국에 유엔 상주기관의 활동을 허가하고 다양한 국제기구들과 협력을 추진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글로벌 보편 의제에 적극적인 동참을 선언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고수하면서도 핵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해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 SDGs를 이행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 새로운 접근과 파트너십을 모색할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과연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규범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냐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결부된다고 볼 수 있다.^{41/} 지속가능성이라는 용어가 근래에 들어 환경학, 생태학, 개발학, 사회학, 정치학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이는 나름 역사적 논의 과정을 가지고 있다.

지속가능성은 일찍이 토마스 기어린(Thomas Gieryn)이 언급했던, 과학이 정치를 만나고 정치가 과학을 만난다는 일종의 경계 용어(boundary term)로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42/} 스쿠네스(Scoones)

41/ 이에 대한 논의는 현재 진행형이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속가능성은 상호 간에 깊은 연관성이 있지만 개념의 주조와 활용은 차이가 있다고 판단한다. 지속가능 발전 담론의 형성과 변화에 해서는 손혁상, “지속가능발전 담론: 형성, 역사적 변화와 다양한 시각,” 박지연 외, 『북한개발협력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서울: 오름, 2020), pp. 21~47을 참고할 것.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에 대한 논의로는 김판석·사득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해와 개념정립,” 『한국정치학회보』, 제32권 4호 (1998), pp. 71~88; 정영근·장민수,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논의 전개,” 『한국동서경제연구』, 제19집 1권 (2007), pp. 143~164; 김미자,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의 현실화를 위한 일고(一考),” 『21세기정치학회보』, 제15권 2호 (2005), pp. 288~307 등을 참고할 것.

42/ Thomas Gieryn, *Cultural Boundaries of Science: Credibility on the Line*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99), pp. 25~35; Ian Scoones, “Sustainability,” *Development in Practice*, vol. 17, no. 4~5 (2007), p. 589.

에 의하면 지속가능성(nachhaltigkeit in German)이라는 용어는 독일의 산림학자 칼로위츠(Hans Carl von Carlowitz)가 1712년에 발간한 『Sylvicultura Oeconomica』에서 숲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처방하면서 처음 사용했다.^{43/} 또한 맬서스(Thomas Robert Malthus)는 1798년 그의 『인구론(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을 통해 산업혁명 시기 억제되지 않은 인구증가가 식량 수요를 압도하게 될 것을 예측하여 인구, 자원, 환경, 성장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키는 데 기여한다.^{44/}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은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에 한정되기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논의되어왔다. 톰슨(Paul Thompson)과 노리스(Patricia Norris)는 정치학자들이 국가(a state) 혹은 정치체제(political regime)의 지속성의 문제를 독일의 산림학보다 훨씬 이전부터 논의해왔다는 점을 지적한다.^{45/} 환경보호의 이익을 위해 경제 발전을 제한하고자 하는 세계적 계획을 빈곤국이 거부함으로써 지속성은 국제정치的主要 모토가 되기도 하였다.^{46/}

개발학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지구 생태계를 고려하는 자연자원의 사용이나 자연 수용력을 고려한 경제성장의 차원을 넘어 인간의 핵심적 필요(crucial human needs)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

43/ Ian Scoones, *Ibid.*, p. 590; Jacobus A. Du Pisani, "Sustainable Development - Historical Roots of the Concept," *Environmental Sciences*, vol. 3, no. 2 (2006), p. 85. 하지만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이 칼로위츠의 독자적 발견이라기보다 당시 유럽의 산림학 및 산림정책과 더불어 다른 연구자들의 사유의 수용 등의 결과라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화임, "지속가능성(Nachhaltigkeit) 개념의 형성사: 18세기 독일 산림학 이론과 실제에서의 의미내용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제72권 1호 (2015), pp. 453~478.

44/ Thomas Malthus, *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London: J. Johnson, 1798).

45/ Paul B. Thompson and Patricia E. Norris, *Sustainability: What Everyone Needs to Know*, p. 13.

46/ *Ibid.*, p. 4.

하다는 소위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진화된다. 18세기 산업혁명 시기를 통해 “인간의 진보가 곧 경제성장과 물질적 진전”이라는 관점이 경제학의 기본 인식을 형성해왔다는 점에서 환경 보호와 인간의 웰빙을 고려한 발전 논의는 새로운 관점을 요구하는 것이었다.^{47/} 1970년대 들어 전 세계적으로 대외원조가 8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개발을 위한 원조는 부유국과 빈곤국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공통 요인이 되었다.^{48/} 1980년대는 시장과 경제자유주의, 정부 주도의 개입주의에 기반한 근대화 방식의 개발주의에 대한 반성이 본격화된 시기이다. 그렇지만 1980년대는 소위 개발이론과 원조정책의 위기의 시대였다. 원조가 성장과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함과 동시에 많은 경우 발전을 저해하기도 했기 때문이다.^{49/} 상당한 원조가 국가 정책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가치는 일률적인 개발 프로젝트로 인해 훼손되며 개발 과정에서 대상국들의 문화유산 및 환경 파괴는 보다 빈번해진 것이 현실이었다.^{50/} 달리 말하자면 원조의 낙관주의와 확대가 이루어진 1970년대는 역설적으로 “경제성장이 세계적 불평등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51/}

이러한 문제인식 가운데 개발의 초점이 단순히 소득의 증가나 부의 낙수효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 필요(basic needs)와 역량(capacity)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1980년대 들어

47/ Jacobus A. Du Pisani, “Sustainable Development - Historical Roots of the Concept,” p. 84.

48/ Carol Lancaster, *Foreign Aid: Diplomacy, Development, Domestic Polit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7), p. 33.

49/ Ian Goldin, *Development: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p. 70.

50/ Aram Ziai, *Development Discourse and Global History* (London: Routledge, 2015), p. 156.

51/ 손혁상, “지속가능발전 담론: 형성, 역사적 변화와 다양한 시각,” p. 31.

본격화되었다. 물론 빈곤국 개발에 있어 탑다운(top-down) 혹은 빅뱅(big-bang) 방식의 구조개혁 도입이 선호되고 경제적 자유주의 원칙에 기반한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이 1980년 말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강화되어온 것은 사실이다.^{52/} 이러한 발전 방식은 학문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서방의 자유주의 모델에 근거하여 원조, 자본, 기술 이전을 포함한 위로부터의 경제개혁을 지지하는 제프리 삭스와 근대화 이론 및 계몽주의적 세계관을 비판하며 사람 중심의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이고 참여적 변화를 강조하는 윌리엄 이스털리의 논쟁이 대표적이다.^{53/}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저조한 경제성장률을 지속하고 있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이미 선진국이 된 국가나 국제개발정책 주도세력들이 처방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 개혁이 과연 대상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했는지에 대해 비판적인 논의가 제기된 점이다. 대표적으로 장하준은 소위 개도국에 적용되거나 심지어 강요된 ‘바람직한(good) 정책(자유무역, 자유방임주의적 산업·무역·기술 정책 등)’이 유용하지 않았으며, 현재 ‘바람직하지 않은(bad)’ 것으로 여겨진 정책과 제도들은 선진국이 과거에 사용했던 정책과 큰 차이가 없었음을 비판한다.^{54/} 즉 선진국이 과거에 사용했던 정책들을 개도국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성장한 선진국은 개도국이 따라 올라오지 못하도록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52/ Anna Lanoszka, *International Development: Socio-Economic Theories, Legacies, and Strategies* (Abingdon: Routledge, 2018), pp. 33~34.

53/ Jeffrey D. Sachs, *The End of Poverty: Economic Possibilities for Our Time* (New York: Penguin Press, 2005); William Easterly, *The White Man's Burden: Why the West's Effort to Aid the Rest Have Done So much Ill and So Little Good* (New York: Penguin Press, 2006).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부열, “국제개발협력 거대담론으로부터의 탈출: 효과성 평가 방법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편, 『개발협력의 세계정치』(서울: 사회평론, 2016), pp. 153~183을 참고할 것.

54/ 장하준 지음, 형성백 옮김, 『사다리 걷어차기』(서울: 부키, 2004), pp. 229~235.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개발 과정에서 생태적 곤경, 빈곤과 환경 오염의 악순환, 지구적 불평등의 확산, 문화적 균질성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식 또한 점차적으로 분명해졌다.^{55/} 특히 주목되는 것은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 인간환경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에서 ‘인간과 자연환경의 상호의존’, ‘사회경제발전과 환경보호의 연결’,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대응과 글로벌 비전의 필요성’이 핵심적인 논의 주제가 된 점이다.^{56/} 1972년 스톡홀름 회의는 인류 환경을 주요 의제로 다룬 최초의 국제회의였다.^{57/}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1972년 로마클럽(Club of Rome)에서 발표한 『성장의 한계(The Limits of Growth)』는 유한한 자원을 가진 지구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인구확장이 식량 부족, 해수면 상승, 자원 고갈, 토양 유실, 식수 오염 등을 야기할 것을 경고한 바 있다.^{58/} 이러한 논의 흐름에서 경제성장, 자원의 한계, 환경보존이 비단 개도국의 문제가 아닌 선진국을 포함한 인류 보편의 문제임을 자각하기 시작했다.^{59/}

1980년대 들어 환경론자들과 학계가 환경문제를 주류 발전 담론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면서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은 다양한 학문 분야를 넘나들며 폭넓게 논의되었다.^{60/} 그 중심에는 1980년대 중반 노르웨이 전 수상 그로 할렘 브룬트란트(Gro Harlem Brundtland)가 이끄는 위원회가 있었고, 19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55/ Aram Ziai, *Development Discourse and Global History*, p. 156.

56/ Anna Lanoszka, *International Development: Socio-Economic Theories, Legacies, and Strategies*, p. 177.

57/ Jeffrey D. Sachs, *The Age of Sustainable Development*, p. 481.

58/ *Ibid.*, p. 185.

59/ 임강택, 『새로운 남북협력의 모색: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한 협력 모델』 (서울: 통일연구원, 2002), p. 15.

60/ Ian Scoones, “Sustainability,” p. 590.

and Development)’에서 발간한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이정표가 된 보고서로 정점을 맞는다. ‘브룬트란트 보고서’로 알려진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발전을 “미래세대로 하여금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하게 된다.^{61/}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은 경제성장 자체가 사회발전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경제성장이라는 단기적인 목표와 기회비용이 건강한 지구를 유지하기 위한 장기적 전망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의 성장, 사회적 공정성, 환경의 지속성이 연계되며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62/}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규범으로 자리 잡는 데 있어 또 하나 중요한 모티브를 제공한 것은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the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이하 리우선언)’과 리우선언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포괄적인 계획 차원에서 채택된 ‘어젠다 21(Agenda 21)’이다.^{63/} 1992년 6월 3일부터 14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지구 환경보존 문제로 178개국 정부가 참여하여 UNCE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유엔환경개발회의)가 개최되었다. 리우선언과 어젠다 21 모두 UNCED에서 채택되었고 후속조치 차원에서 UNCED 합의를 효과적으로 준수하며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차원에서 이행과 모니터링을 위해 CSD(Commission on Sustainable

61/ Sustainable development is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ur Common Future”, UN Doc. A/42/427 (4 August 1987), p. 54.

62/ Anna Lanoszka, *International Development: Socio-Economic Theories, Legacies, and Strategies*, p. 180.

63/ UN, “Agenda 21,”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outcomedocuments/agenda21>> (검색일: 2022.6.1.).

Development,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1992년 12월 발족한다. 리우선언의 원칙과 어젠다 21 이행은 2002년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WSSD(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를 통해 재확인되었다.⁶⁴⁾

초기 산림학에서 논의되던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논의로 진화되면서 지속성이 적용되어야 할 범주와 이를 달성하려는 접근 방식 또한 달라진다. 초창기 산업화 과정에서의 환경적인 부작용, 자원 고갈, 오염, 자원 다양성의 논의가 주가 되었다면 이는 점차적으로 인류의 부와 복지를 증진시키고 동시에 자연에 대한 고려와 환경의 오염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전 지구적인 사회적 목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또한 그 영역 또한 비단 환경에 머무르기보다 빈곤, 인구문제, 보건, 인간의 정주, 대기, 토지, 사막화, 농업개발, 생물다양성, 해양 및 해양생물자원 보호 등으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국가, 민간, 지방정부의 역할강화 부분과 재원, 기술이전, 교육, 국내체제와 국제협력 등과 같은 이행 수단의 논의도 점차 주목을 받게 된다. 특히 국가 간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하여 개별 국가 차원에서 단호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뿐 아니라 국제공동체의 우선순위로 지구적 협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논의가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된다.

2000년대 들어 지속가능한 발전은 비단 한 국가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범세계적인 협력과 합의, 정치적 참여가 필요한 의제로 인식되었다. 경제성장이 환경과 사회가 살아가는 방식이 연결되고 대치되지 않으며 함께 다뤄져야 할 문제라는 의식이 보편화된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어젠다 21의 합의에도 환경에 대한 약속들이

⁶⁴⁾ Ibid.

실천되지 않고 지구온난화, 생물다양성의 파괴, 사막화의 확산 등이 진행되고 있다는 위기의식 또한 작용하였다.^{65/}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 회원국들은 201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리우+20’이라 불리는 ‘유엔지속가능한 발전 정상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CSD)’를 통해 다시 한 번 경제적 번영, 사회적 포용, 환경의 지속성을 근간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전면으로 내세운다.^{66/} 이후 여러 차례 협상과 논의를 통해 17개 목표들을 확정하고 이는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2030 의제로 규정되었다.^{67/}

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북한의 수용과 대응

북한은 2015년 9월 ‘포스트 2015 개발의제’ 동참을 공식화한 이후 2030 의제의 핵심인 SDGs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다각적으로 진행하며 이행 노력을 해왔다.^{68/} 무엇보다 북한은 2021년 7월 SDGs 이행에 관한 VNR을 실시함으로써 SDGs의 이행 방향과 체계, 지표 설정 및 이행 현황 등을 공식적으로 보고하였다. 북한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이행을 약속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수용 의사를 보인 것과 함께 2021년 말 기준 170여 국 이상이 실시한 VNRs에 참여했다는 것은 북한이 글로벌 발전 규범을 수용하고 SDGs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의사소통을 확대하며 필요한 협력을 해 나갈

65/ 제프리 삭스 지음, 이종인 옮김, 『지리 기술 제도』 (과주: 21세기북스, 2021), p. 302.

66/ 이는 2012년 7월 12일 제66차 유엔총회에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의 결의안으로 채택된다. “The Future We Want,” UN Doc. A/RES/66/288 (27 July 2012), para. 3, p. 2.

67/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Doc. A/RES/70/1 (25 September 2015).

68/ 남상민, “UNESCAP 동북아시아사무소 활동 현황과 북한 SDGs 이행,” (통일연구원 자료회의 발표자료, 2022.2.25.).

의사가 있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지역 차원에서 보자면, 2021년 북한의 VNRs 참여로 인해 동북아시아 모든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를 최소 한 번 이상 보고를 완료하게 되었다.^{69/} 2030 의제와 VNRs에 북한이 참여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는 북한이 유엔 SDGs를 현지화(localization)하여 국가발전목표와 여러 부문별 계획에 SDGs를 통합시켰다는 점을 주목했다.^{70/} 또한 이러한 현지화 프로세스(localization process)가 국가 계획위원회와 6개 영역의 기술위원회의를 주관하는 NTF(National Task For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국가태스크포스)에 의해 감독되고 있다는 점 또한 확인했다.^{71/}

글로벌 발전 규범에 대한 북한의 수용과 동참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북한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언제부터 본격화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렇지만 1996년 10월 24일 제51차 유엔총회에서 북한은 국가와 국제적 차원에서 환경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제기 하며, 어젠다 21 이행을 위해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많은 국가와 국제기구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72/} 비록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발언은 북한이 국제사회가 1992년 UNCED 회의 이후 채택한 어젠다 21이라는 국가 실천계획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69/ 동북아시아 국가는 여기서 한국, 북한, 일본, 몽골, 중국을 의미하며, 이 가운데 중국은 2016년, 2021년 두 차례, 일본은 2017년, 2021년 두 차례, 한국은 2016년, 몽골은 2019년, 북한은 2021년 VNR을 하였다.

70/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t the Subregional Level," UN Doc. ESCAP/RFS/2022/2 (28~31 March 2022), para. 42, p. 7.

71/ *Ibid.*

72/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UN Doc. A/C.2/51/SR.15 (24 October 1996), para. 75, 76, p. 16.

재정 지원,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문제 등을 제한적으로나마 파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73/} 실제 북한은 1994년 10월 CBD(Convention on Biodiversity, 생물다양성협약), 동년 12월에는 유엔 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극심한 식량위기에 직면한 북한이 국제사회에 원조를 공식 요청하면서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접촉은 다방면으로 진행되어왔다. 북한의 지속가능한 발전 규범에 대한 동참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인도적 지원이나 개발협력에 대한 합의와 실천을 바탕으로 한 결과이자 선택이다.^{74/} 북한사회가 1990년대 중반 이후 국제사회로부터의 원조를 받게 되고 식량 및 긴급 구호, 부분적인 개발지원을 경험하는 2000년 중반까지의 기간은 개발학 차원에서는 MDGs가 이행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담론으로 보다 더 구체화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북한이 2030 의제 및 SDGs 참여를 공식화한 것은 2015년 9월이지만 그 이전부터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심을 표하고 SDGs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73/ *Ibid.*

74/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최규빈,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북한연구학회보』, 제24권 1호 (2020), pp. 96~100.

표 II-1 2030 의제 및 SDGs에 대한 북한의 입장

| 이름 | 내용 | 회의 | 일시 |
|-----------------------------|---|----------|-----------------|
| 이형철 (주유엔 대표부 대사) | “21세기는 개발의 세기여야 한다. 항구적인 국제 평화와 안보는 빈곤퇴치와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 없이는 상상할 수 없다.” ^{75/} | 유엔 총회 | 2000. 9.15. |
| 신선호 (주유엔 대표부 차석대사) |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은 과학과 기술에 달려 있으며 선진국과 개도국의 격차는 그 점에서 기인한다 … 선진국은 그들의 발전계획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개도국을 지원해야 한다. 유엔은 다양한 국제회의를 통해 아무런 조건 없이 기술이 이전되도록 하는 선언이 실행될 수 있게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모금해야 할 것이다.” ^{76/} | 유엔 총회 | 2001. 10.3. |
| 림성철 (주유엔 대표부 서기관) |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은 인류의 공동번영에 핵심이다. 이 목적을 위해 개별국은 정치적 의지를 발휘하여 현재와 다음 세대를 위한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유리한 공정한 국제경제 무역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경제제재를 부과하거나 한 국가의 경제시스템을 발전의 모델로 주입시킴으로 국가의 내부문제를 방해하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 평화와 안보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77/} | 유엔 총회 | 2002. 11.14. |
| 문종철 (주유엔 대표부 참사관) | “평화적인 환경 없이 지속가능한 발전은 생각할 수도 없다. 평화와 안전이 보장될 때에만 인간, 자본과 기술 자원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보다 더 동원될 수 있다. 분쟁을 대응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은 활발해져야 하며, 서로의 경제·사회제도를 존중하는 전제하에서 회원국들은 협력과 교류를 촉진해야 한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의 보편 기준이나 방법을 채택하는 것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 북한은 모든 국가와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자주, 평등, 호혜에 기반한 새로운 평화적이고 공정한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78/} | 유엔 총회 | 2011. 10.5. |

| 이름 | 내용 | 회의 | 일시 |
|-----------------|--|-------|----------------|
| 박길연 (외무성 부상) | “유엔이 설정한 목표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발전 영역에서, 2012년 6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 지속가능발전 회의에서 합의된 것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공정한 국제 경제무역관계 구축, 공적개발원조 약정 실행, 환경적으로 청정기술을 개도국에 지원하며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의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들이 이행되어야 한다.” ^{79/} | 유엔 총회 | 2012. 10.1. |
| 박익춘 (외무상) | “본 회기 주제로 “포스트 2015 개발의제: 단계 설정”을 선택한 것은 세계 평화와 공동의 번영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기여한다. 특별히 2015년 이전 빈곤감축을 포함하는 MDGs 달성을 위한 마감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그 점에 있어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국제협력이 이미 나왔어야 할 결과들을 만들어 내지 못한 데 있다.” ^{80/} | 유엔 총회 | 2013. 10.1. |
| 리수용 (외무상) | “새천년 이후 지난 15년 동안 세계는 빈곤율이 절반으로 감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평화로운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근 국가경제의 개선 추세를 이어가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 북한은 이번 회기의 포스트 2015 발전 의제 이행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고 유엔 창립 70주년을 맞는 내년도 발전 의제의 성공적인 채택을 위해 적극적인 기여를 할 것임을 회원국들에 보장하고자 한다.” ^{81/} | 유엔 총회 | 2014. 9.27. |

자료: 유엔총회 공식 회의록(official records)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75/ UN Doc. A/55/PV.17 (15 September 2000), p. 28.

76/ UN Doc. A/C.2/56/SR.7 (3 October 2001), pp. 5~6.

77/ UN Doc. A/C.2/57/SR.34 (14 November 2002), p. 7.

78/ UN Doc. A/C.2/66/SR.5 (5 October 2011), p. 4.

79/ UN Doc. A/67/PV.20 (1 October 2012), pp. 22~23.

80/ UN Doc. A/68/PV.23 (1 October 2013), pp. 10~11.

81/ UN Doc. A/69/PV.16 (27 September 2014), pp. 8~11.

북한의 SDGs에 대한 구체적 입장과 이행 전망은 2016년 4월 21일 개최된 유엔 SDGs 달성 고위급 토의(The United Nations High-Level Thematic Debate on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에서 재확인할 수 있다. 리수용 외무상은 SDGs가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정책에 부합”한다고 보고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북한은 “인민들에게 더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82/} 여기서 그는 SDGs에 대한 내부 전망이 좋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① 식량 문제, 먹는 문제 해결을 우선 과업으로 설정, 2030년까지 식량 생산을 2배로 늘리는 사업을 진행, ② 중요 생산시설, 교육문화시설, 살림집을 신속하게 확장, 문화정서 생활기지의 건설, ③ 산림복구를 자연과의 전쟁으로 선포,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에 따른 묘목 생산, 2024년까지 167만여 헥타르 조림·재조림 계획, ④ 국토건설의 과학적으로 전망성 있게 진행, 2030년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인적 및 경제적 손실 대폭 감소, ⑤ 과학기술중시 전략적 노선을 통한 과학연구부분 국가 투자 확대, 설비 국산화를 통한 자립적 개발 능력 향상이 그 근거이다.^{83/} 이러한 북한의 입장은 SDGs를 자신들의 발전전략 차원에서 이행하며 국내 부문별 목표들과 연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15년 이후 북한 내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규범이 어떻게 내재화 되고 지역화되는지를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다만 북한의 공간(公刊)문헌과 자료를 통해서 볼 때 지속가능한 발전 규범에 대한 수용과 북한 내 주요 부문별 사업과 SDGs와의 연계 의지는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82/ “우리 나라 외무상 유엔본부에서 열린 지속개발목표달성에 관한 고위급 토론회에서 연설,” 『로동신문』, 2016. 4. 23.

83/ 위의 글.

표 II-2 북한의 주요 부문별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 제시

| 내용 | 영역 |
|--|--------|
| “우리는 해양자원의 효과적인 개발리용이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인 우리나라의 현실적조건과 세계발전추세에 맞게 우리나라의 바다를 황금해로 전변시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반드시 실현하여야 한다.” ^{84/} | 해양 생태계 |
| “생태환경의 파괴는 인류의 생존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 어느 나라나 할것 없이 환경보호사업을 떠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 환경보호는 사람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그렇고 인류공동의 번영을 위해서도 반드시 중시하여야 할 사업이다. 그것은 결코 한두 나라나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전 지구적인 사업이며 인류의 앞날을 위한것이다.” ^{85/} | 환경 |
| “환경을 보호하고 재생자원의 리용, 폐기물의 순환리용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는 환경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물질적원천을 보장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86/} | 재생 자원 |
| “자원의 효과적리용을 떠나 인류의 지속적 발전을 기대할수 없다. 자원의 효과적 리용을 지향하는 인류의 모든 활동은 사회발전을 적극 추동해나갈 것이다.” ^{87/} | 자원 이용 |
| “새로운 5개년계획의 첫째 농사가 매우 중요하다. 올해 알곡고지를 무조건 점령하고 알곡증산의 안정적이고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초를 착실히 다져야 신심을 가지고 최종목표 점령으로 확신성 있게 나아갈 수 있다.” ^{88/} | 식량 |
| “중요한 것은 인재를 찾아내고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자체의 기술력량과 잠재력을 적극 발달할 때 단위의 지속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찾은 경험이다.” ^{89/} | 교육 |
| “우리 공화국정부는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대처를 위한 법적토대를 끊임없이 강화하는 한편 자연에너르기의 리용정책을 중요구성요소로 하는 국가에너르기 전략을 작성하고 환경과 에너르기의 지속적 개발을 결합시켜 나가고있다.” ^{90/} | 기후 변화 |

84/ 현순일, “해양자원의 효과적인 개발리용은 경제의 지속적발전을 위한 필수적요구,” 『경제연구』, 제1호 (2016), 재인용: 최규빈, “글로벌 개발 규범에 대한 북한의 수용과 변용: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중심으로,” 『수은북한경제』, 가을호 (2021), p. 17.

85/ “환경보호와 인류의 미래,” 『로동신문』, 2020.4.28.

86/ 박현경, “환경산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강국건설을 다그쳐 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 『경제연구』, 제3호 (2016), p. 26.

87/ “인류의 지속적발전을 위한 자원의 효과적리용,” 『로동신문』, 2020.1.16.

88/ “모든 력량을 총집중하여 김매기를 힘있게 추진,” 『로동신문』, 2021.6.11.

89/ “자체의 발전잠재력을 높인 비결,” 『로동신문』, 2021.6.8.

90/ “유엔기후변화대회 고위일군회의에서 우리 나라 대표단 단장 연설,” 『로동신문』, 2015.12.9.

| 내용 | 영역 |
|--|----|
| “지난 1년간 세계적으로 지속개발목표 특히 모성 및 어린이사망률감소, 전염성 및 비전염성질병 대처, 필수약품보장과 보건일군증대 등 보건관련목표달성에서 큰 전진을 이룩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지속개발의정에 제시된 목표들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정책에 부합된다고 보고 지지한데 이어 이미 오래전에 수립된 완전한 무상치료를 중추로 하는 국가보건제도의 튼튼한 토대에 의거하여 목표리행을 힘있게 추진하여왔다.” ^{91/} | 보건 |

출처: 북한 문헌 및 『로동신문』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SDGs는 국가 발전에 관한 정치, 경제, 사회 등 국가의 전 부문의 이행을 요구할 뿐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 민간, 기업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SDGs를 이행하는 국가들이 개별 목표에 대한 기초 실태, 목표 이행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및 활용 능력이 중요하다.

이점에 비추어 본다면, 북한은 대외적으로 자국의 SDGs 이행에 대한 자신감은 있었으나 규범의 수용 및 이행체계 수립, 목표 및 지표 설정, 국가 통계 등과 관련하여 내부적인 한계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II-3>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은 SDGs 관련 지역 프로세스와 대화 및 관련 워크숍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북한의 상황들을 공유하였고, 국제사회는 북한에게 글로벌 규범과 원칙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는 일을 지속해 왔다. 특히 ESCAP은 지역 차원에서 SDGs 관련 통계역량강화 및 VNR 준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SDGs 관련한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의사소통은 2021년 VNR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91/} “조선보건대표단 단장 세계보건기구총회 제70차회의 전원회의에서 연설,” 『로동신문』, 2017.5.27.

표 II-3 북한의 SDGs 이행 및 VNR 준비 관련 국제회의

| 일시 | 장소 | 회의/프로그램명 | 주관 |
|----------|--------------------|---|--------------------------------|
| 2022.3. | 태국 방콕 |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 포럼 Asia-Pacific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 ESCAP |
| 2021.7. | 미국 뉴욕 (온라인) | 자발적국가검토 Voluntary National Review | ECOSOC |
| 2020.5. | 태국 방콕 (온라인) |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 포럼 Asia-Pacific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 ESCAP |
| 2019.10. | 러시아 블라디 보스토크 |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관한 동북아시아관계자 포럼 North-East Asian Multistakeholder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ESCAP |
| 2019.10. | 베트남 다낭 | SDG 지표에 관한 지역 워크숍 Regional Workshop on SDG indicators | ESCAP |
| 2019.4. | 태국 방콕 | VNR 준비에 관한 지역 워크숍 Regional Workshop on VNR | ESCAP |
| 2019.3. | 태국 방콕 |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 포럼 Asia-Pacific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 ESCAP |
| 2018.3. | 태국 방콕 |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 포럼 Asia-Pacific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 ESCAP |
| 2017.10. | 중국 베이징 |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관한 동북아시아관계자 포럼 North-East Asian Multistakeholder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ESCAP |
| 2016.10. | 북한 평양 | 지속적 발전에 관한 평양국제토론회 Pyongyang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DPRK |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

| 일시 | 장소 | 회의/프로그램명 | 주관 |
|---------|---------|---|-------------------------|
| 2016.4. | 태국 방콕 |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 포럼 Asia-Pacific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 ESCAP |
| 2015.9. | 북한 평양 | 지속가능발전목표 착수 회의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Launched in DPRK | UN Resident Coordinator |
| 2015.5. | 태국 방콕 |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 포럼 Asia-Pacific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 ESCAP |
| 2015.4. | 필리핀 마닐라 | 통계 및 지속가능발전 역량강화 훈련 프로그램 Statistic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apacity Building Training Program | UNSIAP, ESCAP |

출처: 최규빈, “글로벌 개발 규범에 대한 북한의 수용과 변용: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중심으로,” 『수은북한경제』, 가을호 (2021), p. 7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

주: 북한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참여해온 유엔 및 ESCAP 총회는 제외.

다. 북한의 발전전략과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북한의 관심과 대응은 일시적이거나 수사적인 차원이라기보다 상당기간 동안의 관찰과 국제사회와의 교류, 개발 규범에 대한 이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공언한 바와 같이 SDGs를 이행하는 것이 북한의 경제발전 5개년전략(2016~2020) 달성 및 사회주의강국건설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부합하다는 전략적 판단이 존재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즉 북한이 SDGs를 수용한 이유는 북한의 국제사회와의 대외관계 및 사회발전전략 차원에서 사유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은 사회주의 기반 경제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다.^{92/} 따라서 북한이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또한 북한의 중앙계획 중심의 경제

92/ 김병연,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 윤영관 편저, 『북한의 오늘』 (서울: 늘봄플러스 2014), p. 69.

체제 및 사회발전전략과 유리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북한 당국 입장에서 SDGs의 관심과 수용은 국제사회와의 대외관계, 내부의 경제발전전략, 북한 개발협력의 필요(needs)와 진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1) 북한과 유엔과의 관계

북한의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담론과 SDGs의 수용은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와 북한 간의 대외관계 차원의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 북한의 대외정책의 기본 이념과 원칙은 「사회주의헌법」 제 17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주, 평화, 친선이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은 자신들에게 우호적으로 대하는 국가들과는 “평등과 자주성, 호상 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 의해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제17조).^{93/} 자주, 친선, 평화는 1980년 10월 조선노동당 제6차대회를 통해 외교적 이념과 대외정책의 원칙으로 천명되었고, 1988년 9월 국가수립 40주년 경축보고대회에서 김일성 연설을 통해 평화가 강조되면서 ‘자주·평화·친선’으로 정리되었다.^{94/} 이러한 북한외교정책 이념이 냉전기에 제국주의 국가들에 대한 침략과 전쟁 저지, 제3세계 및 ‘뿔럭불가담 국가’들과의^{95/} 친선 단결 관계 차원에서 제시된 측면이 있지만 대서방외교 및 유엔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93/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2019.8.29.),” <<https://www.unilaw.go.kr/Index.do>> (검색일: 2022.9.1.).

94/ 허문영, “북한의 대외정책 이념: 형성과 적용,” 『통일연구논총』, 제5권 1호 (1996), p. 242, p. 247; 정병호, “주체사상과 북한외교정책: 사상적 기초가 외교정책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제4권 1호 (2013), p. 35.

95/ 뿔럭불가담 국가는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는 진영에 가담하기를 거부하거나 독자적인 외교노선을 추구하는 국가들을 지칭한다. 국립통일교육원, “북한 지식사전,” <<https://www.uniedu.go.kr/uniedu/home/brd/bbsatcl/nknow/list.do>> (검색일: 2022.9.29.).

1990년대 사회주의 진영 붕괴와 함께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등은 북한의 대외관계 노선에 변화를 야기하였다. 북한은 유엔의 창립 목적과 원칙, 특성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김일성 주석은 “유엔은 모든 나라의 령토와 매개 민족의 독립과 자유와 자주권을 존중하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창설된 것입니다” 라고 밝힌 바 있다.^{96/} 이는 유엔 헌장이 규정하는 유엔의 목적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97/} 실제로 북한은 1991년 9월 제46차 유엔총회를 통해 유엔의 공식 가입국이 된 이후 총회와 주요 위원회, 유엔 기구 회의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왔다. 1992년 제47차 유엔총회에 참석한 김영남 부총리 겸 외교부장은 유엔이 평화와 인류의 공동의 발전을 위한 ‘핵심적 역할(a pivotal role)’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세계 평화와 안전 보장, 공정한 국제질서 구축, 지역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함께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 유엔이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98/} 특별히 자주(independence), 평화(peace), 친선(friendship)이라는 대외정책 원칙은 북한이 유엔 회원국으로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의 주요 근거로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다.^{99/}

96/ 김일성, 『김일성전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p. 284~285.

97/ 유엔 헌장(Charter of the United Nations)은 유엔의 목적을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평화에 대한 위협 방지’, ‘침략행위 등 평화 파괴에 대응한 집단적 조치 및 국제 분쟁의 조정·해결 실현’으로 명시하고 있다(제1조 1항). 또한 유엔은 평등권과 자결 원칙에 기초하여 국가 간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고, 경제·사회·문화적 또는 인도적 문제 해결 및 인권 및 자유의 존중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달성한다고 밝히고 있다(제1조 2, 3항). 유엔 헌장 국문은 외교부의 유엔 헌장 자료 참고, <https://www.mofa.go.kr/www/brd/m_3874/view.do?seq=27332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20> (검색일: 2022.9.1.).

98/ UN Doc. A/47/PV.16 (29 September 1992), pp. 51~52.

99/ *Ibid.*, p. 50; UN Doc. A/76/PV.17 (27 September 2021), p. 23; UN Doc. A/75/PV.15 (29 September 2020), p. 5; UN Doc. A/74/PV.13 (30 September 2019), p. 18; UN Doc. A/69/PV.16 (27 September 2014), p. 11; UN Doc. A/68/PV.23 (1 October 2013), p. 12; UN Doc. A/67/PV.20 (1 October 2012),

1990년대 초반 남북관계 변화, 1993년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등에 따라 유엔이라는 공간은 북한의 대남, 대외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미국을 비판하는 ‘정치적 무대’가 되기도 하였지만, 북한이 국제적 차원의 인권, 개발, 빈곤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주요 의제들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는 공간이 되기도 하였다. 북한은 유엔 현장과 목적 그리고 원칙에 따라 유엔이 “공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고 모든 주권국가들의 평등, 영토 완전(完整),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 할 것”에 대해 공약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2000년 9월에 합의한 유엔 밀레니엄 선언(United Nations Millennium Declaration)에 동참할 뜻을 밝히기도 하였다.^{100/}

MDGs의 종료와 더불어 북한은 개발의제가 빈곤감축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보편의제이자 핵심 담론이 되는 것에 대해 최소한의 이해는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4년 10월 유엔총회에서 북한은 “개발은 유엔의 핵심 미션 중 하나이며 개발은 평화와 함께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양대 축 중 하나”임을 분명히 했다.^{101/} 특히 북한은 2015년 9월 27일 유엔 고위급회의에서 ‘포스트 2015 개발의제’가 채택된 것을 유엔 역사에서 의미 있는 일로 평가하고 세계를 “개조(reshape)하고 변혁(transform)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들이 반영된” SDGs를 채택한다고 밝혔다.^{102/} 유엔총회 및 주요 기구들에서 언급된 논의들을 볼 때, 북한은 유엔이 개도국의 경제적 발전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지역적이고 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p. 24; UN Doc. A/65/PV.6 (21 September 2010), p. 53; UN Doc. A/55/PV.17 (15 September 2000), p. 28; UN Doc. A/54/PV.14 (25 September 1999), p. 9.

100/ “새 천년기유엔수뇌자회의의 진행,” 『조선중앙통신』, 2000.9.10.; “유엔총회 조선 대표 《지속개발》 국제적합의목표 달성에 노력,” 『조선중앙통신』, 2005.11.9.

101/ UN Doc. A/69/PV.16 (27 September 2014), p. 8.

102/ UN Doc. A/70/PV.12 (27 September 2015), p. 5.

수행함을 인정하면서 발전 및 빈곤퇴치와 같은 국제사회의 보편 의제 해결에 동참할 뜻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물론 북한과 유엔 간의 관계에서 비판적인 입장 역시 다양하게 확인된다. 북한은 유엔이 발전의 불평등 문제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며,^{103/} 제재와 경제적 봉쇄가 국제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한다고 비판하고,^{104/}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지속되는 이상 북한의 SDGs는 달성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105/} 김성 유엔대표부 대사는 2021년 7월 13일 VNR에서도 심각한 자연재해, 장기화되는 글로벌 건강 위기와 더불어 지속되는 제재와 봉쇄가 북한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행하고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주요한 장애가 되었다고 밝혔다.^{106/} 지속가능한 발전 담론과 SDGs가 북한에게 이전되는 과정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최소한 유엔이라는 무대를 통해 발전 의제를 확산하는 유엔과 이를 수용하는 참여국과 북한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증대가 유발된 점은 확인된다. 즉 경제사회발전 측면에서 북한은 유엔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으며 유엔이 민족에 대한 자결권과 인권을 존중하고 발전과 빈곤퇴치를 위한 환경조성을 통해 보편적 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2) 북한의 경제발전전략과 유엔 SDGs의 연계

북한의 SDGs 수용은 김정은 체제하에 추진된 국가경제발전5개년

103/ UN Doc. A/55/PV.17 (15 September 2000), p. 25; “박길연부상 천년기개발 목표달성에 적극 기여할 것 강조,” 『조선중앙통신』, 2010.9.24.

104/ UN Doc. A/75/PV.15 (29 September 2020), p. 5; “우리 나라 보건대표단 단장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총회 제40차 전원회의에서 연설,” 『로동신문』, 2017.7.7.; UN Doc. A/71/PV.17 (23 September 2016), p. 50.

105/ UN Doc. A/70/PV.12 (27 September 2015), p. 5; 『로동신문』, 2016.4.23.

106/ “Economic and Social Council,” UN Doc. E/HLPF/2021/5 (6~15 July 2021), p. 22.

전략(2016~2020)과의 연계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발전전략 입장에서 SDGs는 유엔의 2030 의제의 포용적 프레임워크와 다자협력을 통한 파트너십 차원에서 유용하다. SDGs는 경제성장 목표에만 주안점을 둔 것은 아니라 사회 전 영역의 목표들을 아우르는 특징을 갖고 있다. MDGs가 개도국의 빈곤감축 중심의 사회개발에 초점이 맞춰졌었다면 SDGs는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의 참여를 강조하고 경제발전, 식량, 농업, 교육, 성평등, 환경, 평화, 안보 의제를 전방위적으로 다룸으로써 “개발 분야에서 거대한 변환을 기획”하는 특징이 있다.^{107/} 국가 운영 차원에서 볼 때 SDGs는 국가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의제 혹은 이슈 영역들이 포괄되어 있다는 점에서 포용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108/}

북한은 오랜 기간 자립경제노선을 채택해 왔고 2016년 이후 더 강력해진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로 인해 발전과 성장을 위한 외부환경은 우호적이라고 할 수 없다.^{109/} 그렇지만 김정은 정권은 과거에 비해 경제발전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산업의 현대화, 국영경제 관리 방법 개혁, 시장화의 수용 등의 전향적인 조치들을 단행한 바 있다.^{110/} 비록 김정은 위원장은 2021년 1월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 때 경제발전5개년전략의 실패를 자인하였지만^{111/} 2016년 이후 김정은 시대의 북한의 발전전략은 경제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두면서 인민생활

107/ 김태균·김보경·심에리, “국제개발 규범의 국내화 과정에 관한 연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한국의 국내이행 정책수립에 관하여,” 『국제·지역연구』, 제25권 1호 (2016), p. 82.

108/ 홍민 외, 『북한의 발전전략과 평화경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서울: 통일연구원, 2020), p. 45.

109/ 김석진, “경제정책,” 홍제환·김석진,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경제정책, 대외무역, 주민생활』 (서울: 통일연구원, 2021), p. 90.

110/ 홍제환,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종합평가,” 홍제환·김석진,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경제정책, 대외무역, 주민생활』 (서울: 통일연구원, 2021), p. 205.

111/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 수행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되었습니다,” 『로동신문』, 2021.1.6.

향상에 주안점을 둔 방향이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6년 5월 조선노동당 제6차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의 목표는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부문 사이 균형을 보장하여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임을 밝힌 바 있다.^{112/} 동 대회에서 인민경제발전전략 차원의 에너지, 동력, 식량 문제는 “자립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는데 관건적 의의”를 가지며 기초공업, 농업, 경공업 생산 확대를 강조하였다. 특히 식량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사회주의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토대”로 강조한 만큼 북한이 강조하는 자립경제에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113/} 이에 북한은 농업을 경제발전5개년전략의 중요 부문으로 간주하고 인민들의 생존권 보장 및 SDGs 달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 차원에서 식량생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노력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114/}

북한은 또한 보건, 기후변화 대응, 환경보호 및 친환경에너지 이용 등이 인민경제발전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연계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보건 관련으로 북한은 평균수명, 유아사망률, 모성사망비 등 SDGs 보건 지표에서 뚜렷한 개선이 있었음을 과시하였고,^{115/} 이러한 성과가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보건목표 실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부합하는 것임을 강조했다.^{116/} 또한 환경보호,

112/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로동신문』, 2016.5.8.

113/ 위의 글.

114/ “우리 나라 보건대표단 단장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총회 제40차 전원회의에서 연설,” 『로동신문』, 2017.7.7.

115/ “우리 나라 보건대표단 단장 세계보건기구총회 제71차회의에서 연설,” 『로동신문』, 2018.5.25.; “조선보건대표단 단장 세계보건기구총회 제70차회의 전원회의에서 연설,” 『로동신문』, 2017.5.27.

116/ “우리 나라 대표단 단장 전반적의료봉사에 관한 유엔총회 고위급회의에서 연설,” 『로동신문』, 2019.9.28.

해양오염 방지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 및 보완하고 친환경에너지 이용을 국가에너지정책에 중요한 요소로 포함하며 환경보호와 에너지전략을 SDGs와 결합시키고 있음을 언급하였다.^{117/} 북한은 2021년 VNR에서 글로벌 SDGs를 사회주의강국건설 및 5개년전략에 연계시켜 북한식의 SDGs를 수립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으며, 식량, 보건, 환경, 에너지 등 경제발전전략에 주요 의제들이 글로벌 SDGs와 어떻게 조응되는지 분명히 제시하였다.^{118/}

SDGs가 다자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지향하는 점은 북한의 발전전략에서 SDGs를 수용하는 데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SDGs는 빈곤국과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협력을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노력을 강조한다. 이러한 지향성은 유엔 SDGs의 핵심 가치이자 모토가 된 “아무도 뒤처지지 않게 한다(Leave No One Behind)”를 분명히 보여준다. 2020년 9월 제75차 유엔총회에서 김성 유엔대표부 상임대표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는 회원국 사이의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평화와 안보,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119/} 특히 2021년 북한의 VNR에서 정부의 SDGs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양자 및 다자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할 것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120/}

유엔 SDGs가 지향하는 파트너십은 개별 국가들의 SDGs 이행에

117/ “유엔기후변화대회 고위급군회의에서 우리 나라 대표단 단장 연설,” 『로동신문』, 2015.12.9.; “우리 나라 대표단 단장 환경과 개발에 관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상급회의에서 연설,” 『로동신문』, 2017.9.11.; “대양과 바다, 해양자원의 보존과 리용에 관한 유엔고위급대회 진행,” 『로동신문』, 2017. 6.15.;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42.

118/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p. 8~11.

119/ UN Doc. A/75/PV.15 (29 September 2020), p. 5.

120/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48.

있어 필요한 자원 동원, 역량 구축, 투자촉진, 기술이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할 뿐 아니라 이를 구체적인 세부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세부목표로는 선진국의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달성 이행(17.2), 개도국을 위한 자원 동원(17.3), 최빈개도국을 위한 투자촉진 계획 채택 및 이행(17.5), 과학, 기술 및 혁신에 대한 남북·남남·삼각협력 등 지역과 국가 간 협력 강화 및 지식공유 확대(17.6), 친환경기술 개발 지원(17.7), 개도국 대상 SDG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가 계획 지원(17.9), 개도국의 통계역량 구축 지원(17.19) 등이 존재한다. SDGs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기술 격차를 좁히고 국가 제도, 정책, 혁신 시스템 차원의 발전을 위한 역량강화를 지향하는 만큼 북한의 경제강국건설 및 과학기술강국건설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경제의 현대화 및 정보화를 통해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현대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과학과 기술, 지식이 생산을 주도하는 경영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과 기술관리공정을 개발창조형으로 전변” 시킬 것을 강조한 바 있다.^{121/} 다시 말해, 북한은 경제발전전략에 SDGs 주요 목표들을 연계함으로써 국가발전전략을 정당화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자원, 기술, 지식 등을 확보하고 이를 내부 정책 실행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122/}

121/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로동신문』, 2016.5.8. 이집에서 SDGs는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 선진기술의 자립경제 및 지식기반의 경제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 “가장 뛰어난 접근성을 가진 대외협력의 공간”이라는 평가가 있다. 강채연·황인엽, “북한의 발전전략과 SDGs-NDGs 이행의 시사점: SDG1(빈곤종식)과 SDG2(기아퇴치)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9집 3호 (2021), p. 112.

122/ 김태균,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발전 이데올로기: 북한의 자발적국가리뷰(VNR) 준비과정을 중심으로,” 박지연 외, 『북한개발협력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서울: 오름, 2020), p. 60.

(3) 북한과 유엔 간의 전략프레임워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의 수용과 이행은 유엔 대북 사업의 추진을 위해 그동안 북한이 유엔과 협력해 왔던 전략프레임워크(Strategic Framework)에 기반한 과정이자 결과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123/} UNDS(United Nations Development System, 유엔개발시스템)하에서 특정 대상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UNDAF(United Nations Development Assistance Framework: 유엔개발 지원프레임워크)에 기반하여 진행된다. UNDAF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통합적 접근을 지원하는 유엔시스템의 공통적이고 종합적 책임을 규명하는 문건으로, 대상국의 정책, 우선순위, 프로그램 기획 등을 파악하며 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유엔 활동과 기능에 대해 체계적인 검토를 수행한다.^{124/} UNDAF는 대상국 정부와의 협조를 통해 사업의 구체적인 필요, 이유 및 상황분석,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관리, 모니터링, 보고 체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계획이라 할 수 있다. 즉 유엔개발시스템 차원에서 세부적인 모든 국가 프로그램은 UNDAF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UNDAF는 2030 의제의 본격적인 추진 이후 UNSDCF(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Cooperation Framework, 유엔 지속가능발전협력프레임워크)로 명칭이 변경된다. UNDAF와 마찬가지로 UNSDCF는 유엔과 대상국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지만 파트너십과 책무성의 원칙하에 국가들의 SDGs를 지원한다는 분명한 목적을 갖는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125/} 2030 의제 달성에 기한이

123/ 홍민 외, 『북한의 발전전략과 평화경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pp. 63~65.

124/ UNSDG, "United Nations Development Assistance Framework Guidance," June 2017, <<https://unsdg.un.org/resources/united-nations-development-assistance-framework-guidance>> (Accessed September 31, 2022).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상국의 핵심적인 SDGs 우선순위와 격차, 해결책 등을 파악하여 유엔개발시스템 내·외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을 마련한다.^{126/} 또한 UNSDCF는 대상국에서의 SDGs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에 대한 모니터링(*monitoring*), 검토(*review*), 보고 및 평가(*reporting and evaluation*)를 유엔 기구들과 공동으로 담당하고 수행한다.^{127/} 이런 차원에서 유엔은 UNSDCF를 국가 단위에서 2030 의제 이행을 위해 유엔개발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128/} UNSDCF는 대상국에서 활동하는 UNCT(*United Nations Country Team*, 유엔국가팀)로 하여금 해당국의 구체적인 필요와 현실에 대응하여 활동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UNSDCF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 대한 분석 과정이 요구된다.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 우선 유엔 기구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국가의 중장기 전략적 우선순위를 파악해 이를 SDGs에 맞춰 조정하고 국가발전계획하에서 연계 가능한 세부 목표와 지표들을 파악하는 작업이 있다. 다음으로 UNCCA(*United Nations Common Country Analysis*, 공동 국가 분석)가 필요하다.^{129/} 이는 2030 의제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역량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UNCCA에서는 다양한 조사와 분석, 데이터와 통계가 활용되며 성과, 격차, 기회, 장애물,

125/ UNSDG, "In Brief: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Cooperation," January 2020, <<https://unsdg.un.org/resources/brief-united-nations-sustainable-development-cooperation>> (Accessed September 31, 2022).

126/ UNSDG,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Cooperation Framework Guidance," June 2019, <<https://unsdg.un.org/resources/united-nations-sustainable-development-cooperation-framework-guidance>> (Accessed September 31, 2022).

127/ *Ibid.*

128/ *Ibid.*

129/ *Ibid.*

재무상황 등을 파악하고 개발, 인도주의, 평화구축 및 인권 의제 등의 관점에서 국가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의 기회 및 위험이 검토된다.

북한의 경우 2011년 본격적인 지원프레임워크 절차를 추진하기에는 국가 상황 등 여러 제약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유엔은 북한과 동의 하에 지원프레임워크의 이전 혹은 준하는 단계 차원에서 전략프레임 워크(Strategic Framework)를 마련하기로 하였다.^{130/}

이에 따라 북한과 북한에 상주·비상주하는 유엔전문기구들은 2011년과 2017년 UNSF(United Nations Strategic Framework, 유엔전략계획)를 각각 합의했다.^{131/} 특히 UNSF(2017~2021)는 북한이 SDGs를 이행하는 시기와 겹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전략계획에서 북한 당국과 북한에서 활동하는 UNCT는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인간개발(sustainable and resilient human development)”을 공동의 목표로 설정하고,^{132/} 네 가지 전략적 우선순위(strategic priority) 영역(식량 및 영양 안보, 사회개발 서비스, 복원력과 지속 가능성, 데이터와 개발관리)을 합의하였다.^{133/} 특히 북한 당국과 유엔은 전략계획을 이행함에 있어 SDGs를 적용할 것이며 4대 우선

130/ 대표적으로 자료 접근성, 국내 이동과 접촉, 국내직원 파견 제한 등이 있으며 결정적으로 지원프레임워크 준비를 위한 로드맵 개발과 높은 수준과 증거 기반의 CCA 절차 등이 최소 조건으로 준비되어야 하나 북한은 이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

131/ 각각 보고서의 정식 명칭은 “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1–2015”와 “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7–2021”이다.

132/ UN Country Team in DPRK, “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7–2021,” (Pyongyang, 2016.12.20.), <<https://dprkorea.un.org/en/10156-un-strategic-framework-2017-2021>> (Accessed October 1, 2022), p. 13.

133/ *Ibid.*, p. 11.

순위들이 SDG 목표들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분명히 제시 한 바 있다.^{134/}

유엔과 북한 간의 전략계획이 유엔개발체계하에서 보자면 지원 프레임워크의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지만 사실상 지원프레임워크의 주요 지침들이 반영되었으며 북한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담론을 수용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135/} 특히 UNSF가 유엔과 북한이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개발과 인도적 지원을 통합한 계획이라는 점, UNCT 내 개별 기구들이 자신들의 전문성과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와 성과를 설정했다는 점, 그리고 인권 중심 접근법(human rights-based approach), 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gender equality and empowerment of women)와 같은 과거에 찾아보기 힘든 전형적이며 보편 원칙들을 합의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실제 인권 중심 접근법과 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는 ‘아무도 뒤처지지 않게 한다’와 함께 SDGs의 3대 핵심원칙을 이루고 있다.^{136/}

2. 북한 VNR의 특성과 SDGs 세부목표 및 지표 수용 현황

가. 글로벌 SDGs의 수용과 변용, ‘우리식 SDGs’ 구축

2021년 7월 13일 북한은 ECOSOC(Economic and Social Council,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의 HLPF(High-Level Political Forum,

134/ 최규빈,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p. 109.

135/ 유엔 국가 정보 시스템하에서도 북한 사업은 지원프레임워크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UNSDG, <<https://www.unssc.org/courses/un-sustainable-development-cooperation-framework>> (Accessed October 1, 2022).

136/ UNSDG, “Universal Values,” <<https://unsdg.un.org/2030-agenda/universal-values>> (Accessed October 1, 2022).

고위급정치포럼)에서 VNR을 진행하였고 이를 위해 2030 의제 및 SDGs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2030 의제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들은 유엔의 SDGs 보고 체계에 동참하게 되며 VNRs를 통해 선진국 및 개도국 모두는 2030 의제 이행 과정에서의 경험, 성공, 도전 요인, 교훈 등을 공유하게 된다. 2016년 이후 2021년까지 여섯 차례 개최되어 176개국이 참여하였고, 2022년 7월에 개최된 HLPF에서는 네덜란드, 이탈리아, 필리핀, 스리랑카, 스위스 등 45개 국가가 VNRs를 진행하였다.

표 II-4 VNR 참여국 연도별 현황(2016~2022)

|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1 st review | 22 | 42 | 38 | 40 | 26 | 8 | 12 |
| 2 nd review | - | 1 | 7 | 7 | 20 | 24 | 28 |
| 3 rd review | - | - | 1 | - | 1 | 10 | 3 |
| 4 th review | - | - | - | - | - | - | 2 |
| Total | 22 | 43 | 46 | 47 | 47 | 42 | 45 |

출처: Sustainable Development Knowledge Platform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vnrs/>) (검색일: 2022.6.5.)을 참조하여 저자가 재구성함.

북한의 2021년 VNR은 SDGs 이행을 공식화한 이후 최초의 보고이며, 북한의 참여로 동아시아 및 동북아시아 모든 국가들이 최소 한 차례 이상 보고를 완료하였다.^{137/} 무엇보다 북한의 VNR은 자신들이 이행을 공언해 왔던 SDGs를 그동안 어떻게 이행해 왔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VNR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138/} 첫째, 북한은 유엔의

^{137/} ESCAP 분류에 따르면 동아시아 및 동북아시아(East and North-East Asia, ENEA) 국가는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북한, 일본, 몽골, 한국, 러시아이며 이 지역 인구는 총 17억 명이다.

^{138/} 이는 최규빈·홍제환, “북한의 SDGs 이행 동향: ‘자발적 국별 리뷰(VNR)’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

2030 의제 및 SDGs를 자신들의 국가발전목표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북한은 사회주의강국건설 목표와 경제발전 5개년전략(2016~2020) 달성을 위해 유엔 SDGs를 자신들의 NDGs에 통합시켰다. 글로벌 SDGs 17개 목표는 모두 수용하되 95개의 세부 목표(targets)와 132개의 지표(indicators)를 북한의 법률과 규정에 근거하여 선택적으로 수용하였다.^{139/}

둘째, 북한은 SDGs 이행을 위한 이행 조직과 메커니즘을 구축하였다. 북한은 우선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이 의장을 맡고 중앙통계국 부국장이 부의장을 맡는 NTF를 2018년 8월에 발족하였다. NTF는 북한 내 주요 관련 부처,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SDGs 전략을 개발하고 세부목표 및 지표를 확정하며, 전국적인 이행을 점검, 감독 조정하는 총괄 핵심 기구이다.^{140/} NTF 산하에는 사회인구, 과학·교육, 공중보건·식수위생, 경제·에너지, 환경·생태계, 재난 위기관리를 담당하는 6개의 TC(Technical Committee, 기술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중앙통계국 관리들로 구성된 TC는 SDGs 이행 상황을 NTF에 보고하고 하위 이행기구와 소통하여 전국단위에 제반 지침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141/}

셋째, 2021년 VNR은 대북 제재의 본격적인 이행 후 북한의 상황을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글로벌 SDGs의 세부목표 중 53%가 북한의 SDGs에 수용되어 있다고 밝힌 만큼 17개 모든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상황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북한이 2010년대 이후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이행하여 공개한 데이터와^{142/}

^{139/}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6.

^{140/} *Ibid.*, p. 11.

^{141/} *Ibid.*

^{142/} 이 조사는 2012년 영양 실태조사보고서(National Nutrition Survey), 2014년 사회경제 인구 및 건강조사(Socio-Economic Demographic Health Survey),

개별 국제기구가 보고한 자료를 제외하고는 북한의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는 사실상 전무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VNR은 최근 경제, 보건, 교육, 재해재난 등의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SDGs 유관 목표의 이행상황을 부분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북한의 VNR에서 두드러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글로벌 SDGs를 자신의 NDGs와 연계함으로써 북한에 특화된 소위 ‘우리식 SDGs’ 이행을 표방하고 있는 점이다.^{143/} 북한은 사회주의 강국건설이라는 최상의 발전목표하에 인민의 정부 강화 및 인민대중 제일주의 구현, 과학과 교육을 기반으로 한 모든 부문의 발전, 자립과 지식기반 경제 구축, 발전된 사회주의문화 구축이라는 네 가지 세부 발전목표를 제시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SDGs를 포함시켰다. 유엔 SDGs와 북한의 NDGs 간의 연계는 다음과 같다.

2015년 말라리아 인식조사(Malaria Awareness Survey), 2017년 다중지표 군집조사(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MICS)를 이룸.

^{143/} 최규빈·홍제환, “북한의 SDGs 이행 동향: ‘자발적 국별 리뷰(VNR)’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p. 3.

표 II-5 SDGs와 NDGs의 내부 연계

| SDGs | 유엔 | 북한 |
|------|--|---|
| 1 |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 인민 생활수준의 지속적인 개선 |
| 2 | 기아 종식, 식량안보 달성, 영양상태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과 식량의 자급자족 실현 |
| 3 |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 모든 인민의 건강 보장과 삶의 질 개선 |
| 4 |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기회 증진 | 모든 인민을 대학 졸업생의 지적 수준을 갖춘 총명한 노동자로 육성 |
| 5 |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강화 | 모든 부문에서 성평등과 여성 및 여아의 권한을 강화 |
| 6 |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 모든 인민을 위한 물과 위생시설의 지속가능한 사용 및 관리 보장 |
| 7 |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 모든 인민을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성 있으며, 지속가능한 현대적 에너지에 대한 접근을 보장 |
| 8 | 모두를 위한 지속이며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 지식기반 자력갱생 경제구축, 전 인민대중에게 적절하고 생산적인 직업 보장 |
| 9 |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 높은 수준의 주체사상과 과학 기반 국가 경제 수립 인프라 현대화 |
| 10 |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 국가 주체로서 인민대중의 권리 및 역할 보장 |
| 11 |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 사람들에게 보다 풍요롭고 만족스러우며 문명화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 제공 |
| 12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보장 양식 |
| 13 |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 기후변화와 그 영향과의 투쟁에 대한 대중운동 벌이기 |
| 14 |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 | 해안과 바다, 수산 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 |

| SDGs | 유엔 | 북한 |
|----------------------|--|--|
| 15 | 육상생태계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지 및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 숲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회복 그리고 생태계, 생물다양성, 토양 황폐화를 되돌리기 위한 지속가능한 활용 증대 |
| 16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 인민 중심의 조선식 사회주의 체제 강화를 통해 사회 전체를 대가정으로 전환 |
| 17 |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 자주, 평화, 친선의 이념 아래 공화국에 우호적인 모든 국가와 협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고, 남남협력력을 증진 |
| 목표 | 북한 NDGs | SDGs |
| 사회 주의 강국 건설 | 1. 인민의 정부 강화 및 인민대중제일주의 구현 | 4, 9, 16 |
| | 2. 과학과 교육을 통한 모든 부문의 발전 | 4, 5, 9, 12, 14, 17 |
| | 3. 자립과 지식경제 구축 | 1, 2, 3, 4, 6, 7, 8, 9, 10, 11, 12, 13, 14, 15 |
| | 4. 발전된 사회주의문화 구축 | 1, 3, 4, 9, 13, 14 |
| | 공통목표 | 4, 5, 9, 17 |

출처: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p. 8~11을 바탕으로 재구성; 최규민·홍제환, "북한의 SDGs 이행 동향: '자발적 국별 리뷰(VNR)'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pp. 4~5.
 주: 이하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를 "DPRK VNR 2021"로 표기.

북한의 VN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유엔 SDGs 목표가 우리식 SDGs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수용 정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표 II-5>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당수의 글로벌 SDGs 목표가 북한에서도 수용되고 있지만 북한이 자신의 상황과 법·제도에 맞게 목표 자체를 일부 혹은 전면 수정한 목표도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SDG 2 기아종식의 경우 북한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과 식량의 자급 자족 실현'으로, SDG 8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는 '지식기반 자력 경쟁 경제구축, 전 인민대중에게 직업 보장'으로, SDG 9 사회기반 시설 구축, 산업화 증진 및 혁신은 '주체사상과 과학 기반 국가 경제

수립 및 인프라 현대화'로 북한의 주체와 자립, 자력갱생의 의미가 강조되었다. SDG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는 '인민대중의 권리 및 역할 보장'으로 수정되었다.

목표 자체의 변형도 분명히 발견된다. SDG 1 빈곤퇴치가 '인민 생활양상'으로, SDG 4 양질의 교육은 '모든 인민을 대학 졸업생 지적 수준의 지식형 노동자 육성'으로, SDG 16 평화, 정의와 제도가 '인민 중심의 사회주의 체제 강화를 통한 온 사회를 대가정화'로, SDG 17 파트너십은 '자주, 평화, 친선의 이념 아래 공화국에 우호적인 모든 국가와 협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고, 남남협력을 증진'으로 각각 변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30 의제에 동참하는 모든 국가가 유엔의 SDGs를 반드시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이러한 현상을 SDGs의 지역화(localization)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자급, 자립, 자력갱생을 목표들에 반영하고, 사회주의 체제 강화를 목표 전면에 내세운 것은 SDGs 이행이 북한의 체제 유지 및 공고화라는 근원적인 목표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144/}

나. 지표의 수용과 변용

각각의 SDG 목표를 구성하는 세부목표와 이행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에 있어서도 변화가 확인된다. 특히 유엔의 SDGs 지표와 북한이 VNR에서 제시한 지표들을 비교해 보면 글로벌 지표를 수용한 것과 변용한 것이 공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UNSC(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 유엔통계위원회)는 SDGs 지표를 방법론의 정립 여부, 데이터 수집 가능성 측면에서 크게 세 유형으로 구분한다.^{145/}

^{144/} 위의 글, p. 5.

^{145/} 이에 대해선, IAEG-SDGs, "Tier Classification for Global SDG Indicators,"

2021년 북한 VNR에서 주목할 부분은 북한이 유엔 지표(Tier I, II, III)를^{146/} 수용하면서도 상당수의 세부목표 및 지표는 제시하지 않았고, 일부는 북한의 방식으로 변형하거나 새롭게 제시한 것이다. 이 또한 앞서 목표에서 나타난 변화와 마찬가지로 SDGs의 현지화 혹은 지역화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2030 의제를 이행하는 국가들은 국내의 여건 변화 및 정책 변경을 고려하고, 지표의 타당성 및 대표성을 검토하여 지표를 보완 및 개선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SDGs인 ‘K-SDGs’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북한이 제시하지 않은 지표의 경우 북한의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에 따라 의도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있고 북한의 통계 역량으로 인해 자료나 산출방안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통계 이용은 가능하지만 공개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글로벌 지표 자체가 북한에 부적합 경우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실제 북한은 유엔의 각각의 세부목표 및 지표에 대한 수용도에서 차이를 보여준다. 다음의 <표 II-6>에서 알 수 있듯이 SDG 6 깨끗한 물과 위생이나 SDG 3 건강과 웰빙, SDG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는 유엔의 세부목표 및 지표와의 싱크로율이 비교적 높은 반면, SDG 10 불평등, SDG 16 평화, 정의와 제도, SDG 17 글로벌 파트너십의 경우 북한의 수용 정도가 상당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앞선 목표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세부목표나 지표 자체를

<<https://unstats.un.org/sdgs/iaeg-sdgs/tier-classification/>> (Accessed June 6, 2022) 참조.

146/ 티어(Tier) I은 개념이 명확하고 방법론 및 표준이 정립되고 해당지역 내 50% 이상의 국가 및 인구로부터 정기적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지표이며, 티어 II는 개념적으로 명확하고 방법론 및 표준이 정립되어 있지만 정기적인 자료 수집이 가능하지 않는 지표이다. 티어 III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방법론이나 표준이 없으나 현재 개발 중인 지표를 의미한다. 이외 서로 다른 티어가 혼합된 다중티어(multiple tiers)가 일부 있다. 이러한 기준은 유엔 통계위원회가 발족한 관계기관 전문가그룹(IAEG-SDGs)이 마련하여 수정·보완함. 최규빈,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p. 111.

수용하기 어렵거나 국내 상황상 의도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대표적으로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인민의 평등을 지향하는 북한 사회는 사회적 차별이나 불평등과 관련된 SDG 10의 세부목표나 지표에 대한 수용 의지는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의 종식, 법치 증진과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 부패와 뇌물 감소, 대중의 정보 접근 보장과 자유 보호를 다루는 SDG 16에 대한 세부목표와 지표를 북한이 수용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다음으로는 북한의 통계 역량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통계는 조사통계라기보다는 행정자료에 기반한 통계가 다수일 가능성이 크다.^{147/} 즉 각 내각에서 행정자료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중앙통계국에서 최종 확인하여 통계를 공식화하는 방식이 다수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료가 수집되지 않는 지표의 경우 데이터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148/}

표 II-6 유엔과 북한의 SDGs 세부목표 및 지표 수용 비교 (단위: 개)

| SDGs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합계 |
|--------------|------|----|----|----|----|----|----|---|----|----|----|----|----|----|----|----|----|----|-----|
| 유엔 | 세부목표 | 7 | 8 | 13 | 10 | 9 | 8 | 5 | 12 | 8 | 10 | 10 | 11 | 5 | 10 | 12 | 12 | 19 | 169 |
| | 지표 | 13 | 14 | 28 | 12 | 14 | 11 | 6 | 16 | 12 | 14 | 15 | 13 | 8 | 10 | 14 | 24 | 24 | 248 |
| 북한 | 세부목표 | 6 | 4 | 12 | 7 | 5 | 8 | 3 | 6 | 4 | 1 | 9 | 5 | 3 | 6 | 8 | 4 | 1 | 92 |
| | 지표 | 9 | 6 | 25 | 9 | 7 | 12 | 4 | 7 | 6 | 1 | 13 | 6 | 5 | 6 | 10 | 4 | 1 | 131 |
| 북한의 미제시 세부목표 | | 1 | 4 | 1 | 3 | 4 | 0 | 2 | 6 | 4 | 9 | 1 | 6 | 2 | 4 | 4 | 8 | 18 | 77 |
| 북한의 미제시 지표 | | 4 | 8 | 3 | 4 | 7 | 0 | 2 | 10 | 6 | 13 | 3 | 7 | 3 | 4 | 4 | 20 | 23 | 121 |

출처: "DPRK VNR 2021," pp. 51~63을 참조하여 저자가 재정리함.
 주: 북한이 VNR 보고서에서 밝힌 95개 세부목표와 132개 지표 수와 일부 차이가 있음. 북한이 제시한 지표 수와 미제시 지표 수를 합한 것과 유엔 지표 수에 차이가 나는 것은 북한이 UN 지표를 변형하여 VNR을 통해 새롭게 제안한 지표와 관련이 있음.

^{147/} 박영실, "북한의 통계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 및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협력 과제,"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발표자료, 2022.5.13.).

^{148/} 위의 글.

북한이 제시한 지표들은 크게 ① 글로벌 지표를 북한이 완전히 혹은 사실상 수용한 지표, ② 글로벌 지표는 유지하나 내용을 변경한 지표, ③ 새롭게 추가한 지표로 다양화 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세 번째와 관련해서 실제 북한은 2022년 2월 기준으로 글로벌 지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SDG 3.c.2 보건 부문 예산 지출 비율, SDG 4.3.2 일·학습병행제(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에 참여한 청소년 및 성인의 비율, SDG 6.1.2 중력식 급수공급 시스템에 접근성을 가진 가구 비율 등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즉 북한은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통계 데이터의 집계 및 공개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표들을 정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 가지 주지할 점은 유엔이나 SDGs를 총괄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UN DESA(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유엔경제사회국)의 경우 특정 국가의 SDGs 이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VNR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국가나 지역 단위별 특정한 경향성을 판단하기도 하지만 국가 보고서에 대한 평가나 질(quality)에 판단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149/} UN DESA도 SDGs 세부목표와 지표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북한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유엔 차원에서는 개별 국가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이행 현황 및 세부목표와 지표의 수용 정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150/} 이점에서 유엔은

149/ Heewoong Kim(JOINT SDG FUND Report & Evaluation Manager) 인터뷰 (2022.8.3., 미국 뉴욕).

150/ Amson Sibanda(Chief, National Strategies and Capacity Building Branch, Divi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 DESA) 인터뷰 (2022.8.1., 미국 뉴욕).

국가의 요청이 있을 때 SDGs 이행이나 VNR 준비를 다방면으로 지원하며 지표에 대한 표준화, 정기적인 자료수집 등을 통해 비교가능한 지표들을 해당국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지만 글로벌 지표를 얼마나 수용하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해당 국가에 달려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151/}

다. 지표 가용도 현황

지표의 수용도 함께 지표의 가용도(availability) 역시 상당히 중요하다. SDGs에서 지표는 개별 목표의 이행 상황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단이 되며 세계 전체 및 지역 차원에서 비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중요하다. SDGs를 이행하는 국가들은 유엔의 글로벌 지표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국가의 통계 역량 및 데이터 확보 여부에 따라 지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다른 대안 지표를 제시하기도 한다.

UN DESA는 유엔통계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SDG 지표 데이터 플랫폼(Global SDG Indicator Data Platform)을 운영하여 전 세계의 SDGs 지표를 수집하고 가용 정도를 집계하고 있다. 2015년 이래 최소 1개년 혹은 2개년 이상 데이터포인트를 갖고 있는 데이터 시리즈를 대상으로 국가 데이터 및 글로벌 차원의 모니터링 데이터 모두를 합한 경우 목표별 북한의 SDGs 가용 평균 비율은 다음과 같다.

^{151/} 물론 유엔통계국(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은 2030 의제 실행을 위해 주요 국가들의 통계 관련 기관과의 협조하에 데이터를 요청하고 표준화하며 지표들을 검토, 수정, 보완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

표 II-7 북한 SDGs 데이터 가용도

(단위: %)

| SDGs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 평균 (A) | 14.3 | 21.9 | 61.0 | 10.0 | 4.2 | 57.0 | 80.0 | 25.0 | 38.5 | 30.8 | 5.6 | 17.3 | 0.0 | 11.1 | 39.9 | 10.2 | 24.4 |
| 평균 (B) | 14.3 | 27.1 | 81.2 | 20.7 | 20.8 | 64.3 | 80.0 | 33.3 | 38.5 | 33.3 | 33.3 | 21.8 | 0.0 | 17.8 | 51.4 | 13.0 | 25.3 |

출처: UNDESA Statistics Division, "Data Availability," (Accessed September 30, 2022)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주: Data Point: Data for at least two years since 2015(A), Data for at least one year since 2015(B); Nature: All; Analysis Type: Compare Countries across all goals.

2015년 이래 최소 2년 이상 데이터포인트를 가진 경우를 기준으로 데이터 가용성 비율을 범주화할 때 0%에서 25% 미만 사이의 목표는 10개, 25%에서 50% 사이는 4개, 50%에서 75%는 2개, 75%에서 100% 사이는 1개였다. 즉 북한의 SDG 3 건강과 웰빙, SDG 6 깨끗한 물과 위생, SDG 7 에너지 등의 데이터 가용성이 다른 목표들에 비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 이래 최소 1개년 이상 데이터포인트를 가진 경우로 한다면 0%에서 25% 미만 사이의 목표는 7개, 25%에서 50% 사이는 6개, 50%에서 75%는 2개, 75%에서 100% 사이는 2개였다. 데이터 가용성 비율 50% 이상에 해당하는 목표는 SDG 3 건강과 웰빙, SDG 6 깨끗한 물과 위생, SDG 7 에너지, SDG 15 육상생태계로 나타났다.

최소한의 추세분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시점 이상의 데이터 포인트를 보유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다수의 북한 SDG에서 데이터 가용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위의 데이터는 국가 내에서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데이터뿐 아니라 조정되거나 추정되거나 모델링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 및 국제적인 모니터링 데이터(global monitoring data)도 포함하는 경우이다. 만약 국가 데이터나 국가 데이터 중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 정의, 분류에 부합하여 국제적인

비교가능성이 확보된 데이터로 한정할 경우 북한의 데이터 가용도는 더욱 떨어지게 된다.

표 II-8 북한 SDGs 데이터 가용도 범주화

| 범주 | 0~25% | 25~50% | 50~57% | 75~100% |
|------------|--|---|------------------|-----------------|
| 평균% (A) | SDG 1, SDG 2, SDG 4, SDG 5, SDG 11, SDG 12, SDG 13, SDG 14, SDG 16, SDG 17 | SDG 8, SDG 9, SDG 10, SDG 15 | SDG 3, SDG 6 | SDG 7 |
| 평균% (B) | SDG 1, SDG 4, SDG 5, SDG 12, SDG 13, SDG 14, SDG 16 | SDG 2, SDG 8, SDG 9, SDG 10, SDG 11, SDG 17 | SDG 6, SDG 15 | SDG 3, SDG 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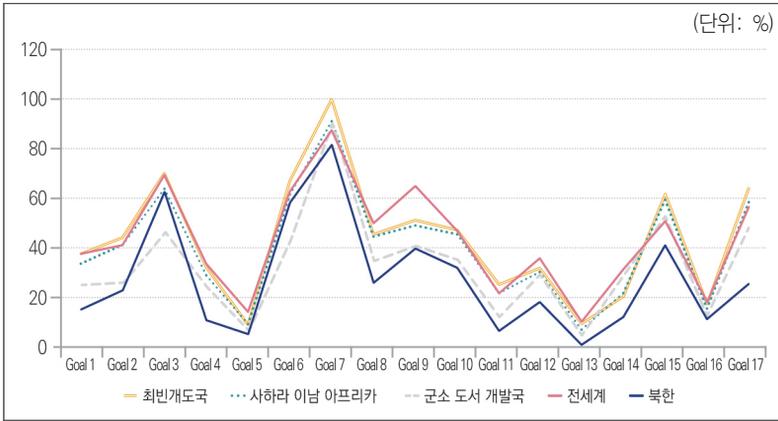
출처: UNDESA Statistics Division, "Data Availability," (Accessed September 30, 2022)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주: Data Point: Data for at least two years since 2015(A), Data for at least one year since 2015(B); Nature: All; Analysis Type: Compare Countries across all goals.

<그림 II-1>이 보여주듯이 2015년 이래 최소 2개년 이상 데이터 포인터를 기준으로 북한의 17개 SDG 데이터 가용도는 전 세계 평균을 밑돌았다.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 군소도서개발국(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등 주요 권역들과^{152/} 비교해 볼 때 북한의 경우 SDG 3 건강과 웰빙, SDG 6 깨끗한 물과 위생을 제외하고 모든 목표들의 데이터 가용도가 낮게 나타났다. 물론 각각의 목표들에서 북한보다 데이터 가용도가 낮은 국가들은 확인이 된다. 그렇지만 일부 목표를 제외하고 북한 SDGs의 전반적인 데이터 가용도는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152/} 기타 국가로 오세아니아(Oceania), 중앙·남아시아(Central and Southern Asia),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유럽과 북아메리카(Europe and Northern America),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Western Asia and Northern Africa),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Eastern Asia and South-eastern Asia) 등이 검토됨.

그림 II-1 세계 및 권역별 SDGs 데이터 가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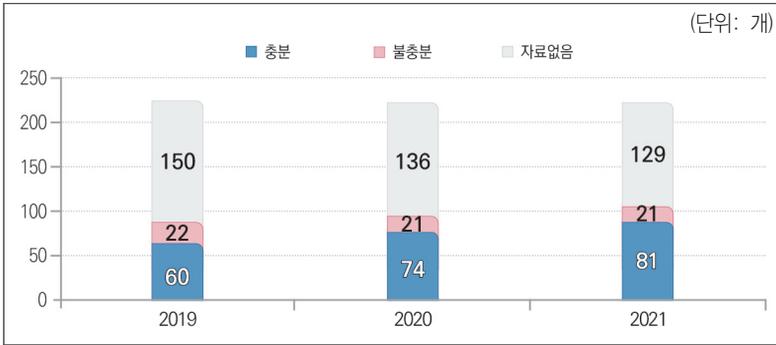
출처: UNDESA Statics Division, "Availability," (Accessed September 30, 2022)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정리함.

주: Data Point: Data for at least two years since 2015; Nature: All; Analysis Type: Global and regional summary reports.

ESCAP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심으로 지표 가용도 현황을 제공한다. ESCAP 통계는 2000년 이래 두 시점 이상의 데이터 포인트를 보유한 최소 한 개 이상의 데이터 시리즈가 있어 시계열 경향 분석이 가능한 경우를 ‘충분 데이터(sufficient data)’로, 최소 한 개 이상의 데이터 시리즈가 있으나 시계열 경향 분석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불충분 데이터(insufficient data)’로, 데이터가 없는 경우는 ‘자료 없음(no data)’으로 분류한다.^{153/} 이 기준에 따르면 북한의 SDG 지표 가용도는 최근 일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2021년 기준 ‘충분 데이터’는 81개로 35.1%에 불과하고 ‘자료 없음’이 129개로 55.8%에 이른다. 충분 데이터만 놓고 볼 때 북한의 데이터 가용도는 동북아시아 및 아시아태평양 평균보다 낮은 가용도를 보이고 있다.

^{153/} UNESCAP, *Asia and the Pacific SDG Progress Report 2021* (Bangkok: UNESCAP, 2021), p. 14.

그림 11-2 북한 SDGs 지표 가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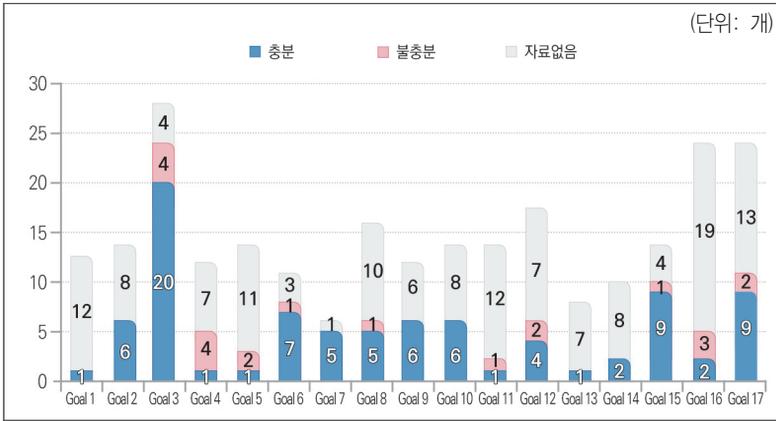


출처: ESCAP SDG Gateway Asia Pacific, “Data Analysis,” (<https://data.unescap.org/data-analysis/sdg-data-availability>) (Accessed September 11, 2022)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전체 목표별 지표 가용도를 보더라도 유엔 통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SDG 3, SDG 6, SDG 7, SDG 15 등에서는 ‘충분 데이터’가 많았으나, SDG 1, SDG 5, SDG 8, SDG 11, SDG 12, SDG 13, SDG 14, SDG 16, SDG 17 등은 상대적으로 ‘자료 없음’이 많이 나타났다. 북한의 SDG 지표 가용도 차이의 원인은 복합적일 수 있다. 대부분의 SDG 지표들은 가계조사, 국가의 행정 데이터, 국제기구 보고 자료에 기반한다.^{154/} 북한의 경우 전체적으로 이러한 조사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각 행정단위의 데이터들이 객관적, 과학적으로 집계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건강, 영양, 식수위생 관련 목표 데이터 가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그나마 UNICEF(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 유엔아동기금), WHO, WFP(World Food Programme, 세계 식량계획) 등이 조사했던 데이터들이 집계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154/} UNESCAP, *Asia and the Pacific SDG Progress Report 2022* (Bangkok: UNESCAP, 2022), p. 65.

그림 II-3 SDG별 북한의 지표 가용도, 2021



출처: ESCAP SDG Gateway Asia Pacific, “Data Analysis,” (Accessed September 11, 2022)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3. 북한의 SDGs 이행: 글로벌 개발의제의 지역화

북한의 2030 의제 동참 및 SDGs에 대한 이행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새로운 개발 접근 방식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적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 실제 북한은 2014년 9월 “자주적인 유엔성원국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것”을 분명히 하고,^{155/} “변혁적인 포스트-2015 개발의제”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156/} 북한이 SDGs라는 국제사회의 보편 규범에 동참한다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은 단순히 경제성장뿐 아니라 사회적 공정성과 환경의 지속성이 연계되어 있고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빈곤, 농업, 교육, 양성평등, 경제성장, 기후변화, 육상 및 해양생태계 등

^{155/} “조선대표단 단장 공화국은 자주적인 유엔성원국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조선중앙통신』, 2014.9.28.

^{156/} UN Doc. A/69/PV.16 (27 September 2014), p. 8.

다양한 의제와 관련된 정책들을 수립하고 지표 및 이행 체계를 구축하며 필요한 데이터를 생산 및 공유하면서 국제적 기준과 방법론에 맞추어 조정해 나가는 작업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 의제가 북한에서 내재화되는 단계와 수준은 다양할 것이며 이는 북한과 유엔 간의 관계, 북한의 대외관계 원칙과 이념, 북한의 발전전략 차원 등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유엔 체제를 인정하고 SDGs와 같이 유엔이 주도하는 주요 담론에 동의와 지지를 표하면서도 발전을 위한 평화 조성, 자주권의 보장, 선진국의 적극적인 노력 등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동등한 회원국으로 발전의 수준에 관계없이 자주권과 평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상호존중, 내정불간섭, 호혜적 이익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헌법 원칙들이 대유엔 관계에서도 투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엔 역시 전략계획을 통해 북한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북한의 취약계층의 인도적 필요에 대응하며 2030 의제 실현과 관련된 사업원칙 및 핵심가치 등을 북한에 적용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SDGs 수용 이유 및 내재화는 북한의 대외관계, 내부의 경제발전전략과의 연계, 북한 개발협력의 필요와 진화라는 차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선택이자 결과이다.

유엔 차원의 SDGs라는 주류 담론이 북한에서 지역화 혹은 현지화될 때 나름의 모방이나 변형 등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비록 지속가능한 발전이 자발적인 참여와 이행으로 이루어지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파트너십을 지향하지만 SDGs의 국제화·주류화·표준화 방향은 이에 대한 준비와 대응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국가들에게는 타협과 절충, 특화 방식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목표와 세부목표들을 부분적·단계적·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특정 지표를 거부 혹은 변형하거나 새로운 지표를 제시하는 것도 이러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우리식 SDGs’를 표방하는 점은 지역화라는 차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지역화의 범위와 수준을 누가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SDGs 자체가 갖는 한계나 비판에 대한 논의와도 결부되어 있다. 무엇보다 ‘아무도 뒤쳐지지 않게 한다’는 원칙이 2030 의제에서 강력하게 추동되는 것은 사실이나 글로벌하게 추진되는 SDGs가 여전히 유엔 기구 중심적이라는 현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발전 경로에 있는 개도국 혹은 저소득국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 또한 가능하다. 또한 MDGs나 SDGs가 국가 고유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환경과 행위자들을 파악하고 오랜 기간의 고유한 역사적 발전 경로를 추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한다.^{157/} 이러한 점에서 지배적인 사회운동과 담론으로 자리매김할 때 처방되는 해결책과 프레임워크들이 사회와 정치 변화에 대한 혁신을 가져오기보다 기존의 제도와 이익구조를 오히려 강화하거나 국제 개발의 핵심제도나 기관들의 기준에 의해 근원적인 자격이 박탈되거나 재생산되는 것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비판론자들은 SDGs는 글로벌 발전 차원으로 기획된 하나의 정치적 프로젝트이며, 핵심 원칙과 프레임워크는 근원적인 삶의 지속성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편적인 권리를 제공하기보다 상업적 이익이 우선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158/}

북한의 SDGs 이행의 가장 큰 걸림돌은 목표 및 세부목표의 부합성이나 지표체계의 수용성, 통계역량의 취약성, 데이터의 가용성이

157/ Jane Briant Carant, “Unheard voices: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evolution in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ird World Quarterly*, vol. 38, no. 1 (2016), p. 17.

158/ Heloise Weber, “Politics of ‘Leaving No One Behind’: Contesting the 2030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genda,” *Globalizations*, vol. 14, no. 3 (2017), pp. 399~400.

아니라 북한이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주도하는 2030 의제에 대한 인식과 도구화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은 지난 경제발전5개년 전략의 실패를 인정한 이후 내부적으로는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을 강조하고 핵무력정책 노선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2021년 새로운 5개년계획을 착수하면서 “중앙집권적이며 계획적인 자력갱생, 과학기술에 의거한 자력갱생, 바로 여기에 우리 경제의 사회주의적 성격과 자립성을 견지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유일한 출로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159/} 인간의 필요(needs) 및 우선순위가 확인되지 않고 북한에서 정권의 지속성에만 매달리게 되는 상황이 초래된다면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사회, 환경,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북한 내에서 더욱 요원해질 가능성이 있다.^{160/}

159/ “새로운 5개년계획의 기본종자, 주제,” 『로동신문』, 2021.8.7.

160/ Gyubin Choi, “Sustainability of North Korean SDGs: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Global NK: Zoom & Connect*, EAI, 29 July 2022, <<https://www.globalnk.org/report/view?cd=REP000035>> (검색일: 2022.9.30.).

Ⅲ. 분야별 SDGs 지표 현황 분석

최원근(통일연구원)

김형렬(서울대학교)

윤인주(한국해양수산개발원)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분야별 SDGs 지표 현황 분석

1. 인간과 사회발전 분야

가. SDG 1 빈곤퇴치

(1) 목표 및 지표 개관

(가) SDG 1 목표와 지표

SDG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퇴치는 앞선 MDGs에 이어 SDGs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목표 중 하나이다. 특히 국제사회가 정한 1일 1.90달러 미만의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는 인구는 단순히 경제적 가난이라는 의미뿐 아니라 기아, 질병, 기후변화 등 자연 및 사회적 환경 변화에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빈곤은 SDGs 달성을 위해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기존의 MDGs로부터 꾸준히 이어져 온 국제사회의 노력의 결과로 전 세계의 빈곤선 미만 인구는 2010년 15.7%에서 2015년 10%, 2017년에는 9.3%, 2019년에는 8.4%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161/}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1998년 이래 처음으로 감소세가 반전

^{161/} Jeffrey D. Sachs *et 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1: The Decade of Ac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1), p. 26.

하여 2020년에는 빈곤율이 다시 9.5%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2030년까지 전 세계의 빈곤율은 약 7%로 6억 명 가량의 인구가 여전히 빈곤선 미만에 머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162/}

SDG 1은 빈곤의 현상과 영향력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즉, 국제적 기준과 각 국가별 기준에 따른 빈곤인구를 감소시키고, 빈곤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자연적 재난과 위험에 대한 안전망의 확보를 지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히 빈곤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안전망과 기초 서비스를 통한 보호와 특히 빈곤계층이 취약한 상황에 노출되는 자연재해의 위험 감소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빈곤퇴치의 전 지구적 협력의 달성을 위해 빈곤 감소 ODA, 정부 총지출 및 공공사회지출 등 전 지구적 및 전사회적 대응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인다.

SDG 1은 모두 7개의 세부목표와 13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7개의 세부목표는 SDGs의 기준인 하루 생계비 1.25달러 이하의 빈곤인구(1.1) 및 각 국가별 기준에 따른 빈곤선 이하 생활인구(1.2)와 관련된 내용 외에도 사회보장제도(1.3) 및 재산권(1.4)과 관련된 제도적 접근성, 재난 위험 감소(1.5)와 빈곤퇴치와 관련된 개발협력 자원(1.a) 및 파트너십(1.b)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 밖에 세부적 지표는 다음 <표 III-1>과 같다.

^{162/} Ibid., p. 26.

표 III-1 SDG 1 세부목표와 지표

| 세부목표 | 지표 |
|--|---|
| 1.1 2030년까지 1일 생계비 1.25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는 모든 인구를 모든 곳에서 종식 | 1.1.1 국제빈곤선 미만에서 살고 있는 인구 비율 (성, 연령, 고용상태 및 지역별) |
| 1.2 각 국가빈곤 정의에 따라 2030년까지 모든 측면에서 빈곤 속에 사는 모든 연령층의 남성, 여성 그리고 아동 비율을 최소 절반으로 감소 | 1.2.1 국가빈곤선 미만에서 살고 있는 인구 비율 (성 및 연령별) |
| | 1.2.2 국가별 정의에 따른 모든 차원의 빈곤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연령의 남성, 여성 및 아동 비율 |
| 1.3 사회안전망을 포함해 모두를 위해 국가별로 적합한 사회적 보호체제 및 조치를 이행하고,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 달성 | 1.3.1 사회보호제도 보장인구 비율(성, 아동, 실업자, 노인, 장애인, 임산부, 신생아, 산업재해자, 빈곤층 및 취약계층별) |
| 1.4 2030년까지 모든 남성과 여성,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경제적 자원과 기본 서비스, 토지와 기타 형태의 재산에 대한 소유와 통제, 상속, 천연자원, 적정 신기술 및 소액금융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 1.4.1 기초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 가구에 살고 있는 인구 비율 |
| | 1.4.2 (a) 법적으로 인정된 문서를 가지며 (b) 토지권이 보장된다고 인식하는, 안정된 토지권을 갖는 성인 인구 비율(성 및 보유형태별) |
| 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회복력을 키우고, 기후 관련 극한 상황 혹은 기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인 충격과 재난에 대한 노출 및 취약성 감소 | 1.5.1 인구 10만 명당 재난으로 인한 사망, 실종,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수 |
| | 1.5.2 글로벌 GDP 대비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 경제 손실비 |
| | 1.5.3 '재난위험감축을 위한 센다이프레임워크(2015~2030)'에 따라 국가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
| | 1.5.4 국가의 재난위험감축전략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전략을 갖추고 있는 비율 |
| 1.a 개도국 특히, 최빈국이 모든 차원의 빈곤퇴치 프로그램과 정책 제공을 위해 증강된 개발협력 을 포함해 다양한 재원 동원 보장 | 1.a.1 수원국 GNI 대비 빈곤감소 ODA 총액 비율 |
| | 1.a.2 정부 총지출 중 필수 서비스(교육, 의료 및 사회적 보호) 지출 비율 |
| 1.b 빈곤퇴치 활동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빈곤층 친화적이고 성인지적 개발전략을 기초로 한 국가, 지역, 글로벌 차원의 탄탄한 정책 프레임워크 수립 | 1.b.1 빈곤 친화적 공공사회지출 |

출처: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 (<https://sdgs.un.org/goals/goal1>) (Accessed June 21, 2022); 통계청 통계개발원,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1』 (대전: 통계청 통계개발원, 2021), p. 91.

주: 이하 통계청 통계개발원, 『한국 SDGs 이행보고서 2021』을 통계개발원, 『한국 SDG 이행 보고서 2021』로 표기.

ESCAP의 2017년과 2021년의 지표 수집 가능성 평가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SDG 1 지표의 수집 가능성은 상당히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017년 SDG 1 지표들은 빈곤인구 비율(1.1.1)과 정부 지출 중 필수 서비스 비율(1.a.2)만 ‘충분’에 해당하고, 그 외에는 모두 ‘불충분’ 또는 ‘자료 없음’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2021년에는 이런 상황이 크게 개선되어, 국가별 빈곤 인구 비율(1.2.2), 토지소유권 비율(1.4.2), 빈곤 친화적 공공지출(1.b.1)을 제외한 모든 지표가 ‘충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을 기준으로 총 9개의 지표 수집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토지소유권 비율(1.4.2)은 ‘불충분’으로, 그 밖에 국가빈곤선 미만에서 살고 있는 인구 비율(1.2.1), 국가별 정의에 따른 모든 차원의 빈곤 인구 비율(1.2.2), 빈곤 친화적 공공사회지출(1.b.1)은 ‘자료 없음’으로 분류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빈곤 관련 지표들이 ‘자료 없음’으로 분류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K-SDGs를 통해 SDG 1을 현지화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실정에 어울리지 않는 국제사회의 빈곤기준보다는 국내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은 SDG 1의 지표 수집가능성에서 매우 미진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SDG 1 지표들 가운데 1.4.1(기초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만이 수집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평가되었고, 그 외의 모든 지표가 ‘자료 없음’으로 분류되었다. 북한의 지표 수집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는 것은 북한 체제의 특성상 직접적으로 빈곤과 관련된 통계나 자료는 물론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등 간접적으로 빈곤율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공개된 북한의 VNR 보고서는 자체

적인 1인당 GDP를 공개하였는데,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의 빈곤율을 파악할 수 있다.

표 III-2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SDG 1 지표 수집 가능성

| 지표 | 티어 그룹 | 아시아태평양 2017 | | | 아시아태평양 2021 | | | 한국 2021 | | | 북한 2021 | | |
|---|-------|-------------|-----|-------|-------------|-----|-------|---------|-----|-------|---------|-----|-------|
| | | 충분 | 불충분 | 자료 없음 | 충분 | 불충분 | 자료 없음 | 충분 | 불충분 | 자료 없음 | 충분 | 불충분 | 자료 없음 |
| 1.1.1 국제빈곤선 미면에서 살고 있는 인구 비율 (성, 연령, 고용상태 및 지역별) | I | ○ | | | ○ | | | ○ | | | | | ○ |
| 1.2.1 국가빈곤선 미면에서 살고 있는 인구 비율 (성 및 연령별) | I | | ○ | | ○ | | | | | ○ | | | ○ |
| 1.2.2 국가별 정의에 따른 모든 차원의 빈곤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연령의 남성, 여성 및 아동 비율 | II | | | ○ | | ○ | | | | ○ | | | ○ |
| 1.3.1 사회보호제도 보장인구 비율(성, 아동, 실업자, 노인, 장애인, 임산부, 신생아, 산업재해자, 빈곤층 및 취약계층별) | I | | ○ | | ○ | | | ○ | | | | | ○ |
| 1.4.1 기초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 가구에 살고 있는 인구 비율 | I | | | ○ | ○ | | | ○ | | | ○ | | |
| 1.4.2 (a) 법적으로 인정된 문서를 가지며 (b) 토지권이 보장된다고 인식하는, 인정된 토지권을 갖는 성인 인구 비율(성 및 보유형태별) | II | | | ○ | | ○ | | | | ○ | | | ○ |
| 1.5.1 인구 10만 명당 재난으로 인한 사망, 실종,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수 | I | | ○ | | ○ | | | ○ | | | | | ○ |
| 1.5.2 글로벌 GDP 대비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 경제손실비 | II | | ○ | | ○ | | | ○ | | | | | ○ |
| 1.5.3 '재난위험감축을 위한 샌다이프레임워크(2015~2030)'에 따라 국가재난위험 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 I | | ○ | | ○ | | | ○ | | | | | ○ |
| 1.5.4 국가의 재난위험감축전략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전략을 갖추고 있는 비율 | II | | | ○ | ○ | | | ○ | | | | | ○ |
| 1.a.1 수원국 GN 대비 빈곤감소 ODA 총액 비율 | I | | | ○ | ○ | | | ○ | | | | | ○ |
| 1.a.2 정부 총지출 중 필수 서비스(교육, 의료 및 사회적 보호) 지출 비율 | II | ○ | | | ○ | | | ○ | | | | | ○ |
| 1.b.1 빈곤 친화적 공공사회지출 | II | | | ○ | | ○ | | | ○ | | | | ○ |

출처: UNESCAP, *Statistical Yearbook for Asia and the Pacific 2017: Measuring SDG progress in Asia and the Pacific: Is There Enough Data?* (United Nations Publication, 2017), pp. 30~34; ESCAP SDG Gateway Asia Pacific, "Data Analysis," (Accessed June 21, 2022)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나) SDG 1 지표 관리기구와 수집 현황

다음의 <표 III-3>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SDG 1의 지표들은 다양한 기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먼저 빈곤과 관련된 지표들은 세계은행(World Bank)과 각국 정부가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 UNICEF 등의 기관과 협력을 통해 조사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국제빈곤선 미만의 인구(1.1.1)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 외에 국가빈곤선 이하의 인구(1.2.1) 및 국가별 정의에 따른 빈곤 인구(1.2.2)는 각국 정부가 관리한다. 한편,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지표들인 사회보장제도 보장인구 비율(1.3.1)은 ILO가, 기초 서비스 접근 가능 인구 비율(1.4.1)은 UN-Habitat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유엔인간정주 계획), 토지소유권(1.4.2)은 세계은행 및 UN-Habitat가 관리한다. 재난관리에 해당하는 세부목표 1.5 이하의 지표들인 1.5.1, 1.5.2, 1.5.3, 1.5.4는 UNDRR(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이 중심적 역할을 한다. 그 외에 빈곤감소 ODA(1.a.1)는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빈곤 친화적 공공사회지출(1.b.1)은 UNICEF가 관리하며, 정부의 필수 서비스 지출 비용(1.a.2)은 ILO, UNESCO-UIS(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유네스코 통계국), WHO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북한은 빈곤을 이외에 사회보장제도 접근성, 재난 대비 등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SDG 1의 지표들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빈곤과 관련된 지표들(1.1.1, 1.2.1, 1.2.2)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 외의 영역에서 총 7개의 지표들을 보유하고 있다.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지표 3개 중 사회보장제도 보장인구 비율(1.3.1) 및 기초 서비스 접근 가능 인구 비율(1.4.1)의 2개를 보유하고 있다. 재난

관리와 관련된 4개의 지표들(1.5.1, 1.5.2, 1.5.3, 1.5.4)은 모두 보유하고 있어 북한 당국의 관심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 밖에 비록 북한 내의 상황에 맞게 변용되었지만 빈곤감소 관련 ODA와 관련된 지표(1.a.1)도 보유하고 있다.

표 III-3 SDG 1 지표 현황 및 관리기구와 북한의 지표 보유 현황

| 세부목표 | 지표 | 변경 티어 | 가능한 관리기관 | 파트너 기관 | 북한 보유 여부 |
|--|--|----------|------------------------|--|----------------|
| 1.1 2030년까지 1일 생계비 1.25 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는 모든 인구를 모든 곳에서 충족 | 1.1.1 국제빈곤선 미만에서 살고 있는 인구 비율(성 연령, 고용 상태 및 지역별) | I | World Bank | ILO | X |
| 1.2 각 국가빈곤 정의에 따라 2030년까지 모든 측면에서 빈곤 속에 사는 모든 연령층의 남성, 여성, 그리고 아동 비율을 최소 절반으로 감소 | 1.2.1 국가빈곤선 미만에서 살고 있는 인구 비율(성 및 연령별) | I | Govt. | UNICEF, World Bank | X |
| | 1.2.2 국가별 정의에 따른 모든 차원의 빈곤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연령의 남성, 여성 및 아동 비율 | II | Govt. | UNICEF, World Bank | X |
| 1.3 사회안전망을 포함해 모두를 위해 국가별로 적합한 사회적 보호체제 및 조치를 이행하고,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 달성 | 1.3.1 사회보호제도 보장인구 비율 (성, 이동, 실업자, 노인, 장애인, 임산부, 신생아, 산업재해자, 빈곤층 및 취약계층별) | I | ILO | World Bank | O |
| 1.4 2030년까지 모든 남성과 여성,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경제적 자원과 기본 서비스, 토지와 기타 형태의 재산에 대한 소유와 통제, 상속, 천연자원, 적정 신기술 및 소액금융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 1.4.1 기초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 가구에 살고 있는 인구 비율 | I | UN-Habitat | UNICEF, WHO | O |
| | 1.4.2 (a) 법적으로 인정된 문서를 가지며 (b) 토지권이 보장된다고 인식하는, 인정된 토지 권을 갖는 성인 인구 비율(성 및 보유형태별) | II | World Bank, UN-Habitat | FAO, UNSD, UN Women, UNEP, IFAD | X |
| 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회복력을 키우고, 기후 관련 극한 상황 혹은 기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인 충격과 재난에 대한 노출 및 취약성 감소 | 1.5.1 인구 10만 명당 재난으로 인한 사망, 실종,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수 | I | UNDRR | UN-Habitat, UNEP, DESA Population Division | O |
| | 1.5.2 글로벌 GDP 대비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 경제손실비 | II | UNDRR | UNEP, FAO | O |
| | 1.5.3 '재난위험감축을 위한 샌다이 프레임워크(2015~2030)'에 따라 국가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 I | UNDRR | UNEP | O |
| | 1.5.4 국가의 재난위험감축전략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전략을 갖추고 있는 비율 | II | UNDRR | | O |

| 세부목표 | 지표 | 변경 티어 | 가능한 관리기관 | 파트너 기관 | 북한 보유 여부 |
|--|---|----------|--|--------|----------------|
| 1.a 개도국 특히, 최빈국이 모든 차원의 빈곤퇴치 프로그램과 정책 제공을 위해 증강된 개발협력을 포함해 다양한 자원 동원 보장 | 1.a.1 수원국 GNI 대비 빈곤감소 ODA 총액 비율 | I | OECD | | ○ |
| | 1.a.2 정부 총지출 중 필수 서비스 (교육, 의료 및 사회적 보호) 지출 비율 | II | Under Discussion among agencies (ILO, UNESCO-UIS, WHO) | | X |
| 1.b 빈곤퇴치 활동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빈곤층 친화적이고 성인지적 개발전략을 기초로 한 국가, 지역, 글로벌 차원의 탄탄한 정책 프레임워크 수립 | 1.b.1 빈곤 친화적 공공사회지출 | II | UNICEF | | X |

출처: IAEG-SDGs, "Tier Classification for Global SDG Indicators," <<https://unstats.un.org/sdgs/iaeg-sdgs/tier-classification/>> (Accessed on May 28, 2022); 통계개발원, 『한국 SDG 이행보고서 2021』, p. 91; "DPRK VNR 2021," p. 58;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번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이행에 관한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 <<https://ksm.or.kr/?uid=1715&mod=document&charity-project=download>> (검색일: 2022.5.28.), p. 56을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주: 이하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번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이행에 관한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를 북한협 번역, "북한 VNR 보고서 2021"으로 표기.

(다) K-SDG 1 세부목표와 지표

SDG 1 빈곤퇴치와 관련하여 한국의 K-SDGs는 기본적으로 빈곤인구 감소와 빈곤을 발생시키거나 빈곤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위기와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SDG 1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K-SDG는 상당한 수준의 현지화(localization)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K-SDG 1은 저개발국가의 상황에 초점을 맞춘 빈곤퇴치 관련 세부목표와 지표들을 한국이 처한 경제적·사회적 도전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변용하고 있다.

K-SDG 1의 가장 큰 특징은 국제사회의 절대적 빈곤율과 관련된 세부목표 1.1과 관련된 내용이 삭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상 하루 1.25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절대적 빈곤율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K-SDGs는

SDG 세부목표 1.2의 국가별 정의에 따른 빈곤율을 세부목표 1.1로 반영하였으며, 빈곤인구 비율을 OECD 평균 이하로 줄이는 것을 구체적 세부목표로 설정하였다. K-SDG 1의 특징 중 하나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세부목표 1.2, 1.3, 1.4를 통해 사회보장제도, 사회서비스 및 긴급복지지원 등을 위한 지표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K-SDGs는 자연재해나 재난에 관해서는 지표 1.4.2에서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사망률 비중만을 다루고 있어 그 비중이 다소 낮다고 평가된다.

표 III-4 K-SDG 1 세부목표와 지표

| K-SDG 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 |
|--|---|
| 세부목표 | 지표 |
| 1.1. 남·녀·노·소, 장애·여부 등과 관계없이 빈곤 인구 비율을 OECD 평균 이하 수준으로 줄인다. | 1.1.1. 중위 가처분소득 50% 기준 상대빈곤율 - 성별, 연령, 장애·집단·여부별 |
| | 1.1.2. 복지 급여(소득보장) 예산 및 GDP 대비 비율 |
| 1.2.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달성한다. | 1.2.1. 의료비 가계직접 본인부담률 |
| | 1.2.2. 고용보험 가입률 |
| | 1.2.3.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율 |
| 1.3.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 1.3.1. GDP 대비 공적 사회 지출 비중(%) (지출항목별) |
| | 1.3.2.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 |
| 1.4.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경제·사회·환경적 충격 및 재난에 대한 노출을 감소하고, 회복력을 강화한다. | 1.4.1. 취약계층 긴급복지지원 예산 및 비율 ※ 긴급복지 예산 = 긴급복지지원금 + 일자리사업 |
| | 1.4.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사망률의 비중 |

출처: 관계부처 합동, 『제4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2021~2040 제1부』 (2021), p. 45.

(2) 북한 현황

(가) 북한의 SDG 1 목표와 세부목표 및 지표

북한 역시 SDG 1 목표인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퇴치를 자체적인 NDGs의 인민 생활 수준의 지속적 개선으로 현지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SDGs에서 설정하고 있는 주요 지표들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SDGs 달성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대표적으로 북한의 NDG 1에는 빈곤이라는 용어나 개념 자체가 빠져 있다는 특징이 있다. 구체적으로 SDG 1.1의 절대빈곤 미만 인구 및 1.2의 국가 빈곤선 이하의 인구라는 두 세부목표가 북한 NDG에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SDG 1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빈곤퇴치 관련 세부목표 및 지표가 북한의 NDG 1에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북한은 빈곤의 개념과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밖에 북한의 NDG는 주택분배(1.1), 고아와 노인 등 소외계층(1.2), 사회보장제도(1.3) 및 문화 및 휴양(1.4) 등을 중심으로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북한은 SDG의 재난대응에 관한 세부목표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NDG의 세부목표 1.5는 재난위험 경감계획에 대한 SDG의 지표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재난대응에 관련된 북한 당국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5 유엔과 북한의 SDG 1 비교

|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퇴치 | | 인민생활 수준의 지속적인 개선 | |
|--|---|---|---|
| 유엔 SDGs(7개 세부목표, 13개 지표) | | 북한 SDGs(6개 세부목표, 9개 지표) | |
| 세부목표 | 지표 | 세부목표 | 지표 |
| 1.1 2030년까지 1일 생계비 1.25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는 모든 인구를 모든 곳에서 종식 | 1.1.1 국제빈곤선 미만에서 살고 있는 인구 비율 (성, 연령, 고용상태 및 지역별) | 1.1 2030년까지 주택 분배 시스템과 국가 배급으로 인민의 물질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킨다. | 1.1.3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 |
| 1.2 각 국가빈곤 정의에 따라 2030년까지 모든 측면에서 빈곤 속에 사는 모든 연령층의 남성, 여성, 그리고 아동 비율을 최소 절반으로 감소 | 1.2.1 국가빈곤선 미만에서 살고 있는 인구 비율 (성 및 연령별) 1.2.2 국가별 정의에 따른 모든 차원의 빈곤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연령의 남성, 여성 및 아동 비율 | 1.2 돌볼 사람이 없는 고아와 노인이 걱정을 모르고 살 수 있도록 당의 예산을 늘린다. | 1.2.1 개설되거나 신설된 초등학교, 중등학교, 육아원, 애육원, 양로원 |
| 1.3 사회안전망을 포함해 모두를 위해 국가별로 적합한 사회적 보호체제 및 조치를 이행하고 | 1.3.1 사회보호제도 보장 인구 비율(성, 아동, 실업자, 노인 장애인, 임산부, 산생아, 산업 | 1.3 국가적으로 적절한 사회 보장제와 조치를 이행한다. | 1.3.1 사회보장제도를 지원 받는 인구 비율 |

|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퇴치 | | 인민생활 수준의 지속적인 개선 | |
|--|---|--|---------------------------------------|
| 유엔 SDGs(7개 세부목표, 13개 지표) | | 북한 SDGs(6개 세부목표, 9개 지표) | |
| 세부목표 | 지표 | 세부목표 | 지표 |
|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 달성 | 재해자, 빈곤층 및 취약계층별) | | |
| 1.4 2030년까지 모든 남성과 여성,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경제적 자원과 기본 서비스, 토지와 기타 형태의 재산에 대한 소유와 통제, 상속, 천연자원, 적정 신기술 및 소액금융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 1.4.1 기초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 가구에 살고 있는 인구 비율 1.4.2 (a) 법적으로 인정된 문서를 가지며 (b) 토지권이 보장된다고 인식하는 안정된 토지권을 갖는 성인 인구 비율(성 및 보유 형태별) | 1.4 2030년까지 인민을 위한 인상적이고 현대적인 문화정서 생활기지를 증설하고 유급휴가제,료양, 휴가를 포함한 인민 중심의 정책을 강화한다. | 1.4.1 기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 |
| 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회복력을 키우고 기후 관련 극한 상황 혹은 기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인 충격과 재난에 대한 노출 및 취약성 감소 | 1.5.1 인구 10만 명당 재난으로 인한 사망, 실종,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수 | 1.5 2030년까지 완벽한 국가 체계를 구축하고 기후와 관련된 자연재해로부터 모든 인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1.5.1 인구 10만 명당 재해로 인한 사망 및 실종자수 |
| | 1.5.2 글로벌 GDP 대비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 경제 손실비 | | 1.5.2 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
| | 1.5.3 '재난위험감축을 위한 샌다이프레임워크(2015~2030)'에 따라 국가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 | 1.5.3 국가재난위험감축계획 |
| | 1.5.4 국가의 재난위험감축 전략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전략을 갖추고 있는 비율 | | 1.5.4 국가전략에 따라 지역별재난위험감축계획을 채택한 비율 |
| 1.a 개도국 특히, 최빈국이 모든 차원의 빈곤퇴치 프로그램과 정책 제고를 위해 증강된 개발협력력을 포함해 다양한 재원 동원 보장 | 1.a.1 수원국 GNI 대비 빈곤 감소 ODA 총액 비율 1.a.2 정부 총지출 중 필수 서비스(교육, 의료 및 사회적보호) 지출 비율 | 1.a 다양한 곳에서 상당한 재정적 동원을 보장한다. | 1.a.1 공적개발원조(ODA) - |
| 1.b 빈곤퇴치 활동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빈곤층 친화적이고 성인자적 개발전략을 기초로 한 국가, 지역, 글로벌 차원의 탄탄한 정책 프레임워크 수립 | 1.b.1 빈곤 친화적 공공사회 지출 | - | - |

출처: 통계개발원, 『한국 SDG 이행보고서 2021』, p. 91; “DPRK VNR 2021,” p. 51, p. 58; 북민협 번역, “북한 VNR 보고서 2021,” p. 50, p. 56.

(나) 북한의 SDG 1 우선순위와 계획

북한은 VNR 보고서를 통해 SDG 1의 우선순위를 “인민의 물질문화적 수요를 국가배급체계를 통해 충족시키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163/} 이를 위해 세부목표들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1.1), 소외계층 지원(1.2), 사회보장제도 이행(1.3) 및 휴양 및 휴가 관련 시설 및 제도 정비(1.4) 등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VNR 보고서는 이러한 세부목표들을 반영하여 평양과 삼지연시 등지를 중심으로 한 주택 무상분배, 수해복구 후 주택 무상분배, 육아원·애육원·초등학교·중등학교·양로원 등의 신설 및 개선, 문화정서생활기지 증설 등을 나열하고 있다.^{164/} 그밖에 북한은 자연재해 대응 역시 중요한 우선순위로 꼽고 있다.

북한은 VNR 보고서에서 SDG 1의 달성을 위한 주요 계획으로 세부목표들의 달성을 통해 사회주의 체제의 장점을 보여주는 것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SDG 1이 국제사회의 빈곤퇴치라는 목표와 상이하게 국내정치적 목적의 달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북한은 두 번째 계획으로 자연재해 피해를 줄인다는 것을 설정하고 있다.

(다) 북한의 SDG 1 지표 현황

북한은 빈곤퇴치와 관련된 총 13개의 지표 가운데 절반을 약간 넘는 7개를 보유하고 있다(1.3.1, 1.4.1, 1.5.1, 1.5.2, 1.5.3, 1.5.4, 1.a.1).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빈곤퇴치 목표에서 가장 중요한 빈곤선 이하에 해당하는 인구 등에 대한 지표가 제외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북한이 2021년 제출한 VNR에 제시된 NDGs에는 빈곤퇴치와 관련해서

^{163/}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13.

^{164/} *Ibid.*, pp. 13~14.

모두 9개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빈곤선 이하에 해당하는 인구비율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를 대신해 공동주택 거주 인구 비율이나 신설된 학교와 보육시설 등을 포함했다. 또한 다음 <표 III-6>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지표들 가운데 1.3.1, 1.4.1, 1.5.2, 1.a.1은 실제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한계가 있다.

북한이 NDGs를 통해 공개한 지표 1.1.3(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은 2015년 0.8%에서 2018년 0.6%, 2020년 0.5%로 다소 하락하고 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인구는 경제적 기반을 갖추기 전까지 기숙사 등 국가가 운영하는 주거시설에 머무는 인구를 의미하는데, 북한이 그동안 평양을 중심으로 새로운 주거단지를 대규모로 건설한 것을 미루어 국가의 주택분배 시스템의 지속적 개선을 나타내려 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제시된 1.2.1(새로 지어진 초등학교, 중등학교, 육아원, 애육원, 양로원의 숫자)은 2015년 29개소에서 2020년 67개소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는 북한이 VNR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북한이 주로 언급하고 있는 고아와 독거노인, 장애 등으로 노동 능력을 상실한 인구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북한 당국의 지원 확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숫자에는 신설된 숫자뿐 아니라 시설개선 등이 포함된 것으로 국가의 지원시설 전체 숫자나 이런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 비율 등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수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북한이 CRPD(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장애인 권리협약) 비준 이후 2018년 제출한 최초 이행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 기준 북한 인구의 5.5%를 장애인으로 파악하고 있다.^{165/} 그러나 북한 내 운영되는 장애인 복지 관련

^{165/} DPRK, *Initial Repor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December 2018),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

기관 현황은 장애에 따른 지원시설의 종류별로 도 단위에서 1개소 내외로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166/}

표 III-6 북한의 VNR에서 제시된 SDG 1 지표 현황

| 지표 | 2015 | 2018 | 2020 |
|--|------|------|------|
| 1.1.3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 | 0.8 | 0.6 | 0.5 |
| 1.2.1 개설되거나 신설된 초등학교, 중등학교, 육아원, 애육원, 양로원(수) | 29 | - | 67 |
| 1.3.1 사회보장제도를 지원받는 인구 비율(%) | - | - | - |
| 1.4.1 기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 | - | - | - |
| 1.5.1 인구 10만 명당 재해로 인한 사망 및 실종자 수 | | | |
| 사망자 | 0.34 | 0.29 | 0.42 |
| 실종자 | 0.09 | 0.3 | |
| 계 | 0.43 | 0.59 | 0.47 |
| 1.5.2 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 - | - | - |
| 1.5.3 국가재난위험경감계획(연도) | - | 2019 | - |
| 1.5.4 국가 전략에 따라 지역별재난위험경감계획을 채택한 비율(%) | 0 | 0 | 100 |
| 1.a.1 ODA(백만 달러) | - | - | - |

출처: “DPRK VNR 2021,” p. 58; 북민협 번역, “북한 VNR 보고서 2021,” p. 56.

한편 북한은 1.3.1(사회보장제도의 지원을 받는 인구 비율) 및 1.4.1(기초 서비스에 대한 접근 가능 인구 비율) 역시 지표에 포함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치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1.4.2(토지권을 갖는 성인 인구 비율)는 북한의 정치적 특성상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의 빈곤퇴치 노력의 상당수는 재해 및 재난위험에 대한 대응에

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PD%2fC%2fPRK%2f1&Lang=en) (Accessed June 4, 2022).

166/ 정지용·이철수, “북한 장애인복지정책 분석,” 『한국장애인복지학』, 제34호 (2016), p. 171.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의 인구 10만 명당 재해로 인한 사망 및 실종자 수는 2015년 0.43명, 2018년 0.59명, 2020년 0.47명 수준을 보인다. 북한은 2019년 국가재난위험경감계획을 채택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0년 기준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별 계획 역시 수립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목표 및 지표 평가

(가) 목표, 세부목표, 지표 적용에 대한 평가

북한은 SDG 1의 빈곤퇴치를 ‘인민생활 수준의 개선’으로 변용하여 적용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SDG 1에 해당하는 NDG 1의 목표, 세부목표 및 지표에서 ‘빈곤’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빈곤퇴치의 핵심적인 내용인 SDG 1.1과 1.2와 그 지표들(1.1.1, 1.2.1, 1.2.2)은 NDG에서 삭제되어 있다.

북한의 NDG 1은 빈곤 관련 목표가 삭제된 대신 소외계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NDG 1.1.3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1.2.1은 학교 및 보육·양로시설 신설에 대한 내용으로 SDGs에 없는 내용을 북한의 실정에 맞춰 추가하였다. 이 밖에 SDG에서 사회보장제도(1.3.1) 및 기초서비스(1.4.1) 관련 지표들은 NDG에서도 1.3.1 및 1.4.1로 수용되었다. 다만, 북한은 토지소유권을 규정한 SDG 1.4.2를 삭제하였다. 이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토지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정치·경제체제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북한은 SDG 1.5의 재난 관련 지표들을 NDG에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 밖에 SDG 1.a를 북한의 실정에 맞게 ODA를 통해 NDG 1 달성을 위한 자원 마련으로 수용하고 있다. 다만, SDG 1.a.2(정부 총지출 중 필수서비스 지출 비율)는 삭제되어 있다. 또한 SDG 1.b.1(빈곤 친화적 공공사회 지출) 역시 삭제되었다.

표 III-7 북한의 SDG 1 수용 현황

| 유엔 세부목표 및 지표 | 북한 | | | |
|---|----|----|----|--|
| | 수용 | 변용 | 삭제 | 추가 비고 |
| 1.1 2030년까지 1일 생계비 1.25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는 모든 인구를 모든 곳에서 종식 | | | ○ | ○ [추가] 1.1 2030년까지 주택 분배 시스템과 국가 배급으로 인민의 물질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킨다. |
| 1.1.1 국제빈곤선 미만에서 살고 있는 인구 비율 (성, 연령, 고용상태 및 지역별) | | | ○ | ○ [추가] 1.1.3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 |
| 1.2 각 국가빈곤 정의에 따라 2030년까지 모든 측면에서 빈곤 속에 사는 모든 연령층의 남성, 여성, 그리고 아동 비율을 최소 절반으로 감소 | | | ○ | ○ [추가] 1.2. 돌봄 사람이 없는 고아와 노인이 걱정을 모르고 살 수 있도록 당의 예산을 늘린다. |
| 1.2.1 국가빈곤선 미만에서 살고 있는 인구 비율 (성 및 연령별) | | | ○ | ○ [추가] 1.2.1 개설되거나 신설된 초등 학교, 중등학교, 육아원, 애육원, 양로원 |
| 1.2.2 국가별 정의에 따른 모든 차원의 빈곤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연령의 남성, 여성 및 아동 비율 | | | ○ | |
| 1.3 사회안전망을 포함해 모두를 위해 국가별로 적합한 사회적 보호체제 및 조치를 이행하고,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 달성 | ○ | | | |
| 1.3.1 사회보호제도 보장인구 비율(성, 아동, 실업자, 노인, 장애인, 임산부, 신생아, 산업재해자, 빈곤층 및 취약계층별) | ○ | | | |
| 1.4 2030년까지 모든 남성과 여성, 특히 빈곤층과 취약 계층에 경제적 자원과 기본 서비스, 토지와 기타 형태의 재산에 대한 소유와 통제, 상속, 천연자원, 적정 신기술 및 소액금융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 | ○ | | [범용] 2030년까지 인민을 위한 인상적이고 현대적인 문화정서 생활기지를 증설하고 유급휴가제, 료양, 휴가를 포함한 인민 중심의 정책을 강화한다. |
| 1.4.1 기초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 가구에 살고 있는 인구 비율 | ○ | | | |
| 1.4.2 (a) 법적으로 인정된 문서를 가지며 (b) 토지권이 보장된다고 인식하는, 안정된 토지권을 갖는 성인 인구 비율(성 및 보유형태별) | | | ○ | |
| 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회복력을 키우고, 기후 관련 극한 상황 혹은 기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인 충격과 재난에 대한 노출 및 취약성 감소 | ○ | | | |

| 유엔 세부목표 및 지표 | 북한 | | | | |
|--|----|----|----|----|----|
| | 수용 | 변용 | 삭제 | 추가 | 비고 |
| 1.5.1 인구 10만 명당 재난으로 인한 사망, 실종,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수 | ○ | | | | |
| 1.5.2 글로벌 GDP 대비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 경제 손실비 | ○ | | | | |
| 1.5.3 '재난위험감축을 위한 센다이프레임워크(2015~2030)'에 따라 국가재난위험감축 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 ○ | | | | |
| 1.5.4 국가의 재난위험감축전략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전략을 갖추고 있는 비율 | ○ | | | | |
| 1.a 개도국 특히, 최빈국이 모든 차원의 빈곤퇴치 프로그램과 정책 제공을 위해 증강된 개발협력력을 포함해 다양한 자원 동원 보장 | ○ | | | | |
| 1.a.1 수원국 GNI 대비 빈곤감소 ODA 총액 비율 | ○ | | | | |
| 1.a.2 정부 총지출 중 필수 서비스(교육, 의료 및 사회적 보호) 지출 비율 | | | ○ | | |
| 1.b 빈곤퇴치 활동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빈곤층 친화적이고 성인지적 개발전략을 기초로 한 국가, 지역, 글로벌 차원의 탄탄한 정책 프레임워크 수립 | | | ○ | | |
| 1.b.1 빈곤 친화적 공공사회지출 | | | ○ | | |

출처: 통계개발원, 『한국 SDG 이행보고서 2021』, p. 91; “DPRK VNR 2021,” p. 51, p. 58; 북민협 번역, “북한 VNR 보고서 2021,” p. 50, p. 56을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북한이 SDG 1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빈곤을 사실상 삭제한 것은 북한 내부의 체제를 유지하고 선전하기 위한 의도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이는 북한 당국이 SDGs를 국내의 국가개발목표에 통합시키는 과정에서 국내정치적 목적과 연동시킨 결과라 할 수 있다. 북한은 VNR 보고서의 서문에서 SDGs의 국내적 적용이 ‘강력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라는 국가목표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167/} 따라서 빈곤과 같이 북한 체제 내부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문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167/}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5.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은 대외적으로 빈곤율을 측정할 수 있는 자료나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빈곤 실태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는 첨예한 문제이다. 북한의 빈곤 실태는 정확한 정보와 자료의 부족 등으로 구체적으로 파악되기 어려운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간접적인 방식으로 빈곤율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다수 시도되어 왔다. 예를 들어, 최근 쿠아레스마 외(2020)는 야간조명을 찍은 위성사진을 이용해 2018년 기준 북한의 빈곤율을 60% 내외로 추정한 바 있다.^{168/} 한편, 송철중 외(2020)의 연구는 세계빈곤시계를 활용해 2017년 기준 북한 인구의 59%로 추정한 뒤, 현 추세대로라면 2030년 기준 43%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169/}

한편 북한은 NDG 1에서 SDG의 재난 관련 지표들을 가감 없이 수용하고 있는 것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선 빈곤율의 경우와 달리 재난 관련 지표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 역시 북한 내부의 체제 유지와 정권의 정당성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1990년대 연이은 자연재해 등의 영향으로 심각한 식량난이 발생하여 고난의 행군으로 이어지는 등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을 보인 바 있다. 실제로 다음 <표 III-8>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2010년대 들어서도 북한은 심각한 자연재해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아왔다. 또한 다음의 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북한은 2020년에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와 최근의 감염병 확산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

168/ Jesús C. Cuaresma, Olha Danylo, Steffen Fritz, Martin Hofer, Homi Kharas and Juan C. L. Bayas, "What Do We Know about Poverty in North Korea?" *Palgrave Communications*, vol. 6, no. 40 (2020), p. 2.

169/ 송철중 외, 『북한의 복지 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남북한 교류협력 방안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p. 59.

표 III-8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주요 자연재해 및 피해(2012~2021)

| 시기 | 행정구역 | 재해 유형 | 사망/ 실종자(명) | 피해자(명) | 손실 |
|-----------------------|---|---------------------|----------------------------|------------|---|
| 2012.4. | 양강도, 자강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강원도 | 기름, 식량부족 | | 3,000,000 | |
| 2012.7.16. ~ 7.29. |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강원도 | 홍수, 하천홍수, 산사태 | 88 | 93,089 | 11,400,000달러 |
| 2012.8.28. ~ 8.30. | 함경북도, 함경남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강원도, 양강도 | 폭풍, 열대성 사이클론, 홍수 | 사망: 59 실종: 45 | 44,461 | 농지피해: 101,000ha |
| 2013.7.12. ~ 7.23. | 자강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강원도, 황해북도, 함경남도 | 홍수, 하천홍수, 산사태 | 51 | 648,690 | 농지피해: 13,340ha |
| 2014.4. ~ 2015.7. | 황해남도, 황해북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평양시 | (장기) 기뭇 (18개월) | | 18,000,000 | 농지피해: 황해남도 논 80%, 황해북도 논 50% 등 |
| 2015.8.1. ~ 8.5. | 평안남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함경북도, 자강도 | 홍수, 하천홍수 | 33 | 3,541 | 주택 파손: 5,240채 |
| 2016.8.29. ~ 9.6. | 함경북도 | 홍수, 하천홍수 | 538 (사망 138, 실종 400) | 600,000 | 61,000,000달러 농지피해: 27,000ha |
| 2016.7.22. ~ 7.24. | | 홍수 | 14 | | |
| 2016.8.30. | 함경북도 | 폭풍, 열대성 사이클론, 홍수 | 60 | 103,865 | |
| 2017.1.~ 6. |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 기뭇 | | | 농지피해: 50,000ha |
| 2018.8. | 황해도 | 태풍 | 76 | 58,000 | |
| 2019.9.6.~ 8. | 평안남도,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 | 태풍 | 5 | | 농지피해: 46,200ha |
| 2020.8.5. | 황해도, 개성, 강원도 | 홍수, 하천홍수 | | 66,720 | |
| 2020.8.27. | 황해남도 | 태풍, 홍수 | | | |
| 2020.9.3. | 함경도, 강원도 | 태풍, 홍수 | | 12,000 | |
| 2021.8. | 함경도 | 홍수 | | 1,350 | |

출처: 최용호, "코로나19 사태와 북한 식량수급 동향과 전망," 『KRI 농정포커스(2020. 11. 27)』, p. 2 (표 1) 및 내용외 외, 『남북 재해재난 공동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추진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21), pp. 96~98 (표 III-1)을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이런 자연재해는 특히 식량수급, 사회기반시설, 주거 등의 안정성에 치명적 피해를 발생시키며, 북한의 빈곤과 기아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 자연재해 및 재난의 예방과 피해 관리는 국가적 차원의 관심 사항이자 정권의 정당성을 가늠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에 따라 NDG 1의 달성에도 필수적인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김정은 위원장 통치 시기 북한은 태풍 예·경보 시스템 재편(2012), 국가계획위원회 산하 재난관리국 설치(2013), 「재해방지 및 구조·복구법」 제정(2014) 및 개정(2017), 국가비상재해대책위원회 신설(2014)에 이어 2019년에는 『국가재해위험감축전략(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isk Reduction)』을 수립하였다.^{170/} 이렇게 북한은 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통치체계의 정당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며, 이를 위해 SDG 1의 재난대응 관련 지표들을 적극적으로 NDG 1에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 지표의 신뢰성과 지속성에 대한 평가

북한의 SDG 1 지표는 신뢰성과 지속성의 두 측면에서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SDG 1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인 빈곤 관련 세부목표와 지표들이 삭제된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공식적으로 빈곤율을 측정할 수 있는 자료나 통계들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빈곤율을 측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간접적으로

^{170/} 조은정·김태경, “김정은 시대 북한 재난 거버넌스의 특징과 대북 정책에 대한 시사점,” (동아시아연구원 Global NK 논평, 2021.10.29.), <https://www.eai.or.kr/new/ko/etc/search_view.asp?intSeq=20865&board=kor_issuebriefing> (검색일: 2022.6.5.); 나용우 외, 『남북 재해재난 공동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추진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21), p. 31.

추정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따라서 SDG 1의 지표들 중 빈곤과 관련된 지표들은 당분간 측정 자체가 어렵다고 평가된다.

한편, 북한은 SDG 1의 사회보장제도나 재난대응 관련 지표들은 NDG 1을 통해 비교적 충실하게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표들의 신뢰성과 지속성에는 다소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북한은 자체적인 VNR에서 이들 지표들의 현황을 공개하였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 보장 인구 비율(1.3.1), 기초 서비스에 접근 가능 인구 비율(1.4.1), 재난으로 인한 경제 손실(1.5.2), 공적개발원조(1.a.1)는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로 북한이 이런 지표의 실질적 향상을 위해 어떤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표 자체의 신뢰성 역시 평가할 수 없다. 덧붙여 SDG 1의 지표들의 수집 가능성 측면에서 북한은 기초 서비스에 접근 가능 인구 비율(1.4.1)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표들이 ‘자료 없음’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표들의 신뢰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지표 미공개·부재에 대한 대응 및 보완 방안

북한의 VNR 보고서나 기타 SDGs와 관련된 통계 등에서도 빈곤 퇴치와 관련해 북한의 현황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이 미공개한 빈곤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대안지표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은 VNR 보고서를 통해 자체적으로 1인당 GDP 변화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빈곤 수준을 유추해볼 수 있다. 가장 최근인 2019년 북한의 GDP는 335억 400만 달러로 1인당 GDP는 1,317달러로 추산된다.^{171/} 2019년 기준으로 이와 가장 유사한 국가들의 빈곤율을 통해 간접적

^{171/} 최규빈·홍제환, “북한의 SDGs 이행 동향: ‘자발적 국별 리뷰(VNR)’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p. 7.

으로 추산해 보면 북한 인구의 절반에서 1/4 가량이 1.90달러 빈곤선 이하에 머물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아래 <표 III-9> 참조).

표 III-9 북한과 유사한 1인당 GDP 국가들의 빈곤율

| 국가 | GDP (2019년)* | 1일 \$1.90 이하 | 1일 \$3.20 이하 |
|------|--------------|----------------|--------------|
| 잠비아 | 1,305달러 | 58.39%** | 73.67%** |
| 아이티 | 1,312달러 | 19.26%** | 42.36%** |
| 짐바브웨 | 1,316달러 | 21.4% (2011년)* | 17% (2011년)* |
| 북한 | 1,317달러** | - | - |

출처: *World Bank Open Data, <<https://data.worldbank.org/>> (Accessed May 28, 2022);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https://dashboards.sdgindex.org/map>> (Accessed May 28, 2022)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다만 위와 같은 GDP를 통한 간접적 분석은 북한이 처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특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북한이 공개한 GDP 자체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또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북한의 빈곤율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학술적·정책적으로 신뢰성을 가질만한 결과는 찾기 힘들다. 따라서 북한의 빈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중장기적 연구가 필요하다.

나. SDG 3 건강과 웰빙

(1) 목표 및 지표 개관

(가) SDG 3 목표와 지표

SDG 3은 모든 연령층의 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이다. 앞선 MDGs부터 보건의 질병은 가장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였다. 건강과 웰빙 분야는 2030 의제를 달성하기에는 다소 미진

하지만 MDGs 이래로 꾸준한 진보를 보여온 것으로 평가되어왔다. 그러나 2020년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한 분야이기도 하다.

MDGs는 유아사망 감소(목표 4), 모성건강 증진(목표 5),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AIDS(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말라리아 등 질병 퇴치(목표 6)의 세 가지 목표를 보건과 질병 분야로 채우며 그 중요성을 잘 드러냈다. 이에 반해 SDGs는 건강과 웰빙 하나의 목표만을 설정하였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목표의 양적 감소가 중요성이 축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SDG 3의 세부 목표와 지표들을 살펴보면 보건과 질병 분야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집약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SDGs는 앞선 MDGs가 초점을 맞췄던 유아사망, 모성건강, 전염성 질병 외에 비전염성 질병, 약물중독, 교통사고와 보편적 의료보험 등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게 해당하는 보건의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SDG 3은 다음 <표 III-10>과 같이 총 13개의 세부목표와 28개의 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SDG 3의 세부목표들은 MDGs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유아 사망률(3.1), 모성 건강(3.2) 및 AIDS, 결핵, 말라리아는 물론 소외열대질환 및 B형간염 등 주요 전염병 질병(3.3)을 포함하고 있다. 심혈관계 질환, 암, 당뇨, 만성호흡기 질환 등 주요 비전염성 질병(3.4), 자살(3.4), 마약 및 약물남용(3.5), 과도한 음주(3.5), 교통사고(3.6), 각종 오염(3.9), 흡연(3.a) 등 사망의 원인이 되는 주요 원인들을 세부목표 및 지표에 포함하고 있다. 그 외에 성 및 생식 보건(3.7), 보건 서비스 접근성(3.8),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3.b), 보건 인력 양성 및 훈련(3.c), 보건 역량(3.d) 등 주요 의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면에서 매우 포괄적이고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III-10 SDG 3 세부목표와 지표

| 세부목표 | 지표 |
|---|--|
| 3.1 2030년까지 모성 사망비를 출생아 10만 명당 70명 미만으로 감소 | 3.1.1 모성 사망비 |
| | 3.1.2 숙련된 의료 인력이 참여한 출산 비율(%) |
| 3.2 2030년까지 신생아와 5세 미만의 예방 가능한 사망을 종식시켜, 모든 국가의 신생아 사망률을 1,000명당 최소 12명 이하, 5세 미만 사망률을 1,000명당 최소 25명 이하 목표 | 3.2.1 5세 미만 사망률 |
| | 3.2.2 신생아 사망률 |
| 3.3 2030년까지 AIDS, 결핵, 말라리아 및 소외열대 질환의 확산을 종식시키고 간염, 수인성 질병 및 기타 전염성 질병 방지 | 3.3.1 비감염인구 1,000명당 HIV 신규 감염자 수 (성, 연령 및 주요 인구 특성별) |
| | 3.3.2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 건수 |
| | 3.3.3 인구 1,000명당 말라리아 발생 건수 |
| | 3.3.4 인구 10만 명당 B형간염 발생 건수 |
| | 3.3.5 소외열대질환 치료가 필요한 인구수 |
| 3.4 2030년까지 예방과 치료를 통해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을 3분의 1로 감소시키고 정신건강과 웰빙 향상 | 3.4.1 심혈관계 질환, 암, 당뇨 또는 만성호흡기 질환 사망률 |
| | 3.4.2 자살률 |
| 3.5 마약 및 해로운 알코올을 포함해 약물남용 예방 및 치료 강화 | 3.5.1 약물사용장애 치료개입(약물치료, 심리사회적 재활 및 사후 관리 서비스) 보장 범위 |
| | 3.5.2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순 알코올 소비량 |
| 3.6 2020년까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 수 절반으로 감소 | 3.6.1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
| 3.7 2030년까지 가족계획 정보 및 교육 등을 포함한 성 및 생식보건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고 생식보건을 국가전략과 프로그램에 통합 | 3.7.1 현대적 피임법 사용으로 가족계획 욕구가 충족되는 가임기(15~49세) 여성의 비율 |
| | 3.7.2 여성 청소년(10~14세, 15~19세) 인구 1,000명당 출산율 |
| 3.8 재정위험 보호, 양질의 필수보건서비스, 모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합리적인 가격의 필수약품 및 백신에 대한 접근 등을 포함하는 보편적 건강 보장 서비스 제공 | 3.8.1 필수보건서비스 보장 범위 |
| | 3.8.2 가구 총지출 및 소득 대비 의료비 과부담 인구 비율 |
| 3.9 2030년까지 유해화학물질,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건수 상당 수준으로 감소 | 3.9.1 실내공기오염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
| | 3.9.2 안전하지 않은 물과 하수처리, 부족한 위생시설로 인한 사망률 |
| | 3.9.3 비의도적 중독 사망률 |
| 3.a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 강화 | 3.a.1 연령표준화한 15세 이상 인구의 현재 흡연율 |

| 세부목표 | 지표 |
|--|--|
| 3.b 개도국에서 주로 발생하는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병에 대한 백신 및 약품 개발과 연구 지원, 저렴한 가격의 필수 의약품 및 백신 제공, 특히 모두에게 의약품에 대한 접근 보장 | 3.b.1 국가정책에 포함된 모든 백신을 접종한 인구의 비율 |
| | 3.b.2 의학연구 및 기초보건 부문 ODA 순 지출액 |
| | 3.b.3 적절한 가격으로 필수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의료 시설 비율 |
| 3.c 최빈개도국 및 개도국에서의 보건인력 양성, 훈련 및 보건 분야 자원 상당 수준 증가 | 3.c.1 보건인력 인력밀도 및 분포 |
| 3.d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의 조기경보, 위험 감소, 국가 및 글로벌 보건리스크 관리 역량강화 | 3.d.1 IHR에 의한 수용 능력 및 응급대처 능력 |
| | 3.d.2 선별된 항생제 내성 유기체에서 기인한 혈류 감염률 |

출처: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3," <<https://sdgs.un.org/goals/goal3>> (Accessed June 21, 2022); 통계개발원, 『한국 SDG 이행보고서 2021』, p. 92.

ESCAP이 평가한 아시아 지역에서 SDG 3의 지표 수집가능성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2017년을 기준으로 13개의 지표가 ‘충분’, 10개는 ‘불충분’, 4개는 ‘자료 없음’으로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다음 <표 III-11>에 보이는 것과 같이 SDG 3의 지표 수집가능성은 꾸준히 증대되어, 2021년을 기준으로 21개 지표가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단 7개 지표만 불충분하다고 분류되었다.

한국은 2021년 기준으로 20개의 지표 수집가능성이 ‘충분’으로 분류된 가운데, ‘불충분’과 ‘자료 없음’에 해당하는 지표가 각각 4개씩으로 나타났다. ‘불충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B형간염 발생 건수(3.3.4), 약물사용장애 치료개입 보장 범위(3.5.1), 실내공기오염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3.9.1)과 안전하지 않은 물과 하수처리, 부족한 위생시설로 인한 사망률(3.9.2)이다. ‘자료 없음’에 해당하는 것은 HIV 신규 감염자 수(3.3.1), 가족계획 비율(3.7.1), 의학연구 및 기초보건 부문 ODA 순 지출액(3.b.2), 적절한 가격으로 필수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의료 시설 비율(3.b.3)이다.

북한도 2021년을 기준으로 20개의 지표가 수집가능성이 충분

하다고 분류된 가운데, 4개씩의 지표가 ‘불충분’ 및 ‘자료 없음’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다른 목표들과 비교했을 때 지표의 수집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에서 지표의 수집가능성이 불충분하다고 평가되는 것은 B형간염 발생 건수(3.3.4), 약물사용장애 치료 개입 보장 범위(3.5.1), 실내공기오염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3.9.1), 부족한 위생시설로 인한 사망률(3.9.2)이다. 자료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 지표는 HIV 신규 감염자 수(3.3.1), 의료비 과부담 인구 비율(3.8.2), 필수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의료 시설 비율(3.b.3), 항생제 내성 유기체에서 기인한 혈류 감염률(3.d.2)이다.

표 III-11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SDG 3 지표 수집 가능성

| 지표 | 티어 그룹 | 아시아태평양 2017 | | | 아시아태평양 2021 | | | 한국 2021 | | | 북한 2021 | | |
|--------------------------------------|-------|-------------|-----|-------|-------------|-----|-------|---------|-----|-------|---------|-----|-------|
| | | 충분 | 불충분 | 자료 없음 | 충분 | 불충분 | 자료 없음 | 충분 | 불충분 | 자료 없음 | 충분 | 불충분 | 자료 없음 |
| 3.1.1 모성 사망비 | I | ○ | | | ○ | | | ○ | | | ○ | | |
| 3.1.2 숙련된 의료 인력이 참여한 출산 비율(%) | I | ○ | | | ○ | | | ○ | | | ○ | | |
| 3.2.1 5세 미만 사망률 | I | ○ | | | ○ | | | ○ | | | ○ | | |
| 3.2.2 산생아 사망률 | I | ○ | | | ○ | | | ○ | | | ○ | | |
| 3.3.1 비감염인구 1,000명당 HIV 신규 감염자수 | I | | ○ | | | ○ | | | ○ | | | ○ | |
| 3.3.2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 건수 | I | ○ | | | ○ | | | ○ | | | ○ | | |
| 3.3.3 인구 1,000명당 말라리아 발생 건수 | I | ○ | | | ○ | | | ○ | | | ○ | | |
| 3.3.4 인구 10만 명당 B형간염 발생 건수 | I | | ○ | | | ○ | | | ○ | | | ○ | |
| 3.3.5 소외열대질환 치료가 필요한 인구수 | I | ○ | | | ○ | | | ○ | | | ○ | | |
| 3.4.1 심혈관계 질환, 암, 당뇨 또는 만성호흡기 질환 사망률 | I | ○ | | | ○ | | | ○ | | | ○ | | |
| 3.4.2 자살률 | I | ○ | | | ○ | | | ○ | | | ○ | | |
| 3.5.1 약물사용장애 치료개입 보장 범위 | II | | | ○ | | ○ | | | ○ | | | ○ | |
| 3.5.2 15세 이상인구 1인당 연간 순알코올 소비량 | I | | ○ | | ○ | | | ○ | | | ○ | | |
| 3.6.1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 I | ○ | | | ○ | | | ○ | | | ○ | | |

| 지표 | 티어 그룹 | 아시아태평양 2017 | | | 아시아태평양 2021 | | | 한국 2021 | | | 북한 2021 | | |
|--|-------|-------------|-----|-------|-------------|-----|-------|---------|-----|-------|---------|-----|-------|
| | | 충분 | 불충분 | 자료 없음 | 충분 | 불충분 | 자료 없음 | 충분 | 불충분 | 자료 없음 | 충분 | 불충분 | 자료 없음 |
| 3.7.1 현대적 피임법을 사용한 가족계획 비율 | I | | ○ | ○ | | | | | | ○ | ○ | | |
| 3.7.2 여성 청소년(10~14세, 15~19세) 인구 1,000명당 출산율 | I | | ○ | ○ | | | | ○ | | | ○ | | |
| 3.8.1 필수보건서비스 보장 범위 | I | | | ○ | ○ | | | ○ | | | ○ | | |
| 3.8.2 가구 총지출 및 소득 대비 의료비 과부담 인구 비율 | I | | ○ | ○ | | | | ○ | | | | ○ | |
| 3.9.1 실내공기오염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 I | | ○ | | ○ | | | ○ | | | | ○ | |
| 3.9.2 안전하지 않은 물과 하수처리, 부족한 위생시설로 인한 사망률 | I | | ○ | | ○ | | | ○ | | | | ○ | |
| 3.9.3 비의도적 중독 사망률 | I | ○ | | | ○ | | | ○ | | | | ○ | |
| 3.a.1 연령표준화한 15세 이상 인구의 현재 흡연율 | I | | ○ | | ○ | | | ○ | | | | ○ | |
| 3.b.1 국가정책에 포함된 모든 백신을 접종한 인구의 비율 | I | | | ○ | ○ | | | ○ | | | | ○ | |
| 3.b.2 의화연구 및 기초보건 부문 ODA 순지출액 | I | ○ | | | ○ | | | | | ○ | ○ | | |
| 3.b.3 적절한 가격으로 필수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의료 시설 비율 | II | | | ○ | | ○ | | | | ○ | | | ○ |
| 3.c.1 보건의료 인력밀도 및 분포 | I | ○ | | | ○ | | | ○ | | | | ○ | |
| 3.d.1 국제보건규정(IHR)에 의한 수용 능력 및 응급대처 능력 | I | | ○ | | ○ | | | ○ | | | | ○ | |
| 3.d.2 선별된 항생제 내성 유기체에서 기인한 혈류 감염률 | II | | | | | ○ | | ○ | | | | | ○ |

출처: UNESCAP, *Statistical Yearbook for Asia and the Pacific 2017: Measuring SDG progress in Asia and the Pacific: Is There Enough Data?* pp. 30~34; ESCAP SDG Gateway Asia Pacific, "Data Availability," (<https://data.unescap.org/data-analysis/sdg-data-availability>) (Accessed June 21, 2022)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나) SDG 3 지표 관리기구와 수집 현황

다음의 <표 III-12>는 SDG 3과 관련된 지표 현황 및 북한의 지표 보유 여부를 보여준다. SDG 3의 지표들은 WHO를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분야에 따라 UNICEF, UNAIDS(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유엔에이즈계획), UNODC(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유엔마약범죄사무소), UN DESA 및 OECD

등의 기구들 역시 지표 관리에 참여하고 있다. 2022년 현재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표가 티어 I로 격상되어 매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수집 및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경우에도 SDG 3의 지표 관리에는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은 VNR 보고서의 주요 보고사항에서 자체적인 무상의료 서비스 등 SDG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세부목표 및 지표를 설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입장을 통해 북한 당국이 SDG 3의 지표 관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은 총 28개의 지표 가운데 3.5.1(약물사용장애 치료개입 보장 범위), 3.8.2(가구 총지출 및 소득 대비 의료비 과부담 인구 비율), 3.d.1(IHR(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국제보건규정)에 의한 수용 능력 및 응급대처 능력), 및 3.d.2(선별된 항생제 내성 유기체에서 기인한 혈류 감염률)의 4개를 제외한 모든 지표를 보유하고 있다.

표 III-12 SDG 3 지표 현황 및 관리기구와 북한의 지표 보유 현황

| 세부목표 | 지표 | 변경 티어 | 가능한 관리기관 | 파트너 기관 | 북한 보유 여부 |
|---|---|----------|-------------|---|----------------|
| 3.1 2030년까지 모성 사망비를 출생아 10만 명당 70명 미만으로 감소 | 3.1.1 모성 사망비 | I | WHO | UNICEF, UNFPA, DESA Population Division, World Bank | O |
| | 3.1.2 숙련된 의료 인력이 참여한 출산 비율(%) | I | UNICEF, WHO | UNFPA | O |
| 3.2 2030년까지 신생아와 5세 미만 의 예방 가능한 사망을 종식시켜 모든 국가의 신생아 사망률을 1,000명당 최소 12명 이하, 5세 미만 사망률을 1,000명당 최소 25명 이하 목표 | 3.2.1 5세 미만 사망률 | I | UNICEF | DESA Population Division, World Bank, WHO | O |
| | 3.2.2 신생아 사망률 | I | UNICEF | DESA Population Division, World Bank, WHO | O |
| 3.3 2030년까지 AIDS, 결핵, 말라리아 및 소외열대질환의 확산을 종식시키고 간염, 수인성 질병 및 기타 전염성 질병 방지 | 3.3.1 비감염인구 1,000명당 HIV 신규 감염자 수(성, 연령 및 주요 인구 특성별) | I | UNAIDS | WHO, UNFPA | O |
| | 3.3.2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 건수 | I | WHO | | O |
| | 3.3.3 인구 1,000명당 말라리아 발생 건수 | I | WHO | | O |

| 세부목표 | 지표 | 변경 티어 | 가능한 관리기관 | 파트너 기관 | 복합 보유 여부 |
|--|--|----------|--------------------------|---|----------------|
| | 3.3.4 인구 10만 명당 B형간염 발생 건수 | I | WHO | | O |
| | 3.3.5 소외열대질환 치료가 필요한 인구수 | I | WHO | | O |
| 3.4 2030년까지 예방과 치료를 통해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을 3분의 1로 감소시키고 정신건강과 웰빙 향상 | 3.4.1 심혈관계 질환, 암, 당뇨 또는 만성호흡기 질환 사망률 | I | WHO | | O |
| | 3.4.2 자살률 | I | WHO | | O |
| 3.5 미약 및 해로운 알코올을 포함해 약물남용 예방 및 치료 강화 | 3.5.1 약물사용장애 치료개입(약물치료, 심리사회적 재활 및 사후 관리 서비스) 보장 범위 | II | WHO, UNODC | | X |
| | 3.5.2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순 알코올 소비량 | I | WHO | | O |
| 3.6 2020년까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 수 절반으로 감소 | 3.6.1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 I | WHO | UNECE | O |
| 3.7 2030년까지 가족계획, 정보 및 교육 등을 포함한 성 및 생식보건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고 생식보건을 국가전략과 프로그램에 통합 | 3.7.1 현대적 피임법 사용으로 가족 계획 욕구가 충족되는 가임기(15~49세) 여성의 비율 | I | DESA Population Division | UNFPA, WHO | O |
| | 3.7.2 여성 청소년(10~14세, 15~19세) 인구 1,000명당 출산율 | I | DESA Population Division | UNFPA, WHO | O |
| 3.8 재정위험 보호, 양질의 필수보건 서비스, 모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합리적인 가격의 필수 약품 및 백신에 대한 접근 등을 포함하는 보편적 건강 보장 서비스 제공 | 3.8.1 필수보건서비스 보장 범위 | I | WHO | UNICEF, UNFPA, DESA Population Division | O |
| | 3.8.2 가구 총지출 및 소득 대비 의료비 과부담 인구 비율 | I | WHO, World Bank | | X |
| 3.9 2030년까지 유해화학물질,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건수 상당 수준으로 감소 | 3.9.1 실내공기오염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 I | WHO | UNEP | O |
| | 3.9.2 안전하지 않은 물과 하수 처리, 부족한 위생시설로 인한 사망률 | I | WHO | UNEP | O |
| | 3.9.3 비의도적 중독 사망률 | I | WHO | UNEP | O |
| 3.a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 강화 | 3.a.1 연령표준화한 15세 이상 인구의 현재 흡연율 | I | WHO, WHO-FCTC | | O |
| 3.b 개도국에서 주로 발생하는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병에 대한 백신 및 약품 개발과 연구 지원, 저렴한 가격의 필수 의약품 및 백신 제공, 특히 모두에게 의약품에 대한 접근 보장 | 3.b.1 국가정책에 포함된 모든 백신을 접종한 인구의 비율 | I | WHO, UNICEF | | O |
| | 3.b.2 의학연구 및 기초보건 부문 ODA 순 지출액 | I | OECD | | O |
| | 3.b.3 적절한 가격으로 필수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의료 시설 비율 | II | WHO | | O |

| 세부목표 | 지표 | 변경 티어 | 가능한 관리기관 | 파트너 기관 | 북한 보유 여부 |
|--|-----------------------------------|----------|-------------|--------|----------------|
| 3.c 최빈개도국 및 개도국에서의 보건인력 양성, 훈련 및 보건 분야 자원 상당 수준 증가 | 3.c.1 보건의료 인력밀도 및 분포 | I | WHO | | O |
| 3.d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의 조기 경보 위험 감소, 국가 및 글로벌 보건리스크 관리 역량강화 | 3.d.1 IHR에 의한 수용 능력 및 응급대처 능력 | I | WHO | | X |
| | 3.d.2 선별된 항생제 내성 유기체에서 기인한 혈류 감염률 | II | WHO | | X |

출처: IAEG-SDGs, "Tier Classification for Global SDG Indicators," (Accessed May 28, 2022); 통계개발원, 『한국 SDG 이행보고서 2021』, p. 92; "DPRK VNR 2021," pp. 51~52, pp. 58~59; 북민협 번역, "북한 VNR 보고서 2021," pp. 50~51, pp. 56~57을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다) K-SDG 3 세부목표와 지표

K-SDG 3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높은 수준의 현지화를 적용하고 있다. SDG는 저개발 국가에서 모성사망률이나 신생아 사망률이 중요한 문제임을 반영하여 이런 문제를 앞순위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심혈관질환, 당뇨, 흡연 등 만성질환(3.1.1)이나 자살률(3.2.1)과 알코올 섭취량(3.2.2), 교통사고 사망률(3.3.1) 등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설정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그 밖에도 아동·청소년 비만률(3.6.3), 초미세먼지(PM2.5) 농도(3.7.2),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3.8.2), 치매환자 등록·관리율(3.8.3), 기능제한 없는 노인인구 비율(3.8.4) 등의 지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권을 저해하는 사회적·환경적 요인들을 반영한 지표들로 평가된다.

표 III-13 K-SDG 3 목표, 세부목표 및 지표

| K-SDG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 |
|---|--|
| 세부목표 | 지표 |
| 3.1 만성질환의 위험요인관리와 건강보장을 확대한다. | 3.1.1 심혈관질환, 암, 당뇨, 만성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사망률(30~70세 인구) |
| | 3.1.2 당뇨병 조절률(%) |
| | 3.1.3 성인 흡연율 |
| | 3.1.4 장애인 만성질환유병률 |
| 3.2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약물오남용을 예방한다. | 3.2.1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유지 |
| | 3.2.2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알코올 섭취량(ℓ) |
| 3.3 교통사고 등 각종 인명사고로 인한 사망과 신체 손상을 예방한다. | 3.3.1 교통사고 사망자수(1천 명당) |
| 3.4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 3.4.1 인구 10만 명당 결핵신고 신환자율 |
| | 3.4.2 인구 10만 명당 말라리아 발생률 |
| 3.5 모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 3.5.1 모성사망비 |
| 3.6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 3.6.1 출생아 1천 명당 신생아 사망률 |
| | 3.6.2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 |
| | 3.6.3 아동·청소년 비만 유병률 |
| 3.7 기후·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사망과 질병을 줄인다. | 3.7.1 인체 내 환경유해물질 농도 수준 |
| | 3.7.2 인구가중 초미세먼지(PM2.5) 농도 |
| 3.8 대한민국의 저출생 극복과 인구고령화를 대비한다. | 3.8.1 영아사망률 |
| | 3.8.2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
| | 3.8.3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
| | 3.8.4 기능제한 없는 노인인구 비율 |
| 3.9 공공보건의로 서비스를 확대하여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한다. | 3.9.1 인구 1천 명당 공공병상수 |

출처: 관계부처 합동, 『제4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2021~2040 제1부』, p. 47.

(2) 북한 현황

(가) 북한의 SDG 3 목표와 세부목표 및 지표

북한은 SDG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을 자체적인 NDG 3 인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촉진으로 수용하고 있다. 북한의 NDG 3은 SDG 3의 세부목표와 지표들을 큰 변용 없이 거의 그대로 수용

하고 있는데, VNR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일부 세부목표는 SDG 3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172/} 구체적으로 북한은 산모 사망률과 관련된 세부목표를 SDG가 설정하고 있는 인구 10만 명당 70명 이하(SDG 3.1)보다 낮은 인구 10만 명당 40명(NDG 3.1)으로 설정하였으며, 비전염성 질병 사망률 감소와 관련된 세부목표(3.4)에서 ‘전반적 무상치료제 및 예방의학의 질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북한은 세부목표 3.d의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의 조기경보, 위험 감소, 국가 및 글로벌 보건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삭제하였다.

표 III-14 유엔과 북한의 SDG 3 비교

| SDG 목표3.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 | 북한 NDG 목표3. 인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촉진 | |
|---|--|--|---------------------------------------|
| 세부목표 | 지표 | 세부목표 | 지표 |
| 3.1 2030년까지 모성 사망률을 출생아 10만 명당 70명 미만으로 감소 | 3.1.1 모성 사망비 | 3.1 2030년까지 산모 사망률을 10만 명당 40명 이하로 감소시킨다. | 3.1.1 인구 10만 명당 산모 사망률 |
| | 3.1.2 숙련된 의료 인력이 참여한 출산 비율(%) | | 3.1.2 전문 의료 인력이 참여한 출산 비율 |
| 3.2 2030년까지 신생아와 5세 미만의 예방 가능한 사망을 종식시켜, 모든 국가의 신생아 사망률을 1,000명당 최소 12명 이하, 5세 미만 사망률을 1,000명당 최소 25명 이하 목표 | 3.2.1 5세 미만 사망률 | 3.2 2030년까지 1,000명당 신생아 사망률 12명 이하,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25명 이하로 감소시킨다. | 3.2.1 인구 1,000명당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
| | 3.2.2 신생아 사망률 | | 3.2.2 인구 1,000명당 신생아 사망률 |
| 3.3 2030년까지 AIDS, 결핵, 말라리아 및 소외열대질환의 확산을 종식시키고 간염, 수인성 질병 및 기타 전염성 질병 방지 | 3.3.1 비감염인구 1,000명당 HIV 신규 감염자 수(성 연령 및 주요 인구 특성별) | 3.3 2030년까지 AIDS, 결핵, 말라리아, 소외열대질환의 전염을 종식시키고 간염, 수인성 질병, 기타 질병을 퇴치한다. | 3.3.1 감염되지 않은 인구 1,000명당 신규 HIV 감염자 수 |
| | 3.3.2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 건수 | | 3.3.2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률 |
| | 3.3.3 인구 1,000명당 말라리아 발생 건수 | | 3.3.3 인구 1,000명당 말라리아 발병률 |
| | 3.3.4 인구 10만 명당 B형간염 발생 건수 | | 3.3.4 인구 10만 명당 B형간염 발생률 |
| | 3.3.5 소외열대질환 치료에 필요한 인구수 | | 3.3.5 소외열대질환에 대한 개입이 필요한 인구수 |

^{172/}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6.

| SDG 목표3,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 | 북한 NDG 목표3, 인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촉진 | |
|--|--|--|--|
| 세부목표 | 지표 | 세부목표 | 지표 |
| 3.4 2030년까지 예방과 치료를 통해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을 1/3로 감소시키고 정신 건강과 웰빙 향상 | 3.4.1 심혈관계 질환, 암, 당뇨 또는 만성호흡기 질환 사망률 | 3.4 2030년까지 전반적 무상 치료제 및 예방의학의 질 향상을 통해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을 1/3로 줄이고 정신 건강과 행복한 삶을 증진시킨다. | 3.4.1 심혈관 질환, 암, 당뇨병 또는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
| | 3.4.2 자살률 | | 3.4.2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
| 3.5 마약 및 해로운 알코올을 포함해 약물남용 예방 및 치료 강화 | 3.5.1 약물사용장애 치료개입 (약물치료, 심리사회적 재활 및 사후 관리 서비스) 보장 범위 | 3.5 마약 남용과 음주를 포함한 약물 남용의 예방과 치료를 강화한다. | - |
| | 3.5.2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순 알코올 소비량 | | 3.5.2 국가적 상황에 따라 1인당 알코올 섭취량으로 정의된 술의 해로운 소비 |
| 3.6 2020년까지 도로교통 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 수 절반으로 감소 | 3.6.1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 3.6 2020년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부상자 수를 절반으로 줄인다. | 3.6.1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 |
| 3.7 2030년까지 가족계획, 정보 및 교육 등을 포함한 성 및 생식보건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고 생식보건을 국가전략과 프로그램에 통합 | 3.7.1 현대적 피임법 사용으로 가족계획 욕구가 충족되는 기간(15~49세) 여성의 비율 | 3.7 2030년까지 성 및 생식기 건강관리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고 국가 전략과 계획에 생식기 보건을 통합시킨다. | 3.7.1 가족계획이 필요한 가임기 여성(15~49세) 중 현대적인 방법에 대한 만족도 |
| | 3.7.2 여성 청소년(10~14세, 15~19세) 인구 1,000명당 출산율 | | 3.7.2 해당 연령대의 여성 1,000명당 청소년 출생률(10~14세, 15~19세) |
| 3.8 재정위험 보호, 양질의 필수보건서비스, 모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합리적인 가격의 필수약품 및 백신에 대한 접근 등을 포함하는 보편적 건강 보장 서비스 제공 | 3.8.1 필수보건서비스 보장 범위 | 3.8 의사당당구역제를 강화하고 특정 지역을 위해 1인당 병원을 의료봉사 센터로 보수하며 인민병원과 진료소에 적절한 물질을 공급하여 인민의 삶을 보호하고 그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 3.8.1 필수 의료봉사 보장 |
| | 3.8.2 가구 총지출 및 소득 대비 의료비 과부담 인구 비율 | | |
| 3.9 2030년까지 유해화학 물질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건수 상당 수준으로 감소 | 3.9.1 실내공기오염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 3.9 2030년까지 유해 화학물질 및 대기 수질 및 토양 오염과 방사능으로 인한 사망자와 질병의 수를 상당히 감소시킨다. | 3.9.1 가정 및 대기오염에 따른 사망률 |
| | 3.9.2 안전하지 않은 물과 하수처리, 부족한 위생 시설로 인한 사망률 | | 3.9.2 안전하지 않은 물, 안전하지 않은 위생 및 위생 부족으로 인한 사망률 |
| | 3.9.3 비의도적 중독 사망률 | | 3.9.3 인구 10만 명당 의도하지 않은 중독으로 인한 사망률 |
| 3.a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 강화 | 3.a.1 연령표준화한 15세 이상 인구의 현재 흡연을 | 3.a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을 강화한다. | 3.a.1 15세 이상 인구에서 현재 흡연의 표준화된 유행 |

| SDG 목표3.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 | 북한 NDG 목표3. 인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촉진 | |
|--|--|--|---|
| 세부목표 | 지표 | 세부목표 | 지표 |
| 3b 개도국에서 주로 발생하는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병에 대한 백신 및 약품 개발과 연구 지원 저렴한 가격의 필수 의약품 및 백신 제공. 특히 모두에게 의약품에 대한 접근 보장 | 3.b.1 국가정책에 포함된 모든 백신을 접종한 인구의 비율 | 3b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병에 대한 백신, 의약품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고 필수 의약품, 백신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며 모든 인민에게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한다. | 3.b.1 국가계획에서 모든 백신을 지원받는 대상 인구의 비율 |
| | 3.b.2 의약품연구 및 기초보건 부문 ODA 순 지출액 | | 3.b.2 의료 연구 및 기초보건 분야의 ODA |
| | 3.b.3 적절한 가격으로 필수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의료 시설 비율 | | 3.b.3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저렴하고 구매 가능한 필수 의약품 구성을 가지고 있는 의료시설 비율 |
| 3c 최빈개도국 및 개도국에서의 보건인력 양성 훈련 및 보건 분야 자원 상당 수준 증가 | 3.c.1 보건인력 인력밀도 및 분포 | 3c 보건 부문의 예산을 늘리고 의료 인력을 교육하며 의료봉사의 질향상을 보장한다. | 3.c.1 인구 1,000명당 의료 인력의 밀도 및 분포 |
| | | | 3.c.2 보건부문 예산지출비율 |
| 3d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의 조기경보, 위험 감소, 국가 및 글로벌 보건리스크 관리 역량강화 | 3.d.1 IHR에 의한 수용 능력 및 응급대처 능력 | - | - |
| | 3.d.2 선별된 항생제 내성 유기체에서 기인한 혈류 감염률 | | |

출처: 통계개발원, 『한국 SDG 이행보고서 2021』, p. 92; “DPRK VNR 2021,” pp. 51~52, pp. 58~59; 북민협 번역, “북한 VNR 보고서 2021,” pp. 50~51, pp. 56~57을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나) 북한의 SDG 3 우선순위와 계획

북한은 VNR 보고서에서 산모건강 및 생식 건강 증진과 아동사망률 및 말라리아 발병률 감소를 주요 성과로 꼽았으나 결핵, 보건인력·제약 및 의료기기 등 기술·필수 의약품 부족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173/} 대기오염과 중독으로 인한 사망률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기존의 말라리아, 결핵, AIDS 퇴치에 있어서 글로벌 펀드의 지원과 백신 보급에 있어서 GAVI(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zation, 세계백신면역연합)의 공동기금의 역할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지원에 대한 긍정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주목

^{173/} Ibid., pp. 19~20.

할 만하다.

북한은 주요 계획으로 예방의학 정책 강화를 통해 평균수명 등 건강 지표를 세계 선진수준으로 높이고, 주요 병원 및 제약공장의 현대화를 통한 공중 보건 부문의 물질적·기술적 기반 증진, 의료체계 개선 및 비상방역사업 기반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174/}

(다) 북한의 SDG 3 지표 현황

다음 <표 III-15>는 북한의 SDG 3의 지표별 달성 현황을 보여준다. 먼저 전체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출산 및 영유아 사망과 관련된 지표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추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각종 전염병 및 중대 질환, 교통사고 사망률 등에서는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모성 사망비 지표는 2017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89명이며,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 밖에 숙련된 의료 인력이 출산 과정에 참여하는 비율은 99.5%, 5세 미만 사망률은 1,000명당 17.3명, 신생아 사망률은 1,000명당 9.5명, 여성 청소년 인구 1,000명당 출산율은 0.29로 SDGs의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AIDS/HIV 신규 감염자 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결핵 발생은 인구 10만 명당 513명, 중대 질환인 심혈관계, 암, 당뇨 및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25.6%로 부진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4.19명으로 부진하며, 실내공기오염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역시 인구 10만 명당 207명으로 부진하다는 우려를 받고 있다. 필수 보건 서비스의 보장 범위는 71로 현상 유지를 이루는 가운데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국가에 의해 보장되는 백신을 접종하는 인구 비율은 97%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74/} Ibid. p. 21.

표 III-15 북한의 SDG 3 지표별 달성 현황

| 지표명 | 수치 | 연도 | 현황 | 추이 |
|--|-------|------|----|----|
| 3.1.1 모성 사망비(인구 10만 명당) | 89.0 | 2017 | 유지 | ↗ |
| 3.1.2 숙련된 의료 인력이 참여한 출산 비율(%) | 99.5 | 2017 | 달성 | - |
| 3.2.1 5세 미만 사망률(1,000명당) | 17.3 | 2019 | 달성 | ↑ |
| 3.2.2 신생아 사망률(1,000명당) | 9.5 | 2019 | 달성 | ↑ |
| 3.3.1 비감염인구 1,000명당 HIV 신규 감염자 수 (성, 연령 및 주요 인구 특성별) | - | - | - | - |
| 3.3.2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 건수 | 513 | 2019 | 부진 | → |
| 3.4.1 심혈관계 질환, 암, 당뇨 또는 만성호흡기 질환 사망률(%) | 25.6 | 2016 | 부진 | → |
| 3.6.1 도로교통사고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 24.19 | 2019 | 부진 | ↓ |
| 3.7.2 여성 청소년(10~14세, 15~19세) 인구 1,000명당 출산율 | 0.29 | 2018 | 달성 | ↑ |
| 3.8.1 필수보건서비스 보장 범위(0~100) | 71 | 2017 | 유지 | ↑ |
| 3.9.1 실내공기오염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 207 | 2016 | 부진 | → |
| 3.b.1 국가정책에 포함된 모든 백신을 접종한 인구의 비율(%) | 97 | 2019 | 달성 | ↑ |

출처: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Accessed May 28, 2022).

북한은 SDG 3 지표 대부분을 자체적인 NDG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제출한 VNR 보고서에서 실제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는 지표는 19개에 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자체적인 NDG에 SDG 3을 대부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각 지표에 해당하는 수치를 대부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SDG 3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적극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표 III-16 북한의 VNR에서 제시된 SDG 3 지표 현황

| 지표 | 2015 | 2018 | 2020 |
|----------------------------------|----------------|----------------|----------------|
| 3.1.1. 인구 10만 명당 산모 사망률(명) | 58 | 50.4 | 49 (2019) |
| 3.1.2. 전문 의료 인력이 참여한 출산 비율(%) | 99.9 (2014) | 99.5 (2017) | - |
| 3.2.1. 인구 1,000명당 5세 미만 아동사망률(명) | 17.7 | 16.9 | 16.8 (2019) |

| 지표 | 2015 | 2018 | 2020 |
|--|---------------------------|---------------------------|----------------------------|
| 3.2.2. 인구 1,000명당 신생아 사망률(명) | 9 (2014) | 9 (2017) | 7.7 (2019) |
| 3.3.1. 감염되지 않은 인구 1,000명당 신규 HIV 감염자 수(명) | 0 | 0 | 0 |
| 3.3.2.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률(명) | 451 | 354 | 351 |
| 3.3.3. 인구 1,000명당 말라리아 발병률(명) | 0.52 | 0.29 | 0.15 |
| 3.3.4. 인구 10만 명당 B형간염 발생률(명) | 6.8 | 6.4 | 5.9 |
| 3.3.5. 소외열대질환에 대한 개입이 필요한 인구수(명) | 0 | 0 | 0 |
| 3.4.1. 심혈관 질환, 암, 당뇨병 또는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 - | - | - |
| 3.4.2.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명) | - | - | - |
| 3.5.2. 국가적 상황에 따라 1인당 알코올 섭취량으로 정의된 술의 해로운 소비(L) | - | - | - |
| 3.6.1.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명) | 8.5 | 8.4 | 7.3 |
| 3.7.1. 가족계획이 필요한 가임기 여성(15~49세) 중 현대적인 방법에 대한 만족도(%) | 89.6 (2014) | 89.7 (2017) | - |
| 3.7.2. 해당 연령대의 여성 1,000명당 청소년 출생률 (10~14세, 15~19세)(%) | 0 (2014) | 1 (2017) | - |
| 3.8.1. 필수 의료봉사 보장(색인) | - | 84 (2017) | - |
| 3.9.1. 가정 및 대기오염에 따른 사망률(%) | - | - | - |
| 3.9.2. 안전하지 않은 물, 안전하지 않은 위생 및 위생 부족으로 인한 사망률(%) | - | - | - |
| 3.9.3. 인구 10만 명당 의도하지 않은 중독으로 인한 사망률(명) | 0.6 | 0.5 | 0.4 |
| 3.a.1. 15세 이상 인구에서 현재 흡연의 표준화된 유행(%) | 46.3 | 46.1 (2017) | - |
| 3.b.1. 국가계획에서 모든 백신을 지원받는 대상 인구의 비율(%) | 97.7 | 93.2 | 94.5 |
| 3.b.2. 의료 연구 및 기초보건분야의 ODA(백만 달러) | 23.5 | - | - |
| 3.b.3.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저렴하고 구매 가능한 필수 의약품 구성을 가지고 있는 의료시설 비율 | - | - | - |
| 3.c.1. 인구 1,000명당 의료 일군의 밀도 및 분포(총 명) 의사(치과외사 포함)(명) 간호원, 조산사(명) 약사(명) 기타(명) | 98 37 43 4 14 | 99 37 43 4 15 | 100 38 44 4 15 |
| 3.c.2. 보건 부문 예산 지출 비율(%) | 6.4 (2014) | 7 (2017) | - |

출처: "DPRK VNR 2021," pp. 58~59; 북민협 번역, "북한 VNR 보고서 2021," pp. 56~57.

북한은 SDG 3 지표들 가운데 출산 및 영유아 건강과 관련해서는 꾸준한 개선을 보이고 있다. 먼저 인구 10만 명당 산모 사망률은 2015년 58명에서 2019년 49명까지 줄어들었으며, 북한의 VNR 보고서는 2030년까지 4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전문 의료 인력이 참여한 출산 비율은 2015년 99.9%에서 2018년 99.5%로 다소 줄어들었으나, 2010년에는 97.3%였던 점을 고려할 때 뚜렷한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의 VNR 보고서는 2030년까지 100% 달성을 세부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1,000명당 아동 사망률의 경우 5세 미만인 아동은 2015년 17.7명에서 2020년 16.8명으로, 신생아 사망은 2014년 9명에서 2019년 7.7명으로 모두 감소세를 보인다. 북한은 VNR 보고서에서 5세 미만은 1,000명당 12명, 신생아는 6명 미만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가임기 여성 중 현대적 가족계획에 대한 만족도(2017년 89.7%) 및 청소년 출산 비율(2017년 1,000명당 1명) 등의 수치도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각종 감염병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결핵은 2015년 451명에서 2020년 351명으로 감소하였으며, B형간염은 2015년 6.8명에서 2020년 5.9명으로 감소하였다. 북한의 VNR 보고서는 말라리아 발병률 감소를 MDGs 추진 기간 가장 중요한 성공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북한은 말라리아 감염이 2010년부터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해서, 인구 1,000명당 2015년 0.52명에서 2020년 0.15명으로 감소하였고 직접적 사망자가 없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AIDS/HIV와 소외열대질환은 0명으로 보고되었다. 북한의 VNR은 말라리아, 결핵 및 AIDS/HIV 퇴치에 글로벌펀드의 지원을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북한은 자살률에 대해서는 구체적 수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VNR 보고서는 사회주의 체제를 통해 모든 국민의 이익이 충족되기

때문에 자살이 사회적 문제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자살문제를 부정하고 있다. 그 밖에 국민 1인당 알코올 섭취량 역시 지표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구체적 수치는 제공되지 않았다. 한편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안전하지 않은 물과 위생시설 등으로 인한 사망률 등은 기술적 문제 등으로 인해 확인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다. 심혈관 질환, 암, 당뇨병 또는 만성 호흡기 질환 등 비전염성 중대 질환 역시 구체적 수치는 제공되지 않았으나, VNR 보고서는 2030년까지 전반적 무상 치료제와 예방의학 정책을 통해 조기 사망률을 1/3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북한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률은 북한의 VNR 기준으로는 2015년 8.5명에서 2020년 7.9명으로 다소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WHO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4.19명으로 국제적 기준과 큰 차이를 보인다.^{175/}

북한은 백신을 지원받는 대상 인구가 2020년 기준 94.5%로 밝히고 있으나 이는 2015년의 97.7%에서 다소 하락한 수치이다. 또한 VNR 보고서에서 대부분의 백신접종이 북한 당국과 GAVI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진행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최근 북한의 오미크론 확산 양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북한은 백신접종에 있어서 심각한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은 VNR 보고서에서 자체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건인력 부족, 제약·의료기 공장의 기술 부족, 필수 의약품 부족 등 국제적 기준과 지역별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175/} World Health Organization, “The Global Health Observatory, Estimated road traffic death rate (per 100,000 population),”
 <[https://www.who.int/data/gho/data/indicators/indicator-details/GHO/estimated-road-traffic-death-rate-\(per-100-000-population\)](https://www.who.int/data/gho/data/indicators/indicator-details/GHO/estimated-road-traffic-death-rate-(per-100-000-population))>
 (Accessed June 5, 2022).

(3) 목표 및 지표 평가

(가) 목표, 세부목표, 지표 적용에 대한 평가

북한은 SDG 3의 목표, 세부목표 및 지표를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세부목표(3.1)는 SDG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도 하였다. 일부 지표의 경우 북한의 정치적 또는 현실적 이유로 삭제하거나 추가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우선 삭제된 지표들의 경우 약물사용장애 치료 보장(3.5.1), 의료비 과부담 인구 비율(3.8.2)이 있다. 또한 세부목표 3.d(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의 조기경보, 위험 감소, 국가 및 글로벌 보건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와 이에 해당하는 지표들인 IHR에 의한 수용 능력 및 응급대처 능력(3.d.1), 항생제 내성 유기체에서 기인한 혈류 감염률(3.d.2)도 삭제하였다.

한편 의학연구 및 기초보건 부문 ODA 순 지출액(SDG 3.b.2)은 의료 연구 및 기초보건분야의 ODA(NDG 3.b.2)로 변용되었다. 이 밖에 북한은 NDG에서 보건 부문 예산 지출 비율(3.c.2)을 추가하였다.

표 III-17 북한의 SDG 3 수용 현황

| 유엔 세부목표 및 지표 | 북한 | | | | |
|---|----|----|----|----|---|
| | 수용 | 변용 | 삭제 | 추가 | 비고 |
| 3.1 2030년까지 모성 사망비를 출생아 10만 명당 70명 미만으로 감소 | | ○ | | | [변용] 2030년까지 산모 사망률을 10만 명당 40명 미만으로 감소 |
| 3.1.1 모성 사망비 | ○ | | | | |
| 3.1.2 숙련된 의료 인력이 참여한 출산 비율(%) | ○ | | | | |
| 3.2 2030년까지 신생아와 5세 미만의 예방 가능한 사망을 종식시켜, 모든 국가의 신생아 사망률을 1,000명당 최소 12명 이하, 5세 미만 사망률을 1,000명당 최소 25명 이하 목표 | | ○ | | | |
| 3.2.1 5세 미만 사망률 | ○ | | | | |
| 3.2.2 신생아 사망률 | ○ | | | | |

| 유엔 세부목표 및 지표 | 북한 | | | | |
|---|----|----|----|----|--|
| | 수용 | 변용 | 삭제 | 추가 | 비고 |
| 3.3 2030년까지 AIDS, 결핵, 말라리아 및 소외열대 질환의 확산을 종식시키고 간염, 수인성 질병 및 기타 전염성 질병 방지 | ○ | | | | |
| 3.3.1 비감염인구 1,000명당 HIV 신규 감염자 수 (성, 연령 및 주요 인구 특성별) | ○ | | | | |
| 3.3.2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 건수 | ○ | | | | |
| 3.3.3 인구 1,000명당 말라리아 발생 건수 | ○ | | | | |
| 3.3.4 인구 10만 명당 B형간염 발생 건수 | ○ | | | | |
| 3.3.5 소외열대질환 치료가 필요한 인구수 | ○ | | | | |
| 3.4 2030년까지 예방과 치료를 통해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을 1/3로 감소시키고 정신건강과 웰빙 향상 | ○ | | | | |
| 3.4.1 심혈관계 질환, 암, 당뇨 또는 만성호흡기 질환 사망률 | ○ | | | | |
| 3.4.2 자살률 | ○ | | | | |
| 3.5 마약 및 해로운 알코올을 포함해 약물남용 예방 및 치료 강화 | ○ | | | | |
| 3.5.1 약물사용장애 치료개입(약물치료, 심리사회적 재활 및 사후 관리 서비스) 보장 범위 | | | ○ | | |
| 3.5.2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순 알코올 소비량 | ○ | | | | |
| 3.6 2020년까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 수 절반으로 감소 | ○ | | | | |
| 3.6.1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 ○ | | | | |
| 3.7 2030년까지 가족계획, 정보 및 교육 등을 포함한 성 및 생식보건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고 생식보건을 국가전략과 프로그램에 통합 | ○ | | | | |
| 3.7.1 현대적 피임법 사용으로 가족계획 욕구가 충족되는 가임기(15~49세) 여성의 비율 | ○ | | | | |
| 3.7.2 여성 청소년(10~14세, 15~19세) 인구 1,000명당 출산율 | ○ | | | | |
| 3.8 재정위험 보호, 양질의 필수보건서비스, 모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합리적인 가격의 필수 약품 및 백신에 대한 접근 등을 포함하는 보편적 건강 보장 서비스 제공 | | ○ | | | [변용] 의사당당구역제를 강화하고 특정 지역을 위해 도 인민병원을 의료봉사센터로 보수하며 인민병원과 진료소에 적절한 물질을 공급하여 인민의 삶을 보호하고 그들의 건강을 증진 |
| 3.8.1 필수보건서비스 보장 범위 | | ○ | | | [변용] 필수 의료봉사 보장 |
| 3.8.2 가구 총지출 및 소득 대비 의료비 과부담 인구 비율 | | | ○ | | |

| 유엔 | 북한 | | | | |
|--|----|----|----|----|------------------------------|
| 세부목표 및 지표 | 수용 | 변용 | 삭제 | 추가 | 비고 |
| 3.9 2030년까지 유해화학물질,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건수 상당 수준으로 감소 | ○ | | | | |
| 3.9.1 실내공기오염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 ○ | | | | |
| 3.9.2 안전하지 않은 물과 하수처리, 부족한 위생 시설로 인한 사망률 | ○ | | | | |
| 3.9.3 비의도적 중독 사망률 | ○ | | | | |
| 3.a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 강화 | ○ | | | | |
| 3.a.1 연령표준화한 15세 이상 인구의 현재 흡연율 | ○ | | | | |
| 3.b 개도국에서 주로 발생하는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병에 대한 백신 및 약품 개발과 연구 지원, 저렴한 가격의 필수 의약품 및 백신 제공, 특히 모두에게 의약품에 대한 접근 보장 | ○ | | | | |
| 3.b.1 국가정책에 포함된 모든 백신을 접종한 인구의 비율 | ○ | | | | |
| 3.b.2 의학연구 및 기초보건 부문 ODA 순 지출액 | ○ | | | | |
| 3.b.3 적절한 가격으로 필수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의료 시설 비율 | ○ | | | | |
| 3.c 최빈개도국 및 개도국에서의 보건인력 양성, 훈련 및 보건 분야 자원 상당 수준 증가 | ○ | | | | |
| 3.c.1 보건의료 인력밀도 및 분포 | ○ | | | | |
| | | | | ○ | [추가] 3.c.2 보건 부문 예산 지출 비율 |
| 3.d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의 조기경보, 위험 감소, 국가 및 글로벌 보건리스크 관리 역량강화 | | | ○ | | |
| 3.d.1 국제보건규정(IHR)에 의한 수용 능력 및 응급 대처 능력 | | | ○ | | |
| 3.d.2 선별된 항생제 내성 유기체에서 기인한 혈류 감염률 | | | ○ | | |

출처: 통계개발원, 『한국 SDG 이행보고서 2021』, p. 92; “DPRK VNR 2021,” pp. 51~52, pp. 58~59; 북민협 번역, “북한 VNR 보고서 2021,” pp. 50~51, pp. 56~57을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북한은 SDG 3의 지표들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표들을 삭제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우선 SDG 3.5.1(약물사용장애 치료개입보장 범위)의 경우 기술적 문제로

빠졌으나 추후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지표를 삭제할 경우 다른 지표들에 해당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북한의 NDG는 3.5.1의 내용만 삭제하고 번호는 남겨둔 뒤, 다음 지표에 3.5.2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SDG 3.5.1은 추후에 NDG에 추가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인다.

SDG 3.8.2(가구 총지출 및 소득 대비 의료비 과부담 인구 비율)는 북한이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여 삭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세부목표 3.d와 그 지표들인 3.d.1(국제보건규정에 의한 수용 능력 및 응급대처 능력) 및 3.d.2(선별된 항생제 내성 유기체에서 기인한 혈류 감염률)를 모두 삭제하여 반영하지 않고 있다. 세부목표 전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북한 내부의 자체적 역량 또는 관심의 부족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나) 지표의 신뢰성과 지속성에 대한 평가

북한은 표면적으로는 SDG 3의 지표들을 충실하게 NDG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완벽하지는 않지만 VNR 보고서를 통해 다양한 지표의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SDG 3 지표 현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측면에서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북한의 의료체계와 자료의 수집이 전산시스템 등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인력에 의해 복잡한 관료체계 속에서 이뤄진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SDG 3의 데이터들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반영하기 보다는 북한의 체제 유지와 관료체계 내에서의 성과주의 등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의 지표의 신뢰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다) 지표 미공개·부재에 대한 대응 및 보완 방향

북한은 SDG 3에서 일부 지표를 미공개하거나 삭제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3.5.1(약물사용장애 치료 보장)과 3.8.2(의료비 과부담 인구 비율)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북한의 자체적 NDG 3에도 3.5.1 항목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추후에 북한 당국에 의해 공개될 여지가 있다고 해석된다. 3.8.2의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국가가 모든 의료비를 부담하는 무상의료를 채택하는 북한의 특성상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단, 북한의 건강권 관련 각종 실태조사 등은 실제로는 환자 및 보호자가 약품, 수술도구 등 대부분의 의료비를 부담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6/} 따라서 비공식적 영역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를 포함하여 의료비 부담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세부목표인 IHR에 의한 수용 능력 및 응급대처 능력(3.d.1)과 항생제 내성 유기체에서 기인한 혈류 감염률(3.d.2)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한계와 역량부족으로 인해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바,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해 북한의 자료수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SDG 4 양질의 교육

(1) 목표 및 지표 개관

(가) SDG 4 목표와 지표

유엔 SDG 4는 교육에 관한 목표이다. SDGs 수립 이전 국제사회의 개발목표였던 MDGs에서도 ‘보편적 초등교육의 실현’이라는 유사한

^{176/} 오경섭 외, 『북한인권백서 2021』 (서울: 통일연구원, 2021), pp. 260~265.

목표를 제시하고 실천해 왔으나, MDGs는 초등교육의 보편적 기회 확대와 개도국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SDG 4는 보다 포괄적인 범주에서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 문제를 다루며, 초등 및 중등교육뿐만 아니라 취학 전 교육 접근성, 기술교육 및 직업훈련 등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교육의 기회 제공을 강조한다. 더불어 교육에서의 성차별 해소와 교육 접근성 보장 이슈 또한 포함하고 있다.

SDG 4의 핵심 목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의 광범위한 보장을 목표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전체적이고 평생학습적인 관점에서 모든 아동, 청년, 성인의 효과적이고 적절한 학습 성과를 낳는 보편적인 취학 전 교육과 초·중·등교육의 보장을 목표로 한다. 둘째, SDG 4는 포용, 형평성, 성평등에 대해 새롭게 광범위하게 초점을 맞춘다. 특히 이러한 특성은 성불평등을 없애고 장애인, 선주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 훈련에 대한 좀 더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고자 하는 세부목표 4.5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셋째, SDG 4는 효과적인 학습, 적절한 기술, 기능, 능력의 획득에 새롭게 초점을 맞춘다. 이는 특히 취학 전 교육(세부목표 4.2), 초·중·등교육(세부목표 4.1)과 청년 및 성인 문해를 위한 세부목표(4.6)와 글로벌 지표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넷째, SDG 4는 좋은 일자리(세부목표 4.4) 및 다면적이고 상호의존적이며 상호연결된 세계에서 세계시민성(세부목표 4.7)을 위한 직업 기술 능력적인 관점에서 학습의 적절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177/}

유엔의 IAEG-SDGs(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dicators, 관계기관 전문가그룹)는 지표별 소관

177/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답으로 풀어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4) 교육 2030 안내서』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8), pp. 10~11.

국제기구 및 유엔 통계처와의 협업을 통해 SDG 세부목표별 지표를 제공한다. SDG 4는 <표 III-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 10개의 세부목표와 세부목표의 진전을 측정하는 12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목표 4.1(초·중등교육)과 4.2(취학 전 교육)에만 지표가 2개씩 있고 나머지 세부목표 4.3~4.c에는 지표가 각각 1개씩 있다. SDG 4의 이행체계 측면에서 주목할 점은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개발계획), UNFPA(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유엔인구기금), UNHCR(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난민기구), UNICEF, UN Women(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유엔여성기구), World Bank, ILO 등을 포함한 유엔 차원의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국가별 자율적인 이행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SDG 4는 국가별 특수성을 고려한 자율적인 이행, 모니터링 및 보고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표의 타당성과 가용성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178/}

표 III-18 SDG 4의 세부목표와 지표

| 세부목표 | 지표 |
|---|--|
| 4.1 모든 여아와 남아가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평한 양질의 무상 초·중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이수를 보장한다. | 4.1.1 (a) 초등학교 2~3학년 (b) 초등학교 말 (c) 전기 중등교육 말에 (i) 읽기와 (ii) 수학 분야에서 최소 숙달 수준에 도달한 아동/청소년 비율 4.1.2 초·중·고등학교 교육 완수율 |
| 4.2 모든 여아와 남아에게 양질의 영유아 발달 교육, 보육 및 취학 전 교육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며 이들이 초·중등교육을 준비할 수 있게 한다. | 4.2.1 건강, 학습, 사회심리적 안녕의 발달 정도가 일반적인 5세 미만 아동의 성별 비율 4.2.2 (정규 초·중등교육 입학 1년 전) 조직화된 학습 참여 성별 비율 |

178/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SDG 4 이행 현황 연구』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2019), p. 4.

| 세부목표 | 지표 |
|--|---|
| 4.3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 비용의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 4.3.1 최근 12개월 내 형식·비형식 교육훈련에 참여한 청년/성인의 성별 비율 |
| 4.4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 직업 기술 등 적합한 기술을 가진 청년과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늘린다. | 4.4.1 기술 유형별 ICT 기능을 보유한 청년과 성인의 비율 |
| 4.5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선주민, 취약한 상황에 처한 이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4.5.1 세분화할 수 있는 이 목록의 모든 지표 대상 형평성 지수(여성/남성, 농촌/도시, 소득 상위/하위 5분위 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장애 형태, 선주민, 분쟁 영향 여부 등) |
| 4.6 모든 청소년과 상당수 성인 남녀의 문해력과 수리력 성취를 보장한다. | 4.6.1 특정 연령 집단에서 기능적 (a) 문해력과 (b) 수리력이 최소 일정 수준에 도달한 성별 인구 비율 |
| 4.7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 생활 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습득을 보장한다. | 4.7.1 성평등과 인권 등 (i) 세계시민교육과 (ii) 지속가능발전교육의 (a) 국가 교육 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 교육 (d) 학생평가에서 주류화 정도 |
| 4.a 아동, 장애인, 성별을 고려한 교육시설을 건립하고 개선하며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한다. | 4.a.1 (a) 전기 (b) 교육 목적의 인터넷 (c) 교육 목적의 컴퓨터 (d) 장애학생을 위한 설비와 자료 (e) 기초 식수 (f) 남녀 구분 기초 위생 시설 (g) (WASH 기준 부합) 기초 손 씻기 시설 등에 접근할 수 있는 학교 비율 |
| 4.b 전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군소 도서개발국, 아프리카 국가 등이 선진국이나 기타 개발도상국의 직업훈련, 정보통신기술, 과학기술 및 공학 분야를 포함한 고등교육에 등록하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을 실질적으로 확대한다. | 4.b.1 연구 부문 및 유형별 장학금 관련 ODA 유입량 |
| 4.c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및 군소도서개발국에서 교사훈련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통해 자격을 갖춘 교사공급을 실질적으로 늘린다. | 4.c.1 특정 국가 해당 교급의 교수에 필요한 최소 수준의 예비교사 양성 교육 및 직문연수 (예: 교수법 연수)를 받은 (a) 취학 전 교육 (b) 초등학교 (c) 중학교 (d) 고등학교 각각의 교사 비율 |

출처: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4," <<https://sdgs.un.org/goals/goal4>> (Accessed September 19, 2022); 통계개발원, 『한국 SDG 이행보고서 2021』, pp. 92~93을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다음의 <표 III-1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SDG 4 지표 수집 가능성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2017년을 기준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한 지표는 4.2.2(초등학교 입학 전 정규화된 학습), 4.b.1(공적원조를 위한 장학금), 4.c.1(조직화된 교사훈련)의 3개뿐이고 나머지 지표는 모두 데이터가 불충분한 지표로 나타났다.^{179/} 반면, 2021년에는 4.3.1(형식적·비형식적 교육과 훈련), 4.5.1(교육 지수에서의 불평등), 4.a.1(교육 시설과 인프라)이 추가되어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한 지표가 총 6개로 증가하였다. 아시아태평양 내 58개국 또는 관할영역 내에서 SDG 4와 관련된 데이터가 부재한 지표는 존재하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 2021년을 기준으로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한 지표는 6개, 데이터가 불충분한 지표는 2개, 데이터가 부재한 지표는 4개였다. 마찬가지로 2021년을 기준으로 북한의 경우에는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한 지표는 1개뿐이고 데이터가 충분한 지표는 4개, 데이터가 부재한 지표는 7개로 확인된다. 한편 <표 III-19>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21년 기준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SDG 4 지표들은 대부분 최상위 수치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중고등학교 교육 완수율이나 초등학교 입학 전 정규화된 학습, 문해력과 수리력, 교육시설과 인프라, 조직화된 교사 훈련 등에서 100%의 달성률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179/ 2017년 자료의 경우 2021년 자료 해석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세 양호(trend ok)'를 '충분'으로, '현황 양호(status ok)'와 '현황 제한(status limited)'을 '불충분'으로 분류하였다.

표 III-19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SDG 4 지표 수집 가능성

| 지표 | 티어 그룹 | 아시아태평양 2017 | | | 아시아태평양 2021 | | | 한국 2021 | | | 북한 2021 | | | |
|-----------------------------|-------|-------------|-----|-------|-------------|-----|-------|---------|-----|-------|---------|-----|-------|---|
| | | 충분 | 불충분 | 자료 없음 | 충분 | 불충분 | 자료 없음 | 충분 | 불충분 | 자료 없음 | 충분 | 불충분 | 자료 없음 | |
| 4.1.1 어린이와 젊은이들의 읽기와 수학 숙련도 | I | | ○ | | | ○ | | ○ | | | | | ○ | |
| 4.1.2 초중고등학교 교육 완수율 | I | | ○ | | | ○ | | | | ○ | | | | ○ |
| 4.2.1 어린이들의 정상 발달 | II | | ○ | | | ○ | | | | ○ | | | ○ | |
| 4.2.2 초등학교 입학 전 정규화된 학습 | I | ○ | | | ○ | | | ○ | | | | | | ○ |
| 4.3.1 형식적·비형식적 교육과 훈련 | II | | ○ | | ○ | | | ○ | | | | | ○ | |
| 4.4.1 ICT 기술 | II | | ○ | | | ○ | | ○ | | | | | | ○ |
| 4.5.1 교육 자수에서의 불평등 | I, II | | ○ | | ○ | | | ○ | | | | | ○ | |
| 4.6.1 문해력과 수리력 | II | | ○ | | | ○ | | | ○ | | | | | ○ |
| 4.7.1 교육에서의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주류화 | I | | | ○ | | ○ | | | ○ | | | | | ○ |
| 4.a.1 교육 시설과 인프라 | I | | ○ | | ○ | | | ○ | | | | | | ○ |
| 4.b.1 공적원조를 위한 장학금 | I | ○ | | | ○ | | | | | ○ | ○ | | | |
| 4.c.1 조직화된 교사 훈련 | II | ○ | | | ○ | | | | | ○ | | | | ○ |

출처: UNESCAP, *Statistical Yearbook for Asia and the Pacific 2017: Measuring SDG progress in Asia and the Pacific: Is There Enough Data?* pp. 30~34; ESCAP SDG Gateway Asia Pacific, "Data Availability," (Accessed September 19, 2022)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표 III-20 아시아태평양 지역 SDG 4 이행지표의 목표(2021년)

| 이행지표 | 목표(비율) |
|--------------------------------|--------------------|
| 4.1.1 어린이와 젊은이들의 읽기와 수학 숙련도(%) | 89(읽기) 91.7(수학) |
| 4.1.2 초중고등학교 교육 완수율(%) | 100 |
| 4.2.2 초등학교 입학 전 정규화된 학습(%) | 100 |
| 4.3.1 형식적·비형식적 교육과 훈련(%) | 3.2 |
| 4.4.1 ICT 기술 | - |
| 4.5.1 교육 자수에서의 불평등(ratio) | 1 |
| 4.6.1 문해력과 수리력(%) | 100 |
| 4.7.1 교육에서의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주류화 | - |
| 4.a.1 교육 시설과 인프라(%) | 100 |
| 4.b.1 공적원조를 위한 장학금 | - |
| 4.c.1 조직화된 교사 훈련(%) | 100 |

출처: UNESCAP, *Asia and the Pacific SDG Progress Report 2021*, pp. 76~77을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나) SDG 4 지표 관리기구와 수집 현황

유엔 SDGs의 지표는 세 개의 티어(I, II, III)로 구분된다. 티어 I은 개념이 명확하고 국제적으로 수립된 방법론과 기준을 이용할 수 있으며 데이터가 정기적으로 생산되는 국가가 50% 이상인 지표이며, 티어 II는 개념이 명확하고 국제적으로 수립된 방법론과 기준을 이용할 수는 있으나 국가별로 정기적인 데이터가 생산되지 않는 지표이다. 티어 III은 국제적으로 수립된 방법론과 기준이 개발 혹은 시험 중인 상태로 아직까지 이용할 수 없는 지표이다.^{180/} 2022년 2월에 업데이트된 기준에 따르면, SDG 4 지표는 모두 티어 I, 혹은 티어 II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제적인 비교가 어느 정도 가능한 상황이다. 세부목표 4.1(초중등교육), 4.a(모두를 위한 포용적 교육), 4.b(교육재정 확보)의 지표들은 모두 티어 I에 속하며, 세부목표 4.3(고등교육), 4.4(취업에 적합한 기술), 4.6(문해력과 수리력), 4.7(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4.c(교사 확보)의 지표들은 모두 티어 II에 속한다. 세부목표 4.2(취학 전 교육)의 경우 지표 4.2.1은 티어 II에, 지표 4.2.2는 티어 I에 각각 속하고, 세부목표 4.5(교육 형평성)는 상황에 따라 티어 I 또는 II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SDG 4 지표를 관리하고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국제기구에는 UNESCO-UIS(10개), UNICEF(1개),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전기통신연합)(1개), OECD(1개) 등이 있다.

^{180/} 김수진, “SDGs 지표 데이터 이용가능성(Data Availability) 분석,” 『국제개발 협력』, 제2호 (2016), p. 80.

표 III-21 SDG 4 지표 현황 및 관리기구와 북한의 지표 보유 현황

| 세부목표 | 지표 | 변경 티어 | 가능한 관리기관 | 파트너 기관 | 북한 보유 여부 |
|---|--|----------|--------------------|--|----------------|
| 4.1 모든 여아와 남아가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평한 양질의 무상 초 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이수를 보장한다. | 4.1.1 (a) 초등학교 2~3학년 (b) 초 등학교 말 (c) 전기 중등교육 말에 (i) 읽기와 (ii) 수학 분 야에서 최소 숙달 수준에 도달 한 아동/청소년의 비율 | I | UNESCO-UIS | OECD | O |
| | 4.1.2 초·중·고등학교 교육 완수율 | I | UNESCO-UIS | | X |
| 4.2 모든 여아와 남아에게 양질의 영유아 발달교육, 보육 및 취학 전 교육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 며 이들이 초등교육을 준비할 수 있게 한다. | 4.2.1 건강, 학습, 사회심리적 안녕 의 발달 정도가 일반적인 5세 미만 아동의 성별 비율 | II | UNICEF | UNESCO-UIS, OECD, World Bank, WHO | O |
| | 4.2.2 (정규 초등교육 입학 1년 전) 조직화된 학습 참여 성별 비율 | I | UNESCO-UIS | UNICEF, OECD | O |
| 4.3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 비용 의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 4.3.1 최근 12개월 내 형식·비형 식 교육훈련에 참여한 청년/ 성인의 성별 비율 | II | UNESCO-UIS | OECD, Eurostat, ILO | O |
| 4.4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 에 필요한 전문, 직업 기술 등 적합한 기술을 가진 청년과 성 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늘린다. | 4.4.1 기술 유형별 ICT 기능을 보유 한 청년과 성인의 비율 | II | UNESCO-UIS, ITU | OECD | O |
| 4.5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 하고, 장애인, 선주민,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 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4.5.1 세분화할 수 있는 이 목록의 모든 지표 대상 형평성 지수 (여성/남성, 농촌/도시, 소득 상위/하위 5분위 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장애 형 태, 선주민, 분쟁 영향 여부 등) | II | UNESCO-UIS | OECD | O |
| 4.6 모든 청소년과 상당수 성인 남 녀의 문해력과 수리력 성취를 보장한다. | 4.6.1 특정 연령 집단에서 기능적 (a) 문해력과 (b) 수리력이 최 소 일정 수준에 도달한 성별 인구 비율 | II | UNESCO-UIS | World Bank, OECD | X |
| 4.7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 생활 방식 인권 성 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 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 한 지식 및 기술 습득을 보장한다. | 4.7.1 성평등과 인권 등 (i) 세계시 민교육과 (ii)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a) 국가 교육 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 교육 (d) 학 생평가에서 주류화 정도 | I | UNESCO-UIS | OECD, UNEP, UN Women | O |

| 세부목표 | 지표 | 변경 티어 | 가능한 관리기관 | 파트너 기관 | 북한 보유 여부 |
|--|--|----------|-------------|--------------------|----------------|
| 4.a 아동, 장애인, 성별을 고려한 교육시설을 건립하고 개선하며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한다. | 4.a1 (a) 전기 (b) 교육 목적의 인터넷 (c) 교육 목적의 컴퓨터 (d) 장애학생을 위한 설비와 자료 (e) 기초 식수 (f) 남녀 구분 기초 위생 시설 (g) (WASH 기준 부합) 기초 손 씻기 시설 등에 접근할 수 있는 학교 비율 | I | UNESCO-UIS | UNICEF, OECD, UNEP | O |
| 4.b 전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군소도서개발국, 아프리카 국가 등이 선진국이나 기타 개발도상국의 직업훈련, 정보통신기술, 과학기술 및 공학 분야를 포함한 고등교육에 등록하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을 실질적으로 확대한다. | 4.b.1 연구 부문 및 유형별 장학금 관련 ODA 유입량 | I | OECD | UNESCO-UIS | X |
| 4.c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및 군소도서개발국에서 교사훈련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통해 자격을 갖춘 교사공급을 실질적으로 늘린다. | 4.c.1 특정 국가 해당 교급의 교수에 필요한 최소 수준의 예비 교사 양성 교육 및 직무연수 (예: 교수법 연수)를 받은 (a) 취학 전 교육 (b) 초등학교 (c) 중학교 (d) 고등학교 각각의 교사 비율 | II | UNESCO-UIS | OECD | X |

출처: IAEG-SDGs, "Tier Classification for Global SDG Indicators," (Accessed September 19, 2022); 통계개발원, 『한국 SDG 이행보고서 2021』, pp. 92~93; "DPRK VNR 2021," pp. 52~53, pp. 59~60; 북민협 번역, "북한 VNR 보고서 2021," p. 51, pp. 57~58을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다) K-SDG 4 세부목표와 지표

한국의 SDG 4 수용 현황은 제4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2021~204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SDG 4 목표는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SDG 1(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SDG 2(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SDG 3(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SDG 5(성평등 보장), SDG 11(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과 함께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파트에 포함되어 있다.^{181/} 세부목표의 주요 내용은 ‘양질의 초·중등교육 이수와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에 대한 접근의 평등을 보장하며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확대'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전문 및 직업 기술인을 양성하고 취약계층의 교육 접근성을 보장하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충분한 재정 및 교사를 확보'할 것이 제안되고 있다. 주요 정책으로는 '공교육 신뢰 제고, 고등교육 기회 확대, 평생교육·직업교육훈련·지속가능발전교육 강화, 소외 계층 기초교육 및 직업교육 학습권 보장, 균등 교육을 위한 재정 투자 확대, 교원 전문성 강화' 등이 있다.^{182/}

〈표 III-22〉는 K-SDGs 교육 분야의 세부목표와 지표를 제시한 것이다. K-SDGs 교육 분야는 2021년 기준 총 10개의 세부목표와 2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K-SDGs 교육 분야의 총 28개의 지표 중 18개 지표는 유엔 SDG 4의 지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10개 지표는 신규로 설정되었다. 반면, 국제적으로는 중요한 지표이지만 한국에서 이미 목표를 달성한 지표들, 예컨대, 4.1.1(어린이와 젊은이들의 읽기와 수학 숙련도)과 같이 이미 한국에서 최상위 수치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는 지표들은 K-SDGs 교육 분야의 지표에서 제외되었다. 아울러 유엔 SDG 4의 이행 수단에 해당하는 4.a, 4.b, 4.c의 경우 글로벌 이행이 아닌 국내 이행에 초점을 맞추어 K-SDGs 내에서 한국적 맥락에 맞는 목표와 지표들로 변형되었다. 구체적으로, 유엔 SDG 4.a에 해당하는 K-SDG 4.8 목표는 '포용적이고 안전한 학습 환경'으로, 유엔 SDG 4.b에 해당하는 K-SDG 4.9 목표는 '교육재정 확보'로, 유엔 SDG 4.c에 해당하는 K-SDG 4.10 목표는 '양질의 교사 확보'를 목표로 수용되었으며 각각의 목표에 맞는 지표들이 신설되었다.

181/ 관계부처 합동, 『제4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2021~2040 제1부』(2021), p. 21.

182/ 위의 책, p. 24.

표 III-22 K-SDG 4 세부목표와 지표

| K-SDG 4 모드를 위한 양질의 교육 | |
|--|---|
| 세부목표 | 지표 |
| 4.1 모든 아동이 성별과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가질 수 있도록 양질의 무상 초등·중등교육의 평등한 이수 보장 | (1) 취학을 (2) 국제 학업성취도평가(PISA 2~6수준 학생 비율) (3) 국가수준 학습성과지표 산출 |
| 4.2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서비스의 이용기회를 보장하여 초등교육에 대비 | (1) 신체적 건강 학습, 심리사회적 안녕 측면에서 발달 정도가 정상적인 5세 이하 여아와 남아 비율 (2) 초등학교 취학 전 체계적인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이용률 (3)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 (4) 긍정적인 가정학습 및 양육환경을 경험하는 영유아 비율 |
| 4.3 모든 학습자들에게 성별과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적정비용으로 가능한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교육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 보장 | (1) 고등교육 이수율 (2)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수혜금액 (3) 고등교육기관에서 성인 학습자의 비학위 교육 과정 참여율 |
| 4.4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 기술 및 직업기술 등 적절한 기술을 가진 청소년 및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증대 | (1) 평생학습 참여율 (2)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 (3) 청소년 및 성인의 ICT 역량 수준 |
| 4.5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이주민, 취약상황에 처한 아동 등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1) 모든 지표에 성별, 장애, 취약계층별 분리통계 도입 |
| 4.6 모든 청소년과 다수의 성인이 문해 및 산술능력을 갖추도록 함 | (1) 활용 가능한 언어역량과 수리역량의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숙련도를 달성한 특정 연령 인구 비율(PIACC) (2) 성인 문해율 |
| 4.7 지속가능발전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존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함 | (1)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주류화 정도(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사교육, 학생평가) (2)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 교육 관련 교육 정책 사업 비율 (3) 교육과정 내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 교육 관련 요소 반영 비율 (4) 교원 중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경험자 비율 |
| 4.8 아동, 장애인, 성별을 고려한 교육시설을 건립·개선하고,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제공 | (1)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율 (2) 학교 내진보강률 (3) Wee 클래스 설치 비율 |

| K-SDG 4 모드를 위한 양질의 교육 | |
|---|--|
| 세부목표 | 지표 |
| 4.9 포용적이고 양질의 교육을 위해 모든 교육단계에서의 충분한 교육재정 확보 | (1) 교육단계별 GDP 대비 공교육비 정부 부담 비율 |
| 4.10 모든 교육단계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사를 충분히 확보 | (1) 교사 1인당 학생 수 (2) 보육교사 중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비율 (3) 특수교사 1인당 특수학생 수 (4) 초·중등 전문상담교사 배치 비율 |

출처: 관계부처 합동, 『제4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2021~2040 제1부』, pp. 48~49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제4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2021~2040)에 따르면, K-SDGs 교육 분야에서 향후 5년간 중점 추진이 필요한 목표와 지표는 4.4(취업에 적합한 기술)에서의 (1) 평생학습 참여율, (2)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 (3) 청소년 및 성인의 ICT 역량 수준과 4.5(교육 형평성)에서의 모든 지표에 성별, 장애, 취약계층별 분리통계 도입으로 선정되었다.^{183/} 또한 공식통계 활용이 가능한 99개의 K-SDGs 지표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을 평가한 결과,^{184/} 2030년 목표치 달성 가능성을 중심으로 위의 ‘맑음’에 5개(고등교육 이수율, 평생학습 참여율,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 Wee 클래스 설치 비율), ‘맑거나 흐림’에 3개(초등 학교 취학 전 체계적인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이용률,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 초·중등 전문상담교사 배치 비율), ‘흐림’에 2개(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정부부담 비율, 보육교사 중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비율), ‘뇌우’에 1개(다문화학생 학업중단율)의 지표가 각각 해당되었다. 특히 ‘다문화학생 학업중단율’의 경우 2013~2017년 사이의 기간에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183/} 위의 책, p. 32.

^{184/} 위의 책, p. 32.

(2) 북한 현황

(가) 북한의 SDG 4 목표와 세부목표 및 지표

북한 사회에서 교육은 해방 이후 국가 형성기부터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이데올로기 동원과 노동력 재생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185/} 1970년대는 북한 교육체계의 근간이 마련된 시기로 볼 수 있는데, 이 시기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에 대한 개편이 이루어지고 사회주의교육의 목적을 명시한 ‘사회주의교육에 대한 테제’가 발표되었기 때문이다.^{186/} 김정은 시대에 이르러 기존의 4-6제 초·중등 교육을 5-3-3제로 개편하고 의무교육기간을 1년 연장하여 1년간의 학교전 의무교육을 포함하는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전면적인 학제 개편이 단행되었으며, 학제 개편의 후속 조치로 2013년부터 교육과정 개정과 새로운 교과서 편찬 작업이 이루어졌다.^{187/} 이처럼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은 김정일 집권기의 교육과 차별성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정권 초기에 다른 어떤 부문보다도 교육 부문에서 새로운 개혁을 시도하였다는 것은 북한 사회의 정당성과 안정성 유지에 갖는 교육의 상징적 의미를 보여준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도 북한의 교육 목적과 기본 성격이 여전히 사회주의교육에 대한 테제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1970년대 이후 지금까지 북한이 교육을 통해 육성하고자 하는 인간상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도 볼 수 있다.^{188/} 교육정책의 방향 측면에서도

185/ 조정아, “김정일 시대의 북한 교육 정책,” 『아시아교육연구』, 제5권 2호 (2004), p. 1.

186/ 차승주, “김정은 시대 북한 교육의 변화에 관한 소고: 1970년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1호 (2018), p. 180.

187/ 조정아, “김정은 시대 북한 교육정책 방향과 중등교육과정 개편,” 『통일정책연구』, 제23권 2호 (2014), pp. 177~178.

188/ 차승주, “김정은 시대 북한 교육의 변화에 관한 소고: 1970년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p. 180.

김정은 시대는 1990년대 경제난에 따른 공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교육에서의 실리주의’가 계승되고 있으며 정보통신과 컴퓨터 교육 강화를 통한 인재 양성, 수월성에 중심을 둔 교육체제 개편, 학점제와 선택교과목제를 비롯한 새로운 제도 도입 등을 통한 교육의 질적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189/} 이는 김정은 시대의 북한 교육정책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이데올로기 동원과 노동력 재생산이라는 기존의 교육목표를 견지하면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라는 전 지구적 변환 속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처럼 사회주의 체제의 유지와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할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온 북한 사회 내에서의 교육의 위상에 걸맞게, ‘양질의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북한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산출해내고 있다. SDGs 교육 관련 지표 수집과 관리를 담당하는 UNESCO-UIS는 북한의 취학률, 문해율, 교사 1인당 학생 수 등의 기초통계를 제공하고 있다.^{190/} 이들 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교육기회 및 접근성의 측면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초중등교육 취학률, 진급률, 이수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며, 영유아교육 및 보육과 관련해서도 ‘신체적 건강, 학습, 심리사회적 특성의 측면에서 발달 정도가 정상적인 5세 미만 아동의 비율’이 87.7%로 전 세계 평균인 69.8%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191/} 또한 교사 1인당 학생 수나 문해율, 읽기 능력 등 교육여건과 학습 성과도 다른 체제전환국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192/} 이처럼 비록 정보가 제한

189/ 조정아, “김정은 시대 북한 교육정책 방향과 중등교육과정 개편,” p. 179.

190/ 박환보, “지속가능발전목표 관점에서 본 북한교육: 북한개발협력에 주는 시사점,” 『교육연구논총』, 제41권 2호 (2020), p. 276.

191/ 위의 글, pp. 276~277.

192/ 위의 글, p. 279.

적으로 제공되고 있기는 하나 공식적으로 발표된 수치상으로만 보면 북한의 공교육망이 중등교육 단계까지 모든 학령기 인구를 다 포괄하는 것으로 보이고 북한 주민들의 일반적인 교육 수준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문해율의 경우에도 북한은 정확한 기초통계를 산출하여 공개하고 있지 않으나 탈북자들은 대체로 북한 주민들의 문해력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북한에서 1946년부터 1949년 초까지 이루어진 문맹 퇴치 사업의 결과 불과 3년 만에 큰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되는데, 해방 직후의 혼란한 시기 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기 이전에도 국가 기구가 총동원되어 체계를 갖추어 정책이 집행되었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193/} 미국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 중앙정보부)의 ‘더 월드 팩트북(The World Factbook)’에서도 북한의 문자해독률(literacy), 즉, 15세 이상 인구 중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인구를 2015년 기준으로 100%(남성 99%, 여성 100%)로 발표하고 있으며,^{194/} UNDP 역시 가장 최근에 접근가능한 데이터에 기반하여 북한의 문자해독률을 100%로 집계하고 있다.^{195/}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이나 북한 사회 내부 소식에 의하면, 실제 북한의 교육 상황은 통계수치가 나타내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특히 1990년대 경제난으로 인해 교사와 학생의 상당수가 장기간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등 공교육 체계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며 교육 접근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공교육 복원

193/ 이대성, “광복 직후 북한의 문자 정책,” 『인문과학연구논총』, 제37권 1호 (2018), p. 48.

194/ CIA, “The World Factbook: North Korea,” <<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countries/korea-north/>> (Accessed June 2, 2022).

195/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s. Literacy rate, adult (% ages 15 and older),” <<https://hdr.undp.org/en/indicators/101406#a>> (Accessed June 2, 2022).

작업이 시작되었지만, 부족한 예산이 일부 영재학교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지원됨에 따라 학교들 간의 교육환경 격차가 커졌고, 주민소득 격차가 증가하면서 경제적으로 빈곤한 취약계층 자녀들의 공교육 이탈 현상이 확산되었다.^{196/} 그 결과 유치원 교육단계에서부터 상급학교 진학에 이르기까지 계층별 격차가 확대되고 사교육이 횡행하고 있으며 학교교육의 시장화가 촉진되고 있는 실정이다.^{197/} 2019년 발표된 UNICEF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북한 전체 학교의 약 54%만이 기초 식수와 위생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교육시설 측면에서의 지역 간 격차도 큰 것으로 확인된다.^{198/}

표 III-23 북한의 국가발전목표(NDGs)와 SDG 4

| 국가발전목표(NDGs) | 연관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
| 1. 인민정부 강화 및 인민제일주의 원칙 구현 | 4,9,16 |
| 2. 과학 및 교육에 기반을 둔 전 부문의 발전 | 4,5,9,12,14,17 |
| 3. 자력갱생 및 지식기반 경제 건설 | 1,2,3,4,6,7,8,9,10,11,12,13,14,15 |
| 4. 완전한 사회주의문화 건설 | 1,3,4,9,13,14 |
| 5. 모든 NDGs와 연결된 공통 목표 | 4,5,9,17 |

출처: “DPRK VNR 2021,” pp. 8~11을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표 III-23〉과 〈표 III-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은 모든 NDGs와 연결된 공통 목표로서 유엔 SDG 4를 현지화하고 있으며 양자 간 상이한 세부목표 및 지표를 보여준다. 우선 유엔 SDG 4의 ‘양질의 교육(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이 북한 SDG 4에서는 ‘모든 인민의 지식노동자화(모든 인민을 대학 졸업생의 지적 수준을 갖춘 총명한 노동자로

196/ 이교덕 외,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 139.

197/ 김정원, “북한교사가 바라보는 북한 학교교육의 의미,” 『통일교육연구』, 제13권 2호 (2018).

198/ UNICEF, *Analysis of the Situation of Children and Wome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yongyang: UNICEF Office, 2019), p. 64.

양성한다')로 변형되어 수용되었다. 아울러 유엔 SDG 4는 총 10개의 세부목표와 12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 북한 SDG 4는 총 7개의 세부목표와 9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유엔 SDG 4의 세부목표 가운데 4.6(문해력 및 수리력), 4.b(교육재정 확보), 4.c(교사 확보)는 북한 SDGs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북한이 유엔 SDGs의 4.6과 4.c를 SDGs의 세부목표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오래전에 문자해독률 100%를 달성하였고 교사의 전문화 정도도 이미 높은 수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4.b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ODA와 같은 국제사회에의 교육개발협력 노력에서 소외된 북한의 현황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반면 유엔 SDG 4의 나머지 세부목표 및 지표들은 북한 SDGs에서 일부 수정되거나 범위가 축소되어 반영되어 있다. 가령, 유엔 SDG의 4.5(교육 형평성)가 북한 SDG 4에서는 '4.5 교육내용과 방법을 더욱 개선하여 종합적으로 발달된 재능,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되고, 높은 창의성과 도덕적 품모, 튼튼한 체력을 지닌 청년세대를 육성'으로 변형되어 수용되었다. 또한 유엔 SDG의 4.7(지속가능발전 교육)이 북한 SDGs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내용은 포함되었으나 인권과 성평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과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내용은 삭제된 채로 '4.7 모든 학습자가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보장한다'로 변형되어 수용되었다. 이처럼 세부목표 및 지표가 수정되거나 범위가 축소된 주된 이유는 첫째, 북한이 글로벌 메타데이터 확정이나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국제학업성취도 평가)나 PIACC(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국제성인역량조사), TIMSS(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 등과

같은 국제적 수준의 조사에 참여하지 않고 국내 공식통계에만 의존하고 있어 자료의 제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며, 둘째, 북한 체제의 우월성에 반하거나 북한이 추구하는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는 세부 목표 및 지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반대로 북한의 SDG 4에만 나타나는 고유의 지표도 존재하는데, 예컨대 지표 4.3.2(일·학습병행제(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에 참여한 청소년 및 성인의 비율)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고유성을 강조하기 위한 지표로 보인다.

표 III-24 유엔과 북한의 SDG 4 비교

| 양질의 교육(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 | 모든 인민의 지식노동자화(모든 인민을 대학 졸업생의 지적 수준을 갖춘 총명한 노동자로 양성한다) | |
|--|---|--|--|
| 유엔 SDGs(10개 세부목표, 12개 지표) | | 북한 SDGs(7개 세부목표, 9개 지표) | |
| 세부목표 | 지표 | 세부목표 | 지표 |
| 4.1 모든 여아와 남아가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평한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이수를 보장 | 4.1.1 (a) 초등학교 2~3학년 (b) 초등교육 말 (c) 전기 중등교육 말에 (i) 읽기 와(ii) 수학분야에서 최소 숙달 수준에 도달한 아동/청소년의 성별비율 | 4.1 '잔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 4.1.1 읽기, 수학에서 최소 숙달기준을 달성한 아동과 청소년의 비율 |
| | 4.1.2 초중고등학교 교육 완수율 | | - |
| 4.2 모든 여아와 남아에게 양질의 영유아 발달교육, 보육 및 취학 전 교육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며 이들이 초등교육을 준비 | 4.2.1 건강, 학습, 사회심리적 인명의 발달 정도가 일반적인 5세 미만 아동의 성별비율 | 4.2 모든 여아와 남아가 초등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보육, '학년 전교육'의 질을 높인다. | 4.2.1 건강, 학습, 심리사회적 행복 측면에서 발달과정에 있는 5세 미만 아동의 성별 비중 |
| | 4.2.2 (정규 초등교육 입학 1년 전) 조직화된 학습 참여 성별비율 | | 4.2.2 (공식 초등학교 입학연령 전 1년간 체계적 교육에 대한 성별 참여율 |
| 4.3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 비용의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 | 4.3.1 최근 12개월 내 형식, 비형식 교육훈련에 참여한 청년/성인의 성별비율 | 4.3 직업교육제도를 지속적으로 완비하고 교원양성제도를 개선하여,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더욱 확대 발전시킨다. | 4.3.1 공식, 비공식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한 청소년 및 성인의 비율 |
| | | | 4.3.2 일·학습병행제(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 체계)에 참여한 청소년 및 성인의 비율 |

| 양질의 교육(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 | 모든 인민의 지식노동자화(모든 인민을 대학 졸업생의 지적 수준을 갖춘 총명한 노동자로 양성한다) | |
|---|--|--|---|
| 유엔 SDGs(10개 세부목표, 12개 지표) | | 북한 SDGs(7개 세부목표, 9개 지표) | |
| 세부목표 | 지표 | 세부목표 | 지표 |
| 4.4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 직업 기술 등 적합한 기술을 지닌 청년과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늘림 | 4.4.1 기술 유형별 ICT 기능을 보유한 청년과 성인의 비율 | 4.4 청년과 성인들에게 각자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한다. | 4.4.1 정보통신기술을 보유한 청소년과 성인의 비율 (15~19세) |
| 4.5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선주민,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 | 4.5.1 세분화할 수 있는 이목록의 모든 지표 대상 형평성 지수(여성/남성, 농촌/도시, 소득 상위/하위 5분위 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장애 형태, 선주민, 분쟁 영향 여부 등) | 4.5 교육내용과 방법을 더욱 개선하여 종합적으로 발달된 재능,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되고, 높은 창의성과 도덕적 품모, 튼튼한 체력을 지닌 청년세대를 육성한다. | 4.5.1 모든 교육 지표에 대한 형평성 지수 1) 여성/남성별 초등, 중등, 고등교육 조정 순 취학률 2) 하위20%/상위40% (자신지수)의 초등, 중등, 고등교육 조정 순 취학률 3) 농촌/도시간 초등, 중등, 고등교육 조정 순 취학률 |
| 4.6 모든 청소년과 상당수 성인 남녀의 문해력과 수리력 성취를 보장 | 4.6.1 특정 연령 집단에서 기능적 (a) 문해력과 (b) 수리력이 최소 일정 수준에 도달한 성별 인구 비율 | - | - |
| 4.7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 생활 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증진, 세계 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습득을 보장 | 4.7.1 성평등과 인권 등 (i) 세계시민교육과 (ii) 지속가능발전교육의 (a) 국가 교육 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 교육 (d) 학생평가에서 주류화 정도 | 4.7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가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보장한다. | 4.7.1 지속가능발전 교육이 교 육정책에서 주류화되어 있는 정도 |
| 4.a 아동, 장애인, 성취를 고려한 교육시설을 건립하고 개선하며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 | 4.a.1 (a) 전기 (b) 교육 목적의 인터넷 (c) 교육 목적의 컴퓨터 (d) 장애학생을 위한 설치와 자료 (e) 기초 식수 (f) 남녀 구분 기초 위생 시설 (g) WASH 기준 부화) 기초 손 씻기 시설 등에 접근할 수 있는 학교 비율 | 4. a 교육여건과 환경을 통해 교육부문의 물질적, 기술적 기반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 4.a.1 다음 항목에 접근 가능한 학교 비율 (a) 전기 (b) 청년 교육을 위한 내부 전선망(인터넷) (c) 청년 교육을 위한 컴퓨터 (d) 학령기 아동 및 장애아동을 위한 공공기반시설 및 교육재료 (e) 안전한 식수 (f) 성별로 분리된 위생시설 (g) 기본적인 손씻기 시설 |

| 양질의 교육(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 | 모든 인민의 지식노동자화(모든 인민을 대학 졸업생의 지적 수준을 갖춘 총명한 노동자로 양성한다) | |
|---|--|---|----|
| 유엔 SDGs(10개 세부목표, 12개 지표) | | 북한 SDGs(7개 세부목표, 9개 지표) | |
| 세부목표 | 지표 | 세부목표 | 지표 |
| 4b 전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군소도서개발도상국, 아프리카 국가 등이 선진국이나 기타 개발도상국의 직업훈련, 정보통신기술, 과학기술 및 공학 분야를 포함한 고등 교육에 등록하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을 실질적으로 확대 | 4.b.1 연구 부문 및 유형별 장학금 관련 ODA 유입량 | - | - |
| 4c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및 군소도서개발도상국에서 교사훈련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통해 자격을 갖춘 교사 공급을 실질적으로 증대 | 4.c.1 특정 국가 해당 교급의 교수에 필요한 최소 수준의 예비교사 양성 교육 및 직무연수(예: 교수법 연수)를 받은 (a) 취학 전 교육 (b) 초등학교 (c) 중학교 (d) 고등학교 각각의 교사 비율 | - | - |

출처: 통계개발원, 『한국 SDG 이행보고서 2021』, pp. 92~93; “DPRK VNR 2021,” pp. 52~53, pp. 59~60; 북민협 번역, “북한 VNR 보고서 2021,” p. 51, pp. 57~58을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표 III-25 북한의 SDG 4 세부목표와 소관기관

| 세부목표 | 소관기관 |
|--|---------------------|
| 4.1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 교육위원회 |
| 4.2 모든 여아와 남아가 초등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ECD), 보육, ‘학년전교육’의 질을 높인다. | 교육위원회 |
| 4.3 직업교육제도를 지속적으로 완비하고 교원양성제도를 개선하여,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더욱 확대 발전시킨다. | 교육위원회 모든 층위 이행기관 |
| 4.4 청년과 성인들에게 각자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한다. | 노동성, 정보산업성 |
| 4.5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가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보장한다. | 교육위원회 |
| 4.a 교육여건과 환경을 통해 교육 부문의 물질적·기술적 기반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 교육위원회 |

출처: “DPRK VNR 2021,” p. 52; 북민협 번역, “북한 VNR 보고서 2021,” p. 51.

〈표 III-2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의 SDG 4의 각 세부목표별 소관기관은 교육위원회(5개 세부목표), 노동성(1개 세부목표), 정보산업성(1개 세부목표) 등이다. 특히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의 확대 발전과 관련된 세부목표 4.3의 경우 모든 층위 정부 기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 북한이 노동자들에게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과 같은 실무 중심의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사회주의 교육체계의 핵심적인 특성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북한의 SDG 4 우선순위와 계획

아래의 〈표 III-26〉은 SDG 4 관련 북한의 우선순위와 계획을 보여 준다. VNR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그동안 시행해 온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위시로 한 교육중시정책의 결과 보편적 초등 및 중등교육 이행과 취학 전 교육기회 제공에 대한 유엔 SDGs의 목표를 오래 전에 달성하였다.^{199/} 이에 북한의 교육 분야에서 남아있는 과제는 전 세계적 교육 발전의 추세에 맞추어 교육의 내용과 방법, 조건 및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교육제도를 더욱 강화·발전시키고 교육환경과 내용 및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교육 분야의 물질적·기술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우선적인 계획으로 삼고 있다.^{200/}

표 III-26 북한의 SDG 4 이행 우선순위와 계획

| 우선순위 | 계획 |
|---------------|---|
| 교육제도의 강화 및 발전 | 중등일반교육체계를 완비하고, 상급 및 복합학(interdisciplinary science) 과정 개선을 포함한 전반적인 고등교육체계를 개선하며, 더 많은 노동자들이 고등교육에 접할 수 있도록 원격 교육체계를 확충 |

^{199/}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21.

^{200/} *Ibid.*, p. 23.

| 우선순위 | 계획 |
|-------------------------|---|
| 교육환경, 내용 및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 |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교수관리시스템 운영으로 교원의 자질을 향상. UNESCO와 UNICEF를 비롯한 국제기구들과의 지속적인 협력 |
| 교육 분야의 물질적·기술적 기반을 강화 | 교육 부문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리고, 학교의 건설과 보수, 현대화를 촉진하며 자선단체들이 교육기관을 물질적, 도덕적으로 후원하도록 독려 |

출처: “DPRK VNR 2021,” p. 23; 북민협 번역, “북한 VNR 보고서 2021,” p. 23을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다) 북한의 SDG 4 지표 현황

표 III-27 북한의 SDG 4 지표 현황과 추세

| 이행지표 | 수치 | 연도 | 현황 | 추세 |
|--|------|------|--------|------|
| 초등입학 전 조직화된 학습에의 참여율 (전체 4~6세 어린이 대비(%)) | - | - | 정보부재 | 정보부재 |
| 초등교육 등록률(%) | 97.8 | 2009 | SDG 달성 | 정보부재 |
| 중학교교육 이수율(%) | - | - | 정보부재 | 정보부재 |
| 문해율(15~24세 인구 대비(%)) | 100 | 2008 | SDG 달성 | 정보부재 |

출처: Jeffrey D. Sachs et al., *From Crisis to Sustainable Development: the SDGs as Roadmap to 2030 and Beyond.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2), p. 263을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표 III-2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의 초등교육 등록률은 2009년 기준 97.8%로 SDG 4의 목표를 이미 달성하였다. 북한은 1956년 8월부터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을 실시하고 1959년 4월부터 모든 교육기관에서 일체의 교육비용을 폐지하였는데, 이러한 정책 실시의 결과 높은 초등교육 등록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201/} 아울러 15~24세 인구 대비(%)로 나타낸 문해율 역시 2008년 기준 100%로

201/ Ibid., p. 22.

SDG 4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북한의 초등교육 등록률과 중학교교육 이수율의 이행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부재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UNESCO-UIS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초등교육 취학률은 112.78%로 완전 취학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며 중등교육도 92.78%로 매우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202/} 초등입학 전 조직화된 학습에의 참여의 경우에도 현황과 추세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가 모두 부재한 것으로 나와 있으나 북한이 유아교육 1년을 포함한 총 12년의 유초중등 무상의무교육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의 초등 입학 전 조직화된 학습에의 참여 비율 역시 상당히 높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I-28 북한의 VNR에서 제시된 SDG 4 지표 현황

| 지표 | 2015 | 2018 | 2020 |
|--|------|--------------------------------------|--------------------------------|
| 4.1.1 읽기, 수학에서 최소 숙달 기준을 달성한 아동과 청소년의 비율(%) 학년 2/3 이수 시점 초등학교 말기 초급중학교(중학교)말기 | - | 93.5, 83.4 97.5, 89 97.5, 83.2 | - |
| 4.2.1 건강, 학습, 심리사회적 행복 측면에서 발달 과정에 있는 5세 미만 아동의 성별 비중(%) | - | 87.7(합계) 86.2(남) 89.2(여) | - |
| 4.2.2. (공식 초등학교 입학연령 전 1년간) 체계적 교육에 대한 성별 참여율(%) | - | 97.1(합계) 97.9(남) 96.3(여) | 99.9(합계) 99.8(남) 99.9(여) |
| 4.4.1 ICT 기술을 보유한 청소년과 성인의 비율 (15~19세)(%) | - | 63.7(남) 61.6(여) | - |

^{202/} 박환보, “지속가능발전목표 관점에서 본 북한교육: 북한개발협력에 주는 시사점,” p. 276.

| 지표 | 2015 | 2018 | 2020 |
|---|---------|------------|---------|
| 4.5.1 모든 교육 지표에 대한 형평성 지수(%) | | | |
| 1) 여성/남성별 초등, 중등, 고등교육 조정 순 취학률 | | 1, 0.97, 1 | |
| 2) 하위20%/상위40%(자산지수)의 초등, 중등, 고등교육 조정 순 취학률 | - | 1, 1, 1 | - |
| 3) 농촌/도시간 초등, 중등, 고등교육 조정 순 취학률 | | 1, 0.99, 1 | |
| 4.a.1 다음 항목에 접근 가능한 학교 비율(%) | | | |
| (a) 전기 | (a) 100 | (a) 100 | (a) 100 |
| (b) 청년 교육을 위한 내부 전산망(인트라넷) | (b) 80 | (b) 100 | (b) 100 |
| (c) 청년 교육을 위한 컴퓨터 | | | |
| (d) 학령기 아동 및 장애아동을 위한 공공기반 시설 및 교육재료 | | | |
| (e) 안전한 식수 | | | |
| (f) 성별로 분리된 위생시설 | | | |
| (g) 기본적인 손씻기 시설 | | | |

출처: “DPRK VNR 2021,” pp. 59~60; 북민협 번역, “북한 VNR 보고서 2021,” pp. 57~58.

〈표 III-28〉은 2021년 7월 북한이 발표한 VNR 보고서의 성과지표 및 성과 도출값을 토대로 북한의 SDG 4번 목표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203/} VNR 보고서에 제시된 북한의 SDG 4의 이행성적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다른 목표들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며, 특히 2021년에는 SDG 4의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204/} 북한의 SDG 4 이행성적은 아시아의 다른 체제전환국들과 비교해 볼 때에도 괄목할만한 성과이다.^{205/} 그러나 4.3.1(형식·비형식교육 참여 비율)이나 4.7.1(지속가능발전의 주류화 정도)의 경우 북한이 글로벌 지표를 수용하고도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4.a.1(교육시설

^{203/}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p. 15~17.

^{204/} 권을 외,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성과와 남북협력과제』 (세종: 대외정책경제연구원, 2021), p. 17.

^{205/} 위의 책, p. 18.

및 인프라)에서도 전산망이나 인터넷 접근성을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는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목표 및 지표 평가

(가) 목표, 세부목표, 지표 적용에 대한 평가

유엔 SDG 4의 ‘양질의 교육(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이라는 목표가 북한 SDG 4에서는 ‘모든 인민의 지식노동자화(모든 인민을 대학 졸업생의 지적 수준을 갖춘 총명한 노동자로 양성한다)’라는 목표로 변용되었다. 아울러 유엔 SDG 4는 총 10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 북한 SDG 4는 총 7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세부목표 가운데 4.2(취학 전 교육)의 경우는 북한이 유엔 SDG 4.2의 내용을 완전히 동일하게 수용한 반면, 나머지 4.1(초중등교육), 4.3(고등교육), 4.4(취업에 적합한 기술), 4.5(교육 형평성), 4.7(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4.a(모두를 위한 포용적 교육)의 경우 북한의 상황에 맞게 바꾸어 수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유엔 SDG의 세부목표 4.6(문해력과 수리력), 4.b(교육재정 확보), 4.c(교사 확보)는 북한 SDGs에서 아예 삭제되었다.

표 III-29 북한의 SDG 4 수용 현황

| 유엔 세부목표 및 지표 | 북한 | | | | |
|--|----|----|----|----|--------------------------------------|
| | 수용 | 변용 | 삭제 | 추가 | 비고 |
| 4.1 모든 여아와 남아가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평한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이수를 보장 | ○ | | | | |
| 4.1.1 (a) 초등학교 2~3학년 (b) 초등학교 말 (c) 전기 중등교육 말에 (i) 읽기와 (ii) 수학 분야에서 최소 숙달 수준에 도달한 아동/청소년의 비율 | | ○ | | | [변용] 읽기 수학에서 최소숙달기준을 달성한 아동과 청소년의 비율 |
| 4.1.2 초중고등학교 교육 완수율 | | | ○ | | |

| 유엔 세부목표 및 지표 | 북한 | | | | |
|---|----|----|----|----|---|
| | 수용 | 변용 | 삭제 | 추가 | 비고 |
| 4.2 모든 여아와 남아에게 양질의 영유아 발달교육, 보육 및 취학 전 교육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며 이들이 초등교육을 준비 | ○ | | | | |
| 4.2.1 건강, 학습, 사회심리적 안녕의 발달 정도가 일반적인 5세 미만 아동의 성별 비율 | ○ | | | | |
| 4.2.2 (정규 초등교육 입학 1년 전) 조직화된 학습 참여 성별 비율 | ○ | | | | |
| 4.3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 비용의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 | | ○ | | | [변용] 직업교육제도를 지속적으로 완비하고 교원양성제도를 개선하여,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더욱 확대 발전 |
| 4.3.1 최근 12개월 내 형식·비형식 교육훈련에 참여한 청년/성인의 성별비율 | ○ | | | | |
| - | | | | ○ | [추가] 4.3.2 일·학습병행제(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에 참여한 청소년 및 성인의 비율 |
| 4.4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 직업 기술 등 적합한 기술을 가진 청년과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늘림 | | ○ | | | [변용] 직업교육제도를 지속적으로 완비하고 교원양성제도를 개선하여,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더욱 확대 발전 |
| 4.4.1 기술 유형별 ICT 기능을 보유한 청년과 성인의 비율 | | ○ | | | [변용] 정보통신기술을 보유한 청소년과 성인의 비율 (15~19세) |
| 4.5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선주민,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 | | ○ | | | [변용] 교육내용과 방법을 더욱 개선하여 종합적으로 발달된 재능, 장차(상)적으로 준비되고, 높은 창의성과 도덕적 품모, 튼튼한 체력을 지닌 청년세대를 육성 |
| 4.5.1 세분화할 수 있는 이 목록의 모든 지표 대상 형평성 지수(여성/남성, 농촌/도시, 소득 상위/하위 5분위 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장애 형태, 선주민, 분쟁 영향 여부 등) | | ○ | | | [변용] 모든 교육 지표에 대한 형평성 지수 1) 여성/남성별 초등, 중등, 고등교육 조정 순 취학률 2) 하위20%/상위40% (자산지수)의 초등, 중등, 고등교육 조정 순 취학률 3) 농촌/도시간 초등, 중등, 고등교육 조정 순 취학률 |
| 4.6 모든 청소년과 상당수 성인 남녀의 문해력과 수리력 성취를 보장 | | | ○ | | |
| 4.6.1 특정 연령 집단에서 기능적 (a) 문해력과 (b) 수리력이 최소 일정 수준에 도달한 성별 인구 비율 | | | ○ | | |

| 유엔 | 북한 | | | | |
|---|-----------|----|----|-------|--|
| | 세부목표 및 지표 | 수용 | 변용 | 삭제 추가 | 비고 |
| 4.7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 생활 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증진, 세계 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습득을 보장 | | ○ | | | [변용]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가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보장 |
| 4.7.1 성평등과 인권 등 (i) 세계시민교육과 (ii) 지속가능발전교육의 (a) 국가 교육 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 교육 (d) 학생평가에서 주류화 정도 | | ○ | | | [변용] 지속가능발전 교육이 교육정책에서 주류화되어 있는 정도 |
| 4.a 아동, 장애인, 성별을 고려한 교육시설을 건립하고 개선하며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제공 | | ○ | | | [변용] 교육여건과 환경을 통해 교육부문의 물질적, 기술적 기반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림 |
| 4.a.1 (a) 전기 (b) 교육 목적의 인터넷 (c) 교육 목적의 컴퓨터 (d) 장애학생을 위한 설비와 자료 (e) 기초 식수 (f) 남녀 구분 기초 위생 시설 (g) WASH 기준 부합) 기초 손 씻기 시설 등에 접근할 수 있는 학교 비율 | | ○ | | | [변용] 다음 항목에 접근 가능한 학교 비율 (a) 전기 (b) 청년 교육을 위한 내부 전선망(인터넷) (c) 청년 교육을 위한 컴퓨터 (d) 학령기 아동 및 장애아동을 위한 공공기반시설 및 교육자료 (e) 안전한 식수 (f) 성별로 분리된 위생시설 (g) 기본적인 손 씻기 시설 |
| 4.b 전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군소도서 개발국, 아프리카 국가 등이 선진국이나 기타 개발도상국의 직업훈련, 정보통신기술, 과학기술 및 공학 분야를 포함한 고등교육에 등록하도록 지원 하는 장학금을 실질적으로 확대 | | | ○ | | |
| 4.b.1 연구 부문 및 유형별 장학금 관련 ODA 유입량 | | | ○ | | |
| 4.c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및 군소도서개발국에서 교사훈련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통해 자격을 갖춘 교사공급을 실질적으로 늘림 | | | ○ | | |
| 4.c.1 특정 국가 해당 교급의 교수에 필요한 최소 수준의 예비교사 양성 교육 및 직무연수(예: 교수법 연수)를 받은 (a) 취학 전 교육 (b) 초등학교 (c) 중학교 (d) 고등학교 각각의 교사 비율 | | | ○ | | |

출처: 통계개발원 『한국 SDG 이행보고서 2021』, pp. 92~93; “DPRK VNR 2021,” pp. 52~53, pp. 59~60; 북한협 번역, “북한 VNR 보고서 2021,” p. 51, pp. 57~58을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유엔 SDG 4의 지표는 총 1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 북한 SDG 4는 총 9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I-29>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 SDG 4의 9개의 지표 중 3개(4.2.1, 4.2.2, 4.3.1)는 유엔 SDG 4의 지표들을 그대로 수용하였고 5개(4.1.1, 4.4.1, 4.5.1, 4.7.1, 4.a.1)는 변용, 3개(4.6.1, 4.b.1, 4.c.1)는 삭제하였으며 1개(4.3.2)는 새롭게 추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SDG 4는 국가별 특수성을 고려한 자율적인 이행, 모니터링 및 보고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표의 타당성과 가용성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SDGs에 대한 북한의 접근 방식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경제 전략과 인민생활의 개선과 연관되어 있으며,^{206/} 특히 SDG 4를 국가발전목표 5개 모두와 밀접히 연계시키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에 유엔 SDG 4의 목표 및 세부목표들 중 상당수가 사회주의강국건설이라는 맥락에 맞게 북한 SDG 4 내에 변용되었으며, 북한 체제의 우월성에 반하거나 북한이 추구하는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는 세부목표 및 지표, 가령 4.b의 경우 의도적으로 회피되고 있기도 하다.

북한의 SDG 4의 이행성과는 전반적으로 다른 목표들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며, 2021년에는 SDG 4의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207/} 북한의 SDG 4 이행성과는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몽골 등의 아시아 내 다른 체제전환국과 비교하더라도 괄목할만한 것이다.^{208/} 북한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서라도 북한이 스스로 SDG 4와 관련된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206/ 송철중 외, 『북한의 복지 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남북한 교류협력 방안 연구』, p. 220.

207/ 권을 외,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성과와 남북협력과제』, p. 17.

208/ 위의 책, p. 18.

(나) 지표의 신뢰성과 지속성에 대한 평가

북한은 유엔 SDGs의 4번 세부목표 중 4.6, 4.b, 4.c를 제외한 나머지 세부목표들과 관련 지표들을 모두 수용하고 있고, 수용된 지표들 중 4.3.1, 4.7.1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데이터도 잘 제시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이 세부목표 4.6(문해력과 수리력)과 4.c(교사 확보)를 삭제하고 관련 지표를 제시하지 않은 이유는 스스로가 이미 오래전에 해당 세부목표를 달성하였다는 내부적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북한은 4.b(교육재정 확보)를 제외한 유엔 SDGs의 교육 관련 세부목표들을 SDG 4 내에 모두 포괄하고 지표 또한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SDG 4 관련 지표들은 북한의 교육 현실을 비교적 잘 대표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다만 4.3.1(형식·비형식교육 참여 비율), 4.7.1(지속가능발전의 주류화 정도), 4.a.1(교육시설 및 인프라)의 일부 내용의 경우 북한이 글로벌 지표를 수용하고도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북한이 해당 지표에 동의하고 데이터를 산출할 의지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4.3.1, 4.7.1, 4.a.1 지표들에 대해서는 북한의 역량강화를 통한 데이터 생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지표의 신뢰성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발표된 수치상으로는 보면 북한은 12년 의무교육제도 시행을 통해 공교육망이 유치원부터 중등교육 단계까지 모든 학령기 인구를 다 포괄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의 일반적인 교육 수준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이나 북한 사회 내부 소식에 의하면, 실제 북한의 교육 상황은 통계수치가 나타내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특히 경제난으로 촉발된 공교육의 붕괴 및 교육의 시장화로 인해 교육 접근성과 성과에서의 계층별, 지역별 격차가 심화

되고 있는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4.5.1(교육 형평성)과 4.a.1(교육시설과 인프라) 지표 관련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검토가 특별히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지표의 지속성과 관련하여, 북한은 SDGs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 왔으며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발전목표와 SDGs를 연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VNR 보고서 내에서 SDG 4는 모든 NDGs와 연결된 공통 목표로써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해방 이후 국가 형성기부터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이데올로기 동원과 노동력 재생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그동안 북한이 달성해 온 교육 분야에서의 성과가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부각시키는 선전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때, 북한은 앞으로도 비교적 일관되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SDG 4의 진전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하고 관련 데이터를 생산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 기회와 성과 측면에서의 형평성 관련 지표나 교육여건에서의 격차와 관련된 지표의 경우 정기적이고 연속적인 데이터 생산을 기대하기가 다소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다.

(다) 지표 미공개·부재에 대한 대응 및 보완 방향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북한은 SDG 4의 세부목표와 지표들을 대부분 수용 또는 변용하였고 4.6.1(수리력과 문해력), 4.b.1(공적 개발원조를 위한 장학금), 4.c.1(조직화된 교사훈련)만 공개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해당 지표들을 북한이 미공개한 원인을 고려함으로써 북한의 실정에 맞는 대안지표를 제안해보고자 한다.

우선, 북한이 4.6(문해력과 수리력)과 4.c(교사 확보)의 세부목표를 삭제하고 지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각 세부목표들을 북한이 이미

오래전에 달성했다는 내부적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가령, 북한은 이미 오래전에 총인구 100% 문해율의 목표치를 달성하였기에 SDG 4 내에 4.6.1과 같은 지표를 따로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엔 SDG의 4.6.1 지표는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으로써의 문자해독률 뿐만 아니라 산술능력과 수리력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며, 각 능력에서의 성별·연령집단별 차이를 고려할 것을 추가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문맹’ 대 ‘비문맹’과 같은 기존의 이분법 구도에서 탈피하여 청소년과 성인의 문해력이나 산술능력에서의 ‘일정 수준’에의 도달을 목표로 설정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PISA나 PIACC, TIMSS 등과 같은 국제적 수준의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청소년 및 성인의 문해력이나 산술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산하고 공개해야 한다. 나아가 향후 4.6.1 지표를 구성함에 있어 문해력이나 산술능력에서의 성별·연령집단별 차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북한이 4.c.1(조직화된 교사 훈련) 지표를 삭제한 것은 북한 사회 내에서 오랫동안 담당 과목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엘리트가 교사로 충원되어 온 현실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북한에서는 교사가 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전문화된 고등교육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기에, 4.c를 교육 부문에서의 별도의 세부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난 이후 국가에서 부여하는 혜택이 축소되고 학교관리와 운영비용의 상당 부분이 학부모에게 전가되면서 교원의 사회적 지위와 인기가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209/} 향후 북한은 SDG 4 내에 교사 확보와 관련된 세부목표와 지표를 수용하고 관련 데이터를

209/ 김희순, “고학력 북한이탈주민이 인지하는 차별과 직업계층 변화에 대한 인식,” 『통일과 평화』, 제2집 2호 (2010), p. 96.

산출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북한의 실정을 파악할 수 있는 대안지표로는 보육 및 초중등 교사 중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비율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의 실정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세부목표와 지표가 삭제된 것은 4.b(장학금 확대)이다. 연구 부문 및 유형별 장학금 관련 ODA는 북한이 자신의 정치·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북한이 해당 지표를 수용하고 데이터를 공개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에 과학기술 분야 발전을 위한 고등교육 활성화를 강조하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 기조에 맞추어, 과학기술 분야 발전을 위한 고등교육 재정의 확보와 인적 교류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과 북한의 상호 협력 강화를 한반도 공동의 목표이자 대안지표로 고려해 볼 수 있다.

표 III-30 북한의 SDG 4 지표 미공개·부재 보완 방향

| 원인 | 지표 | 보완 방향 | |
|---------|--|-------|---------------------------------------|
| 목표치 달성 | 4.6.1 특정 연령 집단에서 기능적 (a) 문해력과 (b) 수리력이 최소 일정 수준에 도달한 성별 인구 비율 | 대안 지표 | 문해력과 수리력이 일정 수준을 달성한 성별에 따른 연령 집단별 비율 |
| | 4.c.1 특정 국가 해당 교급의 교수에 필요한 최소 수준의 예비교사 양성 교육 및 직무연수(예: 교수법 연수)를 받은 (a) 취학 전 교육 (b) 초등학교 (c) 중학교 (d) 고등학교 각각의 교사 비율 | | 보육 및 초중등 교사 중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비율 |
| 의도적 미공개 | 4.b.1 연구 부문 및 유형별 장학금 관련 ODA 유입량 | | 과학기술 분야 발전을 위한 고등교육 분야의 남북한 협력 확대 |

라. SDG 5 성평등

(1) 목표 및 지표 개관

(가) SDG 5 목표와 지표

유엔 SDG 5는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이다. 유엔 SDGs는 MDGs와 비교하였을 때 성평등의 측면에서 진일보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MDGs에서의 성평등 이슈는 목표 3번의 ‘양성평등 및 여성권한 강화’라는 독립 목표로 설정되었으며, 이외에도 목표 1번(기아), 2번(교육), 4번(아동사망률), 5번(모성사망률)에서도 양성평등 이슈가 크로스커팅되었다. 그러나 MDGs는 모성보건, 양성평등의 문제를 다루면서도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무보수 노동 등 여성 인권 관련 이슈와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210/} 이에 SDG 5는 성평등과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한 구조적 방해물을 제거하는 전환적(transformative) 접근을 강조하며 세부목표와 지표 수립 시 성평등을 방해하는 구조적인 문제들의 변화를 위한 목표들이 대거 포함되었다. 아울러 유엔 SDG 5는 성평등과 여성 인권, 여성역량강화를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특히 MDGs와 비교하였을 때 인권적인 고려가 포함되어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211/}

SDG 5의 목표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및 여아 대상의 차별과 폭력의 철폐와 관습에 의한 불합리한 여성 차별의 제거이다. 둘째, 여성의 사회적 참여 측면에서 공공영역과

210/ 장은하 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독자 목표의 국내이행을 위한 지표 연구,” 『여성연구』, 제98권 3호 (2018), p. 138.

211/ UN Women, *A Transformative Stand-alone Goals on Achieving Gender Equality, Women's Rights and Women's Empowerment: Imperatives and Key Components* (New York: UN Women, 2013), pp. 6~7.

고위직 진출 확대와 가사노동에 대한 재평가이다. 셋째, 여성의 몸체에 대한 자주적 결정권 향상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 수단으로 여성의 경제적 자원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의 완비와 정보통신기술의 보급, 성평등을 추진하는 정책 구비 여부를 강조한다.

SDG 5는 <표 III-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 9개의 세부목표와 1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목표 5.2(폭력 철폐), 5.3(악습 철폐), 5.5(동등한 기회 보장), 5.6(성생식권과 재생산권), 5.a(오너십과 통제권)에는 지표가 각각 2개씩 있고 나머지 세부목표들에는 지표가 각각 1개씩 있다. SDG 5의 세부목표 및 지표들은 여성과 여아의 역량을 강화해 정치, 사회, 경제 영역에서의 성평등을 달성하는 한편 무상돌봄과 가사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함으로써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성평등 또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표 III-31 SDG 5의 세부목표 및 지표

| 세부목표 | 지표 |
|---|--|
| 5.1 여성 및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모든 곳에서 없앤다. | 5.1.1 성별에 따른 평등 및 차별금지를 증진 강제 그리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준비되어 있는지 여부 |
| 5.2 인신매매, 성착취 및 기타 유형의 착취를 포함하여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철폐한다. | 5.2.1 상강함이 있는 15세 이상의 소녀 및 여성 중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현재 혹은 이전의 성적 파트너로부터 물리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이들의 비율(폭력의 형태와 연령 그룹별) 5.2.2 15세 이상의 소녀 및 여성 중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성적 파트너 이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이들의 비율(연령그룹 및 사건 발생 장소별) |
| 5.3 조혼, 아동·강제결혼 및 여성할례와 같은 모든 악습을 철폐한다. | 5.3.1 15세 이전에 결혼하거나 18세 이전에 동거를 시작한 20~24세 연령의 여성들의 비율 5.3.2 여성할례를 경험한 15~49세 연령의 소녀 및 여성의 비율(연령별) |
| 5.4 국가별 상황에 맞춰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사회보장정책 및 가정 내 노동의 책임 도모를 통해 무상돌봄과 가사노동에 가치를 부여하고 중요성을 인식한다. | 5.4.1 무상돌봄과 가사노동에 소요되는 시간 비율 (성별, 연령그룹 및 지역별) |

| 세부목표 | 지표 |
|--|--|
| 5.5 정치, 경제, 공공부문 등 모든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 5.5.1 국회 및 지방정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의석 비율 5.5.2 관리직에서 근무하는 여성 비율 |
| 5.6 국제인구개발회의의 행동계획, 베이징행동강령 및 검토회의의 결과 문서에 따라 합의된 대로, 성·생식보건과 재생산권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 5.6.1 성관계 피임제 사용 및 임신보건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15~49세 여성 비율 5.6.2 15~49세 여성에게 성관계 및 임신 관련 보건 정보 및 교육을 보장하는 법률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국가의 수 |
| 5a 여성에게 경제적 자원에 대한 권리와 더불어 토지 및 기타 유형의 자산·금융서비스·유산·천연 자원에 대한 오너십과 통제권 접근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부여될 수 있도록 국내법에 따라 개혁을 시행한다. | 5a.1 (a) 농경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확실한 권리를 가진 전체 농업인구의 비율(성별) (b) 농경지 소유자 또는 토지 관리권을 가진 사람 중 여성의 비율(보유기간별) 5a.2 토지소유나 통제에 대한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관습법을 포함한 법률적 기반을 갖춘 국가의 비율 |
| 5b 여성의 역량강화 촉진을 위한 구형기술, 특히 ICT의 활용을 확대한다. | 5b.1 휴대폰을 소유한 개인의 비율(성별) |
| 5c 모든 수준에서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 및 성평등 촉진을 위한 견고한 정책과 시행가능한 법안을 채택하고 강화한다. | 5c.1 양성평등과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공공 재원을 할당하고 추적 시스템을 갖춘 국가들의 비율 |

출처: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5," <<https://sdgs.un.org/goals/goal5>> (Accessed May 24, 2022); 통계개발원, 『한국 SDG 이행보고서 2021』, p. 93을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표 III-32〉는 아시아태평양 국가와 한국, 북한의 SDG 5 지표 수집 가능성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아시아태평양 국가에서의 SDG 5 지표들의 수집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인데, 2017년을 기준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한 지표는 5.5.1(여성 국회위원 및 지방위원 비율)과 5.5.2(여성관리자 비율)의 2개뿐이고 나머지 지표는 모두 데이터가 불충분하거나 부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2021년에는 2017년 데이터가 부재하였던 지표 중 일부, 즉 5.1.1(법적 체계), 5.3.2(여성할례), 5.6.2(성 및 생식보건), 5.a.2(토지소유 및 통제), 5.c.1(공공재원 할당 및 추적시스템)의 데이터가 불충분한 상태로 개선되었다. 한국의 경우 2021년을 기준으로 충분

한 데이터를 확보한 지표는 4개, 데이터가 불충분한 지표는 2개, 데이터가 부재한 지표는 8개이고, 북한의 경우에는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한 지표는 1개뿐이고 데이터가 불충분한 지표는 2개, 데이터가 부재한 지표는 11개로 나타나 한국과 북한 모두에서 SDG 5 이행지표들의 수집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표 III-32>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21년 기준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SDG 5 이행 지표들은 비교적 수집이 용이한 객관적 지표들, 예컨대, 성별 임금 격차, 노동시장 참여율에서의 성 격차, 중앙의회와 지방정부에서의 여성 의원 비율, 관리자급에서의 여성비율 등에서 사실상 완전 평등에 가까운 높은 목표치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III-32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SDG 5 지표 수집 가능성

| 지표 | 티어 그룹 | 아시아태평양 2017 | | | 아시아태평양 2021 | | | 한국 2021 | | | 북한 2021 | | |
|---|-------|-------------|-----|-------|-------------|-----|-------|---------|-----|-------|---------|-----|-------|
| | | 충분 | 불충분 | 자료 없음 | 충분 | 불충분 | 자료 없음 | 충분 | 불충분 | 자료 없음 | 충분 | 불충분 | 자료 없음 |
| 5.1.1 성별에 따른 평등 및 차별금지를 증진, 강제 그리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준비되어 있는지 여부 | II | | | ○ | | ○ | | | ○ | | | | ○ |
| 5.2.1 성경험이 있는 15세 이상의 소녀 및 여성 중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현재 혹은 이전의 성적 파트너로부터 물리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이들의 비율(폭력의 형태와 연령 그룹별) | I | | ○ | | | ○ | | | ○ | | | | ○ |
| 5.2.2 15세 이상의 소녀 및 여성 중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성적 파트너 이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이들의 비율(연령그룹 및 사건 발생 장소별) | II | | | ○ | | | | | ○ | | | | ○ |
| 5.3.1 15세 이전에 결혼하거나 18세 이전에 동거를 시작한 20~24세 연령의 여성들의 비율 | I | | ○ | | | ○ | | | ○ | | | | ○ |
| 5.3.2 여성할례를 경험한 15~49세 연령의 소녀 및 여성의 비율(연령별) | I | | | ○ | | ○ | | | ○ | | | | ○ |
| 5.4.1 무상돌봄과 가사노동에 소요되는 시간 비율(성별, 연령그룹 및 지역별) | II | | ○ | | | ○ | | | ○ | | | | ○ |

| 지표 | 티어 그룹 | 아시아태평양 2017 | | | 아시아태평양 2021 | | | 한국 2021 | | | 북한 2021 | | |
|---|-------|-------------|-----|------|-------------|-----|------|---------|-----|------|---------|-----|------|
| | | 충분 | 불충분 | 자료없음 | 충분 | 불충분 | 자료없음 | 충분 | 불충분 | 자료없음 | 충분 | 불충분 | 자료없음 |
| 5.5.1 국회 및 지방정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의석 비율 | I | ○ | | | ○ | | | ○ | | | ○ | | |
| 5.5.2 관리직에서 근무하는 여성 비율 | I | ○ | | | ○ | | | ○ | | | | | ○ |
| 5.6.1 성관계 피임제 사용 및 임신보건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15~49세 여성 비율 | II | | ○ | | | ○ | | | | ○ | | | ○ |
| 5.6.2 15~49세 여성에게 성관계 및 임신 관련 보건 정보 및 교육을 보장하는 법률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국가의 수 | II | | | ○ | | ○ | | | | ○ | | | ○ |
| 5.a.1 (a) 농경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확실한 권리를 가진 전체 농업인구의 비율 (성별) (b) 농경지 소유자 또는 토지 관리권을 가진 사람 중 여성의 비율(보유기간별) | II | | ○ | | | ○ | | | | ○ | | | ○ |
| 5.a.2 토지소유나 통제에 대한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관습법을 포함한 법률적 기반을 갖춘 국가의 비율 | II | | | ○ | | ○ | | | | ○ | | | ○ |
| 5.b.1 휴대폰을 소유한 개인의 비율(성별) | II | | ○ | | | ○ | | | ○ | | | | ○ |
| 5.c.1 양성평등과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공공재원을 할당하고 추적 시스템을 갖춘 국가들의 비율 | II | | | ○ | | ○ | | | | ○ | | | ○ |

출처: UNESCAP, *Statistical Yearbook for Asia and the Pacific 2017: Measuring SDG progress in Asia and the Pacific: Is There Enough Data?* pp. 30~34; ESCAP SDG Gateway Asia Pacific, "Data Analysis," (Accessed September 19, 2022)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표 III-33 아시아태평양 지역 SDG 5 지표의 목표(2021년)

| 지표 | 목표 |
|-----------------------------------|------|
| 5.1.P1 성별 임금 격차(%) | 0 |
| 5.1.P2 노동시장 참여율에서의 성 격차(ratio) | 1 |
| 5.1.P3 평균 교육 연한에서의 성 격차(ratio) | 1 |
| 5.1.P4 청년 노동력에서의 성 격차(ratio) | 1 |
| 5.5.1 중앙 의회와 지역 정부에서의 여성 의원 비율(%) | 30.9 |
| 5.5.2. 관리자 급에서의 여성 비율(%) | 50 |

출처: UNESCAP, *Asia and the Pacific SDG Progress Report 2021*, p. 77을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나) SDG 5 지표 관리기구와 수집 현황

아래의 <표 III-3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022년 2월 기준으로 SDG 5 지표는 모두 티어 I, 혹은 티어 II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제적인 비교가 어느 정도 용이한 상황이다. 세부 목표 5.3(악습 철폐)과 5.5(동등한 기회 보장)의 지표들은 모두 티어 I에 속하며, 세부목표 5.1(차별 철폐), 5.4(무상돌봄 및 가사노동), 5.6(성생식권 및 재생산권), 5.a(오너십 및 통제권), 5.b(ICT 활용), 5.c(법안채택 및 강화)의 지표들은 모두 티어 II에 속한다. 세부목표 5.2(폭력 철폐)의 경우 지표 5.2.2는 티어 II에, 지표 5.2.1은 티어 I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SDG 5의 지표의 관리기관 및 파트너 기관으로는 UN Women(11개), UNFPA(6개), WHO(5개), World Bank(4개), UNICEF(4개), UNSD(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유엔통계국) 및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환경계획)(4개), UNDP(4개), OHCHR(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유엔인권고등판무관)(1개), UNODC(1개), OECD(1개) 등이 있다.

표 III-34 SDG 5 지표 현황 및 관리기구와 북한의 지표 보유 현황

| 지표 | 변경 티어 | 가능한 관리기관 | 파트너 기관 | 북한 보유 여부 |
|---|----------|---|------------|----------------|
| 5.1.1 성별에 따른 평등 및 차별금지를 증진, 강제 그리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준비되어 있는지 여부 | II | UN Women, World Bank, OECD Development Centre | OHCHR | O |
| 5.2.1 성경험이 있는 15세 이상의 소녀 및 여성 중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현재 혹은 이전의 성적 파트너로부터 물리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이들의 비율(폭력의 형태와 연령 그룹별) | I | UNICEF, UN Women, UNFPA, WHO, UNODC | UNSD, UNDP | X |
| 5.2.2 15세 이상의 소녀 및 여성 중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성적 파트너 이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이들의 비율(연령그룹 및 사건 발생 장소별) | II | UNICEF, UN Women, UNFPA, WHO, UNODC | UNSD, UNDP | X |

| 지표 | 변경 티어 | 가능한 관리기관 | 파트너 기관 | 북한 보유 여부 |
|--|----------|----------------------|--|----------------|
| 5.3.1 15세 이전에 결혼하거나 18세 이전에 동거를 시작한 20~24세 연령의 여성들의 비율 | I | UNICEF | WHO, UNFPA, UN Women, DESA Population Division | O |
| 5.3.2 여성할례를 경험한 15~49세 연령의 소녀 및 여성의 비율(연령별) | I | UNICEF | UNFPA, WHO | X |
| 5.4.1 무상돌봄과 가사노동에 소요되는 시간 비율(성별, 연령그룹 및 지역별) | II | UNSD, UN Women | | X |
| 5.5.1 국회 및 지방정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의석 비율 | I | IPU, UN Women | World Bank | O |
| 5.5.2 관리직에서 근무하는 여성 비율 | I | ILO | | O |
| 5.6.1 성관계, 피임제 사용 및 임신보건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15~49세 여성 비율 | II | UNFPA | UN Women | O |
| 5.6.2 15~49세 여성에게 성관계 및 임신 관련 보건 정보 및 교육을 보장하는 법률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국가의 수 | II | UNFPA | UN Women, DESA Population Division, WHO | O |
| 5.a.1 (a) 농경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확실한 권리를 가진 전체 농업인구의 비율(성별) (b) 농경지 소유자 또는 토지 관리권을 가진 사람 중 여성의 비율(보유기간별) | II | FAO | UN Women, UNSD, UNEP, World Bank, UN-Habitat | X |
| 5.a.2 토지소유나 통제에 대한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관습법을 포함한 법률적 기반을 갖춘 국가의 비율 | II | FAO | World Bank, UN Women | X |
| 5.b.1 휴대폰을 소유한 개인의 비율(성별) | II | ITU | | O |
| 5.c.1 양성평등과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공공재원을 할당하고 추적 시스템을 갖춘 국가들의 비율 | II | UN Women, OECD, UNDP | | X |

출처: IAEG-SDGs, "Tier Classification for Global SDG Indicators," (Accessed September 22, 2022); 통계개발원, 『한국 SDG 이행보고서 2021』, p. 93; "DPRK VNR 2021," p. 60; 북한협 번역, "북한 VNR 보고서 2021," p. 58을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다) K-SDG 5 세부목표와 지표

제4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2021~2040)에 따르면, 한국의 SDG 5 목표는 '성평등 보장'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SDG 1(빈곤층 감소와 사회 안전망 강화), SDG 2(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농업 강화), SDG 3(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SDG 4(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SDG 11(지속 가능한 도시와 주거지)과 더불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

사회' 파트에 포함되어 있다.^{212/} 세부목표의 주요 내용은 “모든 차별 및 인신매매, 성적착취 등을 철폐하고 돌봄 및 가사노동에 가치를 부여하며 여성의 리더십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여성 권한 강화를 위해 기술접근을 확대하고 여성인력을 양성하며, 성평등을 위한 정책·법을 채택”할 것이 제안되고 있다. 주요 정책으로는 “성평등 의식 확산, 여성폭력 근절·예방, 평등하게 일할 권리·기회 보장,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여성 대표성 제고” 등이 있다.^{213/}

〈표 III-35〉에는 K-SDGs 성평등 분야의 세부목표와 지표가 제시되어 있다. K-SDGs 성평등 분야는 2021년 기준 총 7개의 세부목표와 1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유엔 SDG 5의 9개의 세부목표 중 5.3(악습 철폐)과 5.a(오너십 및 통제권)는 한국적 맥락을 고려하여 K-SDG의 성평등 분야에 반영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유엔 SDG 5.4(무상돌봄과 가사노동)는 K-SDG 5.3 목표로, 유엔 SDG 5.5(동등한 기회보장)는 K-SDG 5.4 목표로, 유엔 SDG 5.6(성생식권과 재생산권)은 K-SDG 5.5 목표로, 유엔 SDG 5.b(ICT 활용)는 K-SDG 5.6 목표로, 유엔 SDG 5.c(정책과 법안)는 K-SDG 5.7 목표로 각각 수용되었다. 또한 K-SDG 5의 지표 14개 중 10개 지표는 유엔 SDG 5의 지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반면 세부목표 5.2(폭력 철폐)의 지표 3개와 세부목표 5.6(ICT 활용)의 지표 1개(대학교 여성과학기술인력 졸업 현황)는 한국적 맥락에 맞추어 신규로 추가된 지표이다.

제4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2021~2040)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협하는 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현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이 취약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대국민조사(1,000명)와 전문가조사(250명)를 취합하여 향후 5년간 중점 추진이 필요한 정책 목표와

212/ 관제부처 합동, 『제4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2021~2040 제1부』, p. 21.

213/ 위의 책, p. 24.

지표를 선정하였다.^{214/} K-SDGs 성평등 분야에서 향후 5년간 중점 추진이 필요한 목표와 지표로는 5.3(무보수 돌봄 및 가사노동에서의 맞벌이 가구 여성 대비 남성의 가정 내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 시간 비율)과 5.7(정책과 법 채택 및 증진)에서의 성별영향평가 정책 개선의견 수용률이 선정되었다. 아울러 공식통계 활용이 가능한 99개의 K-SDGs 지표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을 평가한 결과,^{215/} 2030년 목표치 달성 가능성을 중심으로 ‘맑음’에 2개(성폭력 발생사건 및 미검거율, 의회와 지방의회 여성 비율), ‘맑거나 흐림’에 1개(성인지예산 성과 목표달성률), ‘흐림’에 1개(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의견 수용률)의 지표가 각각 해당되었다.

표 III-35 K-SDG 5 세부목표와 지표

| K-SDG 5 성평등 보장 | |
|--|---|
| 세부목표 | 지표 |
| 5.1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 (1)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률 |
| 5.2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해 모든 영역에서의 인신매매, 성적착취 등의 폭력을 철폐 | (1) 가정폭력 실신고건수 및 대응률 (2) 성폭력 발생사건 및 미검거율 (3) 디지털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및 미검거율 |
| 5.3 무보수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해 인정하고 가치 부여 | (1) 맞벌이가구 여성 대비 남성의 가정 내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 시간 비율 |
| 5.4 정치·경제·공적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을 위해 평등한 기회 보장 | (1) 의회와 지방의회의 여성 비율 (2)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과제 목표 달성률 (3) 민간부문 여성 관리자 비율 |
| 5.5 성·재생산 건강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 | (1) 성·재생산권과 건강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을 보장하는 제도 마련 여부 (2) 초중고등학교에서 성교육을 수행한 비율 (3) 피임 실천율 |

214/ 위의 책, p. 30.

215/ 위의 책.

| K-SDG 5 성평등 보장 | |
|---|---|
| 세부목표 | 지표 |
| 5.6 여성권한 강화를 위해 핵심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여성인력을 양성 | (1) 성별 스마트폰 보유율 (2) 대학교 여성과학기술인력 졸업 현황 |
| 5.7 모든 수준에서 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견실한 정책과 법을 채택하고 증진 | (1)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의견 수용률 |

출처: 관계부처 합동, 『제4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2021~2040 제1부』, p. 50을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2) 북한 현황

(가) 북한의 SDG 5 목표와 세부목표 및 지표

맑시즘은 다른 형태의 사회적 불평등과 마찬가지로 성불평등 또한 사적 소유제에 기인한다고 본다.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 과정에서 여성 해방의 문제는 계급관계의 철폐와 동시에 성취되어야 할 과제로 인식되며, 여성의 종속관계는 노동계급의 투쟁을 통해서만 해소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216/} 이에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성평등이 잘 제도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북한 역시 사회주의 사회 건설의 초창기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방면에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북한이 유엔 CEDAW(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2007년 제출한 최초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헌법은 남녀평등의 원칙과 반(反)차별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법제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217/}

216/ 안인해, “김정일체제의 경제와 여성,” 『한국정치학회보』, 제35권 2호 (2001), p. 226.

217/ 심영희, “북한여성의 인권: 실패와 요인,” 『아시아여성연구』, 제45집 2호 (2006), p. 173.

북한 사회에서의 성평등 원칙은 헌법 이외의 다른 많은 법들에도 반영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1946년에 제정된 「노동법령」은 모성 보호와 여성의 노동권을 법제화한 것으로, 동일노동 동일보수 보장, 여성에 대한 산전산후 휴가, 임신 중의 경노동 보장 등을 명시함으로써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경제활동 주체로 규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218/} 아울러 1946년 제정된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역시 봉건적인 남녀관계를 극복함으로써 국가경제, 문화, 사회, 정치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여성이 남성과 평등한 지위와 권리를 누릴 것을 명시하고 있다.^{219/} 여성의 아동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다수의 조치들 또한 취해져 왔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탁아소 보육 및 유치원 교육을 규정한 1947년의 「탁아소 규칙」, 1949년의 「탁아소에 대한 규정」, 1976년의 「어린이 보육교양법」, 그리고 산전산후의 유급 휴가 기간을 명시한 1993년의 「어린이 보육 교양법 세칙」 등이 이러한 조치들에 포함된다.^{220/} 보다 최근에 이르러 북한은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지적한 여성 인권의 문제를 입법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2001년 9월 유엔의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하였고,^{221/} 2010년에는 여성에 관한 최초의 단독 법령인 「여성 권리보장법」을 채택함으로써 여성을 직접적인 복지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북한 사회 내부의 제도적 변화를 드러내었다.^{222/}

이처럼 북한에서 성평등의 법적 기반은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법과 현실의 괴리는 상당하다. 이는 북한에서의 성평등 법제화가 여성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사회주의 건설 과정의

218/ 위의 글, p. 174.

219/ 안인해, “김정일체제의 경제와 여성,” p. 227.

220/ 심영희, “북한여성의 인권: 실태와 요인,” p. 174.

221/ 위의 글, p. 175.

222/ 이철수, “북한의 ‘여성권리보장법’에 대한 탐색적 분석: 기존 관련 법령과 비교를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제11권 1호 (2019), p. 229.

국가 정책에 종속되어 온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223/} 물론 공식적으로 발표된 수치에 따르면, 북한은 적어도 성·생식 보건과 재생이나 여성의 노동시장 및 정치참여의 측면에서는 SDG 5의 성평등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VNR 보고서에서 역시 북한은 사회주의를 주창하는 국가답게, 서구국가들보다도 더 먼저 남녀평등의 가치를 법에 반영함으로써 이미 오래전에 성평등을 달성했고, SDG 5의 세부목표를 대부분 성취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에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갖고 국가와 사회생활에 참여하고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권리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224/} 그러나 최근 국제기구와 시민사회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들의 내용은 북한의 주장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을 시사한다. 예컨대,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최근 한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로부터 수집한 증언의 내용들에 따르면, 북한 여성은 유교적 여성관에 기반한 여성 차별적 인식과 관습이 강하게 남아있는 가부장적 사회 구조 속에서 많은 일상적 인권 침해와 차별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25/} 2017년 유엔 CEDAW가 북한 심의 결과를 발표한 최종보고서 역시 북한 내 가정 폭력과 성폭력이 심각하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 대책도 제공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226/} 특히 정치 분야나 공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북한의 여성들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정치, 사회 분야 진출에 관한 북한 당국의 주장과 큰 괴리가

223/ 심영희, “북한여성의 인권: 실태와 요인,” p. 176.

224/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23.

225/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 북한의 여성들,” <https://amnesty.or.kr/43359/> (Accessed June 2, 2022).

226/ 원재천·박소영,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에 나타난 북한여성인권,” 『비교법학』, 제61권 (2020), pp. 253~293.

있다.^{227/}

북한은 유엔 SDG 5의 ‘성평등(양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을 ‘모든 부문에서 성평등과 여성 및 여아의 권한을 강화한다’라는 목표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표 III-36>을 통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유엔 SDG 5와 북한의 SDG 5는 양자 간 상이한 세부 목표 및 지표를 보여준다. 우선 유엔 SDG 5는 총 10개의 세부목표와 12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 북한 SDG 5는 총 5개의 세부목표와 7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유엔 SDG 5의 세부목표 가운데 5.2(폭력철폐), 5.4(무상돌봄 및 가사노동), 5.a(오너십 및 통제권), 5.c(법안채택 및 강화)는 북한 SDG 5에서 삭제되었다. 또한 유엔 SDG의 세부목표 5.3(악습철폐)의 경우 북한의 맥락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여성할례 부분은 삭제하고 ‘5.3 조혼을 근절한다’로 변용되었으며 5.3.2의 지표도 미반영되었다. 북한이 유엔 SDGs의 세부목표 5.2와 5.4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데이터를 산출할 방안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여성 인권이나 가부장적 사회의 구조와 같이 민감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으려는 의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세부목표 5.a와 5.c를 반영하지 않은 점은 사회주의 건설 초기부터 성평등 관련 법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시행해 온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맥락에 적합하지 않다는 내부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북한이 새롭게 추가한 SDG 5의 세부목표 및 지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27/ CFR, “Women’s Power Index,” <<https://www.cfr.org/article/womens-power-index>> (Accessed June 2, 2022).

표 III-36 유엔과 북한의 SDG 5 비교

| 성평등(양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 | | 모든 부문에서 성평등과 여성 및 여아의 권한을 강화한다. | |
|--|---|--|--|
| 유엔 SDGs (9개 세부목표, 14개 지표) | | 북한 SDGs (5개 세부목표, 7개 지표) | |
| 세부목표 | 지표 | 세부목표 | 지표 |
| 5.1 여성 및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모든 곳에서 없앤다. | 5.1.1 성별에 따른 평등 및 차별금지를 증진, 강제 그리고 모니터 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준비되어 있는지 여부 | 5.1 모든 부문에서 성평등을 강화한다. | 5.1.1 성평등에 관한 법적 체계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
| 5.2 인신매매, 성착취 및 기타 유형의 착취를 포함하여,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철폐한다. | 5.2.1 성경험이 있는 15세 이상의 소녀 및 여성 중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현재 혹은 이전의 성적 파트너로부터 물리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이들의 비율(폭력의 형태와 연령 그룹별) | - | - |
| | 5.2.2 15세 이상의 소녀 및 여성 중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성적파트너 이외에 다른 사람들로 부터 성폭력을 당한 이들의 비율(연령그룹 및 사건 발생 장소별) | - | - |
| 5.3 조혼, 아동·강제결혼 및 여성할례와 같은 모든 악습을 철폐한다. | 5.3.1 15세 이전에 결혼하거나 18세 이전에 동거를 시작한 20~24세 연령의 여성들의 비율 | 5.3 조혼을 근절한다. | 5.3.1 15세 이전/18세 이전에 결혼 또는 동거를 했던 20~24세 여성의 비율 |
| | 5.3.2 여성할례를 경험한 15~49세 연령의 소녀 및 여성의 비율 (연령별) | | - |
| 5.4 국가별 상황에 맞춰 공 공서비스, 사회보장시설 사회보장정책 및 가정 내 공동의 책임 도모를 통해 무상돌봄과 가사 노동에 가치를 부여하고 중요성을 인식한다. | 5.4.1 무상돌봄과 가사노동에 소요되는 시간 비율 (성별, 연령그룹 및 지역별) | - | - |
| 5.5 정치, 경제, 공공부문 등 모든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완전하고 | 5.5.1 국회 및 지방정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의석 비율 | 5.5 정치, 경제, 공공생활 모든 부문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한다. | 5.5.1 여성이 차지하는 의석 (대의원) 비율 (a) 최고인민회의 (b) 지방인민회의 |

| 성평등(양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 | | 모든 부문에서 성평등과 여성 및 여아의 권한을 강화한다. | |
|--|---|---|--|
| 유엔 SDGs (9개 세부목표, 14개 지표) | | 북한 SDGs (5개 세부목표, 7개 지표) | |
| 세부목표 | 지표 | 세부목표 | 지표 |
|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 5.5.2 관리직에서 근무하는 여성 비율 | | 5.5.2 관리직(간부급) 여성 비율 |
| 5.6 국제인구개발회의의 행동계획, 베이징행동강령 및 검토회의의 결과 문서에 따라 합의된 대로, 성·생식 보건과 재생산권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 5.6.1 성관계, 피임제 사용 및 임신보건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15~49세 여성 비율 | 5.6 국제인구개발회의(ICPD)의 행동계획과 강령 및 이에 대한 검토회의 최종문안에 합의한대로, 지식보건, 재생산권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 5.6.1 생식 보건에 대한 정보에 기반한 결정 피임제 사용 비율 가족계획 비충족 요구 비율 |
| | 5.6.2 15~49세 여성에게 성관계 및 임신 관련 보건 정보 및 교육을 보장하는 법률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국가의 수 | | 5.6.2 15세 이상의 여성과 남성에게 성·생식 보건 정보 및 교육에 대한 완전하고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법률 및 규정(국가 5개년 생식보건 전략) |
| 5.a 여성에게 경제적 자원에 대한 권리와 더불어 토지 및 기타 유형의 자산·금융서비스·유산·천연자원에 대한 오너십과 통제권 접근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부여될 수 있도록 국내법에 따라 개혁을 시행한다. | 5.a.1 (a) 농경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확실한 권리를 가진 전체 농업 인구의 비율(성별) (b) 농경지소유자 또는 토지 관리권을 가진 사람 중 여성의 비율(보유기간별) | - | - |
| | 5.a.2 토지소유나 통제에 대한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관습법을 포함한 법률적 기반을 갖춘 국가의 비율 | | |
| 5.b 여성의 역량강화 촉진을 위한 구형기술, 특히 ICT의 활용을 확대한다. | 5.b.1 휴대폰을 소유한 개인의 비율(성별) | 5.b 여성의 자력화 촉진을 위한 기술, 특히 정보통신 기술 활용능력을 증진시킨다. | 5.b.1 15~49세 성별 휴대폰 보유 개인 비율 |
| 5.c 모든 수준에서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 및 성평등 촉진을 위한 견고한 정책과 시행가능한 법안을 채택하고 강화한다. | 5.c.1 양성평등과 여성들의 권리인장을 위해 공공자원을 할당하고 추적 시스템을 갖춘 국가들의 비율 | - | - |

출처: 통계개발원, 『한국 SDG 이행보고서 2021』, p. 93; “DPRK VNR 2021,” p. 53, p. 60; 북민협 번역, “북한 VNR 보고서 2021,” pp. 51~52, p. 58을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표 III-3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의 SDG 5의 각 세부목표별 소관기관은 교육위원회(1개 세부목표), 노동성(1개 세부목표), 사회안전성(1개 세부목표), 정보산업성(1개 세부목표), 보건성(1개 세부목표)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조혼근절과 관련된 세부목표 5.3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목표들에서 모든 총위 정부 기관의 역할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이 근원적으로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에서 성평등 달성 목표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I-37 북한의 SDG 5 세부목표와 소관기관

| 세부목표 | 소관기관 |
|---|----------------------------|
| 5.1 모든 부문에서 성평등을 강화한다. | 교육위원회 노동성 모든 총위 이행기관 |
| 5.3 조혼을 근절한다. | 사회안전성 |
| 5.5 정치, 경제, 공공생활 모든 부문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한다. | 모든 총위 이행기관 |
| 5.6 국제인구개발회의(ICPD)의 행동계획과 베이징 행동 강령 및 이에 대한 검토회의 최종문안에 합의한 대로 성생식보건, 재생산권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 보건성 모든 총위 이행기관 |
| 5b 여성의 자력화 촉진을 위한 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을 증진시킨다. | 정보산업성 모든 총위 이행기관 |

출처: “DPRK VNR 2021,” p. 53; 북민협 번역, “북한 VNR 보고서 2021,” pp. 51~52.

(나) 북한의 SDG 5 우선순위와 계획

다음의 〈표 III-38〉은 SDG 5 관련 북한의 우선순위와 계획을 나타낸다. VNR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북한 사회가 이미 오래전에 양성평등을 이루었으며 성평등과 관련된 글로벌 SDGs 세부목표의 대부분을 달성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1946년 7월 30일 공포된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에 따라 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한 자유와

권리로 국가 활동과 사회생활에 참여해왔으며, 정치와 사회경제 생활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누리고 있음을 강조한다.^{228/} 이에 북한은 성평등과 관련된 우선적인 계획으로 더욱 더 완전한 성평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평등 관련 국가법을 올바로 시행함으로써 더 많은 여성을 정부 기관 및 기타 조직의 간부에 임명하는 여성의 권한을 보장하는 것과 다양한 형식과 방법의 교육을 강화하여 여성의 잠재력 발현을 위한 교육을 촉진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229/}

표 III-38 북한의 SDG 5 이행 우선순위와 계획

| 우선순위 | 계획 |
|----------------------|--|
| 여성의 권한 보장 | 성평등 관련 국가법을 올바로 시행 더 많은 여성을 정부기관 및 기타 조직의 간부에 임명 |
| 여성의 잠재력 발현을 위한 교육 촉진 | 여성을 위한 의무교육, 고등교육, 전문교육, 특성화교육, 기술교육, 예술 및 상업서비스 교육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의 교육을 강화하여 여성들이 희망하는 적합한 직업에서 능력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 |

출처: “DPRK VNR 2021,” p. 24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다) 북한의 SDG 5 지표 현황

〈표 III-39〉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의 현대적인 가족계획 방법에 대한 수요는 2007년 기준 89.6%로 SDG의 목표를 이미 달성하였으며 수치 또한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여성 대 남성의 노동 참여율 비나 국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의석 수 역시 각각 2020년 90.0%, 2008년 100%로 SDG의 목표를 달성하여 경제와 정치 영역에서의 성평등이 잘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28/}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24.

^{229/} *Ibid.*, p. 24.

여성 대 남성의 노동 참여율 비나 국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의석수의 이행 추세를 확인할 수는 있는 정보는 부재하며, 여성 대 남성의 교육연한 비의 경우 현황과 추세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가 모두 부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39 북한의 SDG 5 지표 현황과 추세

| 지표 | 수치 | 연도 | 현황 | 추세 |
|-------------------------------------|------|------|--------|-------|
| 현대적인 가족계획 방법에 대한 수요(15~49세 여성 대비 %) | 89.6 | 2017 | SDG 달성 | 향상 |
| 여성 대 남성의 교육연한 비(%) | - | - | 정보 부재 | 정보 부재 |
| 여성 대 남성의 노동 참여율 비(%) | 90.0 | 2020 | SDG 달성 | 정보 부재 |
| 국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의석(%) | 100 | 2008 | SDG 달성 | 정보 부재 |

출처: Jeffrey D. Sachs et al., *From Crisis to Sustainable Development: the SDGs as Roadmap to 2030 and Beyond*,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2, p. 263을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표 III-40〉은 북한 VNR 보고서의 성과지표 및 성과 도출값을 토대로 북한의 SDG 5 목표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230/} 북한의 SDG 5를 이행성과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연도별로 상황이 개선되고 있으며 SDG 4와 마찬가지로 2021년에는 SDG 5의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231/} 그러나 북한 사회에는 여전히 SDG 5의 세부목표들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많은 도전과제들이 남아있다.^{232/} 북한의 SDG 5 이행성과는 아시아의 다른 체제전환국들과 비교해서는 다소 긍정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다.^{233/} 그럼에도 불구하고 5.3.1(15세 이전에 결혼이나 동거를 했던 20~24세 여성의 비율)이나 5.5.2(관리직

230/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58.

231/ 권을 외,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성과와 남북협력과제』, p. 17.

232/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https://dashboards.sdgindex.org>〉 (Accessed June 2, 2022).

233/ 권을 외,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성과와 남북협력과제』, p. 18.

여성 비율)의 경우 북한이 글로벌 지표를 수용하고도 관련 데이터는 산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I-40 북한의 VNR에서 제시된 SDG 5 지표 현황

| 지표 | 2015 | 2018 | 2020 |
|--|-----------------------|------------------------------|----------------|
| 5.1.1 성평등에 관한 법적체계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 1946.7.30. | - | - |
| 5.3.1 15세 이전에 결혼 또는 동거를 했던 20~24세 여성의 비율(%) | - | (2017) | - |
| 5.5.1 여성이 차지하는 의석(대의원) 비율(%) (a) 최고인민회의 (b) 지방인민회의 | 20.2 27 | - | 17.6 (2019) |
| 5.5.2 관리직(간부급) 여성 비율(%) | - | - | - |
| 5.6.1 생식 보건에 대한 정보에 기반한 결정 피임제 사용 비율(%) 가족계획 비충족 요구 비율(%) | (2014) 78.2 7.0 | (2017) 70.3 6.6 | - |
| 5.6.2 15세 이상의 여성과 남성에게 성·생식 보건, 정보 및 교육에 대한 완전하고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법률 및 규정 (국가 5개년 생식보건 전략) | 2011.1.30. | 2017.1.30. | - |
| 5.b.1 15~49세 성별 휴대폰 보유 개인 비율(%) | - | 55.7(남) 47.9(여) (2017) | - |

출처: “DPRK VNR 2021,” p. 60; 북민협 번역, “북한 VNR 보고서 2021,” p. 58을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3) 목표 및 지표 평가

(가) 목표, 세부목표, 지표 적용에 대한 평가

유엔 SDG 5의 ‘성평등(양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은 ‘모든 부문에서 성평등과 여성 및 여아의 권한을 강화한다’라는 북한의 SDG 5로 동일하게 수용되었다. 그러나 유엔 SDG 5는 총 9개의 세부목표와 1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북한 SDG

5는 총 5개의 세부목표와 7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유엔 SDG의 세부목표 중 5.2(폭력철폐), 5.4(무상돌봄 및 가사노동), 5.a(오너십 및 통제권), 5.c(법안채택 및 강화)는 북한 SDGs에서 삭제되었다. 반면, 세부목표 5.1(차별철폐)과 5.3(악습철폐)은 변용되었는데, 5.1에서는 ‘차별 종식’이 ‘성평등 강화’로 바뀌어 수용되었으며 5.3의 경우 여성할례 부분은 삭제되고 ‘5.3 조혼을 근절한다’로 변용되었다. 나머지 세부목표는 유엔 SDG 5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며 북한이 독자적으로 채택한 세부목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표 III-41 북한의 SDG 5 수용 현황

| 유엔 세부목표 및 지표 | 북한 | | | | |
|--|----|----|----|----|--|
| | 수용 | 변용 | 삭제 | 추가 | 비고 |
| 5.1 여성 및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모든 곳에서 없앤다. | ○ | | | | |
| 5.1.1 성별에 따른 평등 및 차별금지를 증진, 강제 그리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준비되어 있는지 여부 | ○ | | | | |
| 5.2 인신매매, 성착취 및 기타 유형의 착취를 포함하여,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철폐한다. | | | ○ | | |
| 5.2.1 성경험이 있는 15세 이상의 소녀 및 여성 중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현재, 혹은 이전의 성적 파트너로부터 물리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이들의 비율(폭력의 형태와 연령 그룹별) | | | ○ | | |
| 5.2.2 15세 이상의 소녀 및 여성 중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성적 파트너 이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이들의 비율(연령그룹 및 사건 발생 장소별) | | | ○ | | |
| 5.3 조혼, 아동·강제결혼 및 여성할례와 같은 모든 악습을 철폐한다. | | ○ | | | [변용] 조혼 근절 |
| 5.3.1 15세 이전에 결혼하거나 18세 이전에 동거를 시작한 20~24세 연령의 여성들의 비율 | | ○ | | | [변용] 15세 이전/18세 이전에 결혼 또는 동거를 했던 20~24세 여성의 비율 |
| 5.3.2 여성할례를 경험한 15~49세 연령의 소녀 및 여성의 비율(연령별) | | | ○ | | |

| 유엔 | 북한 | | | | |
|--|----|----|----|----|----|
| 세부목표 및 지표 | 수용 | 변용 | 삭제 | 추가 | 비고 |
| 5.4 국가별 상황에 맞춰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사회보장정책 및 가정 내 공동의 책임 도모를 통해 무상돌봄과 가사노동에 가치를 부여하고 중요성을 인식한다. | | | ○ | | |
| 5.4.1 무상돌봄과 가사노동에 소요되는 시간 비율 (성별, 연령그룹 및 지역별) | | | ○ | | |
| 5.5 정치, 경제, 공공부문 등 모든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 ○ | | | | |
| 5.5.1 국회 및 지방정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의석 비율 | ○ | | | | |
| 5.5.2 관리직에서 근무하는 여성 비율 | ○ | | | | |
| 5.6 국제인구개발회의의 행동계획, 베이징행동강령 및 검토회의의 결과 문서에 따라 합의된 대로, 성·생식 보건과 재생산권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 ○ | | | | |
| 5.6.1 성관계, 피임제 사용 및 임신보건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15~49세 여성 비율 | ○ | | | | |
| 5.6.2 15~49세 여성에게 성관계 및 임신 관련 보건 정보 및 교육을 보장하는 법률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국가의 수 | ○ | | | | |
| 5.a 여성에게 경제적 자원에 대한 권리와 더불어 토지 및 기타 유형의 자산·금융서비스·유산·천연자원에 대한 오너십과 통제권 접근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부여될 수 있도록 국내법에 따라 개혁을 시행한다. | | | ○ | | |
| 5.a.1 (a) 농경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확실한 권리를 가진 전체 농업인구의 비율(성별) (b) 농경지 소유자 또는 토지 관리권을 가진 사람 중 여성의 비율(보유기간별) | | | ○ | | |
| 5.a.2 토지소유나 통제에 대한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관습법을 포함한 법률적 기반을 갖춘 국가의 비율 | | | ○ | | |
| 5.b 여성의 역량강화 촉진을 위한 구현기술, 특히 ICT의 활용을 확대한다. | ○ | | | | |
| 5.b.1 휴대폰을 소유한 개인의 비율(성별) | ○ | | | | |
| 5.c 모든 수준에서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 및 성평등 촉진을 위한 견고한 정책과 시행가능한 법안을 채택하고 강화한다. | | | ○ | | |

| 유엔 세부목표 및 지표 | 북한 | | | | 비고 |
|--|----|----|----|----|----|
| | 수용 | 변용 | 삭제 | 추가 | |
| 5.c.1 양성평등과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공공 재원을 할당하고 추적 시스템을 갖춘 국가들의 비율 | | | ○ | | |

출처: 통계개발원, 『한국 SDG 이행보고서 2021』, p. 93; “DPRK VNR 2021,” p. 53, p. 60; 북민협 번역, “북한 VNR 보고서 2021,” pp. 51~52, p. 58을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표 III-4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유엔 SDG 5의 지표는 총 14개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북한 SDG 5에서는 이 중 7개가 삭제되어 총 7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SDG 5의 7개의 지표 중 6개(5.1.1, 5.5.1, 5.5.2, 5.6.1, 5.6.2, 5.b.1)는 유엔 SDG 5의 지표들을 그대로 수용하였고 1개(5.3.1)는 북한의 맥락에 맞게 변용하였다. SDG 5에서 북한이 새롭게 추가한 지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성평등과 관련된 유엔 SDG 5는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여성 인권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SDG 5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목표 가운데 5.2(폭력철폐), 5.4(무상돌봄 및 가사노동), 5.a(오너십 및 통제권), 5.c(법안채택 및 강화)와 관련 지표들은 북한 SDG 5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북한이 이처럼 유엔 SDGs의 세부목표 5.2와 5.4 및 관련 지표들을 삭제한 것은 데이터 생산이 쉽지 않다는 이유 이외에도 여성 인권이나 가부장적 사회 구조와 같이 민감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으려는 북한의 의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행 수단으로 여성의 경제적 자원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의 완비 및 성평등을 추진하는 정책의 구비를 강조하는 세부목표 5.a와 5.c 관련 지표들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성평등 관련 법과 정책을 채택하고 시행해 온 북한 사회의 맥락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삭제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아울러 세부목표 5.3(악습철폐)의 경우 북한의 맥락과 직접적으로 관계 없는 여성할례 부분은 삭제하고 ‘5.3 조혼을 근절한다’로 변용되었으며 5.3.2의 지표도 삭제되었다. SDG 5에서 북한이 독자적으로 추가한 세부목표 및 지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지표의 신뢰성과 지속성에 대한 평가

북한은 유엔 SDG 5의 세부목표 중 5.2, 5.4, 5.a, 5.c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그대로 수용 또는 변용함으로써 관련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된 지표들 중 5.3.1, 5.5.2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데이터도 비교적 잘 산출하고 있는 편이다. 한편, 북한이 SDG 5에서 세부목표 5.a(오너십과 통제권)와 5.c(법안 채택 및 강화)를 삭제하고 관련 지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가 이미 오래전에 성평등 관련 법과 정책을 구비함으로써 해당 세부목표들을 달성하였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5.2(차별 철폐)와 5.4(무상돌봄 및 가사노동)를 제외한 유엔 SDGs의 성평등 관련 세부목표들과 지표들을 자신의 SDG 5 내에 어느 정도 모두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SDG 5 관련 지표들이 북한의 성평등 현실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제시된 지표들은 대표성이 있다고 파악된다. 다만 5.3.1(15세 이전에 결혼이나 동거를 했던 20~24세 여성의 비율)이나 5.5.2(관리직 여성 비율)의 경우 북한이 글로벌 지표를 수용하고도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중 5.5.2는 정치·사회적 상황에 따라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5.3.1의 경우 데이터를 생산할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집 및 산출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지표의 신뢰성과 관련하여, 북한이 공식적으로 제출한 내용만을 본다면 북한은 성평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완비하였으며 성·생식 보건과 재생이나 여성의 노동시장 및 정치참여의 측면에서도 SDG 5의 성평등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국제기구와 시민사회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들이나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여성의 현실은 당국의 공식적 주장과 괴리가 크다. 북한의 여성들은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수많은 일상적 인권 침해와 차별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도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234/} 그러므로 북한이 성평등을 보장하는 법령을 제시하고 법령의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법적 표현에 불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북한이 여성의 인권이나 구조적 차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세부목표 5.2(차별철폐)와 5.4(무상돌봄 및 가사노동)를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관련 지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볼 때, 북한이 비록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평등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여성의 인권이나 역량강화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많은 도전 과제들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표의 지속성과 관련하여, VNR 보고서에서 북한은 자신이 서구사회들보다도 더 일찍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주체로 규정하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오래전에 성평등을 달성하였음을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교육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그간 지향해 온 성평등 분야에서의 성과는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며 더욱이 북한 당국이

^{234/} 심영희, “북한여성의 인권: 실태와 요인,” pp. 151~194; 안인해, “김정일체제의 경제와 여성,” pp. 225~240.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여성 인권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앞으로도 일관되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SDG 5의 진전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수용하고 관련 데이터를 산출해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유엔 SDGs의 성평등 목표가 기존의 노력들과 차별화되는 부분이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무보수 노동 등 여성 인권 관련 이슈와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부분임을 고려할 때, 북한이 세부목표 중 특히 5.2(폭력철폐)나 5.4(무상돌봄 및 가사노동)를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에 남아있는 과제는 향후 북한이 SDG 5의 세부목표와 지표 수립 시 성평등과 여성 인권 향상을 방해하는 구조적 문제들을 제거하는 전환적 접근을 채택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다) 지표 미공개·부재에 대한 대응 및 보완 방향

북한은 SDG 5의 세부목표 중 5.2, 5.4, 5.a, 5.c를 제외한 나머지 세부목표들은 모두 수용하거나 변용하여 관련 지표들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5.3.2(여성할례)의 경우 북한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삭제된 것으로 보이므로 북한이 향후 해당 지표를 수용하고 데이터를 공개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에 5.3.2 이외에 북한이 미공개하고 있는 다른 지표들 중 특히 5.2(차별철폐)와 5.4(무상돌봄 및 가사노동)의 미공개 원인을 검토해 보고 북한의 실정에 맞는 대안지표를 제안해 보겠다.

북한은 세부목표 5.2(차별철폐)와 5.4(무상돌봄 및 가사노동)의 관련 지표를 자신의 정치적·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많은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북한이 구비한 법적·제도적 측면에서의 성평등은 여성의 일상생활에서의 평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 인권

측면에서의 침해가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235/} 그러나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무보수 노동을 포함하는 여성 인권 관련 이슈와 사회의 구조적 문제는 성평등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향후 북한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당 지표를 수용하고 관련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K-SDG의 5.2와 5.3의 지표들을 참고하여 가정폭력 실신고 건수 및 대응률, 성폭력 발생사건 및 미검거율, 맞벌이가구 여성 대비 남성의 가정 내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 시간 비율 등을 대안지표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표 III-42 북한의 SDG 5 지표 미공개·부재 보완 방향

| 원인 | 지표 | 보완 방향 | |
|---------|--|-------|--|
| 의도적 미공개 | 5.2.1 파트너가 있(었)던 15세 이상의 여성과 여아 중 지난 12개월 동안 (현재 혹은 과거의)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성적, 정서적인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인구 비율 (연령 및 폭력형태별) | 대안 지표 | 가정폭력 실신고건수 및 대응률 |
| | 5.2.2 15세 이상의 여성과 여아 중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친밀한 파트너 이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성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인구비율(연령 및 사건발생 장소별) | | 성폭력 발생사건 및 미검거율 |
| | 5.4.1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의 성별, 연령별, 장소별 비율 | | 맞벌이가구 여성 대비 남성의 가정 내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 시간 비율 |

^{235/} 박경숙, “북한 사회의 국가, 가부장제, 여성의 관계에 대한 시론,” 『사회와 이론』, 제21-1집 (2012), pp. 327~375; 이미경, “경제난 이후 북한여성의 삶과 의식의 변화: 탈북 여성과의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제47권 2호 (2004), pp. 183~212; 김경희·강은애·손명아,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국가가부장제의 재생산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제55집 1호 (2016), pp. 131~164.

2. 번영과 경제발전 분야

가. SDG 10 불평등 완화

(1) 목표 및 지표 개관

(가) SDG 10 목표와 지표

유엔 SDG 10은 국가 내·국가 간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한다. SDG 10은 SDG 1과 더불어 기본적인 소득 보장과 불평등의 완화, 차별적 제도의 철폐 등을 강조하고 있다. 1990년 50%에 달하던 개발도상국의 절대빈곤 인구는 2010년 25%로 비율이 감소하여 절대빈곤 퇴치라는 MDG 1은 목표를 상회하여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 불평등은 최근 들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며, 이는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소득이 불평등한 사회는 교육, 보건, 기술접근도 등에서도 격차를 가져와 균등한 사회 개발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다시 사회적으로 계층 간 이동 가능성을 낮추어 더욱 경직되고 차별적인 사회를 만든다. 사회개발을 목표로 시작한 경제 성장이 다시 사회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236/} 이에 유엔은 사회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함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들이 반드시 함께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 하에서 SDG 10을 국내 또는 국가 간 불평등 완화로 선정하였다.

SDG 10의 목표를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236/} 조아라, “[SDG9,1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란 무엇일까?” <<https://www.greenasia.kr/2016/11/29/vol-72-sdg89-%EC%A7%80%EC%86%8D%EA%B0%80%EB%8A%A5%EB%B0%9C%EC%A0%84%EB%AA%A9%ED%91%9Csdgs-sustainable-development-goals%EB%9E%80-%EB%AC%B4%EC%97%87%EC%9D%BC%EA%B9%8C/>> (Accessed June 2, 2022).

같다. 첫째, 2030년까지 하위 40%의 소득성장률을 국가 평균을 증가하게 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다. 둘째, 연령,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등을 막론하고 모두를 아우르는 정치, 사회, 경제적 포용력을 기르며, 차별적인 법, 정책, 관행을 철폐하고 기회의 평등보장 및 불평등을 해소하고 적절한 입법과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셋째, 금융시장 및 기관의 감독과 규제를 개선하고 의사결정에서 개발도상국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이주와 이동 시 안전성 증진 및 체계를 위해 계획되고 잘 관리된 이민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SDG 10은 <표 III-4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 10개의 세부목표와 1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주 및 난민 관련 세부목표(10.7, 10.c) 2개와 지표(10.7.1, 10.7.2, 10.7.3, 10.7.4, 10.c.1) 5개가 포함되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과 재분배 관련 세부목표(10.1, 10.2, 10.4)와 지표(10.1.1, 10.2.1, 10.4.1, 10.4.2)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부목표 10.7에 지표 4개, 세부목표 10.4에 지표 2개가 있고 나머지 세부목표에는 모두 지표가 각각 1개씩 있다.

표 III-43 SDG 10의 세부목표 및 지표

| 세부목표 | 지표 |
|---|--|
| 10.1 전체 인구의 소득 수준 하위 40%의 소득 증가율을 국가 전체평균 이상까지 점진적으로 달성하고 유지하도록 한다. | 10.1.1 하위 40% 인구 및 총인구 중 가구지출 또는 1인당 소득의 성장률 |
| 10.2 연령, 성별, 장애여부, 인종, 민족, 출신, 종교, 경제 및 기타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포용을 증진하고 확대한다. | 10.2.1 중위소득 50% 이하의 인구 비율 (연령, 성 및 장애인별) |
| 10.3 차별적인 법규, 정책, 관행을 철폐하고, 이와 관련된 적절한 법, 정책, 조치 증진 노력을 통하여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결과의 불평등을 감소한다. | 10.3.1 국제인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을 기준으로 최근 12개월 내 개인적으로 차별을 당했거나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낀 인구의 비율 |

| 세부목표 | 지표 |
|---|--|
| 10.4 재정 정책, 임금 정책, 사회보장정책을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한다. | 10.4.1 임금 및 사회보장이전으로 구성된 GDP 중 노동이 차지하는 비율 10.4.2 재정 정책의 재분배 영향력 |
| 10.5 국제 금융시장 및 기관의 규제와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규제 이행을 강화한다. | 10.5.1 재정 건전성 지표 |
| 10.6 국제 경제 및 금융관련 국제기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효과성, 신뢰성, 책무성 및 적법성이 보장되는 제도의 운용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대의권과 발언권 확보를 보장한다. | 10.6.1 국제기구의 회원국이거나 투표권이 있는 개발도상국의 비율 |
| 10.7 계획적이고 잘 관리된 이주정책의 이행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안전하며 정규적이고 책임 있는 인구 이주와 이동을 지원한다. | 10.7.1 이주국가에서 얻은 연간소득 대비 이주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발생한 비용의 비율 10.7.2 잘 관리되는 이주정책을 이행하고 있는 국가의 수 10.7.3 이주국으로 이동하는 중 사망하거나 사라진 사람의 숫자 10.7.4 이주국별 난민인구의 비율 |
| 10.a WTO 협정에 따라,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에 대한 특별우대 조치 규정을 이행한다. | 10.a.1 관세가 없는 최빈국/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적용되는 관세선 비율 |
| 10.b FDI를 포함한 ODA 및 재원이 가장 필요한 국가, 특히 최빈국, 아프리카 국가, 군소도서 개발국 및 내륙개발도에 국가 계획과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 10.b.1 개발을 위한 자원투입 총액 (예: 공적개발원조, 해외직접투자 및 기타 투입) |
| 10.c 이주자 송금 수수료를 3% 미만으로 낮추고 5%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송금 경로를 제거한다. | 10.c.1 송금된 금액 대비 송금 비용 |

출처: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0," <<https://sdgs.un.org/goals/goal10>> (Accessed June 2, 2022); 통계청 통계개발원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1』, p. 96을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표 III-44>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7년 기준으로 아시아태평양 국가에서의 SDG 10 지표 수집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이었다. 당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한 지표는 10.6.1 (국제기구의 회원이거나 투표권이 있는 개발도상국의 비율)의 1개 뿐이고 4개는 데이터가 불충분한 지표, 6개는 자료가 없는 지표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2021년에는 상황이 비약적으로 개선되어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한 지표가 10개로 증가하였으며 3개가 데이터가

불충분한 지표, 1개만이 자료가 없는 지표로 나타났다. 2021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경우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한 지표는 9개, 데이터가 부재한 지표는 5개였으며 북한의 경우에는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한 지표가 6개, 데이터가 부재한 지표는 8개였다. <표 III-44>는 2021년 기준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SDG 10 지표의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특히 이주민과 관련된 지표들, 즉 이주국으로 이동하는 중 사망하거나 사라진 사람의 숫자와 송출국별 난민 수가 0명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나) SDG 10 지표 관리기구와 수집 현황

<표 III-44>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22년 2월에 업데이트된 기준에 따르면, SDG 10의 지표는 모두 티어 I, 혹은 티어 II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제적인 비교가 어느 정도 가능한 상황이다. 세부목표 10.5(규제 이행), 10.6(개발도상국의 대의권과 발언권 확보), 10.a(최빈국에 대한 특별우대 조치), 10.b(공적개발원조), 10.c(이주자 송금)의 지표들은 모두 티어 I에 속하며, 10.1(하위 소득 성장), 10.2(정치적 포용), 10.3(차별철폐 및 불평등 감소)의 지표들은 모두 티어 II에 속한다. 세부목표 10.4(정책 도입)의 경우 지표 10.4.1은 티어 I에, 10.4.2는 티어 II에 속하고, 세부목표 10.7(이주 지원)의 경우 지표 10.7.1과 10.7.2는 티어 II에, 지표 10.7.3과 10.7.4는 티어 I에 속한다. SDG 10 지표를 관리하고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국제기구에는 World Bank(6개), ILO(2개),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2개), UNHCR(2개), OHCHR(1개), UN DESA/FFDO(Financing for Development Office, 개발재무실)(1개), IOM(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국제이주기구)(1개) 등의 다양한 기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III-44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SDG 10 지표 수집 가능성

| 지표 | 티어 그룹 | 아시아태평양 2017 | | | 아시아태평양 2021 | | | 한국 2021 | | | 북한 2021 | | |
|--|-------|-------------|-----|-------|-------------|-----|-------|---------|-----|-------|---------|-----|-------|
| | | 충분 | 불충분 | 자료 없음 | 충분 | 불충분 | 자료 없음 | 충분 | 불충분 | 자료 없음 | 충분 | 불충분 | 자료 없음 |
| 10.1.1 하위 40% 인구 및 총 인구 중 가구지출 또는 1인당 소득의 성장률 | II | | ○ | | | ○ | | | | ○ | | | ○ |
| 10.2.1 중위소득 50% 이하의 인구 비율 | II | | | ○ | ○ | | | | ○ | | | | ○ |
| 10.3.1 국제인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을 기준으로 최근 12개월 내 개인적으로 차별을 당했거나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낀 인구의 비율 | II | | | ○ | | ○ | | | | ○ | | | ○ |
| 10.4.1 임금 및 사회보장이전으로 구성된 GDP 중 노동이 차지하는 비율 | I | | ○ | | ○ | | | | ○ | | | ○ | |
| 10.4.2 재정 정책의 재분배 영향력 | II | | | | ○ | | | | ○ | | | | ○ |
| 10.5.1 재정 건전성 지표 | I | | | ○ | ○ | | | | ○ | | | | ○ |
| 10.6.1 국제기구의 회원국이거나 투표권이 있는 개발도상국의 비율 | I | ○ | | | ○ | | | | ○ | | | ○ | |
| 10.7.1 이주국가에서 얻은 연간소득 대비 이주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발생한 비용의 비율 | II | | | ○ | | ○ | | | | ○ | | | ○ |
| 10.7.2 잘 관리되는 이주정책을 이행하고 있는 국가의 수 | II | | | ○ | | ○ | | | | ○ | | | ○ |
| 10.7.3 이주국으로 이동하는 중 사망하거나 사라진 사람의 숫자 | I | | | | ○ | | | | ○ | | | ○ | |
| 10.7.4 이주국별 난민인구의 비율 | I | | | | ○ | | | | ○ | | | ○ | |
| 10.a.1 관세가 없는 최빈국/개발도상국으로 부터의 수입품에 적용되는 관세선 비율 | I | | ○ | | ○ | | | | ○ | | | ○ | |
| 10.b.1 개발을 위한 자원투입 총액(예: 공적개발원조, 해외직접투자 및 기타 투입) | I | | ○ | | ○ | | | | ○ | | | ○ | |
| 10.c.1 송금된 금액 대비 송금 비용 | I | | | ○ | ○ | | | | | ○ | | | ○ |

출처: UNESCAP, *Statistical Yearbook for Asia and the Pacific 2017: Measuring SDG progress in Asia and the Pacific: Is There Enough Data?* pp. 30~34; ESCAP SDG Gateway Asia Pacific, "Data Analysis," (Accessed September 19, 2022)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표 III-45 아시아태평양 지역 SDG 10 지표의 목표(2021년)

| 지표 | 목표 |
|--|------|
| 10.2.1 중위소득 50% 이하의 인구 비율(%) | 4.4 |
| 10.4.1 GDP 중 노동이 차지하는 비율(%) | 55.2 |
| 10.4.2 지니계수(coefficient) | 29.5 |
| 10.7.3 이주국으로 이동하는 중 사망하거나 사라진 사람의 숫자(명) | 0 |
| 10.7.4 송출국별 난민수(인구 10만 명당) | 0 |
| 10.a.1 관세가 없는 최빈국/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적용되는 관세선 비율(%) | 77.3 |
| 10.b.1 개발을 위한 자원투입 총액(%) | 2 |
| 10.c.1. 송금된 금액 대비 송금 비용(%) | 3 |

출처: UNESCAP, *Asia and the Pacific SDG Progress Report 2021*, p. 79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표 III-46 SDG 10 지표 현황 및 관리기구와 북한의 지표 보유 현황

| 세부목표 | 지표 | 변경 티어 | 가능한 관리기관 | 파트너 기관 | 북한 보유 여부 |
|---|--|----------|-------------|--------|----------------|
| 10.1 전체 인구의 소득 수준 하위 40%의 소득 증가율을 국가 전체평균 이상까지 점진적으로 달성하고 유지하도록 한다. | 10.1.1 하위 40% 인구 및 총 인구 중 가구지출 또는 1인당 소득의 성장률 | II | World Bank | | X |
| 10.2 연령, 성별, 장애여부, 인종, 민족, 출신 종교, 경제 및 기타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포용을 증진하고 확대한다. | 10.2.1 중위소득 50% 이하의 인구 비율 | II | World Bank | | O |
| 10.3 차별적인 법규, 정책, 관행을 철폐하고, 이와 관련된 적절한 법, 정책, 조치 증진 노력을 통하여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결과의 불평등을 감소한다. | 10.3.1 국제인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을 기준으로 최근 12개월 내 개인적으로 차별을 당했거나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낀 인구의 비율 | II | OHCHR | | X |
| 10.4 재정 정책, 임금 정책, 사회보장정책을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한다. | 10.4.1 임금 및 사회보장이전으로 구성된 GDP 중 노동이 차지하는 비율 | I | ILO | IMF | X |
| | 10.4.2 재정 정책의 재분배 영향력 | II | World Bank | | X |
| 10.5 국제 금융시장 및 기관의 규제와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규제 이행을 강화한다. | 10.5.1 재정 건전성 지표 | I | IMF | | X |

| 세부목표 | 지표 | 변경 티어 | 가능한 관리기관 | 파트너 기관 | 북한 보유 여부 |
|---|--|----------|--|---|----------------|
| 10.6 국제 경제 및 금융관련 국제기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효과성, 신뢰성, 책무성 및 적법성이 보장되는 제도의 운용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대의권과 발언권 확보를 보장한다. | 10.6.1 국제기구의 회원국이거나 투표권이 있는 개발도상국의 비율 | I | DESA/ FFDO | | X |
| 10.7 계획적이고 잘 관리된 이주정책의 이행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안전하며 정규적이고 책임 있는 인구 이주와 이동을 지원한다. | 10.7.1 이주국가에서 얻은 연간 소득 대비 이주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발생한 비용의 비율 | II | ILO, World Bank | | X |
| | 10.7.2 잘 관리되는 이주정책을 이행하고 있는 국가의 수 | II | DESA Population Division, IOM | World Bank, Global Migration Group, UNHCR, UNODC, OECD | X |
| | 10.7.3 이주국으로 이동하는 중 사망하거나 사라진 사람의 숫자 | I | IOM | | X |
| | 10.7.4 이주국별 난민인구의 비율 | I | UNHCR | | X |
| 10.a WTO 협정에 따라,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에 대한 특별우대 조치 규정을 이행한다. | 10.a.1 관세가 없는 최빈국/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적용되는 관세선 비율 | I | ITC, UNCTAD, WTO | | X |
| 10.b FDI를 포함한 ODA 및 재원이 가장 필요한 국가, 특히 최빈국, 아프리카 국가, 군소도서 개발국 및 내륙개도국에 국가 계획과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 10.b.1 개발을 위한 자원투입 총액 (예: 공적개발원조, 해외 직접투자 및 기타 투입) | I | OECD | | X |
| 10.c 이주자 송금 수수료를 3% 미만으로 낮추고 5%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송금 경로를 제거한다. | 10.c.1 송금된 금액 대비 송금 비용 | I | World Bank | | X |

출처: IAEG-SDGs, "Tier Classification for Global SDG Indicators," (Accessed September 22, 2022); 통계개발원, 『한국 SDG 이행보고서 2021』, p. 96; "DPRK VNR 2021," p. 54, p. 61; 북민협 번역, "북한 VNR 보고서 2021," p. 53, p. 59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다) K-SDG 10 세부목표와 지표

제4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2021~2040)에 따르면 한국의 SDG 10 목표는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이며 SDG 8(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SDG 9(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 기반시설 구축), SDG 12(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와 함께 ‘혁신적 성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파트에 포함되어 있다.^{237/} 세부목표의 주요 내용은 “하위 40% 인구 가처분소득을 증가하고 모든 사람에 대한 사회·경제·정치적 포용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재정·임금·사회보호정책을 강화하고 인권 중심적인 이민정책을 실시”할 것이 제안되고 있다. 주요 정책으로는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 장애인 고용서비스 및 직업재활 지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사각해소,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를 통한 고용 안전망 강화, 이민 정착 지원 및 인권보호 강화” 등이 있다.^{238/}

〈표 III-47〉은 K-SDGs 불평등 해소 분야의 세부목표와 지표를 제시한 것이다. K-SDGs 불평등 해소 분야는 2021년 기준 총 5개의 세부목표와 11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유엔 SDG 10의 세부목표 중 10.3(차별철폐 및 불평등 감소)은 한국적 맥락에 맞게 ‘나이, 성별, 장애 여부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으로 변용되었으며, 유엔 SDG의 세부목표 10.5(규제 이행)가 삭제되고 대신 ‘내·외국인 권익을 균형적으로 보장하는 이민정책을 통한 상호 문화 이해 환경을 조성’이 추가되었다. 10.6~10.c는 국가 간 불평등 완화라는 글로벌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K-SDGs 10에서는 모두 삭제되었다. 아울러 K-SDG 10의 지표 11개 가운데 6개는 유엔 SDG 10의 지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반면 K-SDG의 세부목표 10.3과 10.5의 지표들은 모두 한국의 상황에 적합한 내용들로 신규 추가되었다.

237/ 관계부처 합동, 『제4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2021~2040 제1부』, p. 21.

238/ 위의 책, p. 26

표 III-47 K-SDG 10 세부목표와 지표

| K-SDG 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 |
|--|--|
| 세부목표 | 지표 |
| 10.1 하위 40% 인구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국가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달성하고 유지 | (1) 전체 인구의 균등화한 가구소득 대비 소득 하위 40% 인구의 균등화한 가구소득의 비율 (2) 소득격차 비율 |
| 10.2 나이, 성별, 장애여부, 지위 등과 관계 없이 모든 사람에 대한 사회·경제·정치적 포용성을 확대 | (1) 소득 5분위 배율 (2) 소득 1, 2분위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 |
| 10.3 나이, 성별, 장애여부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 | (1) 인구집단별 고용률 (2) 장애인의무고용률 |
| 10.4 재정정책, 임금정책, 사회보호정책을 강화하여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 | (1) GDP 대비 노동소득 분배율 |
| 10.5 내·외국인 권익을 균형적으로 보장하는 이민정책을 통한 상호문화 이해 환경을 조성 | (1) 이주민 권리보장에 관한 국제/국내 인권기구 권고에 대한 적극적 수용 (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통합조례 제정률 (3) 국민 다문화 수용성 지표 (4)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이민/다문화 교육 이수 시간 |

출처: 관계부처 합동, 『제4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2021~2040 제1부』, p. 54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제4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2021~2040)에 따르면, K-SDGs 불평등 해소 분야에서 향후 5년간 중점 추진이 필요한 목표와 지표는 10.2(사회·경제·정치적 포용성)에서의 (1) 소득 5분위 배율과 (2) 소득 1, 2분위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 및 10.3(차별적 대우 철폐)에서의 인구집단별 고용률로 선정되었다.^{239/} 또한 공식통계 활용이 가능한 99개의 K-SDGs 지표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을 평가한 결과,^{240/} 2030년 목표치 달성 가능성을 중심으로 2개(55세 이상 고용률, GDP 대비 가계소득)의 지표가 ‘호림’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요구된다.

239/ 위의 책, p. 35.

240/ 위의 책.

(2) 북한 현황

(가) 북한의 SDG 10 목표와 세부목표 및 지표

북한은 마르크스주의를 나름의 방식으로 변형한 ‘우리식 사회주의’를 인간중심의 사상인 주체사상이 구현된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로 보고 평등을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내세운다.^{241/} 그러나 역사상 존재한 다른 사회주의 사회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는 경제생활을 비롯한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이 존재하고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사회주의 이념에 근거한 법과 정책의 시행으로 자본주의 사회와 비교하여 계급 간, 성별 간 소득격차가 감소하고 노동자의 지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당이 모든 의사결정을 독점하는 과정에서 부의 통제에 따른 불평등이 지위와 소득에서의 불평등으로 연계되어 왔다.^{242/} 이처럼 북한의 불평등의 구조는 혁명 주도 세력에게 장기간 부여되고 있는 특혜와 정치권력에 의한 위계구조가 기본 토대를 이루며,^{243/} 사회진출과 부의 분배의 측면에 있어서도 혁명 이전의 출신 성분과 계급에 따른 불평등이 유지되고 있다.^{244/}

더욱이 2002년 북한에 시장체제가 도입된 이래로는 기존의 출신 성분에 의한 차별에 소득에 의한 계층 분화와 지역 간 격차, 성별 등의 요소가 결합되어 불평등 양상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다.^{245/} 특히 사회주의 체제의 새로운 특권층으로서의 국가 관료는

241/ 김병로, “북한의 시장화와 계층구조의 변화,” 『현대북한연구』, 제16권 1호 (2016), p. 172.

242/ 김병로·김성철, 『북한사회의 불평등구조와 정치사회적 함의』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pp. 3~4.

243/ 위의 책, p. 3.

244/ 김병로, “북한의 시장화와 계층구조의 변화,” p. 173.

245/ 이주영, “사회권규약과 북한인권,” 이주영 외, 『사회권의 관점에서 본 북한인권』 (서울: 통일연구원, 2017), p. 37.

시장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통제와 배분의 권한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고 북한 사회 내에서의 의료이용이나 교육기회에서의 격차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킴으로써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체제의 명분을 퇴색시키고 있다.^{246/} 기존의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국가 관료 집단과 시장화로 인해 새롭게 성장한 상인계급 사이에는 그동안 대체로 공생관계가 성립해왔으나, 2009년 단행된 화폐개혁을 통해 나타나듯 이익의 분배를 둘러싼 이들 간의 긴장과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기도 하다.^{247/} 경제난과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국가의 운영이 일정 부분 상인계급의 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들의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은 점차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 북한 사회 내에서의 계층구조의 변화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248/}

북한은 유엔 SDG 10의 ‘불평등 완화(국가 내/국가 간 불평등을 완화한다)’를 ‘국가 주체로서 인민 대중의 권리 및 역할 보장’이라는 SDG 10으로 변형하여 수용하였다. 그러나 <표 III-48>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북한의 SDG 10에는 1개의 세부목표와 1개의 지표만이 존재하여 유엔 SDG 10의 대다수의 세부목표와 지표를 삭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이 수용한 세부목표 10.2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포용성 확대와 관련된 것인데, 공식적인 지표를 채택하지 않고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포용성과 관련하여 채택된 국가법과 가입된 국제협약만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표 III-49>와 같이 북한의 SDG 세부목표 10.2의 이행을 위한 소관기관은 모든 층위의 기관으로써 포괄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246/ 최규빈 외, 『북한의 사회불평등 연구: 건강 및 교육 불평등과 인권』 (서울: 통일연구원, 2021).

247/ 김병로, “북한의 시장화와 계층구조의 변화,” p. 175.

248/ 위의 글, p. 207.

표 III-48 유엔과 북한의 SDG 10 비교

| 불평등 완화(국가 내/국가 간 불평등을 완화한다) | | 국가 주체로서 인민 대중의 권리 및 역할 보장 | |
|--|--|---|--|
| 유엔 SDGs (10개 세부목표, 14개 지표) | | 북한 SDGs (1개 세부목표, 1개 지표) | |
| 세부목표 | 지표 | 세부목표 | 지표 |
| 10.1 전체 인구의 소득 수준 하위 40%의 소득 증가율을 국가 전체평균 이상까지 점진적으로 달성하고 유지 | 10.1.1 하위 40% 인구 및 총 인구 중 가구지출 또는 1인당 소득의 성장률 | - | - |
| 10.2 연령, 성별, 장애여부, 인종, 민족, 출신 종교, 경제 및 기타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포용을 증진하고 확대 | 10.2.1 중위소득 50% 이하의 인구 비율(연령, 성별 및 장애인별) | 10.2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포용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촉진함 | 10.2.1 관련 국가법 채택, 국제 협약 가입, 장애자보호법, 아동권리보장법, 여성권리보장법, 장애인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
| 10.3 차별적인 법규, 정책, 관행을 철폐하고, 이와 관련된 적절한 법, 정책, 조치 증진 노력을 통하여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결과의 불평등을 감소 | 10.3.1 국제인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을 기준으로 최근 12개월 내 개인적으로 차별을 당했거나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낀 인구의 비율 | - | - |
| 10.4 재정 정책, 임금 정책, 사회보장정책을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 | 10.4.1 임금 및 사회보장이 전으로 구성된 GDP 중 노동이 차지하는 비율 | - | - |
| | 10.4.2 재정 정책의 재분배 영향력 | - | - |
| 10.5 국제 금융시장 및 기관의 규제와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규제 이행을 강화 | 10.5.1 재정 건전성 지표 | - | - |
| 10.6 국제 경제 및 금융관련 국제기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효과성, 신뢰성, 책무성 및 적법성이 보장되는 제도의 운영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대의권과 발언권 확보를 보장 | 10.6.1 국제기구의 회원국 이거나 투표권이 있는 개발도상국의 비율 | - | - |

| 불평등 완화(국가 내/국가 간 불평등을 완화한다) | | 국가 주체로서 인민 대중의 권리 및 역할 보장 | |
|--|---|---------------------------|----|
| 유엔 SDGs (10개 세부목표, 14개 지표) | | 북한 SDGs (1개 세부목표, 1개 지표) | |
| 세부목표 | 지표 | 세부목표 | 지표 |
| 10.7 계획적이고 잘 관리된 이주정책의 이행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안전하며 정규적이고 책임 있는 인구 이주와 이동을 지원 | 10.7.1 이주국가에서 얻은 연간소득 대비 이주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발생한 비용의 비율 | - | - |
| | 10.7.2 잘 관리되는 이주정책을 이행하고 있는 국가의 수 | - | - |
| | 10.7.3 이주국으로 이동하는 중 사망하거나 사라진 사람의 숫자 | - | - |
| | 10.7.4 이주국별 난민인구의 비율 | - | - |
| 10.a WTO 협정에 따라,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에 대한 특별우대 조치 규정을 이행 | 10.a.1 관세가 없는 최빈국/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적용되는 관세선 비율 | - | - |
| 10.b FDI를 포함한 ODA 및 자원이 가장 필요한 국가, 특히 최빈국, 아프리카 국가, 군소도서 개발국 및 내륙개도국에 국가 계획과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장려 | 10.b.1 개발을 위한 자원 투입 총액(예: 공적 개발원조, 해외직접 투자 및 기타 투입) | - | - |
| 10.c 이주자 송금 수수료를 3% 미만으로 낮추고 5%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송금 경로를 제거 | 10.c.1 송금된 금액 대비 송금 비용 | - | - |

출처: 통계개발원, 『한국 SDG 이행보고서 2021』, p. 96; “DPRK VNR 2021,” p. 54, p. 61; 북민협 번역, “북한 VNR 보고서 2021,” p. 53, p. 59.

표 III-49 북한의 SDG 10 세부목표와 소관기관

| 세부목표 | 소관기관 |
|--|---------------|
| 10.2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포용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촉진함 | 모든 총위 이행기관 |

출처: “DPRK VNR 2021,” p. 54; 북민협 번역, “북한 VNR 보고서 2021,” p. 53.

(나) 북한의 SDG 10 우선순위와 계획

〈표 III-50〉은 SDG 10 관련 북한의 우선순위와 계획을 나타낸다. VNR 보고서에서 북한은 모든 인민에게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포용에 대한 권리를 전적으로 제공하며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장애자보호법」, 「여성권리보장법」, 「아동권리보장법」 등을 채택하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의 국제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사회 내의 모든 불평등 요소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249/} 나아가 북한은 국가의 정치 시스템을 통합하고 농촌 지원 강화 등을 통한 도농격차를 감소시키는 것을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계획의 우선순위로 제시하였다.^{250/}

표 III-50 북한의 SDG 10 이행 우선순위와 계획

| 우선순위 | 계획 |
|---------------|---|
| 국가의 정치 시스템 통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급 정부기관은 국가경영과 사회정치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정치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 |
| 도농격차 감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는 농촌 지원을 강화하고 도시의 공장과 기업소는 농촌 협동 농장과 작업반을 지원해야 함 • 에너지 공급 보장, 환경·자재·연료 공급의 개선, 농업생산 증대 보장을 통해 농촌 인구의 생활 기준과 농촌 경제의 물질적, 기술적 기초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실효성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 |

출처: “DPRK VNR 2021,” p. 35; 북민협 번역, “북한 VNR 보고서 2021,” p. 35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249/}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35.

^{250/} *Ibid.*

(다) 북한의 SDG 10 지표 현황

〈표 III-5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은 SDG 10 이행성과의 현황과 추세를 평가할 수 있는 공식적인 지표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 〈표 III-52〉는 북한 VNR 보고서에 나타난 성과지표 및 성과 도출값을 토대로 북한의 SDG 10 지표 현황을 정리한 것인데, 북한은 유엔 SDGs의 10.2.1 지표에 대하여 장애인, 아동,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관련 법안이 채택되고 국제협약에 가입된 일자만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SDG 10 이행성과는 정보의 부재로 인해 아시아의 다른 체제전환국들과의 비교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251/}

표 III-51 북한의 SDG 10 지표 현황과 추세

| 지표 | 수치 | 연도 | 현황 | 추세 |
|------|----|----|-------|-------|
| 지니계수 | - | - | 정보 부재 | 정보 부재 |
| 팔마비율 | - | - | 정보 부재 | 정보 부재 |

출처: Jeffrey D. Sachs et al., *From Crisis to Sustainable Development: the SDGs as Roadmap to 2030 and Beyond*,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2, p. 263을 참고로 저자 재구성.

표 III-52 북한의 VNR에서 제시된 SDG 10 지표 현황

| 지표 | 단위 | 2015 | 2018 | 2020 |
|----------------------------|----|-------------|------|------|
| 10.2.1 관련 국가법 채택, 국제 협약 가입 | | | - | - |
| 장애자보호법 | | 2003.6.18. | | |
| 아동권리보장법 | | 2010.12.22. | | |
| 녀성권리보장법 | | 2010.12.22. | | |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 | 2016.11.23. | | |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 1990.9.21. | | |
|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 | 2001.2.27. | | |

출처: “DPRK VNR 2021,” p. 61; 북민협 번역, “북한 VNR 보고서 2021,” p. 59.

251/ 권을 외,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성과와 남북협력과제』, p. 18.

(3) 목표 및 지표 평가

(가) 목표, 세부목표, 지표 적용에 대한 평가

유엔 SDG 10의 ‘불평등 완화(국가 내/국가 간 불평등을 완화한다)’는 북한 SDGs에서 ‘국가 주체로서 인민 대중의 권리 및 역할 보장’이라는 10번 목표로 수용되었다. 북한의 SDG 10에는 1개의 세부목표와 1개의 지표만이 존재하며 유엔 SDG 10의 대다수의 세부목표와 지표가 삭제되었다. 북한이 유일하게 수용한 세부목표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포용성 확대와 관련된 10.2 뿐이다.

〈표 III-5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유엔 SDG 10의 지표는 총 14개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북한 SDG 10에서는 이 가운데 10.2.1만을 채택하여 북한의 실정에 맞게 변용하고 있다. 북한이 새롭게 추가한 지표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III-53 북한 SDG 10 수용 현황

| 유엔 세부목표 및 지표 | 북한 | | | |
|---|----|----|-------|--|
| | 수용 | 변용 | 삭제 추가 | 비고 |
| 10.1 전체 인구의 소득 수준 하위 40%의 소득 증가율을 국가 전체평균 이상까지 점진적으로 달성하고 유지하도록 한다. | | | ○ | |
| 10.1.1 하위 40% 인구 및 총인구 중 가구지출 또는 1인당 소득의 성장률 | | | ○ | |
| 10.2 연령, 성별, 장애여부, 인종, 민족, 출신, 종교, 경제 및 기타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포용을 증진하고 확대한다. | | | | |
| 10.2.1 중위소득 50% 이하의 인구 비율 (연령, 성 및 장애인별) | | ○ | | [변용] 관련 국가법 채택, 국제 협약 가입, 장애자보호법, 아동권리보장법, 여성권리보장법,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
| 10.3 차별적인 법규, 정책, 관행을 철폐하고, 이와 관련된 적절한 법, 정책, 조치 중진 노력을 통하여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결과의 불평등을 감소한다. | | | ○ | |

| 유엔 세부목표 및 지표 | 북한 | | | | |
|--|----|----|----|----|----|
| | 수용 | 변용 | 삭제 | 추가 | 비고 |
| 10.3.1 국제인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을 기준으로 최근 12개월 내 개인적으로 차별을 당했거나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낀 인구의 비율 | | | ○ | | |
| 10.4 재정 정책, 임금 정책, 사회보장정책을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한다. | | | ○ | | |
| 10.4.1 임금 및 사회보장이전으로 구성된 GDP 중 노동이 차지하는 비율 | | | ○ | | |
| 10.4.2 재정 정책의 재분배 영향력 | | | ○ | | |
| 10.5 국제 금융시장 및 기관의 규제와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규제 이행을 강화한다. | | | ○ | | |
| 10.5.1 재정 건전성 지표 | | | ○ | | |
| 10.6 국제 경제 및 금융관련 국제기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효과성, 신뢰성, 책무성 및 적법성이 보장되는 제도의 운용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대의권과 발언권 확보를 보장한다. | | | ○ | | |
| 10.6.1 국제기구의 회원국이거나 투표권이 있는 개발도상국의 비율 | | | ○ | | |
| 10.7 계획적이고 잘 관리된 이주정책의 이행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안전하며 정규적이고 책임 있는 인구 이주와 이동을 지원한다. | | | ○ | | |
| 10.7.1 이주국가에서 얻은 연간소득 대비 이주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발생한 비용의 비율 | | | ○ | | |
| 10.7.2 잘 관리되는 이주정책을 이행하고 있는 국가의 수 | | | ○ | | |
| 10.7.3 이주국으로 이동하는 중 사망하거나 사라진 사람의 숫자 | | | ○ | | |
| 10.7.4 이주국별 난민인구의 비율 | | | ○ | | |
| 10.a WTO 협정에 따라,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에 대한 특별우대 조치 규정을 이행한다. | | | ○ | | |
| 10.a.1 관세가 없는 최빈국/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적용되는 관세선 비율 | | | ○ | | |
| 10.b FDI를 포함한 ODA 및 재원이 가장 필요한 국가, 특히 최빈국, 아프리카 국가, 군소도서개발국 및 내륙개도국에 국가 계획과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 | | ○ | | |
| 10.b.1 개발을 위한 자원투입 총액(예: 공적개발원조, 해외직접투자 및 기타 투입) | | | ○ | | |

| 유엔 | 북한 | | | | |
|---|----|----|----|----|----|
| 세부목표 및 지표 | 수용 | 변용 | 삭제 | 추가 | 비고 |
| 10.c 이주자 송금 수수료를 3% 미만으로 낮추고 5%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송금 경로를 제거한다. | | | ○ | | |
| 10.c.1 송금된 금액 대비 송금 비용 | | | ○ | | |

출처: 통계청 통계개발원,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1』 p. 96; “DPRK VNR 2021,” p. 61; 북민협 번역, “북한 VNR 보고서 2021,” p. 59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북한의 SDG 10에는 1개의 세부목표와 1개의 지표만이 존재하고 이행성과를 평가할 구체적인 성과 도출값도 제공되고 있지 않다. 유엔 자문기관인 SDSN(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이 발표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에서도 지표에 대한 통계 부족으로 인해 북한의 SDG 10의 달성 정도를 평가할 수 없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252/} 북한이 이처럼 유엔 SDG 10의 국가 내 불평등 완화와 관련된 세부목표들(10.1, 10.2, 10.3, 10.4)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는 같은 계급에 속한 개인들 간에 존재하는 불평등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계급 간 불평등을 타파해야 할 사회 제일의 모순으로 간주하는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제사회의 경제나 정치 무대에서의 통합이나 자유로운 이주를 전제하고 있는 세부목표들(10.5, 10.6, 10.7, 10.a, 10.b, 10.c)의 경우 북한의 정치적·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VNR 보고서에서 농촌 지원 강화 등을 통한 도농격차를 감소시키는 것을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계획의 우선순위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SDG 10의 글로벌 지표들 중 일부에 동의하고 데이터를 산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252/} 위의 책, p. 17.

(나) 지표의 신뢰성과 지속성에 대한 평가

유엔 SDG 10의 세부목표들 중 북한이 수용한 것은 10.2뿐이며, 이에 대해서도 목표 달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지표를 채택하지 않고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포용성과 관련된 국가법이 채택되고 국제협약이 가입된 일자만을 명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이 제공한 데이터에 기초하여 10.2.1 지표의 대표성이나 신뢰성을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는 북한이 채택하고 가입한 법령과 국제협약이 실제 현실을 반영하기보다 단순한 법적·제도적 구조에 불과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한편 지표의 지속성과 관련하여, 유엔 SDG 10의 세부목표와 지표의 많은 부분이 북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에 의존하여 구성될 수밖에 없으며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 및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향후 북한이 유엔 SDG 10의 세부목표와 지표를 수용하고 관련 데이터를 생산해내는 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국제사회는 북한의 특수 상황을 감안한 대안지표를 마련하여 북한의 SDG 10의 이행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특히 국가 간 불평등 완화라는 글로벌 이행보다는 한국의 상황에 적합한 내용들로 구성된 K-SDG 10의 지표들을 참고하여 측정 가능성과 북한의 협력 가능성을 일차적인 기준으로 대안지표를 검토해야 한다.

(다) 지표 미공개·부재에 대한 대응 및 보완 방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 10.2.1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포용성과 관련 채택된 국가법과 가입된 국제협약을 제외하면 다른 유엔 SDG 10의 세부목표와 지표를 모두 수용하지 않았고 데이터도 제공

하지 않는 상태이다. 국가 간 불평등 완화와 관련된 지표들(10.5.1, 10.6.1, 10.7.1, 10.7.2, 10.7.3, 10.7.4, 10.a.1, 10.b.1)의 경우 국제사회의 경제나 정치 무대에서의 통합이나 자유로운 이주를 어느 정도 전제한 지표들이기 때문에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들을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며 대안지표를 제시하는 데에도 다소 무리가 있다.

한편 시장화의 진전에 따라 점차 심화되고 있는 북한 사회 내 불평등의 현실에 비추어 국가 내 불평등 완화와 관련된 유엔 SDG 10의 지표들(10.1.1, 10.2.1, 10.2.2, 10.3.1, 10.4.1, 10.4.2)을 적극 반영해야 할 필요가 절실해 보이지만, 계급 내 불평등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들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가능성도 낮다. 그러나 VNR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농촌 지원 강화 등을 통한 도농 격차를 감소시키는 것을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계획의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데, 이는 농촌의 낙후성을 극복하고자 중앙 집권적인 농업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 생산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북한 당국의 그간의 정책 기조와 일치되는 것이다.^{253/} 따라서 10.2.1 지표를 도농 간 소득격차로 대체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만하다. 또한 10.3.1의 경우에도 국제인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 금지에 관한 북한 내부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대안지표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253/ 장경섭, “중국 농촌개혁의 북한에 대한 함의,” 『한국사회과학』, 제22권 3·4호 (2000), p. 40.

표 III-54 북한의 SDG 10 지표 미공개·부재 보완 방향

| 원인 | 지표 | | 보완 방향 | |
|------------|--|--|----------|--------------------------------|
| | 유엔 SDG | 북한 SDG | 대안 지표 | 도농 간 소득격차 |
| 의도적 변용 | 10.2.1 중위소득 50% 이하의 인구 비율(연령, 성별 및 장애인별) | 10.2.1 관련 국가법 채택, 국제 협약 가입, 장애인보호법, 아동권리보장법, 여성권리보장법,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 | |
| 의도적 미공개 | 10.3.1 국제인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을 기준으로 최근 12개월 내 개인적으로 차별을 당했거나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낀 인구의 비율 | | | 국제인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 금지 관련 법률 제정 |

3. 환경과 생태계 분야

가. SDG 6 깨끗한 물과 위생

(1) 목표 및 지표 개관

(가) SDG 6 목표와 지표

SDG 6은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이다. 물과 위생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안전한 식수의 공급이나 청결 차원을 넘는 중요한 문제이다. SDG 보고서는 깨끗한 물과 위생

시설의 제공이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퇴치에 일차적 예방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254/} 즉, 물과 위생은 보건과 질병 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물의 공급은 식량, 에너지, 산업 등 경제활동과 육상 및 해양생태계 문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SDGs가 시행된 이후 안전한 식수와 위생 분야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나 반대로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공급은 위기의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255/}

SDG 6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에 대한 인류의 보편적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식수의 공급을 비롯한 물부족 현상의 극복, 공중 및 개인 위생의 보장, 하수처리와 생태계 보호 및 복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 밖에도 물과 위생 환경 개선을 위한 ODA 등 국제사회의 협력과 더불어 지자체 등 지역사회의 노력을 함께 포함함으로써 SDG 6의 달성을 위한 총체적 접근을 강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SDG 6은 다음 <표 III-55>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8개의 세부목표와 11개의 지표를 가지고 있다. 이 세부목표 및 지표들은 기본적인 식수(6.1)와 위생시설(6.2)의 제공뿐만 아니라 하수처리(6.3), 지속가능한 담수 및 취수 공급(6.4), 초국가적 수자원 관리 및 협력(6.5), 물 관련 생태계(6.6) 및 이를 위한 국제협력(6.a) 및 지역사회의 역할(6.b)을 포함하고 있다.

^{254/} Jeffrey D. Sachs *et 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1: The Decade of Ac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p. 38.

^{255/} *Ibid.*, pp. 38~39.

표 III-55 SDG 6 세부목표와 지표

| 세부목표 | 지표 |
|--|--|
| 6.1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적당한 가격의 식수에 대한 보편적 접근 달성 | 6.1.1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 비율 |
| 6.2 2030년까지 여성과 소녀 및 취약계층에 특별히 주목하면서, 모두를 위한 충분하고 공평한 공중위생과 개인청결에 대한 접근 달성, 노상 배변 금지 | 6.2.1 (a)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서비스 시설과 (b) 비누와 물이 있는 손씻기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
| 6.3 2030년까지 오염 감소, 유해화학물질 투기 근절 및 배출 최소화화를 통해 미처리된 하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재활용 및 안전한 재사용을 전 세계적으로 대폭 확대 | 6.3.1 안전하게 처리되는 가정용 및 산업용 하·폐수 비율 6.3.2 주변 수질이 양호한 수계의 비율 |
| 6.4 2030년까지 모든 부문에서 물 사용 효율을 높이고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인구수를 상당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담수의 취수와 공급 보장 | 6.4.1 시간에 따른 물 이용 효율성 변화 6.4.2 물 스트레스 수준: 이용 가능한 담수 대비 취수 비율 |
| 6.5 2030년까지 국경 간 협력을 포함해 통합된 물 자원관리 이행 | 6.5.1 통합수자원관리 이행 정도 6.5.2 물 협력을 위한 운영협정을 맺고 있는 접경 지역 비율 |
| 6.6 2020년까지 산, 산림, 습지, 강, 대수층 및 호수 등 물 관련 생태계 보호 및 복원 | 6.6.1 시간 경과에 따른 물 관련 생태계 규모의 변화 |
| 6.a 물·위생 활동 및 프로그램과 관련해 2030년까지 개도국에 대한 국제협력 및 역량배양 지원 확대 | 6.a.1 정부의 지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물과 위생 분야 관련 ODA 금액 |
| 6.b 물·위생 관리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 참여 지원 및 강화 | 6.b.1 물 및 위생관리에 대한 지방 커뮤니티의 참여를 위한 확립된 행정적 정책과 절차를 갖추고 있는 지방행정단위의 비율 |

출처: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6," <<https://sdgs.un.org/goals/goal6>> (Accessed June 21, 2022); 통계개발원, 『한국 SDG 이행보고서 2021』, p. 94.

다음 <표 III-5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아시아 지역에서 SDG 6과 관련된 지표의 수집가능성은 크게 향상되었다. 2017년 기준으로 아시아 지역의 지표 수집가능성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무엇보다 수집가능성이 '충분'에 해당하는 지표는 전무했으며, 전체 11개의 지표 중 '불충분'조차도 3개에 그치고, 대부분의 지표들이 '자료 없음'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SDG의 본격적인 추진과 더불어 중앙 및 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안전한 식수 공급과 관련된 큰 진전이 있었다.^{256/} 이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SDG 6의 지표 자료 접근성 역시 크게 향상되었다. 2021년 기준으로 지표 데이터의 접근성은 8개의 지표가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록 3개의 지표는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분류되고 있으나, ‘자료 없음’에 해당하는 지표가 하나도 없다는 것 자체로도 큰 진전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을 기준으로 대부분의 지표 수집가능성이 ‘충분’으로 분류되고 있다. 다만, 안전하게 처리되는 하·폐수 비율(6.3.1)이 불충분하다고 평가되고 있고, 물과 위생 분야 관련 ODA 금액(6.a.1)과 지방 커뮤니티의 참여를 위한 정책과 절차를 갖추고 있는 지방행정단위 비율(6.b.1)은 ‘자료 없음’으로 분류되었다.

한편, 북한의 경우 절반이 넘는 지표들의 수집 가능성이 ‘충분’으로 분류되는 가운데, 지방 커뮤니티의 참여를 위한 정책과 절차를 갖추고 있는 지방행정단위 비율(6.b.1)이 ‘불충분’으로 분류되었다. 그 외에 안전하게 처리되는 하·폐수 비율(6.3.1), 주변 수질이 양호한 수계 비율(6.3.2) 및 물 협력을 위한 운영협정을 맺고 있는 접경 지역 비율(6.5.2)은 ‘자료 없음’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III-56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SDG 6 지표 수집 가능성

| 지표 | 티어 그룹 | 아시아태평양 2017 | | | 아시아태평양 2021 | | | 한국 2021 | | | 북한 2021 | | | |
|--|----------|----------------|---------|----------|----------------|---------|----------|------------|---------|----------|------------|---------|----------|--|
| | | 충분 | 불 충분 | 자료 없음 | 충분 | 불 충분 | 자료 없음 | 충분 | 불 충분 | 자료 없음 | 충분 | 불 충분 | 자료 없음 | |
| 6.1.1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 비율 | I | | ○ | | ○ | | | | ○ | | | ○ | | |
| 6.2.1 (a)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서비스 시설과 (b) 비누와 물이 있는 손씻기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 II | | ○ | | ○ | | | | ○ | | | ○ | | |

^{256/} Ibid., p. 38.

| 지표 | 티어 그룹 | 아시아태평양 2017 | | | 아시아태평양 2021 | | | 한국 2021 | | | 북한 2021 | | |
|--|-------|-------------|-----|-------|-------------|-----|-------|---------|-----|-------|---------|-----|-------|
| | | 충분 | 불충분 | 자료 없음 | 충분 | 불충분 | 자료 없음 | 충분 | 불충분 | 자료 없음 | 충분 | 불충분 | 자료 없음 |
| 6.3.1 안전하게 처리되는 가정용 및 산업용 하·폐수 비율 | II | | | ○ | | ○ | | | ○ | | | | ○ |
| 6.3.2 주변 수질이 양호한 수계의 비율 | II | | | ○ | | ○ | | ○ | | | | | ○ |
| 6.4.1 시간에 따른 물 이용 효율성 변화 | I | | | ○ | ○ | | | ○ | | | ○ | | |
| 6.4.2 물 스트레스 수준: 이용 가능한 담수 대비 취수 비율 | I | | ○ | | ○ | | | ○ | | | ○ | | |
| 6.5.1 통합수자원관리 이행 정도 | I | | | ○ | ○ | | | ○ | | | ○ | | |
| 6.5.2 물 협력을 위한 운영협정을 맺고 있는 접경 지역 비율 | I | | | ○ | | ○ | | ○ | | | | | ○ |
| 6.6.1 시간 경과에 따른 물 관련 생태계 규모의 변화 | I | | | ○ | ○ | | | ○ | | | ○ | | |
| 6.a.1 정부의 지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물과 위생 분야 관련 ODA 금액 | I | ○ | | | ○ | | | | | ○ | ○ | | |
| 6.b.1 물 및 위생관리에 대한 지방 커뮤니티의 참여를 위한 확립된 행정적 정책과 절차를 갖추고 있는 지방행정단위의 비율 | I | | ○ | | ○ | | | | | ○ | | | ○ |

출처: UNESCAP, *Statistical Yearbook for Asia and the Pacific 2017: Measuring SDG progress in Asia and the Pacific: Is There Enough Data?* pp. 30~34; ESCAP SDG Gateway Asia Pacific, "Data Analysis," (Accessed June 21, 2022)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나) SDG 6 지표 관리기구와 수집 현황

다음 <표 III-57>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SDG 6의 지표들은 다양한 국제기구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우선 식수 및 위생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지표들(6.1.1, 6.2.1)은 WHO와 UNICEF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하수처리 및 수질 관리(6.3.1, 6.3.2)는 WHO, UN-Habitat, UNSD가 관리하며, 효율적인 수자원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지표(6.4.1, 6.4.2)는 FAO(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유엔식량농업기구)가 관리한다. 또한 국가간 수자원 관리 협력에 관한 지표들(6.5.1, 6.5.2)은 UNEP, UNESCO-IHP(UNESCO International Hydrological Program,

유네스코 정부 간 수문프로그램), UNECE(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유엔유럽경제위원회)에 의해 관리되며, 물 관련 생태계 보호 및 복원 지표(6.6.1)는 UNEP와 람사르 협약(Ramsar Convention)에 의해 관리된다. 한편 WHO와 OECD는 공동으로 물과 위생 분야 ODA(6.a.1) 및 지방커뮤니티 참여(6.b.1)에 관한 지표들을 관리하고 있다. SDG 6의 대부분 지표는 데이터 및 측정 방법의 부정확성 등으로 인해 최초에는 티어 II 또는 III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현재는 대부분 지표가 티어 I 또는 II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끝으로 북한은 SDG 6의 모든 지표를 보유하고 있어, 이 분야에 관한 관심과 국제적 기준 달성을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표 III-57 SDG 6 지표 현황 및 관리기구와 북한의 지표 보유 현황

| 세부목표 | 지표 | 변경 티어 | 가능한 관리기관 | 파트너 기관 | 북한 보유 여부 |
|--|---|----------|-----------------------|----------------------------------|----------------|
| 6.1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적당한 가격의 식수에 대한 보편적 접근 달성 | 6.1.1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 비율 | I | WHO, UNICEF | UNEP, UN-Habitat | ○ |
| 6.2 2030년까지 여성과 소녀 및 취약계층에 특별히 주목하면서, 모두를 위한 충분하고 공평한 공중위생과 개인청결에 대한 접근 달성. 노상배변 금지 | 6.2.1 (a)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 서비스 시설과 (b) 비누와 물이 있는 손씻기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 II | WHO, UNICEF | UNEP | ○ |
| 6.3 2030년까지 오염 감소, 유해화학물질 투기 근절 및 배출 최소화를 통해 미처리된 하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재활용 및 안전한 재사용을 전 세계적으로 대폭 확대 | 6.3.1 안전하게 처리되는 가정용 및 산업용 하·폐수 비율 | II | WHO, UN-Habitat, UNSD | UNEP, OECD, Eurostat | ○ |
| | 6.3.2 주변 수질이 양호한 수계의 비율 | II | UNEP | UN-Water | ○ |
| 6.4 2030년까지 모든 부문에서 물 사용 효율을 높이고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인구수를 상당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담수의 취수와 공급 보장 | 6.4.1 시간에 따른 물 이용 효율성 변화 | I | FAO | UNEP, IUCN, UNSD, OECD, Eurostat | ○ |
| | 6.4.2 물 스트레스 수준: 이용 가능한 담수 대비 취수 비율 | I | FAO | UNEP, IUCN, UNSD, OECD, Eurostat | ○ |

| 세부목표 | 지표 | 변경 티어 | 가능한 관리기관 | 파트너 기관 | 북한 보유 여부 |
|---|--|----------|-------------------|------------------------|----------------|
| 6.5 2030년까지 국경 간 협력을 포함해 통합된 물 자원관리 이행 | 6.5.1 통합수자원관리 이행 정도 | I | UNEP | UN-Water, IUCN, Ramsar | ○ |
| | 6.5.2 물 협력을 위한 운영협정을 맺고 있는 접경 지역 비율 | I | UNESCO-IHP, UNECE | | ○ |
| 6.6 2020년까지 산, 산림, 습지, 강, 대수층 및 호수 등 물 관련 생태계 보호 및 복원 | 6.6.1 시간 경과에 따른 물 관련 생태계 규모의 변화 | I | UNEP, Ramsar | UN-Water, IUCN | ○ |
| 6.a 물·위생 활동 및 프로그램과 관련해 2030년까지 개도국에 대한 국제협력 및 역량배양 지원 확대 | 6.a.1 정부의 지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물과 위생분야 관련 ODA 금액 | I | WHO, OECD | UNEP, UN-Water | ○ |
| 6.b 물·위생 관리 개선을 위해 지역 사회 참여 지원 및 강화 | 6.b.1 물 및 위생관리에 대한 지방 커뮤니티의 참여를 위한 확립된 행정적 정책과 절차를 갖추고 있는 지방행정단위의 비율 | I | WHO, OECD | UNEP | ○ |

출처: IAEG-SDGs, "Tier Classification for Global SDG Indicators," (Accessed May 28, 2022). 통계개발원, 『한국 SDG 이행보고서 2021』, p. 94; "DPRK VNR 2021," p. 53, pp. 60~61; 북민협 번역, "북한 VNR 보고서 2021," p. 52, pp. 58~59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다) K-SDG 6 세부목표와 지표

우리나라의 K-SDG 6은 세부목표 및 지표에 한국의 실정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다수의 지표를 변용하거나 삭제하였다. 한국은 이미 개인위생에 대해 선진국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반영하여, SDG의 지표 6.2.1과 같은 기본적인 개인위생에 대한 내용을 대부분 삭제하고 이를 상·하수도 관리 또는 식수 관련 지표들로 교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K-SDG는 세부목표 6.2를 하수도 서비스 관련 내용으로 변용한 뒤,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6.2.1) 및 하수도 중점관리(6.2.2)로 대체하였다. 또한 세부목표 6.4의 지표들은 한국의 상황에 더 적절한 지표들인 상수도 누수율(6.4.1), 지방상수도 자급률(6.4.2)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률(6.4.3)로 변용되었다.

표 III-58 K-SDG 6 목표, 세부목표 및 지표

| K-SDG 6 건강하고 안전한 물 관리 | |
|---|---------------------------------|
| 세부목표 | 지표 |
| 6.1. 모두를 위한 안전한 식수를 공평하게 공급한다. | 6.1.1. 수돗물 만족도 |
| | 6.1.2.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률 |
| 6.2. 모두에게 편리한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 6.2.1.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 |
| | 6.2.2. 하수도 정비중점관리지역 정비대책수립 개소수 |
| 6.3. 수질오염 물질의 수계 유입을 최소화하여 수질개선을 담보한다. | 6.3.1. 유역별 물순환율 |
| | 6.3.2. 수질목표기준 달성도(※ TOC, TP 기준) |
| | 6.3.3. 신규 오염물질 관리 항목 수 |
| 6.4. 물부족 걱정이 없도록 물공급을 안정화하고, 누수 없는 수돗물 공급으로 수자원의 효율화를 추구한다. | 6.4.1. 상수도 누수율(%) |
| | 6.4.2. 지방상수도 지급률 |
| | 6.4.3.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
| 6.5.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다양성을 확대한다. | 6.5.1. 서식 및 수변환경 평가지수 |
| | 6.5.2. 어류건강성 평가지수 |
| | 6.5.3. 습지와 습지보호지역 면적 증감 |
| 6.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지역공동체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한다. | 6.6.1. 물 관련 행정기관위원회 운영실적 신설 |
| | 6.6.2. 수질보전활동지원 예산반영 비율 |

출처: 관계부처 합동, 『제4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2021~2040 제1부』, p. 51.

(2) 북한 현황

(가) 북한의 SDG 6 목표와 세부목표 및 지표

북한은 SDG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보장’을 NDG 6 ‘모든 인민을 위한 물과 위생시설의 지속가능한 사용 및 관리를 보장’이라는 목표로 수용하고 있다. 북한은 SDG 6의 세부목표를 변용이나 수정 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다만 북한은 자체적인 NDG 6에서 중력식 급수공급 시스템(6.1.2)이라는 지표를 추가했다는 점이 유일한 차이이다.

표 III-59 유엔과 북한의 SDG 6 비교

| SDG 목표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보장 | | 북한 NDG 목표 6. 모든 인민을 위한 물과 위생시설의 지속가능한 사용 및 관리를 보장한다 | |
|--|---|---|---|
| 유엔 SDGs(8개 세부목표, 11개 지표) | | 북한 SDGs(8개 세부목표, 12개 지표) | |
| 세부목표 | 지표 | 세부목표 | 지표 |
| 6.1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적당한 가격의 식수에 대한 보편적 접근 달성 | 6.1.1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 비율 | 6.1 2030년까지 모든 인민을 위한 안전한 식수에의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달성한다. | 6.1.1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서비스 이용 인구 비율 6.1.2 중력식 급수공급 시스템에 접근성을 가진 가구 비율 |
| 6.2 2030년까지 여성과 소녀 및 취약계층에 특별히 주목하면서 모두를 위한 충분하고 공평한 공중위생과 개인청결에 대한 접근 달성, 노상배변 금지 | 6.2.1(a)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서비스 시설과 (b) 비누와 물이 있는 손씻기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 6.2 2030년까지 모든 인민을 위한 적절하고 공평한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을 달성한다. | 6.2.1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시설 이용 인구 비율 |
| 6.3 2030년까지 오염 감소, 유해화학물질 투기 근절 및 배출 최소화를 통해 미처리된 하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재활용 및 안전한 재사용을 전세계적으로 대폭 확대 | 6.3.1 안전하게 처리되는 가정용 및 산업용 하·폐수 비율 | 6.3 2030년까지 오염 감소, 폐기물 투기 근절,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질 방류 최소화, 미처리 폐수 비율의 절반 감축, 재활용 및 안전한 재사용의 실질적 확대를 통해 수질을 개선한다. | 6.3.1 안전하게 처리되는 폐수 비율 |
| | 6.3.2 주변 수질이 양호한 수계의 비율 | | 6.3.2 양질의 주변 수원을 갖춘 수역의 비율 |
| 6.4 2030년까지 모든 부문에서 물 사용 효율을 높이고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인구수를 상당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담수의 취수와 공급 보장 | 6.4.1 시간에 따른 물 이용 효율성 변화 | 6.4 2030년까지 모든 부문에서 용수 효율 증대와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한 담수 추출 및 공급 보장으로,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인민의 수를 대폭 감소시킨다. | 6.4.1 시간 경과에 따른 물 사용 효율성의 변화 비율 |
| | 6.4.2 물 스트레스 수준: 이용 가능한 담수 대비 취수 비율 | | 6.4.2 물 스트레스 수준: 가용한 담수지원비율로서의 담수 취수 |
| 6.5 2030년까지 국경 간 협력을 포함해 통합된 물 자원관리 이행 | 6.5.1 통합수자원관리 이행 정도 | 6.5 2030년까지 적절한 초국경 협력을 포함하여, 모든 수준에서 통합수자원관리를 이행한다. | 6.5.1 통합수자원관리 이행 정도 |
| | 6.5.2 협력을 위한 운영협정을 맺고 있는 접경 지역 비율 | | 6.5.2 물 협력을 위한 초국경 유역비율 |
| 6.6 2020년까지 산, 산림, 습지 강, 대수층 및 호수 등 물 관련 생태계 보호 및 복원 | 6.6.1 시간 경과에 따른 물 관련 생태계 규모의 변화 | 6.6 2020년까지 산, 습지, 강, 지하수층 및 호수를 포함, 물과 관련된 생태계를 보호·복원한다. | 6.6.1 생태계가 복원된 강(km) |
| 6a 물·위생 활동 및 프로그램과 관련해 2030년까지 개도국에 대한 국제협력 및 역량개발 지원 확대 | 6.a.1 정부의 지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물과 위생 분야 관련 ODA 금액 | 6.a 2030년까지 물과 위생(WASH)에 관한 국제협력력을 확대시킨다. | 6.a.1 물과 위생시설관련 ODA(공적개발원조) 총액 |

| SDG 목표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보장 | | 북한 NDG 목표 6. 모든 인민을 위한 물과 위생시설의 지속가능한 사용 및 관리를 보장한다 | |
|---|--|---|-----------------------------------|
| 유엔 SDGs(8개 세부목표, 11개 지표) | | 북한 SDGs(8개 세부목표, 12개 지표) | |
| 세부목표 | 지표 | 세부목표 | 지표 |
| 6.b 물·위생 관리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 참여 지원 및 강화 | 6.b.1 물 및 위생관리에 대한 지방 커뮤니티의 참여를 위한 확립된 행정적 정책과 절차를 갖추고 있는 지방행정단위의 비율 | 6.b 물과 위생관리의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의 참여를 강화한다. | 6.b.1 물과 위생시설 관리에 참여하는 지방행정단위의 비율 |

출처: 통계개발원, 『한국 SDG 이행보고서 2021』, p. 94; “DPRK VNR 2021,” p. 53, pp. 60~61; 북민협 번역, “북한 VNR 보고서 2021,” p. 52, pp. 58~59.

(나) 북한의 SDG 6 우선순위와 계획

북한은 VNR 보고서를 통해 자체적인 NDG 6의 우선순위와 계획들을 밝히고 있다. 먼저 북한은 식수와 위생과 관련된 적극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성과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257/} 이를 위해 북한은 우선 중력식 급수 시스템(gravity fed water supply system: GFS)의 보급을 통한 식수 공급을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다. 특히 도농 간의 격차를 지적하는 것은 농촌을 비롯한 지방의 낙후된 식수공급 시설의 개선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 외에 북한은 수질개선, 효율적 물사용, 주변국들과의 통하부자원관리 등을 우선순위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UNICEF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중력식 급수 시스템 추가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가정 및 산업용 폐수의 100% 처리를 주요 계획으로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국가경제를 절수형으로 전환함으로써 수자원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기후변화를 감안한 수자원 관리와 재난위험대응(Disaster Risk Management: DRM)을 주요 계획에 포함시켰다.

^{257/}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25.

(다) 북한의 SDG 6 지표 현황

북한의 SDG 6 지표별 달성 현황은 다소 부진하다고 평가된다. 아래 <표 III-60>은 SDG 6 지표의 대표적 달성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6.1.1(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 비율)의 경우 94.5%로 대체로 양호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6.2.1(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서비스 시설 및 비누와 물이 있는 손씻기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은 83.16%로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위험하며, 6.3.1(안전하게 처리되는 가정용 및 산업용 하·폐수 비율)은 수치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6.4.2(물 스트레스 수준)는 26.5로 현상 유지가 되고 있으나, 가장 최근에 제공된 수치가 2015년 기준으로 현재의 추세를 평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표 III-60 북한의 SDG 6 지표별 달성 현황

| 지표명 | 수치 | 연도 | 현황 | 추이 |
|---|-------|------|----|----|
| 6.1.1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 비율 | 94.5 | 2017 | 유지 | → |
| 6.2.1 (a)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서비스 시설과 (b) 비누와 물이 있는 손씻기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 83.16 | 2017 | 위험 | ↗ |
| 6.3.1 안전하게 처리되는 가정용 및 산업용 하·폐수 비율 | 0 | 2018 | 부진 | - |
| 6.4.2 물 스트레스 수준: 이용 가능한 담수 대비 취수 비율 | 26.5 | 2015 | 유지 | - |

출처: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Accessed May 28, 2022).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은 자체적인 NDG에 SDG 6의 11개 모든 지표를 반영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NDG에 SDG 6의 모든 지표 외에 6.1.2(중력식 급수공급 시스템에 접근성을 가진 가구 비율)를 추가하여 총 12개의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제출한 VNR에 의하면 실제로 해당 지표에 대한 수치가 제시된 것은 6.1.1(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 서비스 이용 인구 비율)과 6.2.1(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시설 이용 인구 비율)에 그치고 있다. 북한 내부적으로 이 지표들을 수집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기술적 한계가 있거나 충분한 거버넌스 역량이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III-61 북한의 VNR에서 제시된 SDG 6 지표 현황

| 지표 | 2015 | 2018 | 2020 |
|--|------|----------------|------|
| 6.1.1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서비스 이용 인구 비율(%) | - | 60.9 (2017) | - |
| 6.1.2 중력식 급수공급 시스템에 접근성을 가진 가구 비율(%) | - | - | - |
| 6.2.1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시설 이용 인구 비율(%) | - | 47.5 (2017) | - |
| 6.3.1 안전하게 처리되는 폐수 비율(%) | - | - | - |
| 6.3.2 양질의 주변 수원을 갖춘 수역의 비율(%) | - | - | - |
| 6.4.1 시간 경과에 따른 물 사용 효율성의 변화 비율 | - | - | - |
| 6.4.2 물 스트레스 수준: 가용한 담수자원 비율로서의 담수 취수(%) | - | - | - |
| 6.5.1 통합수자원관리 이행 정도 | - | - | - |
| 6.5.2 물 협력을 위한 초국경 유역비율 | - | - | - |
| 6.6.1 생태계가 복원된 강(km) | - | - | - |
| 6.a.1 물과 위생시설관련 ODA 총액 | - | - | - |
| 6.b.1 물과 위생시설 관리에 참여하는 지방행정단위의 비율 | - | - | - |

출처: "DPRK VNR 2021," pp. 60~61; 북민협 번역, "북한 VNR 보고서 2021," pp. 58~59.

2021년 제출한 VNR 보고서에서 북한은 SDG 6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목표 달성의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258/} 특히 수질개선과

^{258/} Ibid.

효율적 물 사용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기술 및 자원의 부족과 관계 시설 및 물을 이용하는 각종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문제들을 SDG 6 달성의 문제로 인정하고 있다.^{259/}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국내적으로 중력식 급수 시스템(GFS)의 도입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통합수자원관리(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IWRM) 사업 추진에 대한 성과와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북한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서비스 이용 인구 비율과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시설 이용 인구 비율을 제공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1.1(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서비스 이용 인구 비율)의 경우 도시 지역은 71.3%인 반면 농촌 지역은 44.5%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이런 도농 간 격차는 6.2.1(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시설 이용 인구 비율)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서 도시는 70.8%인 반면 농촌은 11.4%에 그치고 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식수 및 위생시설 제공에서 북한의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 대한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62 안전한 식수/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위생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2017년)

| 지표 | 지역 | 비율 |
|--|-----------|-------|
| 6.1.1. 안전한 식수 사용 인구(Population access to safe drinking water) | 전체 | 60.9% |
| | 도시(Urban) | 71.3% |
| | 농촌(Rural) | 44.5% |
| 6.2.1.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시설 이용 인구(Population access to safely managed sanitation facility) | 전체 | 47.5% |
| | 도시(Urban) | 70.8% |
| | 농촌(Rural) | 11.4% |

출처: “DPRK VNR 2021,” p. 25; 북민협 번역, “북한 VNR 보고서 2021,” p. 25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259/} Ibid., p. 25.

북한은 향후 SDG 6 달성을 위해 UNICEF 등 국제기구들과 협력해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확대하고, 가정 및 산업용 폐수의 100% 처리 달성, 효과적인 물 사용 및 관리, 재난위험에 대한 효과적 대응 기술 도입, 절수형 경제체제 수립을 통한 효과적인 수자원 활용 등을 주요 계획으로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계획의 추진을 위한 국내법적 제도(상수도법, 하수도법, 대동강오염 방지법, 바다오염방지법)를 갖추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상·하수도 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물 관련 재난 대응 기술 및 시설 등은 대규모의 재원과 기술이 요구되는 사업들로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으로 평가된다.

(3) 목표 및 지표 평가

(가) 목표, 세부목표, 지표 적용에 대한 평가

먼저 북한이 SDG 6의 목표와 세부목표를 삭제하거나 변용하지 않고 자체적인 NDG 6에 그대로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지표 수준에서는 약간의 변동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NDG의 세부목표 6.1에는 지표 6.1.2(중력식 급수공급 시스템에 접근성을 가진 가구 비율)가 추가되었다. 반대로 SDG 6.2.1 중 (b)에 해당하는 (비누와 물이 있는 손씻기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은 NDG 6.2.1에서는 삭제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NDG 6.2.1은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시설 이용 인구 비율'만 포함하는 변용된 형태를 갖추고 있다. 마지막으로 SDG 6.6.1(시간 경과에 따른 물 관련 생태계 규모의 변화)은 NDG 6.6.1에서 '생태계가 복원된 강(km)'으로 변용되었다.

표 III-63 북한의 SDG 6 수용 현황

| 유엔 세부목표 및 지표 | 북한 | | | | 비고 |
|--|----|----|----|----|--|
| | 수용 | 변용 | 삭제 | 추가 | |
| 6.1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적당한 가격의 식수에 대한 보편적 접근 달성 | ○ | | | | |
| 6.1.1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 비율 | ○ | | | | |
| | | | | ○ | [추가] 6.1.2. 중력식 급수공급 시스템에 접근성을 가진 가구 비율 |
| 6.2 2030년까지 여성과 소녀 및 취약계층에 특별히 주목하면서, 모두를 위한 충분하고 공평한 공중위생과 개인 청결에 대한 접근 달성. 노상배변 금지 | ○ | | | | |
| 6.2.1 (a)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서비스 시설과 (b) 비누와 물이 있는 손씻기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 | ○ | | | [변용]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시설 이용 인구 비율 |
| 6.3 2030년까지 오염 감소, 유해화학물질 투기 근절 및 배출 최소화를 통해 미처리된 하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재활용 및 안전한 재사용을 전 세계적으로 대폭 확대 | ○ | | | | |
| 6.3.1 안전하게 처리되는 가정용 및 산업용 하·폐수 비율 | ○ | | | | |
| 6.3.2 주변 수질이 양호한 수계의 비율 | ○ | | | | |
| 6.4 2030년까지 모든 부문에서 물 사용 효율을 높이고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인구수를 상당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담수의 취수와 공급 보장 | ○ | | | | |
| 6.4.1 시간에 따른 물 이용 효율성 변화 | ○ | | | | |
| 6.4.2 물 스트레스 수준: 이용 가능한 담수 대비 취수 비율 | ○ | | | | |
| 6.5 2030년까지 국경 간 협력을 포함해 통합된 물 자원관리 이행 | ○ | | | | |
| 6.5.1 통합수자원관리 이행 정도 | ○ | | | | |
| 6.5.2 물 협력을 위한 운영협정을 맺고 있는 접경 지역 비율 | ○ | | | | |
| 6.6 2020년까지 산, 산림, 습지, 강, 대수층 및 호수 등 물 관련 생태계 보호 및 복원 | ○ | | | | |
| 6.6.1 시간 경과에 따른 물 관련 생태계 규모의 변화 | | ○ | | | [변용] 생태계가 복원된 강(km) |
| 6a 물·위생 활동 및 프로그램과 관련해 2030년까지 개도국에 대한 국제협력 및 역량배양 지원 확대 | ○ | | | | |
| 6.a.1 정부의 지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물과 위생 분야 관련 ODA 금액 | ○ | | | | |
| 6.b 물·위생 관리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 참여 지원 및 강화 | ○ | | | | |
| 6.b.1 물 및 위생관리에 대한 지방 커뮤니티의 참여를 위한 확립된 행정적 정책과 절차를 갖추고 있는 지방행정 단위의 비율 | ○ | | | | |

출처: 통계개발원, 『한국 SDG 이행보고서 2021』, p. 94; “DPRK VNR 2021,” p. 53, pp. 60~61; 북민협 번역, “북한 VNR 보고서 2021,” p. 52, pp. 58~59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북한이 SDG 6의 일부 지표를 추가하거나 변용하여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지화를 적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NDG에 지표 6.1.2를 추가하고 6.2.1을 변용한 것은 북한의 실정을 반영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SDG 6.6.1의 물과 관련된 생태계 규모의 변화를 NDG 6.6.1이 생태계가 복원된 강으로 제한한 것은 생태계 복원과 관련된 북한의 기술적 한계와 동시에 정치적 고려를 보여준다. 즉, 북한 내의 산, 산림, 습지, 호수 등 생태계 복원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표에서 강의 생태계 복원만 언급된 것은 한계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일반적으로 북한이 에너지난 등으로 인해 산림자원의 훼손이 심각하고, 이로 인한 홍수, 산사태 등의 재난이 빈번하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북한이 강의 생태계 복원만 언급한 것은 북한 내 물과 관련된 자연환경 훼손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정치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다만, 북한은 2018년에서야 람사르 협약에 가입하였고, 2021년에 5곳의 중점 습지보호지역을 선정한 것으로 미루어 물과 관련된 생태계 복원에 대한 북한 당국의 지속적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260/}

(나) 지표의 신뢰성과 지속성에 대한 평가

북한은 표면적으로 SDG 6의 지표를 큰 변경 없이 적용하고 있다는 면에서 의의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VNR 보고서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실질적인 성취는 미진하다.^{261/} 특히 ESCAP이 북한의 지표 수집 가능성의 다수를 ‘충분’하다고 평가한

260/ “북한, 중점 습지보호지역 5곳 지정…‘멸종위기 물새 보호,’” 『연합뉴스』, 2021.10.6., <<https://www.yna.co.kr/view/AKR20211006141200504>> (검색일: 2022.10.1.).

261/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25.

것과 달리, <표 III-61>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북한이 SDG 6의 실제 달성 현황은 매우 저조하다. 북한이 VNR 보고서에서 실제로 제공하고 있는 이행 현황은 6.1.1(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서비스 이용 인구 비율)과 6.2.1(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시설 이용 인구 비율)뿐이며, 그나마 현황 자체도 2017년에 조사된 것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지표의 신뢰성과 지속성은 매우 미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지표 미공개·부재에 대한 대응 및 보완 방향

북한은 SDG 6 지표를 모두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형식적 측면에서 보완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앞서 신뢰성과 지속성 평가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VNR 보고서를 통해 지표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실질적 데이터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북한이 실질적인 지표현황을 파악하고 투명하게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위생과 물 분야의 개발협력 추진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접촉면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SDG 14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이용

(1) 목표 및 지표 개관

(가) SDG 14 목표와 지표

SDG 14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해양생태계 보전)을 말한다. MDG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이 SDG 체계에서 ‘생태’ 축으로 파생되면서 분화한 SDG 11~15 중 하나이다. SDG 체계는 생태·환경 문제에 대해 SDG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SDG 12(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SDG 13(기후변화 대응), SDG 14(해양생태계), SDG 15(육상생태계)로 나누어 주제별로 접근하고 있다. SDG 14는 SDG 15와 짝을 이루는데, SDG 15가 상대적으로 황폐화가 심각한 산림, 사막화, 서식지, 동식물의 생물다양성 회복 등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 SDG 14는 육상에 비해서 개척되지 않은 해양 공간과 그 자원에 대한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SDG 14는 주제별 세부목표 7개와 이를 지원하는 부가적인 세부목표 3개로 구성되어 있다. 주제별 세부목표 7개는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부목표 14.1(해양오염), 14.2(해양생태계), 14.3(해양산성화), 14.5(해양보호구역)는 ‘보전’에 속한다. 세부목표 14.4(지속가능 어장), 14.6(불법어업), 14.7(경제적 혜택)은 지속가능한 ‘이용’에 속한다. 부가적인 세부목표 14.a(과학 연구), 14.b(영세어업), 14.c(법적 기반)은 이러한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학적 접근과 연구역량 강화, 영세어업에 대한 보호, 국제법 이행을 의미한다.

SDG 14 세부목표 10개의 진전을 측정하는 이행지표는 총 11개이다. 세부목표 14.1(해양오염)에만 이행지표 2개가 있고 나머지 세부목표 14.2~14.c에는 이행지표가 1개씩 있다. 유엔보고에 따르면 해양 환경 보전, 해양과학 투자, 영세어업 지원, 지속가능한 해양관리에 대한 도전과 진전은 지속되고 있다.^{262/} 우선 ‘보전’ 측면의 이행지표를 보면 해양생물다양성 핵심구역 중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비율이 2000년 28%에서 2020년 44%로 증가했다. 또한 2018~2020년 사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하는 엽록소a 이상치(chlorophyll-a

^{262/} 이 문단의 내용은 다음 자료에서 번역하여 인용함. United Nations, *Progress toward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23 July 2021~22 July 2021, pp. 21~22.

anomaly)가 20% 감소했는데 이는 연안 부영양화에 따른 적조 현상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이용’ 측면을 보면, 2019년 기준으로 활발한 평가·관리체계를 도입한 13개국에서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의 어장을 65.8%(세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2018~2020년 사이 IUU(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대한 다섯 가지 주요 집행수단이 5점 척도상 3점에서 4점으로 상승했다. 마지막으로, 부가적인 세부목표에 대한 이행지표를 살펴보면, 2018~2020년 사이 영세어업에 대한 제도적 틀에 대한 점수가 3점에서 4점으로 상승했다.

표 III-64 SDG 14 세부목표와 지표

| 세부목표 | 지표 |
|---|---|
| 14.1. 2025년까지 해양폐기물과 영양분 오염을 포함해 모든 형태의 해양 오염 방지 및 감소 | 14.1.1. (a) 연안 부영양화 지수 (b) 부유성 플라스틱 잔해밀도 |
| 14.2. 2020년까지 회복력 강화를 포함해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해양 복원을 위한 조치를 실행함으로써 해양 및 연안 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보호 | 14.2.1. 생태계 기반 접근법으로 해양 구역을 관리하는 국가 수 |
| 14.3. 모든 수준에서의 과학 협력을 포함해 해양 산성화 최소화 및 그 영향에 대응 | 14.3.1. 대표 표본 추출 지점에서 측정되는 평균 해양산도(pH) |
| 14.4. 2020년까지 효과적인 어업 규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남획, 파괴적인 어업 방법 금지, 최단시간에 어획량을 복원하기 위한 과학적 관리계획 이행 | 14.4.1.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의 어족자원 비율 |
| 14.5. 2020년까지 가용한 과학적 정보 및 국내법·국제법과 일관되게 연안 및 해양구역의 최소 10% 보호 | 14.5.1. 해양구역 대비 보호구역 비율 |

| 세부목표 | 지표 |
|--|---|
| 14.6. WTO 어업보조금 협상에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효과적인 특별대우가 중요함을 인정하고 2020년까지 생산과잉 및 남획,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기여하는 특정 형태의 어업보조금 금지 그리고 이와 유사한 신규 보조금 도입 자체 | 14.6.1.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적 수단 이행 정도 |
| 14.7. 2030년까지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를 위해 최빈개도국 및 군소도서개발국의 경제적 혜택 증대(어업, 수산업, 관광업) | 14.7.1. 군소도서개발국, 최빈개도국, 그리고 모든 국가의 GDP 중 지속가능한 어업 비율 |
| 14.a. 해양건강 증진 및 해양생물다양성 강화를 통해 개도국, 특히 군소도서개발국과 최빈개도국의 개발에 기여하도록 과학지식 증대, 연구역량 발전, 해양기술 이전(정부간 해양학 위원회의 해양기술이전 기준과 지침 고려) | 14.a.1. 총 연구예산 중 해양기술 부문 연구예산 비율 |
| 14.b. 영세 어업인에 해양자원 및 시장접근성 제공 | 14.b.1. 영세어민의 해양자원 접근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법, 규제, 정책, 제도의 국가별 적용 단계 진척도 |
| 14.c.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 보고서의 158번째 단락에 상기된 것과 같이, 해양과 그 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시하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국제법 이행을 통해 해양과 그 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강화 | 14.c.1. 해양과 그 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국제법을 이행하기 위한 법, 정책, 제도, 해양 관련 수단을 비준, 수용, 집행하는 과정에서 진전을 보이는 국가 수 |

출처: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4," <<https://sdgs.un.org/goals/goal6>> (Accessed September 5, 2022); 통계개발원, 『한국 SDG 이행보고서 2021』, p. 98.

유엔의 IAEG-SDGs는 지표별 소관 국제기구와 유엔 통계처의 협업으로 SDG 세부목표별 이행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SDG 이행지표는 세 개(I, II, III)의 티어로 구분되어 업데이트된다. 티어 I에는 개념이 명확하고 국제적으로 수립된 방법론과 기준을 이용할 수 있으며 데이터가 정기적으로 생산되는 국가가 50%에 달하는 지표가 속한다.

티어 II에는 개념이 명확하고 국제적으로 수립된 방법론과 기준을 이용할 수는 있으나 국가별로 정기적인 데이터가 생산되지 않는 지표가 속한다. 티어 III에는 국제적으로 수립된 방법론과 기준이 개발 또는 시험 중인 상태여서 아직까지 이용할 수 없는 지표가 속한다.

여러 국제기구의 참여로 SDG 14 이행지표 중 절반이 티어 I에 속해 국제적인 비교가 가능해 보이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다음 <표 III-6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SDG 14 이행지표 수집 가능성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으로 티어 II는 물론 티어 I에 속한 이행지표조차 대부분 자료가 없는 상태이다. 2017년 기준으로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SDG 14 현황을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이행지표는 14.5.1(해양보호구역 비율)이다.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50% 이상이 단일 시점의 해양보호구역 비율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어서 현황만 판단될 뿐 추세는 파악하기 어렵다.

2021년에는 조금 상황이 나아져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SDG 14 이행지표 중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한 지표는 2개, 데이터가 불충분한 지표는 5개, 데이터가 부재한 지표가 2개로 나타났다.^{263/} 이때,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된 지표란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50%가 2000년 이후에 최소한 2개 이상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추세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다. 다음으로, 데이터가 불충분한 지표는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50%가 단일 시점의 데이터만 제공하므로 추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지표를 말한다. 데이터가 부재한 지표는 아시아태평양 내 58개국 또는 관할영역에서 아무런 데이터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주로 성평등이나 환경에 관한 지표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263/ UNESCAP, *Asia and the Pacific SDG Progress Report 2021*, p. 14.

표 III-65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SDG 14 이행지표 수집 가능성

| 지표 | 티어 그룹 | 아시아태평양 2017 | | | 아시아태평양 2021 | | | 한국 2021 | | | 북한 2021 | | |
|--|----------|----------------|---------|----------|----------------|---------|----------|------------|---------|----------|------------|---------|----------|
| | | 충분 | 불 충분 | 자료 없음 | 충분 | 불 충분 | 자료 없음 | 충분 | 불 충분 | 자료 없음 | 충분 | 불 충분 | 자료 없음 |
| 14.1.1. (a) 연안 부영양화 지수 (b) 부유성 플라스틱 잔해밀도 | II | | | ○ | ○ | | | ○ | | | ○ | | |
| 14.2. 생태계 기반 접근법으로 해양구역을 관리하는 국가 수 | II | | | ○ | | | | ○ | | | ○ | | ○ |
| 14.3.1. 대표 표본 추출 지점에서 측정되는 평균 해양산도(pH) | II | | | ○ | | | | ○ | | | ○ | | ○ |
| 14.4.1.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의 어족자원 비율 | I | | | ○ | | ○ | | | | | ○ | | ○ |
| 14.5.1. 해양구역 대비 보호구역 비율 | I | | ○ | | ○ | | | ○ | | | ○ | | |
| 14.6.1. IUU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적 수단 이행 정도 | I | | | ○ | | | | | ○ | | | | ○ |
| 14.7.1. 군소도서개발국, 최빈개도국, 모든 국가의 GDP 중 지속가능한 어업 비율 | I | | | ○ | | ○ | | | | | ○ | | ○ |
| 14.a.1. 총 연구예산 중 해양기술 부문 연구 예산 비율 | II | | | ○ | | ○ | | ○ | | | | | ○ |
| 14.b.1. 영세어민의 해양자원 접근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법, 규제, 정책, 제도의 국가별 적용 단계 진척도 | I | | | ○ | | ○ | | | | | ○ | | ○ |
| 14.c.1. 해양과 그 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UNCLOS에 반영된 국제법을 이행하기 위한 법, 정책, 제도, 해양 관련 수단을 비준, 수용, 집행하는 과정에서 진전한 국가 수 | II | | | ○ | | ○ | | | | | ○ | | ○ |

출처: UNESCAP, *Statistical Yearbook for Asia and the Pacific 2017: Measuring SDG progress in Asia and the Pacific: Is There Enough Data?* pp. 30~36; ESCAP SDG Gateway Asia Pacific, "Data Analysis," (Accessed September 5, 2022)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2021년 기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SDG 14는 이행지표에 대한 데이터가 가장 부족할 뿐 아니라 17개 SDG 목표 중 진전이 없고 오히려 2000년 대비 가장 많이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264/} 2021년 기준 SDG 14 이행지표 중 측정 가능한 것은 3개로 14.1.1(연안 부영

^{264/} Ibid., p. 4.

양화 지수), 14.5.1(해양보호구역 비율), 14.7.1(GDP 대비 지속가능한 어업 비율)이며 목표치는 아래 표와 같다.

표 III-66 아시아태평양 지역 SDG 14 이행지표의 목표(2021년)

| 지표 | 목표(비율) |
|--------------------------------------|--------|
| 14.1.1. 연안 부영양화 지수(%) | 0 |
| 14.5.1.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핵심 생물다양성 구역 비율(%) | 75 |
| 14.7.1. GDP 대비 지속가능한 어업 비율(GDP 대비 %) | (1.5) |

주: 괄호()안에 표시된 비율은 2015년 대비 목표치.

출처: UNESCAP, *Asia and the Pacific SDG Progress Report 2021*, p. 81을 참고로 저자 번역 및 수정.

(나) SDG 14 지표 관리기구와 수집 현황

2022년 2월에 업데이트된 기준으로 SDG 14 이행지표는 모두 티어 I 또는 티어 II 그룹에 속해 국제적으로 수립된 방법론과 기준이 있는 상태이다. 지속가능한 ‘이용’ 관련 세부목표인 14.4(지속가능 어장), 14.6(불법어업), 14.7(경제적 혜택)에 대한 이행지표는 모두 티어 I 그룹에 속한다. ‘보전’ 관련 세부목표인 14.1(해양오염), 14.2(해양생태계), 14.3(해양산성화)은 티어 II 그룹에 속하고 14.5(해양보호구역)만 티어 I 그룹이다. 부가적인 세부목표 3개 중에는 14.b(영세어업)에 관한 이행지표만 티어 I 그룹이고 14.a(과학연구)와 14.c(법적기반)에 관한 이행지표는 티어 II 그룹에 속한다. 요컨대,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이행지표는 티어 I 그룹에 속하므로 국제적인 비교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보전’에 관한 이행지표는 14.5(해양보호구역)를 제외하면 국제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SDG 14 이행지표를 관리하는 국제기구는 UNEP(3개), FAO(4개), UNESCO(2개), IUCN(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국제자연보전연맹)(1개), UN DOALOS(United Nations

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유엔해양법국)
(1개) 등이다. 그 외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
해사기구)와 람사르 협약 사무소도 파트너 기관으로 참여한다.

표 III-67 SDG 14 지표 현황 및 관리기구와 복한의 지표 보유 현황

| 세부목표 | 지표 | 변경 티어 | 가능한 관리기관 | 파트너 기관 | 복한 보유 여부 |
|--|--|----------|-----------------------|----------------------|----------------|
| 14.1. 2025년까지 해양폐기물과 영양분 오염을 포함해 모든 형태의 해양 오염 방지 및 감소 | 14.1.1. (a) 연안 부영양화 지수 (b) 부유성 플라스틱 잔해 밀도 | II | UNEP | IOC-UNESCO, IMO, FAO | |
| 14.2. 2020년까지 회복력 강화를 포함해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해양 복원을 위한 조치를 실행함으로써 해양 및 연안 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보호 | 14.2.1. 생태계 기반 접근법으로 해양구역을 관리하는 국가 수 | II | UNEP | IOC-UNESCO, FAO | |
| 14.3. 모든 수준에서의 과학 협력을 포함해 해양 산성화 최소화 및 그 영향에 대응 | 14.3.1. 대표 표본 추출 지점에서 측정되는 평균 해양산도 (pH) | II | IOC-UNESCO | UNEP | ○ |
| 14.4. 2020년까지 효과적인 어업 규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남획, 파괴적인 어업 방법 금지, 최단시간에 어획량을 복원하기 위한 과학적 관리계획 이행 | 14.4.1.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의 어족자원 비율 | I | FAO | | |
| 14.5. 2020년까지 가용한 과학적 정보 및 국내법·국제법과 일관되게 연안 및 해양구역의 최소 10% 보호 | 14.5.1. 해양구역 대비 보호구역 비율 | I | UNEP-WCMC, UNEP, IUCN | Ramsar | |
| 14.6. WTO 어업보조금 협상에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효과적인 특별대우가 중요함을 인정하고 2020년까지 생산과잉 및 남획,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기여하는 특정형태의 어업보조금 금지 그리고 이와 유사한 신규 보조금 도입 자제 | 14.6.1.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적 수단 이행 정도 | I | FAO | | |

| 세부목표 | 지표 | 변경 티어 | 가능한 관리기관 | 파트너 기관 | 북한 보유 여부 |
|---|---|----------|-------------------------------|--------|----------------|
| 14.7. 2030년까지 해양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관리를 위해 최빈개도국 및 군소도서개발국의 경제적 혜택 증대(어업, 수산업, 관광업) | 14.7.1. 군소도서개발국, 최빈개도국, 그리고 모든 국가의 GDP 중 지속가능한 어업 비율 | I | FAO, UNEP-WCMC | | |
| 14.a. 해양간강 증진 및 해양생물다양성 강화를 통해 개도국, 특히 군소도서개발국과 최빈개도국의 개발에 기여하도록 과학 지식 증대, 연구역량 발전, 해양기술 이전(정부간 해양학위원회의 해양기술이전 기준과 지침 고려) | 14.a.1. 총 연구예산 중 해양기술 부문 연구예산 비율 | II | IOC-UNESCO | UNEP | |
| 14.b. 영세 어업인에 해양자원 및 시장접근성 제공 | 14.b.1. 영세어민의 해양자원 접근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법, 규제, 정책·제도 국가별 적용 단계 진척도 | I | FAO | | |
| 14.c. 우리가 원하는 미래 (The Future We Want) 보고서의 158번째 단락에 상기된 것과 같이, 해양과 그 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시하는 UNCLLOS에 반영된 국제법 이행을 통해 해양과 그 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강화 | 14.c.1. 해양과 그 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국제법을 이행하기 위한 법, 정책·제도 해양 관련 수단을 비준, 수용, 집행하는 과정에서 진전을 보이는 국가 수 | II | UN-DOALOS 및 UN-Oceans members | | |

출처: IAEG-SDGs, "Tier Classification for Global SDG Indicators," (<https://unstats.un.org/sdgs/iaeg-sdgs/tier-classification/>) (Accessed September 5, 2022); 통계개발원, 『한국 SDG 이행보고서 2021』, p. 98; "DPRK VNR 2021," pp. 62~63; 북민협 번역, "북한 VNR 보고서 2021," p. 61을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다) K-SDG 14 세부목표와 지표

한국의 SDG 14 수용 현황은 제4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2021~2040)에 나타나 있다. 한국의 SDG 14 목표는 ‘해양생태계 보전’으로 수용되어 SDG 6(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SDG 7(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SDG 13(기후변화와 대응), SDG 15(육상생태계 보전)와

더불어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리는 깨끗한 환경’ 파트를 이루고 있다.^{265/}

한국은 SDG 14에 대해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세부목표는 14.6(불법어업)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10개가 모두 수용되었다.^{266/} 수용된 9개 세부목표는 각각 추진전략이 되어 한국 실정에 맞는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대부분은 글로벌 SDG 14와 비슷하지만 14.7(경제적 혜택)과 관련하여 수산, 관광과 더불어 신산업을 고려했고 14.b(영세어업)와 관련하여 어업인의 복지 여건과 어촌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고려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가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의 82.3%(2017년 기준) 수준이고^{267/} 어촌 고령·과소화로 인한 수산업 성장의 구조적 한계와 인구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행지표는 변경, 일부 수정, 신설, 삭제되어 2021년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세부목표 14.4(지속가능 어장)에 대해 ‘감척어선 수(건)’가 삭제되었으며, 14.5(해양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기존의 이행지표였던 ‘개소수(개)’가 ‘지정 면적’으로 변경되었다. 14.a(과학역량)에 대해서는 ‘국내 해양수산과학 기술이전 건수’와 ‘정부의 ODA 중 해양수산 분야 무상원조 규모’가 신설되었다. 14.b(영세어업)에 대해서는 조건불리수산직불제에^{268/} 대한 ‘수급률(%)’과 ‘지급단가(만원)’가 삭제되고 ‘국내 3톤 이상 4톤 미만 어선의 어선원 보험 가입률’이 신설되었다. K-SDG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글로벌 SDG는 각국의 실정에 맞게 세부목표가 수용되고 있으며 이행지표 역시 각국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265/ 관계부처 합동, 『제4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2021~2040 제2부』.

266/ 위의 책, pp. 267~269.

267/ 위의 책, p. 287.

268/ 조건불리지역이란 어업 생산성과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을 말함.

표 III-68 K-SDG 14 세부목표와 이행지표

| K-SDG 14 해양생태계 보전 | |
|--|--|
| 세부목표 | 지표 |
| 14.1. 육상과 해상의 오염물질로부터 해양환경 보전 관리체계 확립 | (1) 수질평가지수값을 이용한 생태기반 해역 별 해수 수질 기준 달성률(%) (2) 해양쓰레기 수거량(톤) |
| 14.2. 바다의 생태환경과 수산자원의 서식처 적극 관리 | (1) 갯벌복원면적(ha) (2) 바다숲 조성 누적면적(km ²) |
| 14.3. 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을 통한 해양산성화에 의한 영향 최소화 | 외해 평균 pH 농도 적정범위(8.0~8.2) 유지 |
| 14.4.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과도한 어업 지양 | 총허용어획량(TAC) 할당비율 |
| 14.5. 해양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해양보호구역 지정 면적 확대 | 해양보호구역 지정 면적 |
| 14.6.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한 경제적 이익 확보 |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어가소득(%) |
| 14.7. 해양과학 연구역량 제고와 해양과학 기술 이전 확대 | (1) 정부연구개발예산 대비 해양수산 연구 개발 투자 비중(%) (2) 국내해양수산과학 기술이전 건수 (3) 정부의 ODA 중 해양수산 분야 무상원조 규모 |
| 14.8. 소규모 영세어업인의 안정적 어업 행위 지원 | 국내 3톤 이상 4톤 어선의 어선원 보험 가입률 |
| 14.9. 해양 및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국제법의 국내 법적 수용 | 관련 협약의 국내적 수용을 위한 국내 입법 진행률 |

출처: 관계부처 합동, 『제4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2021~2040 제2부』, pp. 403~404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2) 북한 현황

(가) 북한의 SDG 14 목표와 세부목표 및 지표

VNR에서 북한은 SDG 14를 ‘해안·바다·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으로 정의했고 10개 세부목표 중 여섯 가지를 수용했다. 빠진 4가지는 14.6(불법어업)과 14.a(과학연구), 14.b(영세어업), 14.c(법적 기반)이다. 이렇게 빠진 4가지 세부목표를 제외한 14.1(해양 오염), 14.2(해양생태계), 14.3(해양산성화), 14.4(지속가능 어장), 14.5(해양보호구역), 14.7(경제적 혜택)에 대해서는 SDG 14에서 제시한 표현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 각 세부목표별 소관기관을 밝히고 있다. 소관기관은 국토환경보호성(3개), 국가과학기술위원회(2개), 국가계획위원회(2개), 국가과학원(1개), 수산성(1개), 국가관광총국(1개) 등이다.

표 III-69 북한의 SDG 14 세부목표와 소관기관

| 세부목표 | 소관기관 |
|--|----------------------|
| 14.1. 2025년까지 해양오염 예방 및 감소 | 국토환경보호성, 국가과학원, 각 기관 |
| 14.2. 2020년까지 해양연안생태계 관리 및 보호, 복원력 강화 | 국토환경보호성, 각 기관 |
| 14.3. 해양산성화 영향 최소화 및 대응, 모든 수준의 과학협력 강화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각 기관 |
| 14.4. 2020년까지 양식 규제, 불법 어로 종결, 과학기반관리, 어장 회복 | 국가계획위원회, 각 기관 |
| 14.5. 2020년까지 법·과학정보 기반 연안·해양구역 최소 10% 보전 | 국토환경보호성,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 14.7. 2030년까지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경제적 편익 증대 | 국가계획위원회, 수산성, 국가관광총국 |

출처: “DPRK VNR 2021,” pp. 55~56을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나) 북한의 SDG 14 우선순위와 계획

VNR에서 북한은 NDGs 5가지를 밝히고 이를 SDGs와 연계시켰다. <표 III-7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 당국은 SDG 14가 NDG 2(과학 및 교육에 기반을 둔 전 부문의 발전), NDG 3(자력갱생 및 지식기반 경제 건설), NDG 4(완전한 사회주의문화 건설)와 연결된다고 보고 있다. SDG 14를 과학·교육·문화적 관점에서도 고려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사실 북한의 모든 NDGs와 연결되는 것은 SDG 4(양질의 교육)와 SDG 9(산업혁신과 인프라)이다. 이는 북한의 NDGs가 ‘교육’ 및 시설 ‘현대화’에 방점을 둔 것으로 해석되며 김정은 시대에 강조되는 정책 방향과 동일하다. 따라서 향후 북한의 SDG 14 이행에 있어서도 교육과 시설 현대화를 강조하는 정책 기조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표 III-70 북한의 NDGs와 SDG 14

| 국가발전목표(NDGs) | 연관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
| 1. 인민정부 강화 및 인민제일주의 원칙 구현 | 4,9,16 |
| 2. 과학 및 교육에 기반을 둔 전 부문의 발전 | 4,5,9,12,14,17 |
| 3. 자력갱생 및 지식기반 경제 건설 | 1,2,3,4,6,7,8,9,10,11,12,13,14,15 |
| 4. 완전한 사회주의문화 건설 | 1,3,4,9,13,14 |
| 5. 모든 NDGs와 연결된 공통 목표 | 4,5,9,17 |

출처: “DPRK VNR 2021,” pp. 8~11을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VNR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부터 해양자원 보호를 국가 정책의 하나로 설정하고 해양자원 보호 및 증식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UNEP의 ‘청정 바다를 위한 행동(Action for the Clean Sea)’에 참여하기로 하고 연간 2개월 동안 진행되는 전국 국토관리동원 기간에 바다와 해안의 부유 플라스틱 및 기타 잔해 수거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해양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연안·해양의 최소 10%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보전하기로 하고 해양자원특별보호구, 연안자원보호구

(동서해 영해~수심 20미터), 연안수자원보호구(동해 대륙붕~수심 200미터) 등을 설정하기로 했다. 연안·해양생태계 관리에 있어서는 남포를 연안통합관리 시범지역으로 관리하고 원산은 관광, 지역 개발, 해양생물다양성 보호에 초점을 두고 관리하기로 했다. 지속 가능한 어업에 대해서는 치어까지 잡아들이는 저인망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 밖에도 해양오염 방지와 수산자원 보호·증식, 관찰·평가·측정 시스템 구축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SDG 14 이행 우선순위와 계획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III-71 북한의 SDG 14 이행 우선순위와 계획

| 우선순위 | 계획 |
|----------------------------|--|
| 연안·영해 보호구 확장 (최소 10%) | CBD 당사국으로서 추진 |
| 공기, 강, 하천, 호수, 바다 오염 방지 | 환경영향평가체계 개선 폐수방출 및 수질환경 기준 개정 오염방지 실행계획, 관리방법, 정화기술 도입 |
| 해양 및 수산 자원 보호 및 증식 | 자원 보호와 생산 간의 균형 수산자원 증식을 위한 첨단기술 도입 자연보호 확산을 위한 법적 통제 강화 |
| 관찰, 평가, 측정 시스템 구축 | 연안부영양화, 부유플라스틱 파편 밀도, 평균 산성도 관측소 신설, 데이터 수집·분석·개입 능력 강화 |
| 연안통합관리 역량강화 | 재난발생 해안지역 평가, 재난 조기경보체계 구축 방파제 안전성 점검, 방풍림 조성 등 |

출처: “DPRK VNR 2021,” pp. 42~43을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VNR에 나타난 SDG 14 관련 북한의 우선순위와 계획은 북한 내부의 동향에서도 일부 읽힌다. 우선 2010년 이후부터 『경제연구』, 『김일성 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 『정치법률연구』 등에서 해양환경, 해양자원, 해양산업, 해양공간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해양환경 보호에 대해서는 오염물의 절대량 감소와 정화처리, 해양 오염감시사업, 해양오염확대방지대책, 환경보호 인식교양사업을

다루고 있다.^{269/} 해양자원 보호에 대해서는 수산자원 보호, 바다 오염 예방, 해양광물자원 개발 시 환경보호를 언급하고 있다.^{270/} 해양자원 개발에 관해서는 해양이 자원의 거대한 보고로서 해양생물 자원이 풍부하다며 어류자원과 바다양식을 강조하고 있다.^{271/}

또한 북한은 2013년부터 연말에 군 수산부문 열성자 회의를 개최하고 2014년부터 매년 신년사에서 수산 부문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2015년과 2016년 신년사에서는 농산, 축산과 더불어 수산을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축의 하나로 명시했다.^{272/} 2017년 신년사에서는 ‘적극적인 어로 전투’를, 2018년 신년사에서는 ‘과학적인 어로 전투’를 주문하기도 했다.^{273/} 하지만 2019년 신년사에는 ‘어로 전투’가 ‘수산업의 보호·증식’으로 바뀌었으며 ‘양어·양식의 활성화’가 ‘어로 및 양어·양식의 과학화’로 바뀌었는데,^{274/} 수년간 지속된 과도한 수산업 활동에 이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한 정책 방향 선회로 해석된다.

(다) 북한의 SDG 14 지표 현황

SDG 14 관련 북한의 해양생태계 현황에 대해서는 ‘보전’과 관련하여 해양오염과 해양보호구역, ‘이용’과 관련하여 불법어업과 영세 어업, 법적 기반에 대해 논의해볼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한다. 또한 ‘보전’과 ‘이용’의 경계에서 서해안 갯벌(연안 습지)이 대규모 매립을

269/ 리진심, “해양환경과 그 보호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제4호 (2010), pp. 117~118.

270/ 조영남, “현시기 해양자원보호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제3호 (2014), pp. 83~84.

271/ 현순일, “해양자원의 효과적인 개발리용은 경제의 지속적발전을 위한 필수적 요구,” 『경제연구』, 제1호 (2016), pp. 30~32.

272/ “신년사,” 『로동신문』, 2015.1.1.; “신년사,” 『로동신문』, 2016.1.1.

273/ “신년사,” 『로동신문』, 2017.1.1.; “신년사,” 『로동신문』, 2018.1.1.

274/ “신년사,” 『로동신문』, 2019.1.1.

통해 간척지로 바뀌고 있다.

〈표 III-7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의 OHI(Ocean Health Index, 해양건강성지수)는 100점 만점에 53.8점으로 중대한 위협에 처해 있고 SDG 14 목표 달성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에서는 하천, 하구, 항만 등의 수질관리 문제로 해양오염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대동강, 두만강, 압록강, 청천강 등 주요 강 인근은 산업용수와 오수 처리 시설이 부족해 수질이 악화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육상기인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한 연안 부영양화는 해양생태계의 생물다양성 훼손과 서식지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 해양생태계의 생물다양성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서해 갯벌이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한반도 서해안은 세계 철새 주요 경로 중 하나인 동아시아-철새이동경로의 중심지로 매년 도요류 2백만 마리가 경유하며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다.

표 III-72 북한의 SDG 14 지표 현황과 추세

| 지표 | 수치 | 연도 | 현황 | 추세 |
|--|------|------|--------|-------|
| 14.1.1. 해양건강성지수(OHI) - 수질(0~100) | 53.8 | 2020 | 중대 위협 | 지연 |
| 14.4.1. 남획·붕괴된 어장에서 잡히는 물고기(총 어획 대비 %) | 35.3 | 2018 | 위협 존재 | 악화 |
| 14.5.1. 생물다양성에 중요한 해양보호구역(%) | 0.0 | 2020 | 중대 위협 | 지연 |
| 14.6.1. 저인망 어업 어획(%) | 31.2 | 2018 | 위협 존재 | 악화 |
| (기타) 어획 후 폐기되는 물고기(%) | 0.5 | 2018 | SDG 달성 | 유지 |
| (기타) 수입품에 포함된 해양생물다양성 위협 (백만 명당) | NA | NA | 정보 부재 | 정보 부재 |

출처: Jeffrey D. Sachs et al., *From Crisis to Sustainable Development: the SDGs as Roadmap to 2030 and Beyond*,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2, p. 263을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표 III-7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필수적인 해양보호구역은 북한이 SDG 14와 관련하여 VNR에서 유일하게 데이터를 공개한 이행지표이다. 2016년 기준으로 북한은 해양관할구역의 0.7%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표 III-73 북한이 발표한 SDG 14 지표 현황

| 이행지표 | 2016 | 2018 | 2020 |
|---|------|------|------|
| 14.1.1. 연안 부영양화 및 부유성 플라스틱 잔해밀도(km ³) | - | - | - |
| 14.2.1. 생태계 기반 접근법을 이용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비율(%) | - | - | - |
| 14.3.1. 평균 해양산도(pH) | - | - | - |
| 14.4.1.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어장의 비율(%) | - | - | - |
| 14.5.1. 해양구역 대비 보호구역 범위(%) | 0.7 | - | - |
| 14.7.1. GDP 대비 지속가능 어업의 비율(%) | - | - | - |

출처: “DPRK VNR 2021,” p. 63을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표 III-7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에 북한의 자연보호지역을 IUCN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발표한 바에 따르면 철새 보호구가 24개로 약 2만 7,000정보, 바다새 보호구가 7개이며 약 215정보에 달한다.

표 III-74 북한의 해양생태계 관련 보호구역 현황

| 분류 | 명칭 | 수 | 면적(정보) |
|-----------|-----------------|----|----------|
| 서식지/종 보호구 | 철새(습지, 번식지) 보호구 | 24 | 26,917.5 |
| | 바다새 보호구 | 7 | 214.5 |

출처: 박우일 외, 『우리나라의 자연보호지역』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마브민족위원회, 2005), p. 11.

또한 〈표 III-7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년에 북한은 람사르 협약에 가입하면서 서해안 문덕과 동해안 나선을 람사르 습지로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렇게 지정된 보호구역 중 생물다양성에

핵심적인 구역은 0%로 추정되어 중대한 위협이 존재하며 SDG 14 목표 달성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75 북한의 람사르 습지 지정 현황(2018년)

| 명칭 | 지정번호 | 지정면적 | 지정일 | 위치 |
|---------|------|-----------|------------|-----------------------|
| 문덕철새보호구 | 2342 | 3,715ha | 2018.1.16. | 39° 33'N 125° 24'E |
| 나선철새보호구 | 2343 | 3,525.7ha | 2018.1.16. | 42° 19'N 130° 34'E |

출처: 람사르 협약 홈페이지, <<https://rsis Ramsar.org/ris/2342>>; <<https://rsis Ramsar.org/ris/2343>> (Accessed June 7, 2022).

북한은 이처럼 해양생태계에 중요한 공간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공간을 파괴하고도 있다. 한반도 서해안의 특징인 갯벌은 연안에 있는 습지로 분류된다. 습지는 지구 표면의 1%밖에 되지 않지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기능은 숲의 5배, 바다의 500배에 이른다.^{275/} 하지만 국토의 80%가 산지인 북한은 경작 면적을 늘리기 위해 서해안 간척지를 매립해 왔다. 지금까지 간척으로 확보된 면적이 여의도의 17배에 이른다.^{276/} 2010년 이후 간척한 대계도, 흥건도, 용매도의 면적만 200km²에 달하는데 이는 서울시의 1/3 면적이다.^{277/} 이 면적의 절반은 최근 3년 동안 간척된 것이며 아직도 12곳에서 간척이 진행되는데 다사도, 광산, 금성, 운춘, 서해리-능금도, 월도, 싸리섬, 강령 등이 있다.^{278/}

275/ Ralph J. M. Temmink *et. al.*, “Recovering Wetland Biogeomorphic Feedbacks to Restore the World’s Biotic Carbon Hotspots,” *Science*, vol. 376, Issue 6593, 6 May 2022, p. 594.

276/ “[요즘 북한은] ‘새 땅을 찾아라!’…간척사업 역량 집중,” 『KBS뉴스』, 2020.5.2.

277/ “북, 2010년 이후 200km² 간척…식량난 해소엔 역부족,” 『연합뉴스』, 2021.12.23.

278/ Peter Makowsky *et. al.*, “North Korea’s Tideland Reclamation Efforts,” 38 North, December 22, 2021, <<https://www.38north.org/2021/12/north-koreas-tideland-reclamation-efforts/>> (Accessed June 7, 2022).

2020년에는 안석 간석지를 완공하여 1,400정보를 확보했고^{279/} 2021년에는 흥건도 2단계 공사와 용매도 3·4구역 공사를 마무리 하면서 1만 3,000여 정보의 땅을 확보했다.^{280/} 북한이 최근에 추진한 대규모 간척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III-76 북한의 최근 대규모 간척 추진 현황

| 구분 | 명칭 | 면적 | 현황 | 비고 |
|------|---------|--------------------|----------|--|
| 평안북도 | 대계도 간석지 | 88km ² | 2010년 완공 | 김정일 시대 대자연개조 사업 모범 |
| 평안북도 | 흥건도 간석지 | 90km ² | 2021년 완공 | 1단계(2012~2016, 45km ²) 2단계(2016~2021, 55km ²) |
| 황해남도 | 용매도 간석지 | 212km ² | 진행 중 | 6구역(2015), 3구역·4구역(2018~2021) |

출처: 윤인주 외, “북한 노동신문 키워드 분석으로 본 해양수산 분야 시사점,” 『KIPI 동향분석』, 제126호 (2019), p. 7; “北 서해지구 대규모간석지 2개 완공...1만 3,000여 정보 새땅 마련,” 『SPN서울평양뉴스』, 2021.5.13.

SDG 14와 관련하여 ‘이용’에 해당하는 또 다른 분야는 수산자원, 어장이다. 북한이 관련된 불법어업은 북한 수역에서 조업하는 제3국 어선의 활동과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는 북한 어선의 활동이 주목된다.

제3국 어선의 동해 수역 입어는 북한 어장의 수산자원 남획과 해양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동해 수역에 입어하는 제3국 어선의 수는 2004년 144척을 시작으로 2020년 2,389척에 달했다.^{281/} 매년 중국에서 설정하는 금어기 동안 제3국 어선들은 적당 3천만~5천만 달러를 북한 측에 지불하고 동해 수역에서 조업을 한다.

279/ “경작지 넓히자” 북한, 평남 안석간척사업 완공...박봉주 시찰,” 『연합뉴스』, 2020.9.16.

280/ “北 서해지구 대규모간석지 2개 완공...1만 3,000여정보 새땅 마련,” 『SPN서울평양뉴스』, 2021.5.13.

281/ 윤인주, “동해 수역 중국어선 남획저지 방안,” 『이슈페이퍼』, 2021.3.26.,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2021, p. 3.

기간은 주로 오징어 성수기인 7~11월이며 쌍끌이 기선 저인망 어선(150~300톤급)이 선단을 이루어 조업한다. 이러한 형태의 조업이 갖는 문제점은 저인망 어업을 통해 남획을 한다는 점이다. 2010년 기준으로 최대 추정치(173,340톤)가 우리나라 전체 오징어 어획량(159,130톤)을 상회했으며 2014년에는 최소 추정치(205,135톤)마저 우리나라 전체 오징어 어획량(163,896톤)을 상회했다.^{282/}

또 다른 문제점은 2017년부터 강화된 유엔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조업권 거래가 지속적으로 적발된다는 점이다. 유엔안보리 결의 2371호는 북한과의 수산 부문 거래 전체를 금지시켰고 유엔안보리결의 2397호는 북한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조업권을 구매 또는 이전하는 행위를 명시하여 금지시켰다. 그러나 제3국 어선의 입어는 계속되어 2017년(101,300톤)과 2018년(62,800톤)에 한국과 일본의 총 오징어 어획량을 상회하는 수준에 달했다.^{283/} 이처럼 유엔 대북 제재가 북한 동해 수역 입어를 금지하자 최근에 입어하는 어선은 등록(registration), 선적(flag), 조업권(license)이 없는 경우가 다수여서 ‘암흑 선단(dark fleet)’이라고도 불린다.^{284/} 이러한 불법 어선의 활동 공간과 내용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 결과, <표 III-72>에서 보는 것처럼 북한에서 남획으로 붕괴된 어장에서 잡히는 물고기는 총 어획 대비 35.3%로 추정되어 여전히 위협이 존재하며 SDG 14 목표 달성을 위한 추세는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는 저인망 어업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저인망 어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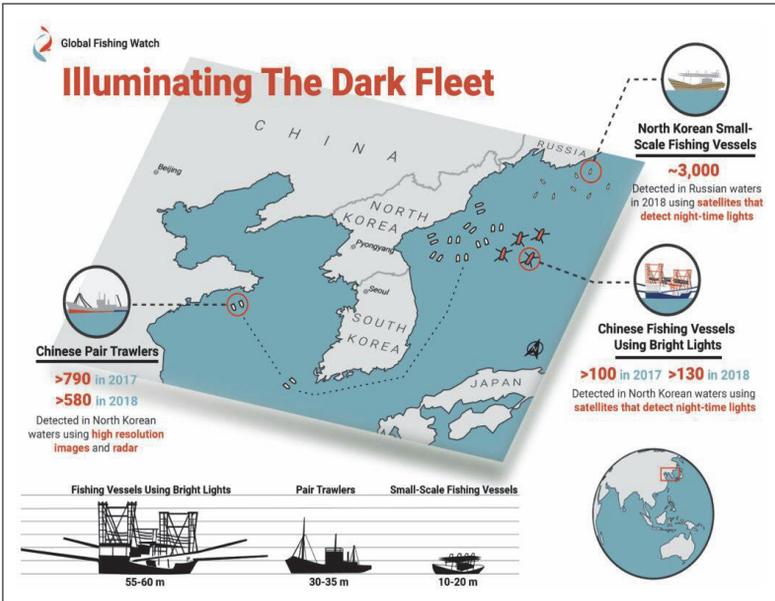
282/ 이정삼·류정곤·기해경, “중국어선의 북한 동해수역 입어동향과 대응방향”, 『수산경영론집』, 제48권 3호 (2017), p. 71; 김운배, “울릉도 오징어 어획량 변동 특징 및 울릉도 오징어 산업 발전방안”, 『수산해양교육연구』, 제31권 6호 (2019), p. 1581.

283/ Jaeyoon Park *et al.*, “Illuminating Dark Fishing Fleets in North Korea,” *Science Advances*, Vol. 6, No. 30 (2020), p. 3.

284/ *Ibid.*

통한 어획이 31.2%로 추정되어 역시 위협이 존재하며 SDG 14 목표 달성을 위한 추세는 악화되고 있다. 그밖에 어획 후 폐기되는 물고기는 0.5%로 추정되고 수입품에서 해양생물다양성의 위협에 대한 정보는 부재한 상황이다.

그림 III-1 북한 동해 수역 입어 제3국 어선의 조업 현황



출처: Global Fishing Watch, <<https://globalfishingwatch.org/press-release/media-kit-north-korea-study/>> (Accessed June 3, 2022).

이와 같은 제3국 어선의 조업 활동에 밀려 영세한 북한 어선은 더 먼 바다로 나가서 조업 활동을 하게 되었다. 북한, 한국, 일본의 해양경계가 만나는 동해 대화퇴 어장은 물론 러시아 수역에서의 북한 어선 활동이 최근 몇 년간 급증했다. 조업 활동 중 일본이나 러시아 해역으로 표류하다가 난파된 채 좌초하는 영세한 목선도 수백 척에 달했다.^{285/}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되고

북한 당국이 외부와의 접촉을 우려하여 어업 활동을 제한하면서 2021년 이후 크게 줄었다.

SDG 14 달성 관련 국제법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과 관련해서는 국제협약, 국제협력, 국내법 제정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유엔기후변화협약(1992년 6월 서명, 1995년 3월 발효), 유엔생물다양성협약(1992년 6월 서명, 1995년 1월 발효), 람사르 협약(2018년 2월 서명, 2018년 5월 발효) 등에 가입했으며 IMO 협약에도 다수 가입되어 있다. 또한 PEMSEA(Partnerships in Environmental Management for the Seas of East Asia, 동아시아해역환경관리 협력기구)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남포와 원산에 ICM(Integrated Coastal Management, 연안통합관리계획)을 도입하고자 했다. 자체적으로 「바다오염방지법」(1997), 「국토환경보호단속법」(1998), 「환경영향평가법」(2005), 「폐기폐설물취급법」(2007), 「대동강오염방지법」(2008), 「자연보호구법」(2009) 등을 제정하기도 했다.

북한의 SDG 14 관련 현황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은 생태계 기반 접근, 해양산도 측정,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어장 관리 등이다. 이러한 부분은 과학적인 방법론이 필요한 분야로 북한이 VNR에서 측정의 어려움을 시인한 바 있다. 북한은 해양·연안 생태계 관리에 관한 과학적 방법론이 부족하여 해양산성화를 정기적으로 측정할 수 없으며 해양환경 모니터링 표준에 미달하여 SDG 14 이행지표가 부분적인 공간에서만 측정된다고 밝혔다.

285/ 현승수 외, 『한반도 평화·번영 실현을 위한 국경협력』 (서울: 통일연구원, 2019), pp. 100~102.

(3) 목표 및 지표 평가

(가) 목표, 세부목표, 지표 적용에 대한 평가

북한은 글로벌 SDG 14를 대부분 수용하였고 새롭게 추가한 것은 없다. SDG 14 목표 자체에 대한 표현을 변용하고 세부목표와 이행 지표 중 일부를 제외했을 뿐 나머지는 거의 그대로 수용하였다.

우선, 북한은 SDG 14 목표를 표현하는 단어 중 ‘대양(ocean)’을 ‘해안(coast)’으로 변용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대양은 “세계의 해양 가운데에서 특히 넓은 해역을 차지하는 대규모의 바다”를 말한다.^{286/} 해양은 “넓고 큰 바다”, “지구 표면의 약 70%를 차지하는 수권(水圈)”, “태평양·대서양·인도양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287/} 남북한이 공유하는 동해와 서해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2조에 의해 ‘반폐쇄해(semiclosed sea)’로 규정된다. 반폐쇄해란 “2개국 이상에 의하여 둘러싸이고 좁은 출구에 의하여 다른 바다나 대양에 연결되거나, 또는 전체나 그 대부분이 2개국 이상 연안국의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이루어진 만, 내만, 또는 바다”를 말한다.^{288/} 따라서 한반도 차원에서는 글로벌 SDG 14 관점의 ‘대양’이라는 표현 보다는, 지리학적 위치상 지역 단위에서 적용 가능한 ‘해역’ 수준으로 범위를 좁혀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해안’이라는 수준으로 공간적 범위를 더욱 축소시켰다. 해안은 “바다와 육지가 맞닿은 부분”을 말한다.^{289/} 북한의 정책 목표에서 해안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

^{286/} 표준국어대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8fe3c9981c354954b3359633e171e602>> (검색일: 2022.9.6.).

^{287/} 표준국어대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d48ed63de0e9449f843fa4db60dbe3ae>> (검색일: 2022.9.6.).

^{288/} 외교부, <https://www.mofa.go.kr/www/wpge/m_3838/contents.do> (검색일: 2022.9.6.).

지를 엿볼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치산치수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태풍으로 인한 연안지역의 피해와 장마나 홍수로 인한 물난리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복구하는 것이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이다. 따라서 북한의 SDG 14 목표는 글로벌 SDG 14 목표를 현지화(localization)시킨 사례로 평가해볼 수 있다.

세부목표 중에는 14.6(불법어업), 14.a(과학연구), 14.b(영세어업), 14.c(법적 기반)가 삭제되었다. 14.6(불법어업)이 빠진 이유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 스스로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제3국 어선에게 조업권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IUU 어업에 기여하는 어업보조금을 금지한다는 세부목표를 수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14.a(과학연구)는 해양기술 부문에 투입할 예산이 부족하고 실제 투입한다고 해도 총 연구예산이 드러나게 만드는 비율을 밝히고 싶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4.b(영세어업)가 빠진 이유는 군 부대 수산사업소가 주도하고 국영 수산사업소를 중심으로 관리되는 북한 수산업의 특성상 영세어민의 해양자원 접근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법·제도가 시행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14.c(법적 기반)가 빠진 이유는 이 세부목표가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국제법 이행을 의미하는데 북한이 유엔해양법을 비준하지 않아 이 법에 대한 구속력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북한의 여건에 적합하지 않은 네 가지 세부목표가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각 세부목표에 해당하는 이행지표 네 가지도 존재하지 않는다.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수단의 이행 정도(14.6.1), 해양기술 예산 비율(14.a.1), 영세어민의 해양자원 접근 진척(14.b.1)은

289/ 표준국어대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8a6b197142144ee-f8f52471d98300154>> (검색일: 2022.9.6.).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에 따른 의도적 미공개이며, 유엔해양법 이행 진전(14.c.a)은 글로벌 지표가 북한의 실정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해석된다.

세부목표 중 14.1(해양오염), 14.2(해양생태계), 14.3(해양산성화), 14.4(지속가능 어장), 14.5(해양보호구역), 14.7(경제적 혜택)은 모두 수용했으며 각 세부목표에 해당하는 이행지표도 거의 동일하다. 하지만 해양보호구역의 비율(14.5.1)을 제외하면 데이터가 부재한 상황인데 이는 해당 이행지표에 관한 정보를 생산할 통계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III-77 북한의 SDG 14 수용 현황

| 유엔 세부목표 및 지표 | 북한 | | | | |
|---|----|----|----|----|----|
| | 수용 | 변용 | 삭제 | 추가 | 비고 |
| 14.1. 2025년까지 해양폐기물과 영양분 오염을 포함해, 모든 형태의 해양 오염 방지 및 감소 | ○ | | | | |
| 14.1.1. (a) 연안 부영양화 지수 (b) 부유성 플라스틱 잔해밀도 | ○ | | | | |
| 14.2. 2020년까지 회복력 및 복원활동을 강화해 해양 및 연안 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보호 조치 실행 | ○ | | | | |
| 14.2.1. 생태계 기반 접근법으로 해양구역을 관리하는 국가 수 | ○ | | | | |
| 14.3. 모든 수준에서의 과학협력을 포함해 해양 산성화 최소화 및 그 영향에 대응 | ○ | | | | |
| 14.3.1. 대표 표본 추출 지점에서 측정되는 평균 해양산도(pH) | ○ | | | | |
| 14.4. 2020년까지 효과적인 어업 규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남획, 파괴적인 어업 방법 금지: 최단시간에 어획량을 복원하기 위한 과학적 관리계획 이행 | ○ | | | | |
| 14.4.1.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의 어족자원 비율 | ○ | | | | |
| 14.5. 2020년까지 가용한 과학적 정보 및 국가법·국제법과 일관되게 최소 연안 및 해양지역의 10% 보호 | ○ | | | | |
| 14.5.1. 해양구역 대비 보호구역 비율 | ○ | | | | |
| 14.6. WTO 어업보조금 협상에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효과적인 특별대우가 중요함을 인정하고 2020년까지 생산과잉 및 남획,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기여하는 특정형태의 어업 보조금 금지 그리고 이와 유사한 신규 보조금 도입 자제 | | | ○ | | |
| 14.6.1.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 수단 이행 정도 | | | ○ | | |

| 유엔 세부목표 및 지표 | 북한 | | | | |
|--|----|----|----|----|----|
| | 수용 | 변용 | 삭제 | 추가 | 비고 |
| 14.7. 2030년까지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및 관리를 통해 최빈 개도국 및 군소도서개발국의 경제적 이익 증가 | ○ | | | | |
| 14.7.1. 군소도서개발국, 최빈개도국, 모든 국가의 GDP 중 지속 가능한 어업 비율 | ○ | | | | |
| 14.a. 해양건강 개선 및 해양 다양성 강화를 통해 개도국, 특히 군소 도서개발국과 최빈개도국들의 개발에 기여하도록 연구 역량 증대 및 과학지식, 선진해양기술 이전(정부 간 해양학위원회의 해양기술 이전에 대한 기준과 지침을 고려) | | | ○ | | |
| 14.a.1. 총 연구예산 중 해양기술 부문 비율 | | | ○ | | |
| 14.b. 소규모 영세어업자들에 해양자원 및 시장접근성 제공 | | | ○ | | |
| 14.b.1. 영세어민의 해양자원 접근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법, 규제, 정책, 제도의 국가별 적용 단계 진척도 | | | ○ | | |
| 14.c.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 보고서의 158번째 단락에서 상기된 대양 및 해양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적기반을 제시하는 UNCLOS에 반영된 국제법 이행을 통해 대양 및 대양 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개선 | | | ○ | | |
| 14.c.1. 해양과 그 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유엔 해양법협약에 반영된 국제법을 이행하기 위한 법, 정책, 제도, 해양 관련 수단을 비교, 수용, 집행하는 과정에서 진전한 국가 수 | | | ○ | | |

출처: 통계개발원, 『한국 SDG 이행보고서 2021』, p. 98; “DPRK VNR 2021,” pp. 55~56, pp. 62~63; 북한협 번역, “북한 VNR 보고서 2021,” pp. 54~55, p. 61을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나) 지표의 신뢰성과 지속성에 대한 평가

북한이 VNR에서 밝힌 이행지표 데이터는 14.5.1 해양보호구역 비율이 유일하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 지표에 대한 대표성, 신뢰성, 지속성만을 논의해볼 수 있겠다.

첫째, 해양보호구역 비율은 북한의 해양생태계 보전을 대표할 수 있는가이다. 14.5.1 해양구역 대비 보호구역 비율은 글로벌 SDG 14가 제시하는 이행지표와 동일하며, UNEP나 IUCN 등을 통해 국제적인 기준에 따른 데이터 생산이 가능한 지표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서도 SDG 14 이행지표 중 데이터가 가장 빠르고 충분하게 확보된

지표이다. 이행지표에 대한 데이터가 거의 부재했던 2017년에 유일하게 불충분하나마 데이터가 확보되었고 2021년에는 충분한 수준으로 취합된 두 개 지표 중 하나에 해당한다. K-SDG 체계에서도 동일한 지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한반도 차원의 통합지표 구성도 가능하다. 따라서 해양보호구역 비율이 북한의 해양생태계 보전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연안 및 해양구역의 최소 10%를 보호한다는 세부목표 14.5의 이행지표로는 대표성을 띤다고 하겠다.

둘째, 해양보호구역 비율은 기존에 발표된 데이터와 비교할 때 얼마나 격차를 보이는가이다. 다시 말해, 북한이 발표하는 자료의 출처와 시기에 따라 해양보호구역 비율의 정보가 얼마나 상이한가이다. 이는 북한의 해양보호구역 비율 정보를 우리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를 뜻한다. 북한이 발표한 해양보호구역 비율의 수치는 2015년 기준 0.7%가 거의 유일하다. 이후에는 정보를 밝히지 않을지언정 다른 수치를 내놓고 있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이 정보가 최신인 상태이다. 또한 북한의 해양관할권이 닿는 구역이 추정 가능하고 북한이 발표한 해양보호구역 목록이 있으므로 이 정보의 진위 여부를 어느 정도 계산해볼 수 있는 상태이다.

셋째, 북한의 해양보호구역 비율은 정기적이고 연속적인 데이터 생산이 가능한가이다. 이는 시계열 비교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진전을 측정할 지표로서 필요한 지속성을 의미한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해양보호구역 비율은 전체 해양 구역에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을 계산한 수치이므로 데이터 생산 자체가 어렵지는 않다. 북한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한다면 그 확대된 면적을 더해서 새로운 비율이 산출 가능하다.

이처럼 해양보호구역 비율은 북한의 SDG 14, 특히 SDG 14.5 세부 목표를 측정하는 이행지표로서 대표성, 신뢰성, 지속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 다만, 북한의 경우에는 정책 집행에 있어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크기 때문에 실제 해양보호구역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가가 관건이라고 하겠다. 해양보호구역의 면적과 비율이 SDG 14를 구성하는 세부목표와 이행지표가 되는 것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수반되는 제도적 관리, 즉 해당 구역 내의 어업 규제나 수산자원 보호, 해양생태계 보전 활동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공식 제도와 달리 현실에서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해양보호구역의 작동방식이 더욱 중요하다.

(다) 지표 미공개·부재에 대한 대응 및 보완 방향

북한은 14.5.1 해양보호구역의 비율을 제외하면 다른 SDG 14 이행지표는 모두 공개하지 않거나 부재한 상태이다. 14.5.1을 제외한 나머지 이행지표는 북한이 글로벌 SDG 14 이행지표를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과 아예 삭제한 것으로 나뉜다. 글로벌 이행지표를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도 데이터가 없다는 것은 북한이 해당 이행지표에 동의하고 데이터를 산출할 의지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지표에 대해서는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데이터 생산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반면, 북한이 세부목표를 반영하지 않음에 따라 이행지표 자체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로벌 지표가 북한의 실정에 얼마나 부적합한지, 그렇다면 대안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우선, 북한이 세부목표와 이행지표를 수용했지만 데이터가 없는 것은 14.1(해양오염), 14.2(해양생태계), 14.3(해양산성화), 14.4(지속 가능 어장), 14.7(경제적 혜택)이다. 해양오염을 측정할 연안 부영양화 및 부유성 플라스틱 잔해밀도(14.1.1),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생태계 기반 접근법을 이용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비율(14.2.1),

해양산성화를 측정하는 평균 해양산도(14.3.1), 어장 황폐화를 예방하기 위해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어장의 비율(14.4.1), GDP 대비 지속가능 어업의 비율(14.7.1)에 대한 데이터 생산이 필요하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SDG 14 이행지표 데이터가 5년 만에 상당히 충분하게 확보된 것을 고려하면,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북한에서도 데이터 생산이 가능해질 것이다. 물론, 생태계 기반 접근법(14.2.1)이나 평균 해양산도(14.3.1)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5년을 노력하고도 여전히 자료가 없는 상태이므로 데이터 생산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라는 단일 해양관할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여러 국가의 해양관할권을 다루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와 달리 데이터 생산이 용이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평균 해양산도 측정은 북한이 희망하는 지역에 대표 표본 추출 지점을 정하면 될 것이다. 다만, 생태계 기반 접근법은 단기간에 전 해역에 적용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연구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의 실정에 맞지 않아 세부목표와 이행지표가 삭제된 것은 14.6(불법어업), 14.a(과학연구), 14.b(영세어업), 14.c(법적 기반)이다. IUU 어업에 대한 국제적 수단 이행 정도(14.6.1)는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에 따라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므로 북한이 데이터를 생산하거나 공개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국제적으로 이 세부목표에 대해 북한의 실정을 판단할 수 있는 대안지표로 북한 동해 수역의 제3국 어선 입어 척수, 러시아 수역의 북한 어선 입어 척수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14.a(과학연구)에 관한 해양기술 부문 연구예산 비율(14.a.1)은 북한이 총 연구예산을 밝히고 싶어 하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할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이는 총 연구예산 대비 비율이 아니라 정부 부처의

해양기술 부문 연구예산 규모로 대체해봄 직하다. 이를 위해 북한의 행정통계 생산 지원 사업을 고려해볼 수 있다.

14.b(영세어업)는 북한이 해당 세부목표를 수용할 경우 K-SDG를 참고하여 이행지표를 구성해볼 수 있다. K-SDG에서는 ‘소규모 영세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행위 지원’이라는 세부목표로 수용하고 ‘국내 3톤 이상 4톤 어선의 어선원 보험 가입률’을 이행지표로 하고 있다. 또한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한 경제적 이익 확보’에 대해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어가소득(%)’을 이행지표로 삼는다. 따라서 이를 참고로 북한 실정에 맞는 자료 및 산출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예컨대 ‘수산협동조합 구성원의 안정적 어업행위 지원’을 세부목표로 수용할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수산협동조합 어가소득(%)’을 이행지표로 고려해볼 수 있다.

14.c(법적 기반)에 관한 14.c.1(유엔해양법 관련 진전)은 북한이 유엔해양법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양 및 그 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북한 내부의 법률 제정을 대안지표로 하고, 향후 북한이 유엔해양법에 가입한다면 K-SDG 14.c와 같이 관련 협약의 국내적 수용을 위한 국내 입법 진행률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SDG 지표의 수용과 관련하여 남북한 공동의 한반도 SDG 체계를 구성할 경우 양측의 공동 관심사를 고려한 이행 지표 설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14.7(경제적 혜택)과 관련하여 남북한은 지속가능한 어업뿐 아니라 관광과 같은 새로운 산업을 고려하고 있고 14.b(영세어업)와 관련하여 어촌의 복지나 정주여건 개선도 정책 의제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양관광의 경제적 혜택이나 어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측정하는 지표도 장기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표 III-78 북한의 SDG 14 지표 미공개·부재 보완 방향

| 구분 | 원인 | 지표 | 보완 방향 | |
|--------------------|---------------------------|------------------------------------|---------------------------------|---------------------------------------|
| 세부 목표 수용 | 통계 생산 역량 부족 | 14.1.1. 연안 부영양화 및 부유성 플라스틱 잔해밀도 | 과학기술을 이용한 측정방법 역량강화 지원 | |
| | | 14.2.1. 생태계 기반 접근법을 이용하는 EEZ 비율 | | |
| | | 14.3.1. 평균 해양산도 | | |
| | | 14.4.1. 생물학 지속가능한 어장의 비율 | | |
| | | 14.7.1. GDP 대비 지속가능 어업의 비율 | | |
| 세부 목표 삭제 | 의도적 미공개 | 14.6.1. IUU 어업 근절 수단 이행 정도 | 대안 지표 | 동해 수역 제3국 어선 입어 척수 |
| | | 14.a.1. 총 연구예산 중 해양기술 부문 비율 | | 해양기술 예산액 |
| | 14.b.1. 영세어업인의 해양자원 접근 진척 | 수산업동조합 어가소득 | | |
| 글로벌 지표의 부적합성 | | 14.c.1. 유엔해양법협약 이행의 진전 | | 해양과 해양자원 보전 및 이용 관련 법률 제정 |

IV. 북한의 VNR 분석을 통한 SDGs 지표역량강화 방안 모색

문경연(전북대학교)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북한의 VNR 분석을 통한 SDGs 지표역량강화 방안 모색

북한은 2021년 7월 SDGs 이행성과를 담은 VNR을 제출하였으며, 여기에 95개의 세부목표, 132개의 이행지표를 포함하였다. 이는 전체 SDGs 전체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 231개 지표의 절반에 가까운 세부목표와 지표들에 대한 데이터를 북한이 제공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특히 여전히 SDGs 지표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IAEG-SDGs는 전체 231개 지표 중 136개 지표만이 티어 I(지표 정의 및 측정 방법론이 명확하며, 50개국 이상이 해당 지표값을 제시하는 지표)에 해당한다. 91개는 티어 II(지표의 정의 및 측정방법론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존재하나, 개별 국가들에 의해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지표)로 분류(2022년 2월 4일 기준)^{290/} 있다는 점에서 아직 SDGs 이행 수준을 보고하는 메커니즘으로서 SDGs 지표 보고 체계 자체가 개별 국가들에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하는 가운데 북한이 132개의 이행지표값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1차년도 연구는 SDG 2, 7, 8, 9, 11, 12, 13, 15, 16, 17 관련 지표에 국한하여 북한의 SDGs 지표를 분석하였다.

^{290/} IAEG-SDGs, "Tier Classification for Global SDG Indicators," (Accessed September 6, 2022).

제IV장에서는 제III장에서 연구한 나머지 SDG 1, 3, 4, 5, 6, 10, 14와 지표에 대해 지표의 신뢰성과 지속성 평가를 바탕으로 SDG 17개 목표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SDGs 전체 목표와 지표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함으로써 북한의 SDGs 17개 목표 이행현황 및 지표 수립에 대한 북한의 지표역량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제IV장의 목적이다.

이 장은 먼저 북한의 국제사회 기준에서 SDGs 이행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시도한다. 첫째, 북한이 제출한 VNR 보고서의 목표와 지표 제시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국내외 평가를 분석할 것이다. 북한의 SDGs 이행 분석을 위해 VNR과 유엔 SDSN의 SDR(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지속가능발전보고서) 2개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VNR은 개별 국가의 SDGs 이행과정 평가가 가능한 유일한 1차 자료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291/} 개별 국가의 의도에 따라 별도 형식을 따르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여 국가별로 비교가 어려우며 신뢰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SDR을 바탕으로 북한의 SDG 목표별 이행현황을 정량적으로 확인하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SDGs 이행에 대해 현 위치를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도전과제(Major Challenge Remain: MCR)로 분류된 SDGs와 북한의 VNR 우선목표 비교를 통해 북한의 SDGs 이행에 대한 목표가 국제사회의 방향과 동일한 초점을 두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두 자료의 통합적 비교는 VNR의 정성적 특성과 유엔의 SDSN의 정략적 특성을 함께 확인이 가능하여 북한의 SDGs 이행에 대한 총체적인 해석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북한의 SDG 17개 목표와 지표를 종합하여 신뢰성 측면과 지속성 측면에서 평가할 것이다. 이전

291/ 우창빈·김태균·김보경,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의 글로벌 경향성 분석: UN 개발적국별리뷰(VNR)를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제15권 2호 (2020), p. 77.

연구에서 분석한 기존 SDG 10개 목표와 지표와 함께 앞 장에서 분석한 SDG 7개 목표 및 지표에 대해 북한 지표 현황을 진단하고, 지표 엄밀화가 필요하거나 지속적 측정을 위해 추가 측정역량강화가 필요한 지표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SDG 17개 목표 중 북한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인도적 상황과 북한의 NDGs를 연계하여 SDGs 이행에 있어 중점으로 두고 있는 분야에 대한 관련 목표, 지표 설정에 있어 역량강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우선순위를 구분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인도적 상황과 북한의 발전계획 측면에서 VNR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나 지표 엄밀화와 지속적인 측정을 위한 역량강화가 필요한 사항, VNR에 미포함된 지표이나 북한 특성상 측정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 등을 총 네 개 그룹으로 나누어 우선순위를 설정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 개발협력에 있어 기본 자료가 되는 지표를 산출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향후 남북 및 국제협력의 방식으로 북한의 SDGs 지표 산출,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주된 목적이 있다.

1. 북한 VNR 추진의 함의

가. VNR 보고서

유엔은 이전 목표인 MDGs 시대에 대한 반성 요소 중 하나가 국가적 수준에서 모니터링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는 성과관리 체계가 미흡하였다는 점이었다. 이에 따라 유엔은 SDGs 목표를 바탕으로 231개에 달하는 지표를 매칭함으로써 국가별 이행성과를 추적할 수 있는 기반을 채택하고 개별 국가들로 하여금 ECOSOC의 HLPF에 4년 주기로

SDGs 이행성과를 공유하도록 권고하였다. 이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많은 개별 국가들이 SDGs 주요목표에 관한 첫 VNR을 제출하였다. 2015, 2017, 2019년 세 차례 개정된 ‘유엔 사무총장의 VNR 공통보고지침(Secretary-General’s Voluntary Common Reporting Guidelines for VNRs)’은 VNR을 작성하는 회원국의 보고서 작성 방향에 대한 안내와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다.

VNR은 2030 의제인 SDGs 이행을 국가적, 지역적,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한 회원국들에 SDGs 이행에 대한 구속력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유하지 않은 유엔의 태생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각국 정부는 VNR을 통해 국내 SDGs 이행을 위한 전략과 추진체계를 수립하고 이행현황을 보고하는 바, 해당 보고서는 SDGs 관련 국가의 역량을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VNR 작성 가이드라인과 별개로 각 국가별로 다양한 해석을 통한 보고서가 작성되어 보고서의 동질성과 통일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VNR은 현재로서 유엔 회원국의 SDGs 이행에 대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2030 의제 달성에 참여의사를 밝혀오며, 지속적으로 국가 정책 목표에 SDGs를 연계하여 SDG 목표 및 성과지표를 제도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2016년 수립된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2016~2020)의 4개 발전목표를 SDGs 목표와 매칭하였고, 2021년 새로 선정된 경제발전 5개년계획에 SDGs를 통합시킨 만큼 앞으로도 이러한 연계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2020년 ECOSOC 산하 HLPF에 첫 번째 VNR 제출을 약속하였고, ESCAP의 지원을 받아 코로나19로 한 해 연기된 1년 후인 2021년 7월 13일 열린 HLPF에서 VNR 발간을 통해 국제사회에

자국의 SDGs 이행 동향을 보고하였다. 북한은 VNR을 통해 국내 SDGs 이행의지와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와 협력 의지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글로벌 SDGs를 북한 당국의 국가경제발전계획(2021~2025, NDGs)과 연계하여 국가 SDGs를 설정하였으며, 정부 우선 순위를 반영하여 전체 17개 목표, 95개 세부목표, 132개 지표로 구성하였다.^{292/} 북한은 글로벌 SDGs 세부목표의 53%를 수용한 점을 밝히며, 특히 농업, 식수위생 및 공중보건, 에너지, 환경 분야에 중점을 두었다. 북한의 NDGs와 연계된 SDGs 목표는 아래 <표 IV-1>, <표 IV-2>와 같다.

표 IV-1 NDGs 주요 목표와 SDGs 목표 연계

| 목표 | 북한 NDGs | SDGs |
|---------------|------------------------------------|---|
| 사회주의 강국 건설 | 1. 인민의 정부 책임성 강화 및 인민대중 제일주의 구현 | 4, 9, 16 |
| | 2. 과학과 교육을 기반한 모든 부문의 발전 | 4, 5, 9, 12, 14, 17 |
| | 3. 자립과 지식기반 경제 구축 | 1, 2, 3, 4, 6, 7, 8, 9, 10, 11, 12, 13, 14, 15 |
| | 4. 발전된 사회주의 문화 구축 | 1, 3, 4, 9, 13, 14 |
| | 5. 공통목표 | 4, 5, 9, 17 |

출처: 최규빈·홍제환, “북한의 SDGs 이행 동향: ‘자발적 국별 리뷰(VNR)’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p. 5.

표 IV-2 SDGs 목표별 NDGs 연계

| | 목표 | | 목표 |
|---|-----------------------|---|----------------------|
| 1 |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 2 |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및 식량자급 실현 |
| 3 | 건강한 삶 보장, 모든 인민의 웰빙증진 | 4 | 지식인 양성 |
| 5 | 양성평등과 모든 여권 신장 | 6 | 지속가능한 물 접근성 및 위생 보장 |

^{292/}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 | 목표 | | 목표 |
|----|------------------------------------|----|-----------------------------------|
| 7 | 지속가능한 현대적 에너지 접근성 보장 | 8 | 자력갱생·지식경제강국 건설·고용보장 |
| 9 | 인민경제 주체화·현대화·기반시설 현대화 | 10 | 모든 인민대중의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 강화 |
| 11 | 풍요로운 삶의 질과 거주환경 보장 | 12 |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보장 |
| 13 | 기후변화 대응 및 영향 감소조치 | 14 | 지속가능한 연안 및 해양자원 보존 |
| 15 |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토지 비옥도 회복 및 생물 다양성 유지 | 16 | 사회주의 체제 공고화 |
| 17 | 글로벌 파트너십 | | |

출처: 권을 외,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성과와 남북협력과제』, p. 8.

한편 북한은 SDGs를 제도화하는 과정과 함께 SDGs 이행을 위한 성과지표별 모니터링·평가·조정체계를 마련하였다. 북한의 SDGs 추진체계로는 국가 SDGs 세부목표와 이행지표를 수립 및 조정기구인 NTF와 국가통계시스템을 통해 국내외 기관의 데이터 수집과 목표별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NTF에 보고하는 기획팀 산하 6개 TC로 구성된다. 기술위원회는 모두 국가통계시스템의 중점인 중앙통계국 관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학·교육, 사회인구, 공중보건·식수 위생, 환경·생태계, 경제·에너지, 재난위기관리 등 6개로 구분되어 있다.^{293/}

북한의 사회경제현황은 정부의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북한은 SDG 2의 곡물 생산량 목표인 700만 톤을 달성하지 못한 점을 밝혔다.^{294/} 공중 보건 분야에서 무상의료제도와 전문 의료인력 양성을 통한 모성 및 신생아, 5세 미만 아동 사망률과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등 감염률이 감소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여전히 수도 공급 부족 등 안전한 식수

^{293/}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7.

^{294/} *Ibid.*, p. 15

이용에 문제가 존재한다. 특히 에너지의 경우, 에너지와 원자재 부족으로 전력 생산량이 감소하여 수요 충족이 어렵고, 대체 가능한 재생 에너지 기술 보급 또한 진척이 없어 사용 비율 또한 낮음에 따라 에너지 문제 해결이 시급함을 알렸다. 또한 지속적인 기후변화로 태풍과 홍수피해를 입어, 농업생산 기반시설에 큰 피해를 받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SDGs 달성에 있어 주요 장애 요인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봉쇄 조치,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사회경제적 여파,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 등을 언급하며 이에 따라 SDGs 이행을 위한 양자 및 다자 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점 분야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글로벌 지표 SDG 16과 17 등 국제 지표를 북한의 실정에 맞는 지표 도입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 필요성을 언급하였다.^{295/}

한편 북한이 글로벌 규범의 SDGs를 자국 SDGs 지표로 설정하는 과정에서 NDG와 연계하고 북한 체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략화했다. SDGs는 기본적으로 유엔 합의에 따른 공동의 정치적 목표임과 동시에 실제 이행의 실천적 문제 간의 대립을 보여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으며 VNR 또한 국가별 자발적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 통일성의 문제가 함께 제시된다.^{296/} 특히 북한 체제 특성상 정치적 이슈와 관련 있는 SDG 16과 대부분 선진국 의무적 요소가 포함된 SDG 17에 대해 북한이 현시점의 적용이 어려운 만큼 SDG 16은 ‘사회주의 체제 공고화’, SDG 17 ‘글로벌 파트너십 개발’로 재설정하였다.

동 VNR 보고서는 북한이 자발적으로 SDG 이행 관련 정책 추진

^{295/} *Ibid.*, p. 49.

^{296/} 우창빈·김태균·김보경,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의 글로벌 경향성 분석: UN 자발적국별리뷰(VNR)를 중심으로,” p. 76.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공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또한 보고서에 SDG 1(빈곤퇴치), 2(기아종식), 3(건강과 웰빙), 8(경제성장과 일자리) 등 북한의 경제상황과 직결되는 목표와 지표들이 공개됨에 따라, 2016년 본격적인 대북 제재 이행 이후에 북한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불분명하고 불충분한 통계 수치가 제시되고, VNR 이전에 내·외부기관을 통해 제출된 적이 없는 지표들이 다소 존재한다는 점에서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북한과 같은 저개발국의 경우 권력기관을 장악한 정부의 이해관계가 VNR 보고서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가 제출한 이행 계획서와 데이터는 온전히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297/}

나. SDSN 메커니즘

북한은 VNR 보고서에 비교적 SDGs에 대한 높은 수용도를 보여 주었으나, 목표 이행 정도를 구체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실제로 글로벌 VNR 경향성을 연구한 우창빈 외 2인은 국가별로 개발원조 지원을 목적으로 실제 SDGs의 이행역량 대비 계획을 부풀리는 등 강한 정치적 수사의 특성을 보이며, 유엔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작성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사실상 VNR 보고서 원본 자체를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어렵다고 평가한다.^{298/} 유엔 SDSN의 지속가능발전보고서는 글로벌 SDGs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제공하여 객관적인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299/} SDR에 활용된 데이터는 국가별

^{297/} 위의 글, p. 77

^{298/} 위의 글, p. 66.

^{299/} SDR은 지속가능발전 해법 네트워크(SDSN) 및 Bertelsmann Stiftung이 공동으로 집필하며, 2016년부터 발간 중이다. UN 회원국들 대상으로 수집가능한 지표들을 수집하고, 매년 변경된 지표 표기 및 분석방식을 사용하여 방법론을 지속 개선한다. SDG Index, <<https://sdgindex.org/reports>> (검색일: 2022.9.6.).

비교를 위해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통계자료를 활용함에 따라 자국 정부가 제출한 정보 데이터와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300/} SDSN의 SDR은 193개국 모든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SDG 이행현황에 대해 목표별 전반적인 경향성 분석 및 지표별 이행현황 SDG 지수 및 대시보드를 제시하고, 목표들의 조화들로 여섯 가지 광범위 전환 측면에서 SDG 구현을 구성하며 국가별 이행순위를 평가한다. 특히 소득국가와 국가별로 매년 이행하기 어려운 SDGs의 MCR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소득그룹 및 국별 SDGs 세부지표 제시 유무와 이행의 경향성을 측정한다. 최근 발간한 2022년 SDR을 통해 북한의 SDGs에 대한 이행 정도와 전반적인 경향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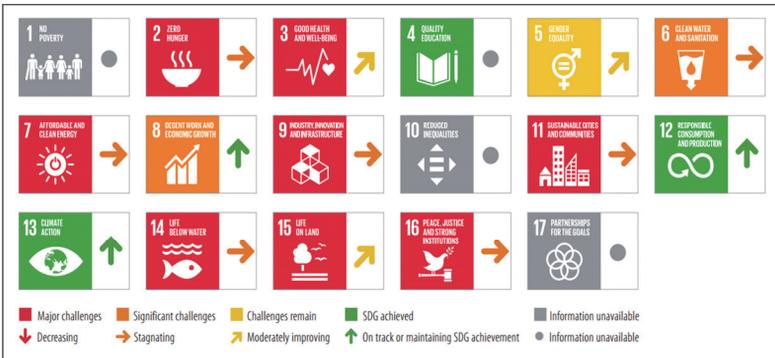
가장 최근에 발간된 2022년 보고서에서 북한의 SDGs 이행현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은 SDSN이 지정한 글로벌지표 94개 중 29개 지표가 미제출로 전체 31%만을 제시하여 데이터 가용성 부족으로 SDGs 지표 미제시 국가 30개국 중 하나로 구분되어 있다. 이에 따라 SDSN이 제시한 여섯 가지 광범위한 전환 측면에서 해당 국가가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확인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SDSN이 제시한 북한의 2022년 주요 도전과제는 <그림 IV-1>과 같이 SDG 2(기아 종식), 3(건강과 복지), 7(에너지), 9(혁신과 인프라), 11(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14(해양생태계), 15(육상생태계), 16(정의, 평화, 제도)으로 여덟 개 목표가 있다. 한편 SDG 1(빈곤 종식), 10(불평등 완화), 17(글로벌 파트너십)은 정보 불충분으로 이행 여부 측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목표별 경향을 살펴보면, 8(양질의 일자리 및 경제 성장), 12(책임있는 소비와 생산), 13(기후

^{300/} Jeffrey D. Sachs et al., *From Crisis to Sustainable Development: the SDGs as Roadmap to 2030 and Beyond*,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2, p. 57.

변화 대응)의 경우 SDG 목표 달성을 유지 중으로 보이며, 2(기아 종식), 7(에너지), 9(혁신과 인프라), 11(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14(해양생태계), 16(평화·정의·제도)은 성과가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3(건강과 복지), 5(성평등), 15(육상생태계)의 경우 앞서 6개 목표보다 완만한 개선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IV-1 북한의 SDG 목표 이행 현황



출처: Jeffrey D. Sachs et al., *From Crisis to Sustainable Development: the SDGs as Roadmap to 2030 and Beyond*,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2, p. 262.

이는 북한이 VNR에서 자체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평가한 기초 보건 지표가 국제적 기준으로는 여전히 주요 도전과제로 구분되며 개선이 정체되어 있다는 것이다. <표 IV-3>과 같이 SDSN이 세부지표를 분석한 결과, 주요과제의 경우 대부분이 정체되어 있는 추세를 보이며 세부지표 중 SDG 2.1(영양 부족 인구 비율), 3.6(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11.3(도시 인구 대비 개선된 상·하수도 접근 인구 비율)에서 이행이 감소된 지표가 확인된다. 한편 북한이 자국의 SDGs 이행에 있어 우선과제 분야를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VNR에서 식수 및 위생시설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진전이 더디어 주거시설에 안전한 식수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않음을 밝혔으며, 식량안보와 영양 부문 해결을 위해 식량 자급 자족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표 IV-3 북한의 SDG 2~16 지표별 주요과제

| 목표 | 이행 내용 | 수치 | 연도 | 평가 | 경향 |
|----------------------------------|---|-------|------|------|----------|
| SDG 2 기아종식 | (2.1) 영양 부족 인구 비율(%) | 42.4 | 2019 | 주요과제 | 감소 |
| | (2.2) 5세 미만 아동 중 발육 부진 비율(%) | 19.1 | 2017 | 주요과제 | 정체 |
| SDG 3 건강과 웰빙 | (3.3) 결핵 발생률(인구 10만 명당) | 523.0 | 2020 | 주요과제 | 감소 |
| | (3.9) 가구 대기 오염으로 인한 DSUFUD 표준화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 207 | 2016 | 주요과제 | - |
| | (3.6) 교통사고(인구 10만 명당) | 24.2 | 2019 | 주요과제 | 감소 |
| SDG 5 성평등 | (5.5) 여성 국회 의석(%) | 17.6 | 2020 | 주요과제 | 정체 |
| SDG 6 깨끗한 물과 위생 | (6.3)(6.a) 인공 폐수 처리(%) | 0.0 | 2018 | 주요과제 | - |
| SDG 7 적정한 가격의 청정 에너지 | (7.1)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인구(%) | 49.4 | 2019 | 주요과제 | 점차 개선 |
| | (7.a) 청정 연료와 요리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 | 10.8 | 2019 | 주요과제 | 정체 |
| | (7.2) 전기 출력당 CO ₂ 배출량 (MtCO ₂ /TWh) | 1.7 | 2019 | 주요과제 | 정체 |
| SDG 8 양질의 일자리 및 경제성장 | (8.7) 현대판 노예제 피해자 (인구 1,000명당) | 104.6 | 2018 | 주요과제 | - |
| SDG 9 산업·혁신· 인프라 | (9.c)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 | 0.0 | 2012 | 주요과제 | - |
| | (9.c) 모바일 광대역 이용(인구 100명당) | 16.6 | 2019 | 주요과제 | 정체 |
| | (9.5)(9.a)(9.b) 과학 및 기술 저널 기사 (인구 1,000명당) | 0.0 | 2020 | 주요과제 | 정체 |
| | (9.5)(9.b) 연구 개발 지출(GDP 대비 %) | 0.0 | 2018 | 주요과제 | - |
| SDG 11 지속가능 한 도시 및 공동체 | (11.6) 대기 물질의 연간 평균 농도가 직경 2.5 마이크로(PM2.5)(μ g/m ³) | 29.8 | 2019 | 주요과제 | 개선 |
| | (11.3) 개선된 상수도, 하수도 접근 (도시 인구 대비 %) | 73.6 | 2020 | 주요과제 | 감소 |

| 목표 | 이행 내용 | 수치 | 연도 | 평가 | 경향 |
|------------------------|--|------|------|------|----|
| SDG 14 해양 생태계 | (14.2)(14.4)(14.5) 생물 다양성에 중요한 해양 공간에서 보호되는 평균 면적(%) | 0.0 | 2020 | 주요과제 | 정체 |
| | (14.c) 해양 건강 지수: Clean Waters 점수(최저 0~100 최고) | 53.8 | 2020 | 주요과제 | 정체 |
| SDG 15 육상 생태계 | (15.1)(15.5) 육상 생물 다양성 보존 지역 비율(%) | 0.0 | 2020 | 주요과제 | 정체 |
| | (15.1)(15.5) 담수 생물다양성 보존 지역 비율(%) | 0.0 | 2020 | 주요과제 | 정체 |
| SDG 16 평화·정의· 제도 | (16.4)(16.5) 부패 인식 지수 (최저 0~100 최고) | 16 | 2021 | 주요과제 | 정체 |
| | (16.7) 언론 자유 지수(최고 0~100 최저) | 81.3 | 2021 | 주요과제 | 정체 |

출처: 한기호, “북한 내 취약계층의 SDGs 달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방안 모색: 제3차 북한-유엔 전략계획 구성을 중심으로,” 『통일연구』, 제26권 1호 (2022), pp. 134~135를 바탕으로 지표 작성; Jeffrey D. Sachs et al., *From Crisis to Sustainable Development: the SDGs as Roadmap to 2030 and Beyond*,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2, p. 263을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북한의 SDGs 지표별 주요과제는 다른 저소득국들의 주요 도전과제와도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SDSN이 지속가능발전보고서에서 구분한 저소득국의 2022년 가장 이행이 어려운 도전과제 전체 10개 중 4개 지표(6.2, 6.3, 9.c, 3.6)가 북한의 국가별 도전과제에 해당되고, 3개 지표(1.2, 16.2, 8.10)는 측정이 불가하나 북한이 처한 상황 고려 시 열악할 것으로 예상되어, 저소득국이 직면한 도전과제와 비슷한 수준이다.

정리하자면, VNR은 개별 국가들의 자발적 SDG 보고 메커니즘으로 현재 개별 국가들에 대한 SDGs 이행성과를 파악하는 자료로 의의가 있다. 한편 SDR은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가별로 이행현황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북한의 SDG 이행의 현 위치와 주요 도전과제 파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VNR과 SDR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글로벌 SDGs의 경향성을 바탕으로 북한의 VNR에서

SDGs 제시 방식을 분석하였다.

한편 우창빈 외가 구분한 5개의 국가별 VNR 내 SDGs 포함 유형들 중 북한은 ‘HLPF 연례 중점분석 대상 SDGs를 일부 포함하여 자국의 우선목표로 설정하는 유형’으로 고려된다.^{301/} 이는 글로벌 경향 중 4번 유형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많은 국가들이 설정한 것이다. 북한이 글로벌 규범의 SDGs를 국가발전목표와 연계를 통해 북한 체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목표 및 지표를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다. 특히 SDG 16, 17 등과 같이 북한의 특성을 고려 시 이행하기 어려운 목표에 대해 SDG 16은 ‘사회주의 체제 강화’, SDG 17은 ‘우호적 파트너십 개발’로 재설정 등 북한식으로 변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302/}

이 중 북한이 VNR을 제출한 2021년 HLPF 연례주제의 중점 분석 대상은 총 9개로, 북한은 4개 목표(2, 3, 12, 13)가 해당되어 HLPF와 VNR 우선목표 간 일치도는 44% 정도이다. 다만 국제사회의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타격이 큰 관계로 경제, 사회, 환경 등 회복과 재건을 목적으로 한 총체적인 주제를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21년의 경우 이전 HLPF 중점 목표 개수보다 많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SDSN MCR 목표와 VNR 우선목표 간 일치도는 MCR 목표 7개 중 VNR 목표가 4개 포함된 57%로 HLPF 중점 목표보다 높다. 이는 HLPF가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을 위한 연례 주제이기 때문에 저소득국

301/ 우창빈 외는 국별 VNR 작성 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총 5개로 구분한. 1) HLPF 연례 중점분석 대상 SDGs와 무관하게 자국의 우선목표를 독립적으로 설정하는 유형, 2) HLPF 연례 중점분석 대상 SDGs를 일부 포함하여 자국의 우선목표를 설정하는 유형, 3) HLPF 연례 중점분석 대상 SDGs 전체(100%)를 우선목표로 포함하여 설정하는 유형, 4) 특정 SDGs를 우선목표로 명시하지 않고 전체 17개의 SDGs를 설정하는 경우, 5) 2회 이상 제출하여 회차별로 우선목표 설정이 상이한 경우 등이 있음. 우창빈·김태균·김보경,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의 글로벌 경향성 분석: UN 자발적국별리뷰(VNR)를 중심으로”를 참고하기 바람.

302/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p. 46~49.

인 북한이 중점으로 두는 방향과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SDSN MCR과 일치도가 높은 이유로 SDSN이 제시한 목표가 북한과 같은 저개발국가의 SDGs 이행현황을 분석하여 선정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을 종합하면, 북한이 자국의 현재 상황에 대한 비교적 객관적 평가와 주요 해결과제를 인지하고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표 IV-4 HLPF 2021 연례주제 및 중점 SDGs

| 구분 | 2021 |
|-------------------|---|
| HLPF 연례주제 | 지속가능발전의 경제·사회·환경적 차원에서 코로나19로부터의 탄력적인 회복: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10년간의 이행을 통한 2030 의제 달성을 위한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방향 구축 |
| 주제별 검토 중점분석 대상 | 1, 2, 3, 8, 10, 12, 13, 16, 17 |

출처: HLPF, <<https://hlpf.un.org/2021>> (검색일: 2022.9.11.)을 바탕으로 재구성.

표 IV-5 SDSN MCR 평가목표 및 HLPF 중점목표 대비 국별 VNR 우선 목표 일치성

| 2021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SDSN MCR 목표 -VNR 우선 목표 간 일치도(%) | HLPF 중점목표-VNR 우선 목표 간 일치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7 |

○: 국별 VNR 우선목표(national priority goal)로 설정된 SDGs

■: UN SDSN '2021 지속가능발전보고서'에서 주요도전과제(MCR)로 지적된 국별 SDGs

출처: 우창빈·김태균·김보경,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의 글로벌 경향성 분석: UN 자발적 국별리뷰(VNR)를 중심으로," pp. 85~90; HLPF, (검색일: 2022.9.11.)을 바탕으로 재구성.

2. 북한 VNR 지표 종합 분석

앞서 VNR과 SDR을 통한 북한의 SDGs 이행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보았다. 이 절에서는 작년 SDGs 목표 분석과 앞 장에서 분석한 북한의 SDGs 목표와 세부지표의 신뢰성 및 지속성 평가를 바탕으로 전체 목표에 대해 지표 엄밀화와 지속성 제고를 위해 추가 측정 역량강화가 필요한 지표를 총괄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303/} 이를 통해 북한 개발협력에 있어 북한의 SDGs 지표 산출,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장에서는 1차년도 연구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표의 신뢰성과 지속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신뢰성은 북한의 현 통계적 역량을 고려 시 지표 측정이 어려운 경우나, VNR이 제출되기 전 다른 북한 내·외부 기관에 의해 지표 및 데이터가 제시된 적이 없었거나, 국제기구 등 다른 외부 통로에서 측정한 데이터값과 상이할 때 지표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북한의 지표 측정에 대한 추가 역량이 요구된다. 지속성의 경우, 북한이 VNR에서 2~3년 주기로 제시한 데이터값 중 3개년도(2015, 2018, 2020)에 대한 모든 지표값이 제시되지 않아 연속성이 떨어지거나, 향후 지표의 중요성이 확대됨으로써 해당 지표에 대한 지속적 측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가. 신뢰성 종합 평가

먼저 제시된 지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시스템 체계화와 관리 역량강화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지표의 엄밀화가 필요

^{303/} SDGs 10개 목표(2, 7, 8, 9, 11, 12, 13, 15, 16, 17)의 경우, 1차년도 연구에서 해당 목표 및 지표에 대한 북한의 VNR 지표를 동일한 분석방법으로 종합 분석 완료하였음에 따라 세부사항은 이전 연구 참조하길 바람. 황수환 외,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의 SDGs 소개와 지표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21).

한 경우와 측정방식이 단순하여도 현장조사가 요구되는 경우는 정확성 관련 역량강화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두 번째로 지표가 이전에 내·외부기관에 제시된 적 없다가 갑자기 나타난 경우에 대해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제별 연계 지표를 위한 데이터 측정역량과 국가통계 자체 정확성이 부족한 북한의 특성 고려 시 북한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지표임에 따라 지표의 신뢰성이 추가로 요구되는 경우도 해당한다. 반대로 지표 정의 자체가 명확하여 과학적 측정방식을 통해 단순 측정 기술만이 필요한 경우나 연도별 지표를 모두 제시하여 측정 노하우가 존재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지표들에 대해서는 다른 지표 대비 정확성 확보를 위한 추가 노력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구분하였다.

북한이 제시한 지표 70개 중 정확성 제고를 위한 추가 역량강화가 필요한 지표는 47개이다. 지표의 엄밀화가 필요한 사항이 30개로 가장 많으며 관련 지표로는 통계의 세밀화가 필요한 경우와 북한이 처한 인도적 위기(SDG 2, 기아종식)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해당 지표들은 현재 중요한 지표로 세분화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두 번째로 저개발국인 북한의 특성상 향후 국가의 발전을 통해 지표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표로 총 12개 지표가 있으며, 주로 국가의 경제발전과 관련 있는 SDG 8(경제성장)과 SDG 9(인프라), SDG 11(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분포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가장 많은 수의 지표를 제시한 SDG 11은 북한이 경제발전과 함께 도시화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국가발전정책의 목표와 SDGs를 연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의 경제 발전 시 도시화는 피할 수 없는 지표임에 따라, 관련 지표의 엄밀화가 필요하다. 또한 북한이 이전 내·외부기관에 지표를 제시한 적 없고 국제적 기준으로 측정

시 북한이 제시한 지표값과 큰 편차를 가지고 있는 SDG 3, 4 또한 북한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표 측정의 정확성이 요구된다. 북한의 일부 데이터 측정에 있어 그대로 측정되기보다는 북한의 체제 유지와 관료체계 내에서의 성과주의 등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북한이 제시한 지표 중 대부분의 지표가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이는 북한이 당국의 열악한 데이터 수집 역량을 인정한 것처럼 통계 자체의 정확성이 미흡한 바 관련 주제별 지표 측정역량과 전반적인 통계시스템 구축 역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나. 지속성 종합 평가

지속성 측정을 위한 역량강화가 필요로 하는 지표는 VNR에서 제시한 3개년 지표값이 제시되지 못한 경우와 향후 해당 지표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속적인 측정이 요구되는 경우로 구분된다. 특히 지표의 중요성은 2개로 세분화하였는데 이는 국가 정책 등 북한 특성상 중요한 요소로 판단될 경우와 국제적으로 지표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속적인 측정이 요구되는 경우로 지속적인 데이터 확보를 위한 시스템 및 관리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간주하였다.

북한이 제시한 세부지표에서 지속적인 측정을 위한 역량강화가 필요한 지표는 총 70개 중 63개이다. 역량강화에 대한 노력이 요구되지 않은 지표들은 대부분 측정 방식이 명확하고 세 차례 모두 지표값을 제시한 지표들이다. 지속성이 요구되는 지표들은 정확성 제고가 필요한 지표보다 16개로 더 많이 분류되었다. 이는 북한이 지표를 연속적으로 제시하고 지표값을 가지고 있더라도 국가의 발전 초기 단계에 있는 저개발국인 북한이 앞으로 여러 발전 단계에 있어 지속적인 지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특성

에 따라 지표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경우가 총 51개로 대부분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북한이 제시한 지표들 중 국제사회가 강조하고 있는 환경, 평화, 인권 등 주요 규범과 개발목표와 연관되어 글로벌 추세에 맞게 중요성이 더 커지는 지표들은 5개로 이에 대한 추가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국제사회의 규범 중 환경적 측면에서 글로벌 SDGs 달성을 위한 공동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이 요구된다. 이들 지표로는 이산화탄소 배출 관련 9.4.1, 13.2.1 등이 있으며, 해당 지표의 지속적인 측정은 글로벌 측면에서도 공동의 목표를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6 북한 SDG 지표 신뢰성 및 지속성 평가

| 목표 및 지표 | 북한 VNR 지표 내용(단위) | 정확성 확보 위한 추가 역량강화 필요 지표 | | | 지속성 측정 위한 추가 역량강화 필요 지표 | | |
|---------|---|---|-----------------------|-----------------------------|-------------------------------|-----------------------------|-------------------------------------|
| | | 지표 업일화 필요 | 지표 수집의 불연속 성 | 북한 특성 고려 정확성 필요 | 지표값 미제시 | 북한 특성 고려 지표 중요성 | 글로벌 추세에 따른 지표 중요성 확대 |
| SDG 1 | 1.5.1 인구 10만 명당 재난으로 인한 사망, 실종,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수 | 인구 10만 명당 재해로 인한 사망자 및 실종자 수(전체) 사망 실종 | ○ | | | ○ | |
| | 1.5.3 '재난위험감축을 위한 센다이프레임 워크(2015~2030)'에 따라 국가재난 위험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 국가 재해 위험 감소 전략 | | × | | ○ | |
| | 1.5.4 국가의 재난위험감축전략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전략을 갖추고 있는 비율 | 국가 전략에 따라 채택된 지역 재해 위험 감소 계획의 비율(%) | | ○ | | × | |
| SDG 2 | 2.1.1 영양 부족 현황(POU) | 식량부족(1,000t) | ○ | | | ○ | |
| | 2.2.1 5세 미만 아동 중에서 연령대비 신장이 WHO 아동 성장표준 중간 값으로부터 표준편차가 -2 미만인 발육 부진 현황 | 5세 미만 아동의 발육부진 유병률 (키 < -2)(%) | ○ | | | ○ | |
| | 2.2.2 5세 미만 아동 중에서 신장 대비 체중이 WHO 아동성장표준 중간 값으로부터 표준편차가 >+2 또는 <-2 인 영양 불량 현황(형태별: 저체중, 과체중) | 5세 미만 아동의 영양실조 유병률(키에 대한 몸무게 > +2 또는 < -2)(%) | ○ | | | ○ | |

| 목표 및 지표 | 북한 VNR 지표 내용(단위) | 정확성 확보 위한 추가 역량강화 필요 지표 | | | 지속성 측정 위한 추가 역량강화 필요 지표 | | |
|---|---|---------------------------------------|-----------------------|-----------------------------|-------------------------------|-----------------------------|-------------------------------------|
| | | 지표 엄밀화 필요 | 지표 수집의 불연속 성 | 북한 특성 고려 정확성 필요 | 지표값 미제시 | 북한 특성 고려 지표 중요성 | 글로벌 추세에 따른 지표 중요성 확대 |
| SDG 2 | 2.4.1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에 사용 되는 농지면적 비율 | X (측정 방식 명확) | | | | | ○ |
| | 2.5.1 식량 및 농업을 위해 중장기 보존 시설 에 확보되어 있는 식물과 동물의 유전 자원의 수 | | | ○ | | ○ | |
| | 2.5.2 멸종 위기에 있는, 멸종 위기에 있지 않은, 혹은 알려지지 않은 멸종 위기에 처한 것으로 분류되는 지역품종의 비율 | X (측정 방식 명확) | | | | | ○ |
| SDG 3 | 3.1.1 모성 사망비 | 인구 10만 명당 산모 사망률 | ○ | | | ○ | |
| | 3.1.2 숙련된 의료 인력이 참여한 출산 비율(%) | 전문 의료 인력이 참여한 출산 비율 | ○ | | | ○ | |
| | 3.2.1 5세 미만 사망률 | 인구 1,000명당 5세 미만 아동사망률 | ○ | | | ○ | |
| | 3.2.2 신생아 사망률 | 인구 1,000명당 신생아 사망률 | ○ | | | ○ | |
| | 3.3.1 비감염인구 1,000명당 HIV 신규 감염 자 수(성, 연령 및 주요 인구 특성별) | 감염되지 않은 인구 1,000명당 신규 HIV 감염자 수 | ○ | | | ○ | |
| | 3.3.2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 건수 |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률 | ○ | | | ○ | |
| | 3.3.3 인구 1,000명당 말라리아 발생 건수 | 인구 1,000명당 말라리아 발병률 | ○ | | | ○ | |
| | 3.3.4 인구 10만 명당 B형간염 발생 건수 | 인구 10만 명당 B형간염 발생률 | ○ | | | ○ | |
| | 3.3.5 소외열대질환에 대한 개입이 필요한 인구수 | 소외열대질환에 대한 개입이 필요한 인구수 | ○ | | | ○ | |
| | 3.6.1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 | ○ | | | ○ | |
| 3.7.1 현대적 피임법 사용으로 가족계획 욕구가 충족되는 가임기(15~49세) 여성의 비율 | 가족계획이 필요한 가임기 여성(15~49세) 중 현대적인 방법에 대한 만족도 | ○ | | | ○ | | |

| 목표 및 지표 | 북한 VNR 지표 내용(단위) | 정확성 확보 위한 추가 역량강화 필요 지표 | | | 지속성 측정 위한 추가 역량강화 필요 지표 | | |
|----------------|--|--|-----------------------|-----------------------------|-------------------------------|-----------------------------|-------------------------------------|
| | | 지표 엄밀화 필요 | 지표 수집의 불연속 성 | 북한 특성 고려 정확성 필요 | 지표값 미제시 | 북한 특성 고려 지표 중요성 | 글로벌 추세에 따른 지표 중요성 확대 |
| SDG 3 | 3.7.2 여성 청소년(10~14세, 15~19세) 인구 1,000명당 출산율 | ○ | | | | ○ | |
| | 3.8.1 필수보건서비스 보장 범위 | ○ | | | | ○ | |
| | 3.9.3 비의도적 중독 사망률 | ○ | | | | ○ | |
| | 3.a.1 연령표준화한 15세 이상 인구의 현재 흡연율 | ○ | | | | ○ | |
| | 3.b.1 국가정책에 포함된 모든 백신을 접종한 인구의 비율 | ○ | | | | ○ | |
| | 3.b.2 의학연구 및 기초보건 부문 ODA 순 지출액 | | | X (측정 방식 명확) | | ○ | |
| | 3.c.1 보건의료 인력밀도 및 분포 | 인구 1,000명당 의료 일군의 밀도 및 분포(의사(치과의사 포함) 간호원 조산사, 약사 기타) | ○ | | | | ○ |
| 보건 부문 예산 지출 비율 | | X (측정 방식 명확) | | | | ○ | |
| SDG 4 | 4.1.1 (a) 초등학교 2~3학년 (b) 초등학교 말 (c) 전기 중등교육 말에 (i) 읽기와 (ii) 수학 분야에서 최소 숙달 수준에 도달 한 아동/청소년의 비율 | | | ○ | | ○ | |
| | 4.2.1 건강, 학습, 사회심리적 안녕의 발달 정도가 일반적인 5세 미만 아동의 성별 비율 | | | ○ | | ○ | |
| | 4.2.2 (정규 초등교육 입학 1년전) 조직화된 학습 참여 성별 비율 | | ○ | | | ○ | |
| | 4.4.1 기술 유형별 ICT 기능을 보유한 청년과 성인의 비율 | | | ○ | | ○ | |

| 목표 및 지표 | 북한 VNR 지표 내용(단위) | 정확성 확보 위한 추가 역량강화 필요 지표 | | | 지속성 측정 위한 추가 역량강화 필요 지표 | | |
|---|---|-------------------------------|---------------------------------|-----------------------------|-------------------------------|-----------------------------|-------------------------------------|
| | | 지표 엄밀화 필요 | 지표 수집의 불연속 성 | 북한 특성 고려 정확성 필요 | 지표값 미제시 | 북한 특성 고려 지표 중요성 | 글로벌 추세에 따른 지표 중요성 확대 |
| 4.5.1 세분화할 수 있는 이 목록의 모든 지표 대상 형평성 지수(여성/남성, 농촌/도시, 소득 상위/하위 5분위 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장애 형태, 선주민, 분쟁 영향 여부 등) | 모든 교육 지표에 대한 형평성 지수 1) 여성/남성별 초등, 중등, 고등교육 조정 순 취학률 2) 하위20%/ 상위40% (자산지수)의 초등, 중등, 고등교육 조정 순 취학률 3) 농촌/도시간 초등, 중등, 고등교육 조정 순 취학률 | | ○ | | | ○ | |
| SDG 4 4a.1 (a) 전기 (b) 교육 목적의 인터넷 (c) 교육 목적의 컴퓨터 (d) 장애학생을 위한 설비와 자료 (e) 기초 식수 (f) 남녀 구분 기초 위생 시설 (g) (WASH 기준 부합) 기초 손 씻기 시설 등에 접근할 수 있는 학교 비율 | 다음 항목에 접근 가능한 학교 비율 (a) 전기 (b) 청년 교육을 위한 내부 전산망 (인트라넷) (c) 청년 교육을 위한 컴퓨터 (d) 학령기 아동 및 장애아동을 위한 공공기반시설 및 교육재료 (e) 안전한 식수 (f) 성별로 분리된 위생시설 (g) 기본적인 손씻기 시설 | | X (세 차례 걸쳐 모두 제시, 측정 노하우 구축) | | | ○ | |
| 5.1.1 성별에 따른 평등 및 차별금지를 증진, 강제 그리고 모니터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준비되어 있는지 여부 | 성평등에 관한 법적체계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 | X (법령 제정 완료) | | | ○ | |
| SDG 5 5.5.1 국회 및 지방정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의석 비율 | 여성이 차지하는 의석(대의원) 비율 (a) 최고인민회의 (b) 지방인민회의 | | X (측정방식 명확) | | | ○ | |
| 5.6.1 성관계, 피임제 사용 및 임신보전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하는 15~49세 여성 비율 | 생식 보건에 대한 정보에 기반한 결정 피임제 사용 비율 가족계획 비충족 요구 비율 | ○ | | | | ○ | |

| 목표 및 지표 | 북한 VNR 지표 내용(단위) | 정확성 확보 위한 추가 역량강화 필요 지표 | | | 지속성 측정 위한 추가 역량강화 필요 지표 | | |
|----------------------------------|---|--|---------------------------------|-----------------------------|-------------------------------|-----------------------------|-------------------------------------|
| | | 지표 엄밀화 필요 | 지표 수집의 불연속 성 | 북한 특성 고려 정확성 필요 | 지표값 미제시 | 북한 특성 고려 지표 중요성 | 글로벌 추세에 따른 지표 중요성 확대 |
| SDG 5 | 5.6.1 성관계 피임제 사용 및 임신보건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스스로 의 사결정을 하는 15~49세 여성 비율 | 15세 이상의 여성과 남성에게 성·생식 보건, 정보 및 교육에 대한 완전하고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법률 및 규정 (국가 5개년 생식보건 전략) | X (전략 수립 지속 노력) | | | | ○ |
| | 5.b.1 휴대폰을 소유한 개인의 비율(성별) | 15~49세 성별 휴대폰 보유 개인 비율 | | ○ | | ○ | |
| SDG 6 | 6.1.1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 비율 |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서비스 이용 인구 비율 | | | ○ | | ○ |
| | 6.2.1 (a)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서비스 시설과 (b) 비누와 물이 있는 손씻기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시설 이용 인구 비율 | | | ○ | | ○ |
| SDG 7 | 7.1.2 청정연료 및 기술에 주로 의존하는 인구 비율 | 청정 연료 및 기술에 1차적으로 의존하는 인구 비율(%) | | | ○ | ○ | |
| | 7.2.1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 | 전체 에너지 소비 최종단계에서 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 | X (세 차례 걸쳐 모두 제시, 측정 노하우 구축) | | | | ○ |
| | 7.3.1 1차 에너지와 GDP로 측정되는 에너지 집약도 | 1차 에너지와 GDP 차원에서 측정된 에너지 집중도(GJ/1,000달러) | X (세 차례 걸쳐 모두 제시, 측정 노하우 구축) | | | | ○ |
| SDG 8 | 8.1.1 1인당 실질 GDP 연 성장률 | 연간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 | | ○ | | ○ |
| | 8.2.1 취업자 1인당 실질 GDP 연 성장률 | 근로자 1인당 연간 실질 GDP 성장률 | | | ○ | | ○ |
| | | 정부 지출에서 R&D 비율(%) | | X (측정 방식 명확) | | | |
| | 8.5.1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성, 연령, 직업 및 장애별) | 고용 인구 비율 | X (측정 방식 명확) | | | | ○ |
| 8.9.1 총 GDP 및 성장률에 관광분야 직접 기여 비율 | 전체 GDP 및 성장률에서 관광업 비율 | | | ○ | | ○ | |
| SDG 9 | 9.2.1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 ○ | | | ○ | |

| 목표 및 지표 | 북한 VNR 지표 내용(단위) | 정확성 확보 위한 추가 역량강화 필요 지표 | | | 지속성 측정 위한 추가 역량강화 필요 지표 | | |
|---------|---|--|---------------------------------------|-----------------------------|-------------------------------|-----------------------------|-------------------------------------|
| | | 지표 엄밀화 필요 | 지표 수집의 불연속 성 | 북한 특성 고려 정확성 필요 | 지표값 미제시 | 북한 특성 고려 지표 중요성 | 글로벌 추세에 따른 지표 중요성 확대 |
| | | | | | | | |
| SDG 9 | 9.4.1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GDP당 CO ₂ 배출량 | | ○ | | | ○ |
| | 9.5.1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 GDP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 비율(%) | ○ | | | ○ | |
| | 9.5.2 인구 100만 명당(상근상당) 연구자 수 | 인구 100만 명당 연구자 수(인) | X (측정 방식 명확, 다년간 수치 제시로 측정 노하우 구축) | | | | |
| SDG 11* | 11.1.1 빈민가, 임시거처 또는 비적정 거처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 공유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 | ○ | | | | ○ |
| | 11.3.1 인구증가를 대비 토지소모율 비 | 인구증가를 대비 토지소비용 비율(%) | X (아직 현 북한의 발전 단계에서는 추가 역량강화 불요) | | | | |
| | 11.4.1 모든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존, 보호 및 관리에 배정된 1인당 총 지출액 (자금원천(공공, 민간), 유산종류(문화, 자연), 정부유형(중앙, 광역, 시군별)) | 자연보호구역 수(개수) 천연기념물 수(개수) | X (측정 방식 명확, 다년간 수치 제시로 측정 노하우 구축) | | | | |
| | 11.a.1 인구증가에측과 소요자원을 통합하여 수립된 도시 및 지역개발계획을 이행하는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비율 (도시규모별) | 도시 거주 인구 비율(%) | | ○ | ○ | | ○ |
| | SDG 13* | 13.2.1 국가감축기여목표(NDCs), 장기 전략, 국가적응계획 등을 보유한 국가의 수 | 격년마다 제출하는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국가계획 보고서 수 | X (국가계획 보고 및 목표 수립 노력) | | | ○ |
| SDG 14 | 14.5.1 해양구역 대비 보호구역 비율 | 해양구역 대비 보호구역 범위(%) | X (측정 방식 명확) | | | ○ | |
| SDG 15 | 15.1.1 총 국토면적 중 산림 면적의 비율 | 전체 토지면적 중 숲지대 비율(%) | X (측정 방식 명확) | | | ○ | |
| | 15.2.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상황 | 지속가능한 숲 관리를 향한 진전 a) 보호 숲지대 비율(%) b) 매년 숲지대 증가율(%) c) 헥타르 당 숲의 누적량 (M2ha) | ○ | | | ○ | |
| | 15.3.1 황폐화된 국토면적 비율 | 전체 육지면적 중 황폐화된 땅 비율(%) | ○ | | | ○ | |
| | 15.4.1 산악생물다양성 중요 지역 중 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면적 비율 | 산악지역 생물다양성을 위한 주요 구역 중 보호구역 범위(%) | X (측정 방식 명확) | | | ○ | |

| 목표 및 지표 | 북한 VNR 지표 내용(단위) | 정확성 확보 위한 추가 역량강화 필요 지표 | | | 지속성 측정 위한 추가 역량강화 필요 지표 | | |
|--|--|-------------------------------|-----------------------|--|-------------------------------|--|-------------------------------------|
| | | 지표 엄밀하 필요 | 지표 수집의 불연속 성 | 북한 특성 고려 정확성 필요 | 지표값 미제시 | 북한 특성 고려 지표 중요성 | 글로벌 추세에 따른 지표 중요성 확대 |
| 15.4.2 산악녹색피복지수 | 산 녹화 지수(%) | ○ | ○ | | | ○ | |
| 15.5.1 적색목목지수 | 적색 목목 지수 동물/ 식물/ 하위 식물/ 위기종 | ○ | ○ | | | ○ | |
| SDG 15 15.8.1 외래침입종의 유입 예방과 통제를 위해 국가 차원의 법률과 적당한 수단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비율 | 외부침입종의 방지와 억제를 위한 관련 국가 법령 “국경에서의 동물과 식물 검역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법”,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 | | | X (측정 방식 명확, 국가 법률 채택 완료) | | |
| 15.9.1 (a)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아이치 목표 타겟2에 따라 국가 차원의 목표를 수립한 국가의 수와 그 목표에 따른 보고 진전도 (b) 환경경제계 정 구현을 위한 국가 회계 및 보고 시스템과 생태다양성의 통합 | 생물다양성 가치 발전 계획의 통합(%) | ○ | ○ | | | ○ | |
| SDG 16 16.9.1 5세 미만 중 행정 당국에 출생 등록 된 자의 비율(연령별) | 출생 시 행정 당국에 등록된 5세 이하 유아비율 | | | X (북한 체제 특수성 고려할 때 신뢰성 의문 제기 불필요) | | X (SDG 16 제시가능한 유일한 지표로 지속적인 측정 및 제시 가능할 것으로 예상) | |
| SDG 17 17.6.1 인구 100명당 유선 초고속인터넷 가입률(속도별) | 국가 간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협정과 프로그램의 수(협력 형태별, PCS) | | | X (정확성 불필요 지표) | | X (다른 데이터 소스로 측정 가능함) | |

*주: 13.1.1, 13.1.2, 13.1.3 지표는 SDG 11에서 제시된 세부지표와 동일함에 따라 생략.
출처: SDG 9개 지표(2, 7, 8, 9, 11, 13, 15, 16, 17)의 경우 이전 연구인 황수환 외,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의 SDGs 소개와 지표분석』, pp. 306~317을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북한이 제시한 VNR 내 전체 목표와 세부지표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환경 등 전반적인 발전 측면에서 필수적인 지표들이 대다수인 바 주제별 연계지표에 대한 개선과 함께 측정의 정확성과 지속성 제고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여러 분야에 걸친 다양한 지표들의 지속적인 측정을 위해서는 당국의 통계 및

지표 측정역량 관련 정책 및 제도 수립과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되며, 인적역량강화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 북한은 안정적 자원 확보와 함께 IAEG-SDG가 제시한 지표 관리 가능 국제기구들과 북한 간 협업체계 구축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겠다.

3. 북한 VNR 지표역량강화 우선순위 도출

이 절에서는 현재 북한 경제 및 사회 발전 수준과 상황을 고려하여 <표 IV-7>과 같이 북한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이슈와 북한의 VNR 중점분야와 관련하여 추가 역량강화와 개발이 필요한 지표들을 선별하였다. 앞 절에서 개별목표에 대한 신뢰성과 지속성 제고가 요구되는 지표들을 분석했다면, 이번 절에서는 분야별 개발 필요 지표들을 분석한다.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 측면에서 목표 간 조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제시된 지표의 경우 관련 이슈 해결을 위해 총체적인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역량강화를 도출하였으며, 미제시된 지표의 경우 시간적 선후상황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개발 및 측정이 필요한 목표를 선별하였다.

표 IV-7 북한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우선 중점분야

| 구분 | | 해당 SDG 목표 |
|-------------|-------------------|---|
| 1. 인도적 위기대응 | 가. 추가 역량강화 필요한 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안보: SDG 2 • 재난위기관리: SDG 1* • 인권: SDG 5, 8 |
| | 나. 미제출 지표 도출 과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 SDG 1 • 식량안보: SDG 2, 12 • 재난위기관리: SDG 1 • 인권: SDG 5, 8, 10, 11, 16 |

| 구분 | | 해당 SDG 목표 |
|-------------------------|-------------------|--|
| 2. 북한 NDG 연계 (VNR 중점분야) | 다. 추가 역량강화 필요한 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SDG 2 • 공중보건: SDG 3 • 깨끗한 물과 위생: SDG 6 • 에너지: SDG 7 • 인프라: SDG 9 • 환경: SDG 13, 14, 15 |
| | 라. 미제출 지표 도출 과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SDG 2 • 공중보건: SDG 1, 3 • 깨끗한 물과 위생: SDG 6 • 에너지: SDG 7 • 인프라: SDG 9 • 환경: SDG 6, 12, 13, 14, 15 |

* 주:북한은 재난 위기 관리와 관련하여 SDG 11과 13에 동일 지표를 제시함.
출처: "DPRK VNR 2021,"; 북민협 번역, "북한 VNR 보고서 2021"을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먼저 북한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은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현재 북한에 대한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인도적 지원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304/} 다른 이슈 대비 우선적으로 대북지원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SDGs 달성을 위해 북한의 이행 의지를 북돋을 협력방안으로 북한이 SDGs 이행에 중점을 두고 있는 농업, 식수위생, 공중보건, 에너지, 환경 등 중점분야들에서 우선순위를 구분해 볼 것이다. 북한은 VNR 보고서에 SDGs에 국가발전목표와 연계를 통해 해당 분야가 자국의 SDGs 중점분야임을 밝힌 바 있으며, 동 분야는 SDGs 이행을 위한 NTF 산하 기술위원회의 6개 분야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북한의 의지 확인이 가능하다.^{305/} 이러한 북한의 관심 분야의 지표 개발 및 측정 역량강화 지원은 북한의 글로벌 개발의제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의

304/ 최규빈·홍제환, "북한의 SDGs 이행 동향: '자발적 국별 리뷰(VNR)'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p. 12.

305/ 기술위원회(TC)는 모두 국가통계시스템의 중점인 중앙통계국 관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학·교육, 사회인구, 공중보건·식수위생, 환경·생태계, 경제·에너지, 재난위기관리 등 6개로 구분되어 있다.

지를 가지게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제시한 지표의 경우, 앞서 분석한 지표별로 신뢰성, 정확성 평가 기준에 따라 관련 이슈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강화가 필요한지 살펴볼 것이다. 한편 미제출 지표 중 도출 과제의 경우, 이전 연구와 함께 현재 북한의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과 상황을 고려하여 지표 개발과 측정 및 관리에 우선시되는 지표를 선정해보았다. 이 절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SDGs 목표 중 북한이 처한 인도주의 상황, 국가발전전략과 연계된 지표 개발 및 수치 측정에 시간적 선후사항을 구분지어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국제사회에서 티어 I 이나 티어 II로 구분되고, 1) 해당 지표 수집 기술이 단순하여, 적은 노력으로 측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국제협력을 통해 측정 가능한 지표일 경우, 2) 북한 체제의 특성과 역량 고려 시 중요한 지표일 경우, 3) 국제사회에서 중요시되어 북한의 관심이 요구되는 경우, 4) 체제 특성상 민감 정도 등으로 시급성을 나누어 보았다. 또한 이전 연구와 앞 장에서 제시한 해당 미제시 지표에 대해 국제 사회의 지표 관리 기관을 확인하고, 추가로 어떤 우리 정부 부처와 협력이 가능한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306/}

가. 북한의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추가 개발 필요 지표 분석

북한은 지속적인 대북 제재와 봉쇄,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인도적 위기에 놓여져 있다. 북한이 처한 대표적인 인도적 위기는 빈곤과 지속된 식량난,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 및 식량생산의 악순환, 인권 탄압 등이 있다. 우선적으로 식량안보 해결을 위해서는 SDG 1(빈곤

^{306/} SDG 10개 지표(2, 7, 8, 9, 11, 12, 13, 15, 16, 17)에 대한 북한 지표 분석은 이전 연구에서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황수환 외,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의 SDGs 소개와 지표분석』, pp. 277~340.

종식)과 2(기아종식) 달성이 필수적이다. 매해 자연재해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난대응 관리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공개하지 않았지만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 탄압은 당국의 거부반응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인권보호가 중요한 국제적 규범임에 따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보았다. 이 세 가지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해 관련 SDG 목표에 대한 북한이 제시한 지표 중 어떤 추가 역량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미제시한 지표 중 개발과 측정이 우선되는 지표들을 선별해보고자 한다.

(1) 식량안보

표 IV-8 식량안보 측면에서 추가 역량강화 필요 지표

| 목표 | 지표 | 북한 VNR | | | | 신뢰성 및 지속성 평가 | |
|-------|---|--|-------------|---------------|------|---|---------------------------------------|
| | | 지표 내용 (단위) | 지표값 | | | 정확성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표 | 지속적 측정역량 강화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표 |
| | | | 2015 | 2018 | 2020 | | |
| SDG 2 | 2.1.1 영양 부족 현황(POU) | 식량부족 (1,000) | 1,147 | 1,486 | - | ○ | ○ |
| | 2.2.1 5세 미만 아동 중에서 연령대비 신장이 WHO 아동 성장표준 중간 값으로부터 표준편차가 -2 미만인 발육 부진 현황 | 5세 미만 아동의 발육부진 유병률 (키 <-2%) | 27.9 | 19.1 | 17.4 | ○ | ○ |
| | 2.2.2 5세 미만 아동 중에서 신장 대비 체중이 WHO 아동성장표준 중간 값으로부터 표준편차가 >+2 또는 <-2 인 영양 불량 현황(형태별: 저체중, 과체중) | 5세 미만 아동의 영양실조 유병률 (키에 대한 몸무게 >+2 또는 <-2%) | - (2012) | 4.8 (2017) | 4.5 | ○ | ○ |

출처: 황수환 외,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의 SDGs 소개와 지표분석』, pp. 306~307.

특히 SDG 2는 식량안보와 관련된 목표로 북한의 식량난 해결을 위해 직결된 목표이다. VNR에 따르면 북한 내 식량안보와 영양 부문에 있어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이 실시되고 있음에 따라 현황 평가를 위해 비교적 해당 지표를 정례적으로 측정해 왔을 것으로 추정되어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2022년 SDR이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여전히 SDG 2 관련 지표 2.1.1 ‘영양 부족인구비율(%)’은 개선 정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2.2.1 ‘5세 미만 아동 발육 부진 비율(%)’ 개선정도가 정체되어 있는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도전과제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기구의 측정 방식에 대해 지속된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하며, 해당 지표가 인도주의 상황 평가에 있어 유일한 핵심지표라는 점에서 지속 측정을 위한 통계역량강화와 북한 내 지표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한 지표로 판단된다.

(2) 재난위기관리

북한은 매해 자연재해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바, 재해에 대한 복원력 강화는 북한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VNR에 따르면 북한의 국토 중 74%가 산악지대로 다수의 강과 하천 유역을 포함하고 있어, 최근 5년 동안 매년 태풍과 홍수로 심각한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307/}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해는 농업생산 기반시설에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식량안보와도 직결되는 중요 문제임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책과 계획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307/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37.

표 IV-9 재난위기관리 측면에서 추가 역량강화 필요 지표

| 목표 | 지표 | 북한 VNR | | | | 신뢰성 및 지속성 평가 | |
|-------|--|--|----------------------|---------------------|----------------------|---|---------------------------------------|
| | | 지표 내용 (단위) | 지표값 | | | 정확성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표 | 지속적 측정역량 강화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표 |
| | | | 2015 | 2018 | 2020 | | |
| SDG 1 | 1.5.1 인구 10만 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 수 | 인구 10만 명당 재해로 인한 사망자 및 실종자 수(전체 사망 실종) | 0.43 0.34 0.09 | 0.59 0.29 0.3 | 0.47 0.42 0.05 | ○ | ○ |
| | 1.5.3 '재난위험감축을 위한 센다이프레임워크(2015~2030)'에 따라 국가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 국가 재해 위험 감소 전략 | - | 수립 | - | × | ○ |
| | 1.5.4 국가의 재난위험감축 전략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전략을 갖추고 있는 비율 | 국가 전략에 따라 채택된 지역 재해 위험 감소 계획의 비율(%) | 0 | 0 | 100 | ○ | ○ |

출처: 황수환 외,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의 SDGs 소개와 지표분석』, pp. 311~312.

북한은 이에 따라 자국의 SDG 1, SDG 11과 SDG 13을 통해 재난 위기관리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였다.^{308/} SDG 1 목표 중 1.5.1의 경우 재난에 취약한 북한의 과거부터 재난 피해자 규모 측정역량에 대해 국제사회가 지속된 우려를 표한 점과 1.5.4 지표의 경우 과거 두 차례 비율을 제시하지 않다가 마지막 해에 100%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두 지표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두 지표들에 대한 지표 엄밀화와 지속성 제고를 위한 추가 역량강화가 필요

^{308/} 북한은 재난 위기 관리와 관련하여 SDG 1과 11, 13에 동일 지표를 제시하였다. 1.5.1 '인구 10만 명당 사망 및 실종자 수'의 경우 11.5.1, 13.1.1과 동일하며, 1.5.3 '국가재난위험감축정책'의 경우 11.b.1, 13.1.2와 동일하고, 1.5.4 '국가 정책에 적용된 지역재난경감계획 비율'은 11.b.2, 13.2.1. 지표와 동일하다.

하다. 한편 1.5.3은 전략 수립으로 신뢰성에 대해 의문제기가 필요하지 않는 바 수립된 전략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측정을 통한 업데이트만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 인권

인권은 국제사회의 중요 규범 중에 하나로 북한의 폐쇄적인 사회 특성상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나 VNR에서 인권에 대해 사회주의국가로서 만인이 평등함에 따라 노동 관련 인권 문제가 존재하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공공연하게 알려진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고려하면 지표값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역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북한은 인권 관련 지표를 대부분 제시하지 않았으며, SDG 5(성평등)의 양성평등과 SDG 8(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의 노동권 관련 지표만을 유일하게 제시하였다. 성평등의 경우,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국가인 만큼 남녀평등의 가치를 과거부터 법에 반영해왔다. 5.1.1 지표는 법 제정이 관련된 만큼 별도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없으나, 사회 변화를 반영한 법률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지속적인 측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8.5.1 ‘고용 인구 비율’의 경우, 이 지표로는 근로자의 노동환경 진단이라는 해당 지표를 측정하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바 경제상황과 함께 사회발전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측정이 요구되는 지표이다. 해당 지표는 측정 방식이 명확함에 따라 추가로 정확성을 제고하는 노력은 요구되지 않는다.

표 IV-10 인권 측면에서 추가 역량강화 필요 지표

| 목표 | 지표 | 북한 VNR | | | | 신뢰성 및 지속성 평가 | |
|-------|--|-----------------------------|----------------|------|----------------|---|---------------------------------------|
| | | 지표 내용 (단위) | 지표값 | | | 정확성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표 | 지속적 측정역량 강화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표 |
| | | | 2015 | 2018 | 2020 | | |
| SDG 5 | 5.1.1 성별에 따른 평등 및 차별금지율 증진 강제 그리고 모니터링 가능한 법률적 기반이 준비되어 있는지 여부 | 성평등에 관한 법적체계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 1946.7.30. | - | - | X | ○ |
| SDG 8 | 8.5.1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성, 연령, 직업 및 장애별) | 고용 인구 비율 | 53.8 (2014) | - | 55.3 (2019) | X | ○ |

출처: 북한 지표는 “DPRK VNR 2021,” pp. 53~54, pp. 60~61; 북민협 번역, “북한 VNR 보고서 2021,” pp. 51~53, pp. 58~59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SDG 8은 황수환 외, 『통일 준비를 위한 북한의 SDGs 소개와 지표분석』, p. 309.

나. 북한의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신규 개발 필요 지표 분석

(1) 빈곤

SDG 1(빈곤종식)은 최빈국인 북한의 국내 빈곤 현황을 고려 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주요 목표이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빈곤을 체제 내부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문제로 인식하여 대외적으로 빈곤을 측정이 가능한 자료나 통계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빈곤을 간접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대부분 북한의 전체 인구 중 절반 이상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바 우선적으로 SDG 1 지표들에 대한 측정과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SDG 2(기아종식) 관련 식량안보를 달성할 경우, 빈곤층에 대한 식량안보의 해결이 가능함에 따라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지표로 평가한다.

표 IV-11 빈곤 측면에서 수립 및 측정 필요 지표

| 목표 | 지표 | 국제기구 내 지표 관리 | | | 북한 | | | 우리 정부 내 해당 지표 협력 가능 부처 |
|-------|---|--------------|---------------|--------------------|---------------------|----|----|------------------------------------|
| | | 현재 티어 | 가능한 관리 기관 | 파트너 기관 | 지표 개발 및 측정의 우선순위 | | | |
| | | | | | 단기 | 중기 | 장기 | |
| SDG 1 | 1.1.1 국제빈곤선 미만에서 살고 있는 인구 비율(성, 연령, 고용상태 및 지역별) | I | World Bank | ILO | ○ | | | 보건복지부 통계청 |
| | 1.2.1 국가빈곤선 미만에서 살고 있는 인구 비율(성 및 연령별) | I | World Bank | UNICEF, World Bank | ○ | | | 보건복지부 통계청 |
| | 1.2.2 국가별 정의에 따른 모든 차원의 빈곤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연령의 남성, 여성 및 아동 비율 | II | National Gov. | UNICEF, World Bank | ○ | | | 보건복지부 통계청 |
| | 1.3.1 사회보호제도 보장인구 비율(성, 아동, 실업자, 노인, 장애인, 임산부, 신생아, 산업재해자, 빈곤층 및 취약계층별) | I | ILO | World Bank | ○ | |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
| | 1.4.1 기초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 가구에 살고 있는 인구 비율 | I | UN-Habitat | UNICEF, WHO | ○ | | | 보건복지부 통계청 |
| | 1.a.1 수원국 GNI 대비 빈곤감소 ODA 총액 비율 | I | OECD | - | ○ | | | 통계청 |
| | 1.b.1 빈곤 친화적 공공사회지출 | II | UNICEF | - | ○ | | |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통계청 |

출처: IAEQ-SDGs, "Tier Classification for Global SDG Indicators,"; 진유강·박영실, 『SDGs 데이터 국제기구 제공체계 구축 방안 연구』(대전: 통계청 통계개발원, 2021), pp. 83~104를 참조하여 저자가 재정리함.

북한은 SDG 1에서 빈곤 관련된 모든 지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북한은 SDG 1중 의도적으로 빈곤 관련 지표들을 제외하고, '인민 생활 수준의 개선'이라는 목표 아래 1.1.3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과 1.2.1 '개설되거나 신설된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아동원, 양로원 등'을 북한의 특성에 맞춰 변용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해당 지표들은 SDG 1의 궁극적인 목적인 빈곤퇴치를 직접적

으로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미제시 지표로 구분하였다. 이로써 SDG 1에서 모든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SDG 목적에 맞는 지표 설정과 수치 측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지표라고 하겠다.

북한의 체제 특성상 빈곤 관련 지표 측정에 거부반응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1.1.1, 1.1.2, 1.1.3은 빠른 시일 내에 지표 개발과 측정이 필요한 지표라고 하겠다. 지표 관리 가능한 국제기구와 국내기관은 빈곤의 특성처럼 다양한 편이다. 국제기구로는 World Bank, ILO, UN-Habitat, UNICEF 등이 있으며, 국내에는 빈곤통계를 발표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와 인구통계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담당하는 통계청이 주로 지표 개발 및 측정에 대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식량안보

식량안보 관련 미제시 지표의 경우, 대다수의 지표가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과 직결되는 지표임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지표 측정이 필요하다 하고 볼 수 있다. 그 중 SDG 2.1.2, 2.c.1, 12.3.1은 북한이 안정적인 식량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표로 인도적 위기 상황을 측정할 수 있는 대안적 지표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해당 농업 분야 3개 지표 측정에 있어 측정 관리가 가능한 국제기구는 지표 순서대로 FAO와 UNEP이며, 국내기관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 파트너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표 IV-12 식량안보 측면에서 수립 및 측정 필요 지표

| 목표 | 지표 | 국제기구 내 지표 관리 | | | 북한 | | | 우리 정부 내 해당 지표 협력 가능 부처 |
|--------|---|--------------|-----------|--------|------------------|----|----|------------------------|
| | | 현재 tier | 가능한 관리 기관 | 파트너 기관 | 지표 개발 및 측정의 우선순위 | | | |
| | | | | | 단기 | 중기 | 장기 | |
| SDG 2 | 2.1.2 식량 불안 경험 척도(FIES)를 기준으로, 중간 혹은 극심한 수준의 식량 불안정에 처해있는 인구 현황 | I | FAO | - | ○ | ○ | | 농림축산식품부 |
| | 2.c.1 식품 가격의 이상치 지표(IPA) | II | FAO | - | ○ | ○ | | 농림축산식품부 |
| SDG 12 | 12.3.1 (a) 식량손실지수 및 (b) 식량 폐기지수 | II | FAO, UNEP | | ○ | ○ | | 농림축산식품부 |

출처: 황수환 외,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의 SDGs 소개와 지표분석』, p. 319, p. 328.

(3) 재난위기관리

표 IV-13 재난위기관리 측면에서 수립 및 측정 필요 지표

| 목표 | 지표 | 국제기구 내 지표 관리 | | | 북한 | | | 우리 정부 내 해당 지표 협력 가능 부처 |
|-------|--------------------------|--------------|-----------|-----------|------------------|----|----|------------------------|
| | | 현재 tier | 가능한 관리 기관 | 파트너 기관 | 지표 개발 및 측정의 우선순위 | | | |
| | | | | | 단기 | 중기 | 장기 | |
| SDG 1 | 1.5.2 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 II | UNDRR | UNEP, FAO | ○ | | | 행정안전부 |

출처: IAEG-SDGs, "Tier Classification for Global SDG Indicators,"; 진유강·박영실, 『SDGs 데이터 국제기구 제공체계 구축 방안 연구』, pp. 83~104를 참조하여 저자가 재정리함.

북한 당국은 재난대응에 대한 관심으로 관련 제도 및 전략을 구축하고 있으며, 자연재해 관련 대부분의 SDGs 지표들을 반영하고 있다. 유일하게 미제시한 지표인 1.5.2의 경우, 재난 피해에 대한 물리적 손실에 대해 확인이 가능함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지표 개발 및 측정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해당 지표는 재난에 대한 복원력 확인 등 북한의 재해관리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대안지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표 관리가 가능한 기관으로는 UNDRR이 있으며, 파트너 기관으로는 UNEP, FAO가 있다. 국내기관으로는 행정안전부가 관련 지표 측정 역량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인권

북한에게 인권 관련 지표는 체제 특수성에 따라 가장 공개를 꺼려하는 지표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체제 특성과 거리가 있는 지표만을 제시하고 인권과 직결되는 관련 지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보편적인 인권 보호가 중요한 국제적 규범이라는 점에서 타협이 불가능한 지표인 바, 북한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관련 지표 개발과 측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표 IV-14 인권 측면에서 수립 및 측정 필요 지표

| 목표 | 지표 | 국제기구 내 지표 관리 | | | 북한 지표 개발 및 측정의 우선순위 | | | 우리 정부 내 해당 지표 협력 가능 부처 |
|-------|--|--------------|-------------------------------------|------------|---------------------------|----|----|------------------------------------|
| | | 현재 타어 | 가능한 관리 기관 | 파트너 기관 | 단기 | 중기 | 장기 | |
| | | | | | | | | |
| SDG 5 | 5.2.1 성경험이 있는 15세 이상의 소녀 및 여성 중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현재, 혹은 이전의 성적 파트너로부터 물리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이들의 비율(폭력의 형태와 연령 그룹별) | I | UNICEF, UN Women, UNFPA, WHO, UNODC | UNSD, UNDP | ○ | | | 여성가족부 |
| | 5.2.2 15세 이상의 소녀 및 여성 중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성적 파트너 이외에 다른 사람들로 부터 성폭력을 당한 이들의 비율(연령그룹 및 사건 발생 장소별) | II | UNICEF, UN Women, UNFPA, WHO, UNODC | UNSD, UNDP | ○ | | | 여성가족부 |
| | 5.c.1 양성평등과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공공재원을 할당하고 추적 시스템을 갖춘 국가들의 비율 | II | UN Women, OECD, UNDP | - | | ○ | | 여성가족부 |

| 목표 | 지표 | 국제기구 내 지표 관리 | | | 북한 | | | 우리 정부 내 해당 지표 협력 가능 부처 |
|--------|--|--------------|--------------|----------------------------------|---------------------|----|----|------------------------------------|
| | | 현재 타어 | 가능한 관리 기관 | 파트너 기관 | 지표 개발 및 측정의 우선순위 | | | |
| | | | | | 단기 | 중기 | 장기 | |
| SDG 8 | 8.5.2 실업률(성, 연령 및 장애별) | I | ILO | - | ○ | | | 고용노동부 |
| | 8.7.1 5~17세 아동노동 인구수와 비율(성 및 연령별) | II | ILO, UNICEF | - | ○ | | | 고용노동부 |
| | 8.8.1 근로자 10만 명당 치명적 및 비치명적 산업 재해 건수(성 및 이주 상태별) | II | ILO | - | ○ | | | 고용노동부 |
| | 8.8.2 ILO 협약과 국내입법에 기초한 노동권(집회 및 단체교섭의 자유)의 국가별 준수 수준(성 및 이주 상태별) | II | ILO | - | | ○ | | 고용노동부 |
| SDG 10 | 10.3.1 국제인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을 기준으로 최근 12개월 내 개인적으로 차별을 당했거나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낀 인구의 비율 | II | OHCHR | - | ○ | | | 국가인권위원회 |
| | 10.7.3 이주국으로 이동하는 중 사망하거나 사라진 사람의 숫자 | I | IOM | - | ○ | | | 법무부 |
| SDG 11 | 11.7.2 지난 12개월 동안 신체적 혹은 성적 괴롭힘을 당한 인구 비율(성, 연령, 장애 및 발생장소별) | II | UNODC | UN Women, UN-Habitat | ○ | | | 여성가족부 |
| SDG 16 | 16.1.1 인구 10만 명당 고의에 의한 살인범죄 피해자수(성 및 연령별) | II | UNODC, WHO | DESA Population Division, UNICEF | ○ | | | 통계청 |
| | 16.1.2 인구 10만 명당 분쟁 관련 사망자수(성, 연령 및 사유별) | II | OHCHR | UNMAS, DESA Population Division | ○ | | | 통계청 |
| | 16.1.3 지난 12개월간 (a) 신체적, (b) 정서적, (c) 성적 폭력에 노출된 인구비율 | II | UNODC | UN Women, UNFPA, WHO, UNICEF | ○ | | | 통계청 |

| 목표 | 지표 | 국제기구 내 지표 관리 | | | 북한 | | | 우리 정부 내 해당 지표 협력 가능 부처 |
|--|--|--------------|-------------------|------------------|---------------------|----|---------|------------------------|
| | | 현재 타어 | 가능한 관리 기관 | 파트너 기관 | 지표 개발 및 측정의 우선순위 | | | |
| | | | | | 단기 | 중기 | 장기 | |
| SDG 16 | 16.2.1 지난 1개월간 보호자로부터 체벌이나 심리적 위협을 경험한 적이 있는 1~17세 아동 비율 | II | UNICEF | - | ○ | | | 국가인권위원회 |
| | 16.2.2 인구 10만 명당 인신매매 피해 자수(성, 연령 및 착취형태별) | II | UNODC | UNICEF | ○ | | | 국가인권위원회 |
| | 16.2.3 18~29세 인구 중 18세 이전에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인구 비율 | II | UNICEF | UNSD, UNODC | ○ | | | 국가인권위원회 |
| | 16.3.1 지난 12개월간 관할 당국 혹은 기타 공식적인 분쟁해결수단에 피해신고를 한 폭력범죄피해자 비율 | II | UNODC | - | | ○ | | 국가인권위원회 |
| | 16.3.2 교정시설 수용자 중 형 미선고자 비율 | I | UNODC | - | ○ | | | 국가인권위원회 |
| | 16.3.3 지난 2년간 분쟁을 경험한 인구비율, 공식 혹은 비공식 분쟁해결기구를 이용한 인구 비율(기구 유형별) | II | UNDP, OECD, UNODC | - | | ○ | | 국가인권위원회 |
| | 16.10.1 지난 12개월 동안 언론인, 관련 미디어 종사자, 노동조합원 및 인권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살인, 납치, 실종, 강제구금 및 고문 건수 | II | OHCHR | ILO, UNESCO -UIS | ○ | | | 국가인권위원회 |
| | 16.a.1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에 따른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존재 | I | OHCHR | - | ○ | | | 국가인권위원회 |
| 16.b.1 국제인권법 차별금지기준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차별 또는 괴롭힘 경험을 보고한 인구 비율 | II | OHCHR | - | | ○ | | 국가인권위원회 | |

출처: IAEГ-SDGs, "Tier Classification for Global SDG Indicators,"; 진유강·박영실, 『SDGs 데이터 국제기구 제공체계 구축 방안 연구』, pp. 83~104를 참조하여 저자가 재구성함; SDG 8, SDG 16은 황수환 외,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의 SDGs 소개와 지표분석』, pp. 321~322, pp. 325~326, pp. 332~334.

한편 인권은 SDGs 목표 중 환경 분야와 마찬가지로 여러 목표들에서 포괄적으로 다뤄짐에 따라 지표들이 목표별로 세분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인도주의와 보편적 인권 측면에서 시급한 목표와 지표에 대해 ‘단기 지표’로 설정하였다. 인권침해 측면에서 모든 종류의 폭력, 살인, 분쟁 등의 지표들(5.2.1, 5.2.2, 10.3.1, 10.7.3, 11.7.2, 16.1.1, 16.1.2, 16.1.3, 16.2.1, 16.2.2, 16.2.3, 16.3.1, 16.3.2, 16.10.1, 16.a.1)은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지표로 시급히 측정이 요구됨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측정이 필요하다. 인권 관련 국제기구로는 UNODC, WHO, OHCHR, UNICEF 등으로 다양하다. 인구 통계를 관련 국가 협력 기관으로 통계청이 적절하며, 인권 관련 된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적절해 보인다. SDG 5.2.1, 5.2.2, 11.7.2의 경우 성적 괴롭힘의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임에 따라, 관리 가능 국제기구로 UN Habitat, UN Women, UNDP가 있으며, 국내에서는 협력 파트너로 여성가족부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인권 보호 측면에서 핵심 이슈는 아니나, 북한 주민의 보나온 삶을 위해 필요한 인권보호 제도와 정책 수립 관련 지표들(16.3.1, 16.3.3, 16.b.1)의 경우 북한의 특수성과 의지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시급한 지표들 해결한 이후 시점인 ‘중기 지표’로 분류하였다.

한편 인권적 사회발전 측면에서 중요성이 커지는 노동권의 경우, 아동, 청년, 노동자의 노동권 관련 지표들(8.5.2, 8.7.1, 8.8.1)에 대한 측정이 시급해 보인다. 이에 대한 성과 측정에 이어서 ‘8.8.2 노동권의 국가별 수준’에 대해서는 중기적으로 준비가 요구된다. 이들 지표의 측정과 관리 가능한 기구는 ILO이며 국내에는 고용노동부가 지표 측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북한의 국가발전목표와 연계 시 추가 개발 필요 지표 분석

다음으로 북한이 VNR에서 지정한 중점분야에서 관련 신규 및 추가 개발이 필요한 지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동안 북한의 SDGs와 NDGs 연계는 북한의 SDGs 이행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자국의 개발목표와 통합한 SDGs 목표와 세부지표 개발 및 측정에 대한 지원은 북한의 SDGs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VNR 보고서에 농업, 식수위생 및 공중보건, 에너지, 환경 분야에 중점으로 두었으며, 분야별 기술위원회를 두어 국가 통계시스템을 통해 지표 측정 및 관리 중이다. 해당 분야와 직접 관련 있는 목표는 SDG 2(기아종식), 3(건강과 웰빙), 6(깨끗한 물과 위생), 7(에너지), 9(인프라), 12(책임있는 소비와 생산), 13(기후변화 대응), 14(해양생태계), 15(육상생태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농업

먼저 북한은 국내 식량 자급자족 달성을 위해 농업을 중점분야로 두고 있다. 식량안보와 영양 부문에서 국제기구와의 적극적인 협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MDG 1(빈곤 및 기아종식) 목표인 곡물 생산량 700만 톤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밝혔다.^{309/} 이에 따라 북한은 식량 자급자족 실현과 농업기술 발전을 향후 SDGs 이행 계획으로 세웠다. 북한의 식량안보 달성을 위해 관련 지표 개발과 측정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09/}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15.

표 IV-15 농업 측면에서 추가 역량강화 필요 지표

| 목표 | 지표 | 북한 VNR | | | | 신뢰성 및 지속성 평가 | |
|-------|---|--|------------------|--------|------|---|---------------------------------------|
| | | 지표 내용 (단위) | 지표값 | | | 정확성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표 | 지속적 측정역량 강화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표 |
| | | | 2015 | 2018 | 2020 | | |
| SDG 2 | 2.4.1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에 사용되는 농지면적 비율 |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에서 농업면적 비율(%) | 95 | 96 | 95 | X | ○ |
| | 2.5.1 식량 및 농업을 위해 중장기 보존 시설에 확보되어 있는 식물과 동물의 유전자원의 수 | 식량과 농업 안보를 위한 유전자원의 수(종) | 168 | 265 | - | ○ | ○ |
| | 2.5.2 멸종 위기에 있는 멸종 위기에 있지 않는 혹은 알려지지 않은 멸종 위기에 처한 것으로 분류되는 지역품종의 비율 | 멸종위기 수준이 위험, 비위험 또는 알려지지 않음으로 분류된 지역 품종의 비율(종) | 60,374 (2014) | 86,268 | - | X | ○ |

출처: 황수환 외,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의 SDGs 소개와 지표분석』, pp. 306~307.

앞서 언급한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 관련 지표 외 북한 농업의 장기적 관점에서 추가 지표 측정이 요구되는 지표를 살펴보았다. 2.4.1과 2.5.2는 명확한 측정방식으로 단순 기술적 역량만이 필요함에 따라 측정의 정확성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중요한 지표로서 지속적인 측정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지표의 정확성 제고와 지속성 확보 모두 요구되는 지표로는 적은 보존 종 수에 대해 시설 확보 및 보존 기술에 대한 역량 구축이 필요한 2.5.1이 있다.

(2) 공중보건

SDG 3(건강과 웰빙)은 과거 MDGs 중 여러 보건 및 질병 분야에 대한 목표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개발의제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이며, 특히 개발도상국에게 해당 목표에 대한 달성이 요구된다. 북한은 ‘모든 인민의 건강한 삶 보장’을 목표로 공중보건 분야에 중점을 두기 위해 NDG 3에 대부분의 SDG 3 지표를 수용하였다. 북한은 VNR을 통해 유아사망, 모성사망, HIV/AIDS 및 주요 MDG 목표들에 대해 개선된 성과를 밝히고 있다.^{310/} 이처럼 북한이 출산 및 영유아 사망 관련 지표에서 긍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각종 전염병 및 중대 질환, 교통사고 사망률 등에서는 부진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 북한 당국 차원에서 무상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인력 및 필수 의약품의 부족과 제약 및 열악한 의료기기 생산을 위한 기술 및 인프라 등 도전과제가 남아있는 바, 북한 당국은 공중보건 부문의 물적, 기술적 기반을 통합하고 의료인력의 질을 개선하고자 한다.

표 IV-16 공중보건 측면에서 추가 역량강화 필요 지표

| 목표 | 지표 | 북한 VNR | | | | 신뢰성 및 지속성 평가 | |
|-------|---|---------------------------------|-------------|-------------|-------------|---|---------------------------------------|
| | | 지표 내용 (단위) | 지표값 | | | 정확성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표 | 지속적 측정역량 강화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표 |
| | | | 2015 | 2018 | 2020 | | |
| SDG 3 | 3.1.1 모성 사망비 | 인구 10만 명당 산모 사망률 | 58 | 50.4 | 49 (2019) | ○ | ○ |
| | 3.1.2 숙련된 의료 인력이 참여한 출산 비율(%) | 전문 의료 인력이 참여한 출산 비율 | 99.9 (2014) | 99.5 (2017) | - | ○ | ○ |
| | 3.2.1 5세 미만 사망률 | 인구 1,000명당 5세 미만 아동사망률 | 17.7 | 16.9 | 16.8 (2019) | ○ | ○ |
| | 3.2.2 신생아 사망률 | 인구 1,000명당 신생아 사망률 | 9 (2014) | 9 (2017) | 7.7 (2019) | ○ | ○ |
| | 3.3.1 비감염인구 1,000명당 HIV 신규 감염자 수(성, 연령 및 주요 인구 특성별) | 감염되지 않은 인구 1,000명당 신규 HIV 감염자 수 | 0 | 0 | 0 | ○ | ○ |

310/ Ibid., p. 55.

| 목표 | 지표 | 북한 VNR | | | | 신뢰성 및 지속성 평가 | |
|-------|---|--|----------------|----------------|------|---|---------------------------------------|
| | | 지표 내용 (단위) | 지표값 | | | 정확성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표 | 지속적 측정역량 강화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표 |
| | | | 2015 | 2018 | 2020 | | |
| SDG 3 | 3.3.2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 건수 |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률 | 451 | 354 | 351 | ○ | ○ |
| | 3.3.3 인구 1,000명당 말라리아 발생 건수 | 인구 1,000명당 말라리아 발병률 | 0.52 | 0.29 | 0.15 | ○ | ○ |
| | 3.3.4 인구 10만 명당 B형 간염 발생 건수 | 인구 10만 명당 B형간염 발생률 | 6.8 | 6.4 | 5.9 | ○ | ○ |
| | 3.3.5 소외열대질환에 대한 개입이 필요한 인구수 | 소외열대질환에 대한 개입이 필요한 인구수 | 0 | 0 | 0 | ○ | ○ |
| | 3.6.1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 | 8.5 | 8.4 | 7.3 | ○ | ○ |
| | 3.7.1 현대적 피임법 사용으로 가족계획 욕구가 충족되는 기임기(15~49세) 여성의 비율 | 가족계획이 필요한 기임기 여성(15~49세) 중 현대적인 방법에 대한 만족도 | 89.6 (2014) | 89.7 (2017) | - | ○ | ○ |
| | 3.7.2 여성 청소년(10~14세, 15~19세) 인구 1,000명당 출산율 | 해당 연령대의 여성 1,000명당 청소년 출생률(10~14세, 15~19세) | 0 (2014) | 1 (2017) | - | ○ | ○ |
| | 3.8.1 필수보건서비스 보장 범위 | 필수 의료봉사 보장(색인) | - | 84 (2017) | - | ○ | ○ |
| | 3.9.3 비의도적 중독 사망률 | 인구 10만 명당 의도하지 않은 중독으로 인한 사망률 | 0.6 | 0.5 | 0.4 | ○ | ○ |
| | 3.a.1 연령표준화한 15세 이상 인구의 현재 흡연율 | 15세 이상 인구에서 현재 흡연의 표준화된 유행 | 46.3 | 46.1 (2017) | - | ○ | ○ |

| 목표 | 지표 | 북한 VNR | | | | 신뢰성 및 지속성 평가 | |
|-------|-----------------------------------|--|----------|------|------|---|---------------------------------------|
| | | 지표 내용 (단위) | 지표값 | | | 정확성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표 | 지속적 측정역량 강화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표 |
| | | | 2015 | 2018 | 2020 | | |
| SDG 3 | 3.b.1 국가정책에 포함된 모든 백신을 접종한 인구의 비율 | 국가계획에서 모든 백신을 지원받는 대상 인구의 비율 | 97.7 | 93.2 | 94.5 | ○ | ○ |
| | 3.b.2 의학연구 및 기초보건 부문 ODA 순 지출액 | 의료 연구 및 기초보건분야의 공적개발원조 (ODA) | 23.5 | - | - | X | ○ |
| | 3.c.1 보건의료 인력밀도 및 분포 | 인구 1,000명당 의료 일군의 밀도 및 분포 <small>의사(치과의사 포함) 간호원, 조산사 약사 기타</small> | 98 | 99 | 100 | ○ | ○ |
| | | | 37 | 37 | 38 | | |
| 43 | | | 43 | 44 | | | |
| 4 | | | 4 | 4 | | | |
| | 14 | 15 | 15 | | | | |
| | 보건 부문 예산 지출 비율 | 6.4 (2014) | 7 (2017) | - | X | ○ | |

출처: “DPRK VNR 2021,” pp. 58~59; 북민협 번역, “북한 VNR 보고서 2021,” pp. 56~57을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북한의 경우 SDG 3 보건지표들의 대다수가 마지막 연도인 2020년에는 수집되지 않았다. 이는 자국 내 코로나19의 여파로 해당 지표 수집이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북한의 열악한 인구통계 역량을 고려 시 측정방식이 비교적 명확한 3.b.2, 3.c.1 중 보건 부문 예산지출 비율을 제외하고, 신뢰성 부분에서 지표 엄밀성 제고가 필요하다. 북한의 의료체계의 역량 고려 시 데이터 수집이 전산시스템이 아닌 인력에 의해 이루어지고 당국의 체제 유지와 관료 체계 내 성과주의 등 외부적 요인이 지표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실

제로 3.3.1 ‘HIV 신규감염자 수’와 3.3.5 ‘소외열대질환 환자 수’의 지표가 지속적으로 ‘0’이라는 점과 3.3.1 ‘결핵발생률’과 3.6.1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률’이 국제적 기준으로 수집한 지표와 수치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수집된 지표 수치에 대해 신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리하자면 공중보건 분야 서비스 증진 및 확산하고자 하는 당국의 정책에 맞춰 모든 지표들의 지속적인 측정이 필요한 지표라고 보았으며, 관련 지표 개선을 위한 역량강화 및 기술 지원 등이 함께 요구된다.

(3) 깨끗한 물과 위생

SDG 6(깨끗한 물과 위생)은 안전한 식수의 공급이나 위생 차원을 넘어 전염성 질병 퇴치에 1차적 예방수단으로 보건과 질병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물의 공급은 식량, 에너지, 산업 등 경제활동과 하수처리 관리로 육상 및 해양생태계 문제와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북한 당국은 수질개선과 효율적 물 사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식수 공급과 환경, 식량, 산업, 에너지 등 물 분야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식수 위생을 중점분야로 두고 있다.^{311/}

북한 당국의 수질 개선 및 식수와 위생시설 공급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SDG 6에 대한 지표별 이행현황은 다소 부진하다고 평가된다. 북한은 VNR을 통해 기술적 한계와 자원의 부족으로 수질 개선 문제, 식수 및 위생시설 보장의 어려움, 관개시설 및 수자원 관리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충분한 물 공급에 있어 실질적 목표 달성의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311/} *Ibid.*, pp. 25~26.

표 IV-17 깨끗한 물과 위생 측면에서 추가 역량강화 필요 지표

| 목표 | 지표 | 북한 VNR | | | | 신뢰성 및 지속성 평가 | |
|-------|--|---------------------------|------|-------------|------|---|---------------------------------------|
| | | 지표 내용 (단위) | 지표값 | | | 정확성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표 | 지속적 측정역량 강화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표 |
| | | | 2015 | 2018 | 2020 | | |
| SDG 6 | 6.1.1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 비율 |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 서비스 이용 인구 비율 | - | 60.9 (2017) | - | ○ | ○ |
| | 6.2.1 (a)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서비스 시설과 (b) 비누와 물이 있는 손씻기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시설 이용 인구 비율 | - | 47.5 (2017) | - | ○ | ○ |

출처: "DPRK VNR 2021," pp. 58~59; 북민협 번역, "북한 VNR 보고서 2021," pp. 60~61을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북한의 SDG 6에 대한 적극적 관심에 비해 실제 제시한 수치는 2개로 미미하다는 점을 통해 북한 내부적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지표 수집 및 데이터 측정에 있어 기술적 및 거버넌스 역량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안전한 식수 및 위생시설 지원에 대한 북한의 관심과 열악한 인구통계 역량 등 북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표 측정에 있어 정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두 지표 모두 2017년 현황 조사에만 그쳤다는 점과 도시와 농촌 간 비교적 큰 격차를 보인다는 점에서 북한의 관심과 함께 지속적인 지표 측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해당 지표들은 북한 주민의 삶의 질과도 직결되며, 오염된 물은 SDG 3(건강과 웰빙) 내 수인성 질병 및 사망에 대한 지표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4) 에너지

북한은 에너지 부족 문제와 대체 에너지 마련에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중점분야로 에너지를 선정하였다. 특히 절대적인 에너지와 원자재 부족으로 전력 생산량이 감소하여 수요 충족이 어렵고, 대체 가능한 재생에너지 기술 보급의 더딘 발전으로 인한 사용률이 저조함에 따라 에너지 문제 해결이 시급함을 알렸다.^{312/}

표 IV-18 에너지 측면에서 추가 역량강화 필요 지표

| 목표 | 지표 | 북한 VNR | | | | 신뢰성 및 지속성 평가 | |
|-------|---------------------------------|---|----------------|----------------|------|---|---------------------------------------|
| | | 지표 내용 (단위) | 지표값 | | | 정확성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표 | 지속적 측정역량 강화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표 |
| | | | 2015 | 2018 | 2020 | | |
| SDG 7 | 7.1.2 청정연료 및 기술에 주로 의존하는 인구 비율 | 청정 연료 및 기술에 1차적으로 의존하는 인구 비율(%) | - | 10.3 (2017) | - | ○ | ○ |
| | 7.2.1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 | 전체 에너지 소비 최종단계에서 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 | 12.1 (2016) | 9.3 | 10.8 | X | ○ |
| | 7.3.1 1차 에너지와 GDP로 측정되는 에너지 집약도 | 1차 에너지와 GDP 차원에서 측정된 에너지 집중도 (GJ/1,000달러) | 35 | 31.5 | 28.7 | X | ○ |

출처: 황수환 외,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의 SDGs 소개와 지표분석』, p. 308.

에너지 관련 지표 중 청정에너지와 관련 있는 7.2.1, 7.3.1은 북한이 다년간 지표값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측정 노하우를 구축한 것으로

^{312/} Ibid., pp. 27~28.

고려되어, 지속적인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역량강화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SDG 7.1.2의 경우 의존도가 높은 화석과 수력 에너지 외 다른 재생에너지에 대해 익숙치 않은 북한의 상황을 감안하여 주제별 연계된 지표역량강화와 인구 통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5) 인프라

인프라는 북한이 경제발전에 있어 중점적으로 우선시하는 분야로 국내 생산을 통한 경제발전과 자급자족적인 경제 구조를 발전목표로 하고 있다.^{313/} 특히 제조업은 자급자족 경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북한에게 중요한 산업 분야이다.

표 IV-19 인프라 측면에서 추가 역량강화 필요 지표

| 목표 | 지표 | 북한 VNR | | | | 신뢰성 및 지속성 평가 | |
|-------|---|--------------------------|-------|-------|--------------|---|---------------------------------------|
| | | 지표 내용 (단위) | 지표값 | | | 정확성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표 | 지속적 측정역량 강화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표 |
| | | | 2015 | 2018 | 2020 | | |
| SDG 9 | 9.2.1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 40.18 | 40.06 | 38.60 (2019) | ○ | ○ |
| | 9.4.1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GDP당 CO ₂ 배출량 | 9.7 | - | 9.4 | ○ | ○ |
| | 9.5.1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 GDP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 비율(%) | 8.2 | 8.7 | 9.6 | ○ | ○ |

출처: 황수환 외,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의 SDGs 소개와 지표분석』, p. 310.

이에 따라 제조업 관련 지표인 9.2.1은 해당 분야의 향후 발전에

^{313/} Ibid., p. 32.

다른 관련 지표의 엄밀화 노력과 함께 북한의 성장 단계를 진단하기 위한 측면에서 지속 평가가 필요하다. 9.5.1은 북한이 세 차례 모두 지표값을 제시하였으나, 향후 시장경제 확산을 가정할 때 북한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아래 중앙정부 외에도 다양한 주체들에 의한 연구개발비가 증가할 것을 고려하여 세밀화된 개발비 측정이 가능하도록 지표 엄밀화와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개발도상국에서 빠른 산업 부문 발전으로 수반되는 이산화탄소 배출의 경우(9.4.1), 국제사회가 중점으로 두는 환경 이슈인 점과 북한이 SDGs 이행에 있어 환경 또한 중점분야로 선정했다는 점에서 정확한 측정과 지속적인 평가 노력이 모두 요구된다.

(6) 환경

환경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자연재해에 큰 피해를 입은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이다. 앞서 ‘인도적 위기’의 재난위기대응에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은 재해에 취약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 극심한 기후변화로 발생한 자연재해는 인도적 위기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식량안보에 위협을 준다. 북한은 이러한 재난위기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국의 SDG 11을 ‘자연재해’로 설정하고 재난 및 위기관리를 위한 체계 강화와 산림화, 수자원 보전 등 기반시설 복구에 힘을 쓸 것을 강조하고 있다.^{314/} 또한 환경 분야는 북한이 관심을 두고 있는 부문으로 제도 수립과 함께 육상 및 해양 생태계 보호에 대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314/}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37.

표 IV-20 환경 측면에서 추가 역량강화 필요 지표

| 목표 | 지표 | 북한 VNR | | | | 신뢰성 및 지속성 평가 | |
|--------|---|--|-----------------|------------------------------|------------------------------|---|---------------------------------------|
| | | 지표 내용 (단위) | 지표값 | | | 정확성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표 | 지속적 측정역량 강화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표 |
| | | | 2015 | 2018 | 2020 | | |
| SDG 13 | 13.2.1 국가감축기여목표 (NDCs), 장기전략, 국가적응계획 등을 보유한 국가의 수 | 격년마다 제출하는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국가계획 보고서 수 | 두 번째 보고서 (2012) | 첫 번째 보고서 FNDc (2016)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업데이트 중 (2021) | X | ○ |
| SDG 14 | 14.5.1 해양구역 대비 보호 구역 비율 | 해양구역 대비 보호구역 범위(%) | 0.7 | - | - | X | ○ |
| SDG 15 | 15.1.1 총 국토면적 중 산림 면적의 비율 | 전체 토지면적 중 숲지대 비율(%) | 67.3 | 69.9 | 73.6 | X | ○ |
| | 15.2.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상황 | 지속가능한 숲 관리를 향한 진전 a) 보호 숲지대 비율(%) b) 매년 숲지대 증가율(%) d) 헥타르 당 숲의 누적량(M ² ha) | 67.3 46 | 69.9 1.3 44 (15~18) | 73.6 1.7 44 (15~20) | ○ | ○ |
| | 15.3.1 황폐화된 국토면적 비율 | 전체 육지면적 중 황폐화된 땅 비율(%) | 9.7 | 8.1 | 7.2 (2019) | ○ | ○ |
| | 15.4.1 산악생물다양성 중요 지역 중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면적 비율 | 산악지역 생물다양성을 위한 주요 구역 중 보호구역 범위(%) | 4.6 | - | - | X | ○ |
| | 15.4.2 산악녹색피복지수 | 산 녹화 지수(%) | 89 | - | - | ○ | ○ |
| | 15.5.1 적색목록지수 | 적색 목록 지수 동물 식물 하위 식물 위기종 | - | 0.89 0.94 - - | - | ○ | ○ |

| 목표 | 지표 | 북한 VNR | | | | 신뢰성 및 지속성 평가 | |
|--------|---|-----------------------|------|------|------|---|---------------------------------------|
| | | 지표 내용 (단위) | 지표값 | | | 정확성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표 | 지속적 측정역량 강화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표 |
| | | | 2015 | 2018 | 2020 | | |
| SDG 15 | 15.9.1 (a)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아10년목표 타겟 2에 따라 국가 차원의 목표를 수립한 국가의 수와 그 목표에 따른 보고 진전도 (b) 환경경제계정 구현을 위한 국가 회계 및 보고 시스템과 생태 다양성의 통합 | 생물다양성 가치 발전 계획의 통합(%) | 10 | - | - | ○ | ○ |

출처: 황수환 외,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의 SDGs 소개와 지표분석』, pp. 314~315; “DPRK VNR 2021,” pp. 62~63; 북민협 번역, “북한 VNR 보고서 2021,” pp. 60~61을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SDG 11과 13에 앞서 ‘인도주의 시급성’에서 언급한 북한의 재난 대응에 대한 역량 및 지표 평가는 본 목표에서 생략하였다. SDG 15(육상 생태계)는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고, 산림파괴의 심각성으로 인한 재난 취약성이 더욱 심화되어 북한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지표 생산에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중 지표 정의가 비교적 명확하고 과학기술로 객관적 측정 방식이 가능한 경우(15.4.1)를 제외하고, 현장조사가 요구되는 지표들(15.2.1, 15.3.1, 15.4.2, 15.5.1)에 대해 측정의 엄밀화가 필요해보인다.

SDG 14(해양생태계)의 경우, 북한은 다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부진한 이행현황과 마찬가지로 SDG 14 목표 이행이 더딘 편이다. 뿐만 아니라 해양건강성지수 등 해양생태계에 중대한 위협에 처해 있으며 하천, 하구, 항만 등의 수질관리 문제로 해양오염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은 해양자원 보호를 국가

정책으로 설정하고 해양자원 보호 및 증식 계획과 연안 및 해양생태계관리를 시행하고 있다.^{315/}

해양생태계 중 북한이 유일하게 제시한 지표인 14.5.1 ‘해양보호구역 비율’의 경우 국제적으로 명확한 측정방식이 존재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가장 빠르게 확보된 지표값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정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비교적 불필요하다고 보겠다. 이처럼 데이터 생산 자체가 어렵지 않으나 2017년 이후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측정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이 정책 집행에 있어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크므로 당초 국제사회의 해당 지표 수립의 목적에 따른 실효성 있는 해양보호구역 제도 운영을 위해 수반되는 제도적 관리에 대한 추가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환경 중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13.2.1을 통해 국가 계획 보고서를 제출하고, 목표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해당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표의 중요성이 커진 바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해당 목표 수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라. 북한의 국가발전목표와 연계 시 신규 개발 필요 지표 분석

(1) 농업

앞서 언급한 시급한 인도주의 관련 미제시 지표 외 북한은 자국의 식량자급자족을 위해 농업 분야에 중점을 두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2.3.1, 2.3.2, 2.a.1, 2.a.2 등 해당 지표

^{315/} Ibid., p. 42.

들은 농업발전 과정에서 필요하며, 인도주의적 지표보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농업 분야인 등 지표들은 FAO의 지표 관리가 가능하고, 국내적으로는 농업 관련 지표 측정에 전문성을 보유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표 측정 파트너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21 농업 측면에서 수립 및 측정 필요 지표

| 목표 | 지표 | 국제기구 내 지표 관리 | | | 북한 | | | 우리 정부 내 해당 지표 협력 가능 부처 |
|-------|---|--------------|--------------|------------|---------------------|----|----|------------------------|
| | | 현재 타어 | 가능한 관리 기관 | 파트너 기관 | 지표 개발 및 측정의 우선순위 | 단기 | 중기 | |
| SDG 2 | 2.3.1 노동단위 당 생산량(농업, 축산업, 산림업 사업체 규모별) | II | FAO | - | ○ | | ○ | 농림축산식품부 |
| | 2.3.2 소규모 식량 생산업자의 평균 소득(성별, 토착상태별) | II | FAO | World Bank | ○ | | ○ | 농림축산식품부 |
| | 2.a.1 정부 지출의 농업 편향 지수 | I | FAO | - | ○ | | ○ | 농림축산식품부 |
| | 2.a.2 농업 부문에 대한 공식적인 전체 지원금(공적개발원조와 다른 공식적인 지원금을 합한 금액) | I | OECD | FAO | ○ | | ○ | 농림축산식품부 |

출처: 황수환 외,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의 SDGs 소개와 지표분석』, p. 319.

(2) 공중보건

북한 당국이 공중보건 증진을 위해 주요 정책을 실시 중이며 SDG 3 지표 관리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체제 특성상 의도적으로 공개를 원치 않는 지표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미제시 지표들의 지표 개발은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른 목표 대비 지표 수집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표 IV-22 공중보건 측면에서 수립 및 측정 필요 지표

| 목표 | 지표 | 국제기구 내 지표 관리 | | | 북한 | | | 우리 정부 내 해당 지표 협력 가능 부처 |
|-------|--|--------------|----------------------|-----------|---------------------|----|----|------------------------------------|
| | | 현재 타어 | 가능한 관리 기관 | 파트너 기관 | 지표 개발 및 측정의 우선순위 | | | |
| | | | | | 단기 | 중기 | 장기 | |
| SDG 1 | 1.a.2 정부 총지출 중 필수 서비스 (교육, 의료 및 사회보호) 지출 비율 | II | ILO, UNESCO-UIS, WHO | - | ○ | | | 보건복지부 |
| | 3.4.1 심혈관계 질환, 암, 당뇨 또는 만성호흡기 질환 사망률 | I | WHO | - | ○ | | | 보건복지부 |
| | 3.4.2 자살률 | I | WHO | - | ○ | | | 보건복지부 |
| | 3.5.1 약물사용장애 치료개입(약물 치료, 심리사회적 재활 및 사후 관리 서비스) 보장 범위 | II | WHO, UNODC | - | ○ | | | 보건복지부 |
| | 3.5.2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순 알코올 소비량 | I | WHO | - | ○ | | | 보건복지부 |
| SDG 3 | 3.8.2 가구 총지출 및 소득 대비 의료 비 과부담 인구 비율 | I | WHO, World Bank | - | ○ | | | 보건복지부 |
| | 3.9.1 실내공기오염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 I | WHO | UNEP | ○ | | | 보건복지부 |
| | 3.9.2 안전하지 않은 물과 하수처리, 부족한 위생시설로 인한 사망률 | I | WHO | UNEP | ○ | | | 보건복지부 |
| | 3.b.3 적절한 가격으로 필수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의료 시설 비율 | I | WHO | - | | ○ | | 보건복지부 |
| | 3.d.1 IHR에 의한 수용 능력 및 응급대처 능력 | I | WHO | - | | | ○ | 보건복지부 |
| | 3.d.2 선별된 항생제 내성 유기체에서 기인한 혈류 감염률 | I | WHO | - | | ○ | | 보건복지부 |

출처: IAEG-SDGs, "Tier Classification for Global SDG Indicators,"; 진유강·박영실, 『SDGs 데이터 국제기구 제공체계 구축 방안 연구』, pp. 83~104를 참조하여 저자가 재구성함.

사망률 관련 지표들인 3.4.1, 3.4.2, 3.9.1, 3.9.2는 북한 주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만큼 빠른 시일 내 측정역량강화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전염성 질병인 3.4.1 심혈관계, 암, 당뇨 또는 만성호흡질환 사망률의 경우 지표 측정이 우선되고, 향후 그에 대한 의료 지원 역량강화 관련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특히 3.9.1은 지표 이행이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시급한 지표 측정 및 역량강화가 요구된다. 해당 지표의 경우 국제적 지표가 이미 존재하여 활용이 가능하므로 지표 측정이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a.2의 정부 지출 중 의료 지출 비율의 경우, 북한의 의료 서비스 제공에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빠른 시일 내 지표 측정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3.5.1 ‘약물사용장애 치료개입’, 3.5.2 ‘알코올 소비량 비전염 질병’은 의료 분야에 있어 초기 발전 단계에 있는 북한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가 아님에 따라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본다. 그 중 3.d.1 ‘국제보건규정에 의한 수용 능력’의 경우, 다른 전 세계적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개발을 위한 역량강화와 측정이 요구된다고 보았으나, 현재 북한의 역량으로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장기로 구분하였다.

무상의료 서비스를 표명하는 북한이 공개를 원치 않은 3.8.2, 3.b.3 등 보편적 건강보장 서비스 제공 관련 지표의 경우, 북한 체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과 웰빙’ 관련 해당 지표들은 모두 보건 분야 지표로 WHO가 주로 지표 관리가 가능하고, 약물은 UNODC, 통계와 관련 있는 World Bank가 함께 데이터 수집 및 지표 측정이 가능하며, 국내적으로는 보건복지부가 관련 지표 측정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본다.

(3) 깨끗한 물과 위생

북한의 SDG 6의 11개 지표를 모두 반영한 사례를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당국의 관심과 함께 국제적 기준 달성을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현재 목표에 대한 이행이 부진하지만 모든 지표를 개발해놓은 상황임에 따라 해당 분야에 대한 지표 수집 및 데이터 측정을 위한

기술적 지원 및 거버넌스 구축 관련 역량에 대한 지원만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북한이 이미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통합 수자원관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목표 대비 국제협력 시 적극적인 협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V-23 깨끗한 물과 위생 측면에서 수립 및 측정 필요 지표

| 목표 | 지표 | 국제기구 내 지표 관리 | | | 북한 | | | 우리 정부 내 해당 지표 협력 가능 부처 |
|-------|--|--------------|---------------------------|--|---------------------|----|----|------------------------|
| | | 현재 타어 | 가능한 관리 기관 | 파트너 기관 | 지표 개발 및 측정의 우선순위 | | | |
| | | | | | 단기 | 중기 | 장기 | |
| SDG 6 | 6.3.1 안전하게 처리되는 가정용 및 산업용 하·폐수 비율 | II | WHO UN-Habitat UNSD | UNEP OECD Eurostat | ○ | | | 환경부 |
| | 6.3.2 주변 수질이 양호한 수계의 비율 | II | UNEP | UN-Water | ○ | | | 환경부 |
| | 6.4.1 시간에 따른 물 이용 효율성 변화 | I | FAO | UNEP IUCN UNSD OECD Eurostat | ○ | | | 환경부 |
| | 6.4.2 물 스트레스 수준: 이용 가능한 담수 대비 취수 비율 | I | FAO | UNEP IUCN UNSD OECD Eurostat | ○ | | | 환경부 |
| | 6.5.1 통합수자원관리 이행 정도 | I | UNEP | UN-Water IUCN Ramsar | | | ○ | 환경부 |
| | 6.5.2 물 협력을 위한 운영협정을 맺고 있는 접경 지역 비율 | I | UNESCO-IHP UNECE | - | | | ○ | 환경부 |
| | 6.6.1 시간 경과에 따른 물 관련 생태계 규모의 변화 | I | UNEP Ramsar | UN-Water IUCN | | ○ | | 환경부 |
| | 6.b.1 물 및 위생관리에 대한 지방 커뮤니티의 참여를 위한 확립된 행정적 장책과 절차를 갖추고 있는 지방행정단위의 비율 | I | WHO OECD | UNEP | ○ | | | 환경부 |

출처: IAEQ-SDGs, "Tier Classification for Global SDG Indicators,"; 진유강·박영실, 『SDGs 데이터 국제기구 제공체계 구축 방안 연구』, pp. 83~104를 참조하여 저자가 재구성함.

6.3.1, 6.3.2, 6.b.1 등의 지표는 북한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식수와 위생과 직접 관련 있는 바 깨끗한 물과 위생 목표 중 비교적 빠른 시일 내 해결해야 하는 지표로 보았다. 한편 농업인프라의 수자원 관리와 관련 있는 6.4.1, 6.4.2 또한 식량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6.6.1 ‘생태계 규모 변화에 대한 측정’은 해당 분야에 대한 북한의 열악한 지표 측정역량을 고려하여 비교적 장기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국경 간 협력이 필요한 6.5.1, 6.5.2의 경우, 자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경지대를 걸친 한국 및 중국과 관련 협력이 필요한 바, 앞서 단기, 중기 과제를 해결에 중점을 두고 이후 관심을 가져도 될 지표로 보아 ‘장기’로 구분하였다.

해당 분야는 다양한 국제기구들에 의해 조사와 평가가 되고 있는 만큼 IAEG-SDGs는 WHO(깨끗한 물과 위생), UN-Habitat(거주시설 및 환경), UNEP(환경), OECD(통계) 등 다양한 협력기관을 제시하였다. 국내기관으로는 국내 식수위생을 관리하고 있는 환경부가 적격이라고 하겠다.

(4) 에너지

SDG 7 에너지 목표의 경우, 시급성에 따라 지표 개발의 시기성을 구분해보았다. 먼저 전기에너지와 관련 있는 7.1.1 ‘전기 접근성이 있는 인구 비율’의 경우 북한 인구의 삶의 질과 직접 연관 있는 지표임에 따라 시급한 측정이 필요할 것으로 고려된다. 또한 해당 지표는 이미 SDSN에서 국제적 측정방식이 존재하고 지표값이 제시된 만큼 빠른 시일 내 측정이 가능해 보인다. 관련 지표 관리는 World Bank로 IRENA(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국제재생에너지 기구)가 파트너 기관으로 협력이 가능하며, 국내기관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적절하다고 하겠다.

표 IV-24 에너지 측면에서 수립 및 측정 필요 지표

| 목표 | 지표 | 국제기구 내 지표 관리 | | | 북한 | | | 우리 정부 내 해당 지표 협력 가능 부처 |
|-------|--|--------------|--------------|----------------|----------------|---------------------|----|------------------------|
| | | 현재 타어 | 가능한 관리 기관 | 파트너 기관 | 북한 해당 여부 | 지표 개발 및 측정의 우선순위 | | |
| | | | | | | 단기 | 중기 | |
| SDG 7 | 7.1.1 전기 접근성이 있는 인구 비율 | I | World Bank | IEA, UN-Energy | ○ | ○ | | 산업통상 자원부 |
| | 7.a.1 개도국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포함한 재생 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연구 개발과 재생에너지생산을 지원하는 국제 자금 흐름 | I | OECD, IRENA | IEA, UN-Energy | ○ | | ○ | 환경부 |
| | 7.b.1 개도국의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 I | IRENA | | ○ | | ○ | 환경부 |

출처: 황수환 외,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의 SDGs 소개와 지표분석』, p. 320.

그 외 청정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지표(7.a.1, 7.b.1)는 현재 북한의 에너지 수급 현황과 역량 고려 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 ‘중기’로 분류하였다. 지표 관리 가능 국제기구는 IRENA이며, 국내에서는 환경부가 분야 역량강화 및 지표 측정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고려된다.

(5) 인프라

북한이 사회주의강국을 목표로 경제발전을 위해 인프라 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음에 따라 관련 산업 분야에 대한 전략 및 제도적 마련이 요구된다. 인프라 전략 수립 시 산업현황 확인이 필요할 필수 데이터가 필요함에 따라, 9.2.2, 9.3.1, 9.3.2, 9.2.2 등 산업 비율 관련 지표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측정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북한의 산업구조상 해당 산업 육성이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9.b.1 ‘총 부가가치 대비 중고급기술산업 부가가치 비율’은 ‘중기

지표'로 분류하였다. 이들 지표 개발과 측정은 UNIDO(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와 산업통상지원부가 협력이 가능하다.

표 IV-25 인프라 측면에서 수립 및 측정 필요 지표

| 목표 | 지표 | 국제기구 내 지표 관리 | | | 북한 | | | 우리 정부 내 해당 지표 협력 가능 부처 | |
|-------|--|--------------|-------------------|------------------|----------------|---------------------|----|------------------------|----|
| | | 현재 티어 | 가능한 관리 기관 | 파트너 기관 | 북한 해당 여부 | 지표 개발 및 측정의 우선순위 | | | |
| | | | | | | 단기 | 중기 | | 장기 |
| SDG 9 | 9.1.1 사계절 도로 2km 반경 내 거주하는 농촌 인구 비율 | II | World Bank | UNEP, UNECE, ADB | ○ | ○ | | 국토교통부 | |
| | 9.1.2 승객 및 화물 운송량 (운송수단별) | I | ICAO, ITF-OECD | UPU, UNEP, UNECE | ○ | ○ | | 국토교통부 | |
| | 9.2.2 총 고용 대비 제조업 고용 비율 | I | UNIDO | | ○ | ○ | | 산업통상자원부 | |
| | 9.3.1 총 산업 부가가치 중 소규모 산업 비율 | II | UNIDO | UNCDF | ○ | ○ | | 산업통상자원부 | |
| | 9.3.2 부채 혹은 대출한도가 있는 소규모 산업 비율 | I | UNIDO, World Bank | UNCDF | ○ | ○ | | 산업통상자원부 | |
| | 9.a.1 인프라분야에 대한 국제 사회의 총 공적지원 (ODA와 기타 공적지원) | - | OECD | | ○ | ○ | | 국무조정실 | |
| | 9.b.1 총 부가가치 대비 중고급 기술산업 부가가치 비율 | I | UNIDO | OECD | ○ | ○ | | 산업통상자원부 | |
| | 9.c.1 무선네트워크 사용 가능 인구 비율(기술별) | I | ITU | |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출처: 황수환 외,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의 SDGs 소개와 지표분석』, pp. 323~324.

또한 사회적 발전 측면의 물리적 인프라와 관련된 도로접근성 지표(9.1.1, 9.1.2)의 경우 북한의 현재 경제발전 상황을 고려하여 시기상 '중기 지표'로 분류하였다. 이들 지표 관리 가능 기구는 지표 순대로 World Bank,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있으며, 국내에서는 국토교통부가 협력 파트너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력 보급 등 그 외 인프라와 관련된 9.a.1과 9.c.1은 시급성이 요구되진 않으나 국제적으로 명확한 지표 정의로 인해 측정이 비교적 쉬워 단기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표들이다. 해당 지표 관리 가능 기구는 ITU이며, 국내적으로는 산업통상지원부가 있다.

(6) 환경

표 IV-26 환경 측면에서 수립 및 측정 필요 지표

| 목표 | 지표 | 국제기구 내 지표 관리 | | | 북한 | | | 우리 정부 내 해당 지표 협력 가능 부처 |
|-----------|---|--------------|---------------------|--|------------------------|----|----|------------------------|
| | | 현재 타어 | 가능한 관리 기관 | 파트너 기관 | 지표 개발 및 측정의 우선순위 | | | |
| | | | | | 단기 | 중기 | 장기 | |
| SDG 6 | 6.4.1 시간에 따른 물 이용 효율성 변화 | I | FAO | UNEP IUCN UNSD OECD Eurostat | ○ | | | 환경부 |
| | 6.4.2 물 스트레스 수준: 이용 가능한 담수 대비 취수 비율 | I | FAO | UNEP IUCN UNSD OECD Eurostat | ○ | | | 환경부 |
| | 6.5.1 통합수자원관리 이행 정도 | I | UNEP | UN-Water IUCN Ramsar | | | ○ | 환경부 |
| | 6.5.2 물 협력을 위한 운영협정을 맺고 있는 접경 지역 비율 | I | UNESCO-IHP UNECE | - | | | ○ | 환경부 |
| | 6.6.1 시간 경과에 따른 물 관련 생태계 규모의 변화 | I | UNEP Ramsar | UN-Water IUCN | | ○ | | 환경부 |
| SDG 12 | 12.1.1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을 지원하는 정책수단을 개발, 채택, 이행하고 있는 국가 수 | II | UNEP | - | | | ○ | 환경부 |
| | 12.4.1 유해 폐기물과 기타 화학물질에 대한 국제 다자간 환경협약이 요구하는 정보 제공에 관한 약속과 의무를 이행하는 당사국 수 | I | UNEP | - | | | ○ | 환경부 |

| 목표 | 지표 | 국제기구 내 지표 관리 | | | 북한 | | | 우리 정부 내 해당 지표 협력 가능 부처 |
|--------|--|--------------|--------------|----------------------|------------------------|----|----|------------------------|
| | | 현재 타어 | 가능한 관리 기관 | 파트너 기관 | 지표 개발 및 측정의 우선순위 | | | |
| | | | | | 단기 | 중기 | 장기 | |
| SDG 12 | 12.4.2 (a) 1인당 발생시키는 유해폐기물 발생량과 (b) 유해폐기물 처리 비율(처리유형별) | II | UNSD, UNEP | OECD, Eurostat, UNU | | ○ | | 환경부 |
| | 12.5.1 국가 재활용 비율, 물질재활용 톤 | II | UNSD, UNEP | OECD, Eurostat, UNU | | ○ | | 환경부 |
| | 12.6.1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기업 수 | II | UNEP, UNCTAD | UNEP | | | ○ |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
| | 12.7.1 지속 가능한 공공 조달 정책과 실행 계획 이행 정도 | II | UNEP | - | | | ○ | 조달청 |
| | 12.8.1 (i) 세계시민교육 (ii) 지속가능발전교육이 (a) 국가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교육 (d) 학생 평가 영역에서 주류화된 정도 | II | UNESCO-UIS | - | | | ○ | 교육부 |
| | 12.b.1 경제환경 측면에서 지속가능관광 모니터링을 위한 표준 회계 틀 이행 | I | UNWTO | - | | | ○ | 문화체육관광부 |
| | 12.c.1 GDP 단위당 화석연료보조금액 | I | UNEP | - | | | ○ | 환경부 |
| SDG 13 | 13.2.2 연간 온실가스 총 배출량 | II | UNFCCC | - | ○ | | | 환경부 |
| | 13.a.1 2025년까지 1천억 달러 자원 조성을 위해 매년 제공 혹은 모금되는 금액 | II | UNFCCC | - | | | ○ | 환경부 |
| SDG 14 | 14.1.1. (a) 연안 부영양화 지수 (b) 부유성 플라스틱 잔해밀도 | II | UNEP | IOC-UNESCO, IMO, FAO | ○ | | | 해양수산부 |
| | 14.2.1. 생태계 기반 접근법으로 해양 구역을 관리하는 국가 수 | II | UNEP | IOC-UNESCO, FAO | | | ○ | 해양수산부 |
| | 14.3.1. 대표 표본 추출 지점에서 측정되는 평균 해양산도(pH) | II | IOC-UNESCO | UNEP | ○ | | | 해양수산부 |
| | 14.4.1.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의 어족자원 비율 | I | FAO | - | ○ | | | 해양수산부 |
| | 14.6.1. IUU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적 수단 이행 정도 | I | FAO | - | | | ○ | 해양수산부 |

| 목표 | 지표 | 국제기구 내 지표 관리 | | | 북한 | | | 우리 정부 내 해당 지표 협력 가능 부처 |
|-----------|---|--------------|-----------------------------------|--------------|------------------------|----|----|------------------------|
| | | 현재 타어 | 가능한 관리 기관 | 파트너 기관 | 지표 개발 및 측정의 우선순위 | | | |
| | | | | | 단기 | 중기 | 장기 | |
| SDG 14 | 14.7.1. 군소도서개발국, 최빈개도국, 모든 국가의 GDP 중 지속가능한 어업 비율 | I | FAO UNEP- WCMC | - | ○ | | | 해양 수산부 |
| | 14.a.1. 총 연구예산 중 해양기술 부문 비율 | II | IJC- UNESCO | UNEP | | | ○ | 해양 수산부 |
| | 14.b.1. 영세어민의 해양자원 접근을 인 정하고 보호하는 법, 규제, 정책, 제도의 국가별 적용 단계 진척도 | I | FAO | - | | | ○ | 해양 수산부 |
| | 14.c.1. 해양과 그 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 능한 이용을 위해 유엔해양법협 약에 반영된 국제법을 이행하기 위한 법, 규제, 정책, 제도, 해양 관련 수단을 비준, 수용, 집행하는 과정에서 진전한 국가 수 | II | UN-DOALOS UN-Oceans members | - | | | ○ | 해양 수산부 |
| SDG 15 | 15.1.2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 중요 지역 중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면 적 비율(생태계 유형별) | I | UNEP-WCMC, UNEP, IUCN | Ramsa | ○ | | | 환경부 |
| | 15.6.1 (유전자원의) 공정하고 공평한 혜택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입 법, 행정 및 정책 프레임워크를 채택한 국가의 수 | I | CBD- Secretariat | FAO, UNEP | | | ○ | 환경부 |
| | 15.7.1 불법 거래 혹은 밀렵된 야생생물 비율 | II | UNODC, CITES | UNEP | | | ○ | 환경부 |

주: SDG 12, 13, 15 목표 간 지표별 중복내용은 생략.

출처: IAEG-SDGs, "Tier Classification for Global SDG Indicators,"; 진유강·박영실, 『SDGs 데이터 국제기구 제공체계 구축 방안 연구』, pp. 83~104를 참조하여 저자가 재구성함; SDG 12, SDG 13, SDG 15는 황수환 외,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의 SDGs 소개와 지표분석』, p. 328, pp. 330~331.

미제시 지표 중 지구온난화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성을 띄는 지표는 국제사회에서 주요 논의 중인 사항인 온실가스 배출 관련 지표인 SDG 13.2.2이다. 이외에도 유해폐기물, 재활용, 화석연료 등 관련 지표(12.4.2, 12.5.1, 12.c.1)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중요

성이 커지고 재난대응을 위한 인도적 위기 대비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 따라 북한의 준비가 ‘중기’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리 가능 국제기구로는 지표 순서대로 UN FCCC, UNSD와 UNEP가 있으며, 국내에는 환경부가 관련 노하우 및 역량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13.a.1의 경우, 북한의 경제 여건상 환경 관련 큰 규모의 재원 조성이 당분간 어려운 바 장기간 준비가 요구되는 지표로 보일 것이다. 또한 12.6.1, 12.7.1, 12.8.1 등 지속가능발전 관련된 지표의 경우, 다른 지표들 대비 시급하진 않으며, 북한의 발전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로 구분하였다.

지구온난화 외에도 생태계 관련 지표 중 앞서 언급한 물 관련 생태계(SDG 6)의 경우 설명을 생략하였다. 이를 제외한 육상 및 해양 생태계에서 추가 지표 개발이나 측정이 요구되는 지표는 다음과 같다. 우선 15.1.2는 북한의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생물다양성 중요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설정한다면 단기에 지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관리 가능 기관으로 UNEP-WCMC(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World Conservation Monitoring Centre, 유엔환경계획 세계보전감시센터)와 환경부가 적절할 것으로 고려된다. 그 외 북한 내부 역량과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15.6.1과 15.7.1은 지표 준비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고려된다.

해양생태계의 경우, 북한이 세부목표로 수용한 지표(14.1.1, 14.3.1, 14.4.1, 14.7.1)들에 대해 정책적 의지를 보이는 바 과학기술을 이용한 측정역량강화 지원 시 빠른 시일 내 지표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4.2.1 지표는 북한의 현재 통계 측정역량 고려 시 단기간에 전 해역에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련 역량강화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그에 반해 북한의 실정에 따라 세부목표와 이행지표가 삭제된 지표

중 의도적으로 공개를 거부한 지표인 14.6.1, 14.a.1, 14.b.1의 경우 북한이 데이터를 생산하거나 공개할 것을 단기간에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여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북한의 특수 상황을 감안한 대안지표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14.c.1 유엔 해양법협약 이행 진전의 경우, 현재 북한이 가입하지 않은 상태임에 따라, 향후 가입에 있어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기구에서 지표 관리가 가능한 기구는 생태계 보존 측면에서는 UNEP가 있고, 수산 관련 기구는 FAO가 있으며, 국내에서는 해양수산부가 관련 협력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한편 환경과 관련된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12.b.1의 경우, 관광 산업이 경제발전 중인 개발도상국의 발전전략에서 중요 분야로 간주되며, 북한 또한 해당 분야에 관심을 보이는 바 중기적 관점에서 관련 지표인 12.b.1에 대해 지표 측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표의 경우 국제기구인 UNWTO(United Nations World Tourism Organization, 유엔세계관광기구)와 국내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로 들 수 있다.

4. 소결

VNR은 유엔 회원국들의 자발적 SDGs 보고 메커니즘으로 통일성이 부재하고 개별국가들에 대한 이행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재 SDGs의 이행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써 의의가 있다. 북한이 제출한 VNR은 북한이 자국의 SDGs 목표 이행을 위해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자체적으로 현황을 평가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SDGs에 대한 이행의지와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

하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유엔 회원국별 SDGs 이행현황을 평가하는 유엔 SDSN이 2022년 SDR을 통해 북한의 SDGs 이행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한 결과, 북한은 다른 저소득 국가의 상황과 유사하게 시급한 도전과제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아직까지 북한이 제시한 지표가 불충분하여 실제 정확한 이행현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VNR과 SDR의 종합적인 분석은 북한이 SDGs 달성을 위해 수립한 목표와 지표에 대한 데이터 측정역량강화가 필수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전 연구와 앞 장에서 분석한 북한의 SDGs 17개 목표와 세부지표의 신뢰성 및 지속성 평가를 바탕으로 전체 17개 목표에 대해 추가 측정역량강화가 필요한 지표를 총괄적으로 검토하였다. 북한은 여전히 국가 발전의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발전 측면에서 지표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바, 주제별 연계지표에 대한 개선과 함께 측정 정확성과 지속성 제고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북한의 경제 및 사회발전 상황을 고려하여 인도주의적 지원의 시급성과 북한의 VNR 중점분야 해결을 위해 추가 역량강화 및 지표 개발이 필요한 지표들을 선별하였다. 관련 분야의 SDGs 이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목표별 세부지표 간 연계를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분석했다. 여러 분야에 걸친 다양한 지표들의 지속적인 측정을 위해서 당국의 통계 및 지표 측정역량 관련 정책 및 제도 수립과 거버넌스의 구축이 요구되며, 인적역량강화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현재 북한은 대북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해 국경 봉쇄, 지속적인 자연재해 등으로 SDGs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은 통계 역량이 부족하고, 국내외 사회경제적 위기에 맞물려 자체적인 지원

이 미흡한 바, 지표 측정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동 연구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한민국이 지원 가능한 통계 역량 및 SDG 이행을 개선할 수 있는 지표를 우선적으로 선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V. 결론

최규빈(통일연구원)

최원근(통일연구원)

김형렬(서울대학교)

문경연(전북대학교)

윤인주(한국해양수산개발원)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결론

1. 요약

이 연구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동참을 선언한 2030 의제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2021년 7월 보고한 VNR의 SDGs 이행 현황을 중심으로 북한의 세부목표 및 지표를 검토 하였다. 지속가능한 발전 담론은 경제 성장만으로 오늘날의 세계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경제 발전, 사회적 발전, 자연의 보호라는 세 가지 중추적 요인이 상호 연계되어 있는 만큼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극단적 빈곤과 기아로부터의 해방, 새천년개발목표 종료에 맞춰 새로운 전환 필요에 따라 국제사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국제사회의 새로운 개발의제로 합의한다.

북한은 2015년 9월 ‘포스트 2015 개발의제’ 동참을 공식화한 이후 국제사회와 다각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이행을 해왔고 2021년 7월 SDGs 이행에 관한 VNR을 실시함으로써 SDGs의 이행 방향과 체계, 지표 설정 및 이행 현황 등을 공식적으로 보고하였다. 중요한 점은 북한이 왜 국제사회의 주류 개발 담론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수용 했으며, SDGs를 어떻게 현지화하고 있는가이다.

북한의 SDGs의 수용은 국제사회와의 대외관계, 내부의 경제발전 전략, 북한 개발협력의 진화에 따른 컨센서스(consensus)가 종합적

으로 고려된 결과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북한의 관심과 대응은 일시적이거나 수사적인 차원이라기보다 상당 기간 동안의 관찰과 국제사회와의 교류, 개발 규범에 대한 이해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경제사회발전 측면에서 북한은 유엔의 역할을 인정해왔고 유엔이 민족에 대한 자결권과 인권을 존중하고 발전과 빈곤퇴치를 위한 환경조성을 통해 보편적 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해 왔다. 상호존중, 내정불간섭, 호혜적 이익이라는 헌법 원칙을 강조하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동등한 회원국으로 유엔이 주도하는 주요 담론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혀온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은 SDGs가 북한의 경제발전5개년전략(2016~2020) 달성 및 사회주의강국건설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부합하다는 전략적 판단을 갖고 수용하였다. 사실 2030 의제는 행동 지향적이며 모든 국가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해야 하고 광범위한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목표를 다루고 있지만 빈곤 문제 해결 및 취약계층 위기 극복을 도울 새로운 접근 및 집중적인 지원도 지향하고 있다. 2030 의제는 각 나라의 현실과 역량, 발전 수준의 차이를 고려하고 국가 정책과 우선순위를 존중하며,^{316/}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여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을 제고하고, 글로벌 파트너십 및 연대 정신에 기반하고 있다.^{317/}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은 국제사회가 다 함께 동참하고 개별 국가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고려하는 SDGs를 굳이 거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북한은 경제발전전략에 SDGs 주요 목표들을 연계함으로써 국가발전전략을 정당화하고 이행에 필요한 자원, 기술, 지식 등을 확보하여 이를 내부 정책 실행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2030 의제와

^{316/}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Doc. A/RES/70/1 (25 September 2015), para 5, 21, p. 3, p. 6.

^{317/} *Ibid.*, para. 39, p. 10.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북한의 통치 전략 및 발전전략 차원에서 유용하다. 실제 북한은 2021년 VNR에서 글로벌 SDGs를 사회주의강국 건설 및 5개년전략에 연계시켜 북한식의 SDGs를 수립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식량, 보건, 환경, 에너지 등 경제발전전략에 주요 의제들이 글로벌 SDGs와 어떻게 조응되는지 명확히 밝혔다.

2030 의제가 북한에게 이전되는 과정은 인류를 빈곤과 저발전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방하고 MDGs 이후 국제사회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동원하는 ‘유엔’과 자신들의 경제발전전략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정당화하려는 ‘북한’의 필요가 적절히 맞아떨어졌기 때문만은 아니다. 유엔이 대북사업의 추진을 위해 그동안 북한과 협력해 왔던 전략프레임워크에 기반한 과정이자 결과인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1990년 중반 이후 북한의 식량 부족 및 기근에 대응하면서 시작된 유엔 기구들의 대북 사업은 2010년 들어 글로벌 개발의제와의 연결 및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 기구들 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에 대한 수요를 만들었다. 2011년 마련된 전략계획이 MDGs 달성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계획이었다면,^{318/} 2017년 수립된 전략계획은 SDGs에 기반한 목표 및 사업 원칙에 대한 합의라고 볼 수 있다. 즉 북한의 2030 의제 이행은 북한이 국제사회가 합의한 개발의 보편적 접근 방식과 핵심 가치 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동시에 북한식으로 변용하는 일련의 현지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례이다. 2년차 연구에서 주목하는 주요 목표별 평가는 아래와 같다.

북한은 SDG 1 빈곤퇴치를 자체적인 NDG 1 인민생활 수준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수용하였다. 북한은 SDG 1의 13개 지표 가운데 7개를

318/ 임을출,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 새천년개발목표(MDGs) 체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2권 2호 (2013), p. 144.

수용했지만, 빈곤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의나 기준을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은 근본적인 한계로 볼 수 있다. 북한은 빈곤과 관련된 SDG 1의 지표들을 삭제한 대신,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보장과 관련된 지표들로 변경하거나 새로 추가하였다. 또한 재난경감과 관련된 지표들은 SDG 1의 내용을 변화 없이 수용하였다. 특히 북한의 VNR 보고서에는 5개의 지표에만 실제 현황이 나타나 있어, 북한 당국이 지표의 이행을 위한 실질적 역량과 의지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SDG 3 건강과 웰빙과 관련된 세부목표와 지표들을 성실하게 NDG에 수용하였다. 북한의 VNR 보고서는 북한의 자체적인 무상의료 서비스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일부 세부목표에 SDG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을 앞세우고 있었다. 다만 북한의 보건·의료 현실상 대부분의 자료들이 전산망 등에 의해 취합되는 것이 아니라 인력에 의존하거나 관료적 행정체계를 거쳐 수집되기 때문에 신뢰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현실이다.

SDG 4 양질의 교육은 북한에서 ‘모든 인민의 지식노동자화’로 변형되어 수용되었다. 세부목표 가운데 4.6(문해력 및 수리력), 4.b(교육 재정 확보), 4.c(교사 확보)는 북한 SDGs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 나머지 세부목표 및 지표들은 북한 SDGs에서 일부 수정되거나 범위가 축소되어 반영되었다. 이는 북한이 글로벌 메타데이터 확정이나 PISA나 PIACC, TIMSS 등과 같은 국제적 수준의 조사에 참여하지 않고 국내 공식통계를 통한 자료의 제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북한 체제의 우월성에 반하거나 북한이 추구하는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는 세부목표 및 이행지표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북한은 유엔의 SDG 5를 사실상 그대로 수용하여 모든 부문에서

성평등과 여성 및 여아의 권한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렇지만 유엔 SDG 5의 세부목표 가운데 5.2(폭력철폐), 5.4(무상돌봄 및 가사노동), 5.a(오너십 및 통제권), 5.c(법안채택 및 강화)는 북한 SDG 5에서 삭제되었다. 유엔 SDG의 세부목표 5.3(악습철폐)의 경우 북한과 관계없는 여성할례 부분은 삭제하는 대신 조혼 근절로 변용되었으며 5.3.2의 지표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자료 및 산출 방안이 부재한 원인으로 볼 수 있으나 여성 인권이나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같이 민감한 사안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으려는 북한의 의도에 기인한다. 특히 세부목표 5.3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목표들에서 정부 기관의 역할이 부각된다는 것은 북한이 근본적으로 남녀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에서 성평등을 다루고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은 SDG 6 깨끗한 물과 위생의 분야에서 한 개의 지표를 추가하고 두 개의 지표를 수정한 점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지표들을 SDG 6의 글로벌 기준에 맞게 수용했다. 다만, 북한의 VNR 보고서에서 SDG 6의 실제 이행 현황을 단 두 개의 지표로만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북한이 VNR 보고서에서 실질적인 목표 달성의 측면에 어려움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엔 SDG 10은 국가 내·국가 간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한 반면 북한은 인민 대중의 권리 및 역할 보장으로 변형하여 수용하였다. 북한의 SDG 10에는 1개의 세부목표와 1개의 세부지표만이 존재한다. 북한이 수용한 세부목표 10.2는 사회적·정치적·경제적 포용성 확대와 관련된 것인데, 공식적인 이행지표를 채택하지 않고 이와 관련하여 채택된 국가법과 가입된 국제협약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즉 북한은 유엔 SDG 10의 대다수의 세부목표와 지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북한 사회가 공식적으로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SDG 10이 북한 체제의 국제사회에서의 정당성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향후 SDG 10의 이행지표 관련 데이터를 생산해내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VNR 보고서에서 SDG 14를 해안·바다·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으로 정의했고 10개 세부목표 중 여섯 가지를 수용했다. 빠진 네 가지는 14.6(불법어업)과 14.a(과학연구), 14.b(영세어업), 14.c(법적 기반)이다. 이처럼 북한의 여건에 적합하지 않은 네 가지 세부목표가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각 세부목표에 해당하는 이행지표 네 가지도 존재하지 않는다.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수단의 이행 정도(14.6.1), 해양기술 예산 비율(14.a.1), 영세어민의 해양자원 접근 진척(14.b.1)은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에 따른 의도적 미공개이며, 유엔해양법 이행 진전(14.c.1)은 글로벌 지표가 북한의 실정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세부목표 중 14.1(해양오염), 14.2(해양생태계), 14.3(해양산성화), 14.4(지속가능 어장), 14.5(해양보호구역), 14.7(경제적 혜택)은 모두 수용했으며 각 세부목표에 해당하는 이행지표도 글로벌 지표와 거의 동일하다. 하지만 해양보호구역의 비율(14.5.1)을 제외하면 데이터가 부재한 상황인데 이는 해당 이행지표에 관한 정보를 생산할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북한은 유엔의 SDGs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북한의 상황과 우선순위에 따라 변용하여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상당수의 글로벌 SDGs 목표가 북한에서도 그대로 수용되고 있지만 북한이 자신의 상황과 법·제도에 맞게 목표 자체를 일부 혹은 전면 수정한 목표도 확인되었다. 지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북한

이 제공하는 데이터의 가용도와 신뢰도는 북한 SDGs를 해석함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불분명하고 불충분한 통계 수치가 제시되고, VNR 이전에 내·외부기관을 통해 제출된 적이 없는 지표들이 다소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북한의 데이터 가용 정도도 상당히 낮다. 유엔 SDG 통계에 의하면 2015년 이래 최소 2개년 이상 데이터포인트를 확보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할 때 북한의 17개 SDG 목표 중 50% 이상 가용도를 나타낸 것은 3개 목표(SDG 3, 6, 7)에 불과했다. 유엔 SDSN의 지속가능발전보고서 또한 북한이 글로벌지표 94개 중 29개 지표가 미제출로 전체 31%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SDSN의 지속가능발전보고서는 북한을 데이터 가용 정도가 낮고 SDGs 지표 미제시 국가 30개국 중 하나로 구분하고 있었다. 북한의 VNR과 유엔 SDSN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북한이 제시한 세부지표에서 정확성 제고를 위한 추가 역량강화가 필요한 지표는 47개이며 지속적인 측정을 위해 역량강화가 필요한 지표는 63개로 파악되었다.

끝으로 이 연구는 북한의 식량안보(SDG 1, 2), 재난위기관리(SDG 11), 인권증진(SDG 5, 8)이 북한의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기존 지표 중 역량강화가 필요한 지표와 함께 신규로 개발이 필요한 지표들을 선별하였다. 또한 북한의 NDG와 연계되며 SDG 이행체계로써 기술위원회로 제시된 농업(SDG 2), 건강과 웰빙(SDG 3), 깨끗한 물과 위생(SDG 6), 에너지(SDG 7), 인프라(SDG 9), 환경(SDG 13, 14, 15) 분야에서 역량강화가 필요한 지표 및 신규 개발이 필요한 지표를 제시하였다. 결국 북한에는 다른 저소득국의 상황과 유사하게 시급한 도전과제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SDG 목표와 수립한 지표에 대한 데이터 측정역량강화가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2. 정책적 시사점

2021년 북한 VNR에서 주목할 부분은 북한이 유엔의 지표를 수용하면서도 상당수의 세부목표 및 지표는 제시하지 않았고, 일부는 북한의 방식으로 변형하거나 새롭게 제시한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유엔 차원의 SDGs라는 주류 담론이 북한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지역화 혹은 현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이 2021년 제출한 VNR은 북한이 자국의 SDGs 목표 이행을 위해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자체적으로 현황을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북한이 SDGs 이행의 핵심적인 프로세스인 VNR을 수행한 것은 SDGs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다만 SDGs를 북한 체제의 지속성과 북한 발전전략의 정당성으로 활용하거나 취약계층의 빈곤과 삶의 질 개선 보다 기존 제도와 이익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구화하는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SDGs의 국제화·표준화·지역화 측면에서 정책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가. 지속가능한 발전 담론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이해

지속가능한 발전 담론 자체가 북한에게 특별히 해(害)가 되지 않았던 만큼 김정은 체제에서 강조되는 ‘우리식 사회주의 전면적발전’ 사상 및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에서^{319/}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다방면의 발전과 균형을 지향하는 SDGs는 앞으로도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320/} 유엔 SDGs 이행이 2030년까지이며, 북한이 자신들의

319/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향한 거창한 변화의 서막을 열어놓으시여,” 『로동신문』, 2022.1.27.; “조선로동당 제1차 선전부문일군강습회 개강,” 『로동신문』, 2022.3.29.

새로운 경제발전5개년계획(2021~2025)에 SDGs를 긴밀하게 통합한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SDGs는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 차원에서도 유의미한 의제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행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북한에 특화된 방식으로 SDGs를 달성하고자 할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식 SDGs가 보편적 개발의제와 조화될 수 있도록 북한 당국과 더 많은 소통과 대화를 하고 필요한 지식공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의 SDGs에서 글로벌 세부목표나 지표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중요하다. 북한과의 직접적인 협력이 어렵다면 북한의 SDGs 이행을 지원하고 필요한 기술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ESCAP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기구들과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즉 한국은 다년간의 대북지원 경험 및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ODA 사업을 통해 축적한 경쟁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북한의 발전전략이 국제사회가 함께 합의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긴밀히 연계되도록 다리(bridge builder)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20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서 개도국의 SDGs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의 역량을 집중할 것을 명시한 바 있다.^{321/} 비록 북한이 ODA의 대상이 아니며 정부의 대북 지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로 별도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기구를 활용한 다자성 양자 지원은 국제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가능하

320/ 물론 김정은 위원장은 정치 및 군사강국을 선차적으로 달성하면서 경제와 문화 강국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는 점, 2030 의제가 SDG 16에서 평화를 포함 하지만 군사 부분을 직접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김정은 체제의 ‘사회주의전면발전론’은 2030 의제와 근본적인 지향점에서 차이가 있다. 임수호는 북한이 “국방건설 선차, 경제건설 동시추진이라는 특유의 절충주의적 담론”을 통해 최고지도자의 경제전략노선에 대한 해안과 해답 그리고 향후 실패 가능성에 대한 위험 회피를 동시에 의도한 것으로 분석한다. 임수호, “북한 ‘사회주의 전면발전론’의 의미와 시사점,” 『INSS 전략보고』, no. 158 (2022), p. 5.

321/ 맹준호, “국제개발협력 차원에서 보는 북한 SDGs 이행 과제,”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발표자료, 2022.2.16.).

다.^{322/} 김정은 위원장 이후 계속되는 핵미사일 개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로 북한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협력사업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 그렇지만 북한이 당면한 만성적인 식량부족, 글로벌 보건위기,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은 글로벌 차원의 대응과 협력이 요구되는 의제인 만큼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의 공간은 존재한다.

제프리 삭스는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세 가지 도전으로 소득 격차 증대 및 부의 편중에 의한 경제적 불평등, 지구온난화, 생물 다양성 손실, 해양오염으로 나타나는 글로벌 환경위기, 국가 간 갈등 위험 고조로 인한 전쟁 발발 가능성을 뽑았다.^{323/} 그는 시장 중심의 경제성장이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국가의 번영, 불평등의 감소,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추구해야 하며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목표를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이 시대의 핵심 비전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32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차원의 도전은 북한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 북한 역시 사경제 활동으로 인한 소득 격차가 생겨나고 있고 농업, 경공업, 중공업 등 부문 별 균형 발전,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완화 등이 사회주의 전면 발전에 있어 중요한 의제로 강조되고 있다.^{325/}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성 재난 등은 무엇

322/ 위의 자료.

323/ 제프리 삭스 지음, 이종인 옮김, 『지리 기술 제도』, pp. 284~286.

324/ 위의 책, p. 301.

325/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기는 정치와 경제, 문화, 국방 등 모든 부문이 균형적으로, 동시에 발전하는 시대를 의미한다. ...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차이, 공업과 농업간의 차이,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결정적으로 없앨 때 수도로부터 산골짜기까지 이르기 까지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인민들의 문명한 생활이 활짝 꽃피나게 될 것이다. 나라의 전반부문을 균형적으로 동시에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강국건설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관건적인 요구이다.”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이룩해나가자.” 『로동신문』, 2021.10.30.; “우리식 사회주의의 새로운 발전기는 결코 특정한 한두개 분야나 부문에서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면적 발전에 관한 우리 당의 구상과 결심은 사회주의건설에서 매 부문들 사이의 균형을

보다 북한의 식량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북한 당국의 관심이 높다. 무엇보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와 갈등 상황은 지속되고 있으며 남북한 모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세계화가 직면한 불평등, 환경위기, 평화의 취약성은 복합적 위기로 세계적으로 합의하고 총체적인 접근 방식인 지속가능한 발전은 한반도 전체에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326/} 따라서 북한의 인도적 위기 대응역량강화 및 국가발전 목표와의 연계 차원에서 SDGs 이행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나. 데이터 측정 및 수집을 위한 역량강화

이 연구가 밝힌 것과 같이 북한의 SDGs 달성을 위해서는 SDG 목표와 수립한 지표에 대한 데이터 측정역량강화가 필수적이다. 북한 데이터에 대한 신뢰의 문제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데이터 자체의 부재, 데이터 수집 능력의 미비, 과학적이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데이터 측정 및 관리 능력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지표 미비는 데이터 가용 실태로 분명히 드러났다. 북한의 경제, 사회, 환경 등 각 영역들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되고 북한 통계국의 검토와 승인이 이루어진 데이터가 국제사회와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질 때 글로벌 지표의 수용도도 높아질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 북한의 데이터 가용 정도는 일부 목표를 제외하고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VNR의 지표로 제시한 데이터라 하더라도 상당수는 2015년, 2018년, 2020년의 3년 자료만을 제시

보장하고 사회전반을 다같이 속살이 지게 발전시키는 것이며 시, 군을 비롯한 지방이 변하는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것이다. 사회주의 건설의 전 전선이 다같이 발전하고 전진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발전관이고 혁명의 요구이며 발전을 지향하는 우리의 리상이고 목표이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 회의의 커다란 실천적 의의,” 『로동신문』, 2022.1.4.

^{326/} 제프리 삭스 지음, 이종인 옮김, 『지리 기술 제도』, p. 277.

한 관계로 시계열 분석이 어렵다.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 가용도, 신뢰도를 높이는 것의 일차적인 책임은 북한 당국에 있다. 여러 분야에 걸친 다양한 지표들의 지속적인 측정을 위해서 당국의 통계 및 지표 측정역량 관련 정책 및 제도 수립과 거버넌스의 구축이 요구되며, 인적역량강화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북한 스스로 열악한 데이터 수집 역량을 인정한 것처럼 통계 자체의 정확성이 미흡한 관계로 관련 주제별 지표 측정역량과 전반적인 통계시스템 구축 역량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의 주류 담론으로 자리 잡은 SDGs의 국제화 및 표준화 방향에 대해 북한은 아직 충분한 준비가 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SDGs와 비교 차원에서 북한이 제시한 목표들의 부합성이나 데이터의 가용 정도는 현재 북한 SDGs 이행의 현실과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이 다양한 의제와 관련된 정책들을 수립하고 지표 및 이행 체계를 구축해왔으며 필요한 데이터를 국제기구들과의 협업을 통해 조사하고 공유해 왔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다.^{327/}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통계역량강화를 요구하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당 차원에서 통계사업의 범위 확대, 선진적인 통계 기법 및 기술 도입, 통계의 객관성과 과학성 등의 역량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통계의 중요성 및 개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SDGs 이행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국가계획위원회와 중앙통계국 역시 2021년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경제사업의 객관적조건과 생산가능성, 잠재력에 대한 과학적인 타산에 기초하여 사업체계와 방법을 혁신

^{327/} UNFPA와 북한이 실시한 두 차례 인구조사(1993, 2008) 외, WFP, UNICEF, WHO가 실시한 영양실태조사(National Nutrition Survey, 2002, 2004, 2012), UNFPA의 경제사회인구보건조사(Socio-Economic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s 2014), UNICEF가 실시한 다중지표군집조사(MICS, 1998, 2000, 2009, 2017)가 대표적인 사례임.

하는데서 나서는 방도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찾아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328/}

북한의 데이터역량강화는 단순히 북한의 경제사회의 현실을 파악하고 SDGs 이행 및 모니터링을 위한 기본 요건을 갖추는 것 이상으로 인도적으로 가장 취약한 주민들의 실태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저개발국가나 통계역량이 미흡한 국가일수록 가장 취약한 혹은 뒤쳐진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특히 취약계층(아동, 청소년, 장애인, 유병자, 노인, 이주자 등)에 대한 통계적으로 명확한 세분화된 데이터(disaggregated data)가 북한에서 수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집계되지 못했던 인구를 파악하는 것(counting the uncounted)”^{329/} 북한 사회 내 불평등 요인과 취약계층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여 SDGs 이행 차원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330/}

이 연구는 북한이 제시한 지표 중 대부분의 경우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인도주의적 지원의 시급성과 북한의 VNR 중점분야 해결을 위해 추가적인 역량강화 및 개발이 필요한 지표를 제시하였다. 국내외 사회경제적 위기에 맞물려 부족한 통계 역량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이 자체적인 지원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바, 지표 측정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북한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관련 지표 개발과 측정을 요구하는 한편 국제협력을 통해 관련된 지식공유 및 기술협력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328/ “국가경제지도기관들에서 하반기 인민경제계획수행을 위한 작전심화,” 『로동신문』, 2021.7.4.

329/ UNSD, “Data Disaggregation and the SDGs,” (<https://unstats.un.org/sdgs/files/meetings/vnr-workshop-dec2019/4.1-UNSD-Disaggregation-for-SDGs.pdf>) (Accessed October 10, 2022).

330/ Inga T. Winkler and Margaret L. Satterthwaite, “Leaving no one behind? Persistent inequalities in the SDG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ights*, vol. 21, no 8 (2017), p. 1074.

다. 주요 SDG별 정책 제안

2차년도 연구가 수행된 주요 목표별 정책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빈곤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및 재난경감 대책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북한은 국제적 또는 자체적 기준에 부합하는 빈곤 관련 통계를 공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빈곤의 개념이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는 근본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북한의 SDG 1을 평가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조율하기 위해서도 북한 내 빈곤 실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요구된다. 특히 북한의 경제 구조상 지역 간 편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국단위뿐만 아니라 지역별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은 SDG 1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재난경감과 관련된 세부목표 및 지표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다. 북한이 매년 반복되는 태풍, 홍수, 가뭄 등으로 인해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보고 있음에 따라, 현 정부는 체제의 정당성을 기증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북한의 VNR 보고서가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을 숨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난경감 대책 분야에서는 ODA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런 북한의 적극적인 태도는 재난경감 정책 및 방재 분야를 통해 남북 간 교류 또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유도할 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다. 따라서 대북 경제제재라는 현실적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재난경감 대책에 대한 상호 간의 공유 및 이해를 통해 남북교류 및 인도적 지원의 물꼬를 트는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SDG 3 건강과 웰빙과 관련하여 북한의 의료체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협력방안이 요구된다. 북한의 VNR 보고서에서 건강과 웰빙 관련 데이터들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력에 의존하는 자료수집 체계는 북한 의료체계에 대한 오랜 지적사항이기도 하다. 특히 북한의 경직된 관료체계 속에서 열악한 의료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감염병 질환에 대한 대응 역량과 함께 북한 의료체계의 근본적 문제는 비감염 및 만성질환 분야의 취약성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염병 분야에 대한 단기적이고 일회적 지원을 넘어서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의료체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하는 남북 간 및 다자간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단순히 의료진이나 장비, 의약품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북한의 의료체계의 전산화를 통한 투명성 재고 등 근본적 차원의 개선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셋째, SDG 4 양질의 교육과 관련하여 북한의 교육 형평성 실태 분석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지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수치상으로만 보면 북한은 12년 의무교육제도 시행을 통해 공교육망이 유치원부터 중등교육 단계까지 모든 학령기 인구를 다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북한 주민들의 일반적인 교육 수준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이나 북한 사회 내부 소식에 의하면, 실제 북한의 교육 상황은 통계수치가 나타내고 있는 것과는 큰 괴리가 있다. 특히 경제난으로 촉발된 공교육의 붕괴 및 교육의 시장화로 인해 교육 접근성과 성과에서의 계층별, 지역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북한의 SDG 4 중 특히 교육 형평성의 실질적 달성을 위해서는 북한 내 교육 접근성과 성과에서의 실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북한의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관심을 활용하여 4.7 관련 남북한 공동의 한반도

SDG 체계 구성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PISA나 PIACC, TIMSS 등과 같은 국제적 수준의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청소년 및 성인의 읽기 능력이나 산술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정기적인 국제 데이터 생산에 협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지표 가용성 차원에서 필요하다.

넷째, SDG 5 성평등 관련으로 여성의 인권 향상과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제출한 내용을 보면 북한에서는 국가형성기부터 성평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성·생식 보건과 재생이나 여성의 노동시장 및 정치참여의 측면에서도 SDG 5의 성평등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실제 북한의 여성들은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수많은 일상적 인권 침해와 차별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도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여성의 노동자화라는 사회주의 이념에도 불구하고 여성 노동력은 남성 노동력의 보조적 역할 정도로만 여겨지고 가정에서도 주부의 전통적 역할을 강요받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 SDG의 성평등 목표가 MDG를 포함한 기존의 노력들과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다면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무보수 노동 등 여성 인권 관련 이슈와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하여, 향후 북한의 SDG 5의 세부목표와 지표 수립 시 여성 인권 향상과 역량강화를 방해하는 구조적 문제들을 제거하는 전환적 접근을 채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물과 위생 관련 인프라 재건 및 생태계 보호에 관한 협력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SDG 6 깨끗한 물과 위생 분야는 북한이 정책적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조차 자체적 역량 부족을 인정할 정도로 성취가 미진한 분야이다. 그러나

이런 열악한 현실은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북한의 물과 위생 분야 인프라 개선을 위한 개발협력 차원의 접근 필요성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 특히 북한은 VNR 보고서 등에서 농어촌 등 지방의 낙후된 상하수도 시설 문제를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낙후된 지역의 물과 위생에 관련된 인프라 재건과 관련된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북한의 물 관련 생태계 보전 및 복원 관련 협력방안 추진 또한 시급히 필요한 분야이다. 북한은 2018년 람사르 협약에 가입한 데 이어 2022년에는 중점 습지보호지역을 선정하는 등 물 관련 생태계 보전 및 복원에 꾸준한 관심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 차원뿐 아니라 민간 차원의 남북한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생태계 보전 및 복원을 중심으로 한 남북 협력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물과 관련된 남북협력은 생태계 복원 차원뿐 아니라 재난경감 문제와도 연계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여섯째, SDG 10 불평등 완화 관련으로 농촌의 낙후성과 도농격차 극복을 위한 남북한 협력 추진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북한은 VNR 보고서에서 농촌 지원 강화 등을 통한 도농격차 감소를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계획의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 이는 농촌의 낙후성을 극복하고자 중앙집권적인 농업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 생산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북한 당국의 그간의 정책 기조와 일치되는 것이며, 북한이 사회 내에 현존하는 불평등의 현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 북한은 2021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에서 「시군발전법」을 채택하고 이듬해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는 「사회주의농촌발전법」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법 제정은 북한이 최근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 및 지방 발전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북한 당국의 도농격

차 해결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에 비추어, 농촌의 낙후성과 도농 간의 불평등 문제 해결에 대한 남북 공동의 한반도 SDG 체계를 구성하고 양측의 공동 관심사를 활용한 지표 설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그간 농업 분야 북한 지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남북 간 교류 또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유도할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또한 SDG 10 불평등 완화 관련한 데이터 확보 및 대안 지표 마련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이게도 불평등 완화와 관련된 SDGs 10은 거의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데이터 가용도도 상당히 낮은 편이다. 북한이 SDG 5와 마찬가지로 SDG 10에서 특히 인권이나 사회의 구조적 문제 관련 이슈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현 위치를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노력 차원에서 수용 가능한 지표를 파악하고 관련 지표를 북한 사회의 현실에 적합한 방식으로 수정할 수 있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SDG 14 해양생태계의 경우 해양보호구역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국제적으로 해양보호구역 자료를 관리하는 UNEP와 IUCN, 랍사르 협약 사무국 등을 통해 주기적인 해양보호구역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평가 수단을 도입하고 해양보호구역을 운영·관리하는 관계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해양보호구역 모니터링 사업은 북한 현장 방문을 수반하지만 역량강화 교육은 온라인으로도 추진가능하다. 또한 해양보호구역 중 랍사르 습지 등은 철새이동경로 상에 위치하여 한국의 랍사르 습지와 연계한 관찰과 추적도 필요하다. 한반도 해양생태계 보전 차원에서 한국과 북한의 랍사르 습지를 공동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

는 사업도 추진해 볼 만하다. 이 사업은 남북한 양자 간 환경협력 의제로 다루기보다는 ‘한반도 람사르 습지 네트워크 사업(가칭)’ 등으로 국제협력 틀 안에서 남북한이 국제기구와 함께 공동 추진하는 편이 자료협조와 기술적인 협력에서 편의성과 추진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SDG 14 지표 중 공개된 자료는 해양보호구역의 비율이 유일한 이상 미공개된 지표나 부재한 자료에 대해서는 북한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대안지표 개발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이슈는 IUU 어업, 해양기술 연구예산, 영세어업인 관련 사항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제협력사업을 제안하고 사업 범위 내에서 공개 가능한 수준의 지표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IUU 어업의 폐해와 관리 방안에 관한 교육사업, 해양기술 역량강화 사업, 수산협동조합 어가소득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사업 등이 있을 것이다. 북한에서 이러한 분야의 내부 지표를 공개하기 꺼린다면, 북한이 국제협력사업을 수용하고 이를 통해 추진된 실적이라도 해당 분야의 진전 척도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남북환경협력 추진이 가능한 여건이 조성된다면 한반도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남북 양자 간 협력 사업도 구상해볼 수 있다. 남북한의 SDG 14 세부목표와 이행지표 체계를 한반도 버전으로 통합하여 업그레이드하고 남북한이 공동으로 한반도 버전의 VNR을 발간하는 것도 상징적인 사업이 될 것이다.

라. 전략계획 지원을 통한 북한의 인도적 상황 개선 및 개발역량강화

한국 정부는 유엔과 북한 간의 차기 전략계획 수립 과정 및 이후의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유엔 차원의 대북사업은 UNCT를 중심으로 북한 당국과의 긴밀한 협의와 합의하에 진행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북한은 여러 가지 제약 요건 상 유엔시스템 하의 UNDAF 혹은 UNSDCF가 온전히 착수되기 어려운 바 이에 준하는 성격을 가진 UNSF가 마련되었다. 특히 두 번째 유엔 전략계획(2017~2021)은 유엔과 북한이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개발 분야와 인도적 지원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법(cross-cutting approaches)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인권 중심 접근법, 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 등 SDGs의 핵심 원칙들을 합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기로 합의한 전략계획은 북한의 코로나19 상황 등 여러 현실적 이유로 2022년까지 연장되었다. 2023년부터는 새로운 사업 주기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준비 과정 및 의제 논의에 정부는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331/}

2023~2027년도 전략계획이 어떠한 형태와 내용이 담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인도적 위기 대응 및 개발협력 방향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개별 전문가들이 독자적인 전문성과 접근성을 바탕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전략계획과 무관하기 보다 연동되어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우도 인도적 지원 사업은 HPC(Humanitarian Programme Cycle, 인도주의 사업

331/ UN Sustainable Development Group, <<https://unsdg.un.org/un-in-action/democratic-peoples-republic-korea>> (Accessed October 10, 2022).

주기에 따라 대상국의 세부적인 인도적 상황과 필요를 파악해 진행 된다.^{332/} IASC(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인도적 지원 기관 간 상임위원회)는 북한의 장기화된 인도적 위기 및 코로나19 등으로 HRP(Humanitarian Response Plans, 인도적 대응계획)가 마련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개발 연계 접근 방식을 고민하게 되었고, 유엔 전략계획하에서 인도적 지원 사업의 틀이자 일종의 대응 계획으로 ‘필요와 우선순위(Needs and Priorities)’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였다.^{333/}

2021년 북한의 VNR의 내용과 여기서 제시된 모든 지표들은 2020년 까지의 데이터이므로 북한의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국경을 차단하며 북한 내 상주하던 국제기구 직원들이 철수하게 되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된 2020년 12월 이후 상황은 반영되지 못했다. 즉 2년 넘게 이어져 온 북한의 고강도 방역조치로 인해 북한의 무역 및 민생활동이 제약되고 그간 유엔 기구들을 통해 진행되어 왔던 인도적 지원 사업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SDGs 이행 진척 또한 담보 상태에 있거나 퇴보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은 인도적

332/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도주의 사업 계획(Humanitarian Planning)은 HPC에 따라 인도주의 필요와 대응 분석(Humanitarian Needs and Response Analysis)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 주기는 큰 틀에서 위기의 상황, 인도적 조건, 필요의 심각성 등을 파악하는 HNO(Humanitarian Needs Overviews, 인도적 필요검토)와 이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목적, 우선순위, 대응 방식, 지표 및 모니터링 등을 도출하는 HRP가 이루어진다. 2019년 글로벌 인도주의 검토(Global Humanitarian Overview)에 따르면 북한의 경우 HRP가 아닌 Other Response Plan 차원으로 2020년 지원대상(1080만 명)과 필요재원(1억 700만 달러) 등을 확정했으나 2021년 계획은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20 DPR Korea Needs and Priorities 보고서에서는 지원필요인구가 1040만 명으로 확정되었다. OCHA, *Global Humanitarian Overview 2021* (Geneva: OCHA, 2021); OCHA, *Global Humanitarian Overview 2020* (Geneva: OCHA, 2020), p. 29; UNCT, *2020 DPR Korea Needs and Priorities* (Geneva: OCHA, 2020), p. 6.

333/ UN Country Team in DPRK, “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7~2021,” p. 9.

위기를 극복할 필요(needs)가 있음과 동시에 다방면의 영역에서는 개발협력의 수요(demands)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주지할 점은 2030 의제 추진 기한인 2030년까지의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관계로 유엔 차원의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은 더욱더 SDGs 프레임워크하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유엔 대북사업은 UNCT 내의 협업 필요성이 증대하고 상주 조정관(Resident Coordinator)의 역할이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차기 전략계획은 2030 의제 달성에 있어 중요한 시기에 마련되는 것이며 포스트 코로나19 이후 SDGs 이행을 위한 대북사업 전반의 우선순위, 사업 원칙, 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 등이 합의될 수 있으므로 한국 정부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인간안보(human security) 및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 개념이 글로벌 담론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 1990년대 중반부터임을 감안한다면,^{334/} 북한이 지속가능한 발전, 권리에 기반한 접근, 성평등에 대한 개념을 수용하여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을 아우르는 사업 원칙으로 합의했다는 것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북한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과 활용법은 일반적인 서구의 개념과 이해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 북한 사회의 특징을 고려할 때 개발의 주체에서 시장과 시민사회는 사실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국가 중심적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북한이 추구하는 발전전략이 북한 주민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1995년 이래 25여 년이 지나는 동안

334/ UNDP는 1994년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에서 처음으로 포괄적인 인간안보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David Andersen-Rodgers and Kerry F. Crawford, *Human Security: Theory and Action* (London: Rowman & Littlefield, 2018), p. 6;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1994*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pp. 24~25.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막대한 도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20년 기준 인구의 40%인 1010만 명이 식량불안정성을 겪고 있어 식량지원이 필요하며,^{335/} 41.6%에 해당하는 1070만 명이 영양부족 상태에 놓여있다.^{336/} 또한 2017년 기준 인구의 33%인 840만 명이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이 없는 상황이다.^{337/} 북한 당국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끊임없이 집착하는 동안 북한 주민의 삶은 뚜렷한 개선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에서 경제발전5개년전략이 추진되던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북한이 SDGs를 이행하고 있는 시기와 온전히 겹친다. 이 시기 북한은 어느 때 보다 경제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출하였지만 결국 기대했던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북한이 비핵화와 대외 개방을 포함하는 변혁적인 정책을 채택하지 않는 이상 북한의 경제 위기는 계속될 것이며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은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다.^{338/} 북한은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여전히 “중앙집권적이며 계획적인 자력갱생”이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선전하고 있다.^{339/} 또한 서구의 원조와 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는 여전히 부정적이며 ‘자본주의적 발전’은 착취 및 불평등 심화로 귀결될 것으로 본다.^{340/}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지속

335/ UNCT, *2020 DPR Korea Needs and Priorities*, p. 14.

336/ FAO, IFAD, UNICEF, WFP and WHO, *The Stat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the World 2022* (Rome: FAO, 2022), p. 140, p. 153.

337/ UNCT, *2020 DPR Korea Needs and Priorities*, p. 14.

338/ 김석진, “북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왜 실패했을까,”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1-06, 2021.2.24.), p. 4, <<https://www.kinu.or.kr/pyxis-api/1/digital-files/c44390e6-4772-44ce-85af-61b34d9b9745>> (검색일: 2022.10.11.).

339/ “새로운 5개년계획의 기본종자, 주체,” 『로동신문』, 2021.8.7.

340/ “《원조》와 《개발》의 미명하에 다른 나라들에 대한 일방적인 경제적 침투와 예측화정책을 강행하던 자본주의나라들의 교활한 수법은 통하지 않게 되었다,” “자본주의의 암담한 운명을 보여주는 자체목락의 심각한 징후,” 『로동신문』, 2022.1.14.

가능발전 담론과 SDGs는 북한 발전의 새로운 대안적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윌리엄 이스털리의 표현을 빌리자면 북한에서 이행되는 SDGs는 “위로부터의 강력한 행동을 강조하는” 권위주의적인 테크노크라트 유형의 정부에서 “목표 중심의 접근(a goal-based approach)”이 이루어지는 것이다.^{341/} 비판적 발전 연구자들은 양적 지표가 거버넌스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점을 지적한다.^{342/} 맑시즘 관점에서는 SDGs가 “현대의 아편”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343/} 북한의 발전 방식은 개인의 자유와 참여, 민주주의하에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발전 (free development)”보다 독재적 행태에서 이루어지는 “권위주의적 발전(authoritarian development)”에 가깝다.^{344/} 이 점에서 북한의 SDGs 이행은 상당히 독특하고 어려운 조건하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 SDGs가 정권의 정당성과 지속성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지 아니면 세계적인 불평등, 환경위기, 평화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차원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실현, 지구 보호, 사회적 포용 증진의 방향으로 설정될지는 전적으로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 다만 국제사회는 발전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는 북한 취약계층의 인권과 자유, 인간다운 삶을 향유 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북한 사회가 지속가능한 인간개발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지원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41/ William Easterly, *The Tyranny of Experts* (New York: Basic Books, 2021), pp. 124~127.

342/ SDGs의 한계 차원에서 지표중심주의와 방법론적 국가주의에 대한 논의는 황진태·백일순, 『북한의 효과적인 SDGs 이행을 위한 공간전략 탐색』 (서울: 통일연구원, 2021), pp. 38~46을 참고할 것.

343/ 사이토 고헤이 지음, 김영현 옮김,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고양: 다다서재, 2021), p. 5.

344/ William Easterly, *The Tyranny of Experts*, p. 127.

참고문헌

1. 단행본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북한연구방법론』. 서울: 한올아카데미, 2003.
- 관계부처 합동. 『제4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2021~2040 제1부』. 2021.
_____. 『제4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2021~2040 제2부』. 2021.
- 권율·최장호·유애라·최유정.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성과와 남북협력과제』. 세종: 대외정책경제연구원, 2021.
- 김병로·김성철. 『북한사회의 불평등구조와 정치사회적 함의』.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 나용우 외. 『남북 재해재난 공동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추진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21.
- 박지연 외. 『북한개발협력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서울: 오름, 2020.
- 사이토 고헤이 지음. 김영현 옮김.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고양: 다다서재, 2021.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편. 『개발협력의 세계정치』. 서울: 사회평론, 2016.
- 송철중 외. 『북한의 복지 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남북한 교류협력 방안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 아마르티아 센 지음. 정미나 옮김. 『세상은 여전히 불평등하다』. 파주: 21세기북스, 2018.
- 아마티아 센 지음. 이상호·이덕재 옮김. 『불평등의 재검토』. 서울: 한올아카데미, 1999.
- 오경섭·홍석훈·홍제환·정은미·이지순. 『북한인권백서 2021』. 서울: 통일연구원, 2021.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답으로 풀어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4) 교육 2030 안내서』.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8.
- 윤영관 편저. 『북한의 오늘』. 서울: 늘봄플러스, 2014.
- 이교덕·임순희·조정아·이기동·이영훈.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7.
- 이주영·김현주·박진아·이다혜·신희석·배연재. 『사회권의 관점에서 본 북한인권』. 서울: 통일연구원, 2017.
- 임강택. 『새로운 남북협력의 모색: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한 협력 모델』. 서울: 통일연구원, 2002.
- 장하준 지음. 형성백 옮김. 『사다리 걷어차기』. 서울: 부키, 2004.
- 제프리 삭스 지음. 이종인 옮김. 『지리 기술 제도』. 파주: 21세기북스, 2021.
- 진유강·박영실. 『SDGs 데이터 국제기구 제공체계 구축 방안 연구』. 대전: 통계청 통계개발원, 2021.
- 최규빈·박환보·이요한. 『북한의 사회불평등 연구: 건강 및 교육 불평등과 인권』. 서울: 통일연구원, 2021.
- 통계청 통계개발원.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1』. 대전: 통계청 통계개발원, 2021.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SDG 4 이행 현황 연구』.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2019.
- 현승수 외. 『한반도 평화·번영 실현을 위한 국경협력』. 서울: 통일연구원, 2019.
- 홍민 외. 『북한의 발전전략과 평화경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과 지속 가능한 발전목표』. 서울: 통일연구원, 2020.
- 홍제환·김석진.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경제정책, 대외무역, 주민생활』. 서울: 통일연구원, 2021.
- 황수환 외.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의 SDGs 소개와 지표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21.

황진태·백일순. 『북한의 효과적인 SDGs 이행을 위한 공간전략 탐색』.
서울: 통일연구원, 2021.

Andersen-Rodgers, David and Kerry F. Crawford. *Human Security: Theory and Action*. London: Rowman & Littlefield, 2018.

DPRK. *Initial Repor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December 2018.

Easterly, William. *The Tyranny of Experts*. New York: Basic Books, 2021.

_____. *The White Man's Burden: Why the West's Effort to Aid the Rest Have Done So much Ill and So Little Good*. New York: Penguin Press, 2006.

FAO, IFAD, UNICEF, WFP and WHO. *The Stat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the World 2022*. Rome: FAO, 2022.

Gieryn, Thomas. *Cultural Boundaries of Science: Credibility on the Line*.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99.

Goldin, Ian. *Development: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Lancaster, Carol. *Foreign Aid: Diplomacy, Development, Domestic Polit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7.

Lanoszka, Anna. *International Development: Socio-Economic Theories, Legacies, and Strategies*. Abingdon: Routledge, 2018.

Malthus, Thomas. *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London: J. Johnson, 1798.

OCHA. *Global Humanitarian Overview 2020*. Geneva: OCHA, 2020.

_____. *Global Humanitarian Overview 2021*. Geneva: OCHA, 2021.

- Sachs, Jeffrey D., Christian Kroll, Guillaume Lafortune, Grayson Fuller and Finn Woelm,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1: The Decade of Ac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1.
- Sachs, Jeffrey D., Guillaume Lafortune, Christian Kroll, Grayson Fuller and Finn Woelm, *From Crisis to Sustainable Development: the SDGs as Roadmap to 2030 and Beyond*,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2.
- Sachs, Jeffrey D.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2*, 2022, _____, *The Age of Sustainable Developmen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5.
- _____. *The End of Poverty: Economic Possibilities for Our Time*, New York: Penguin Press, 2005.
- Strange, Tracey and Anne Bayley, *Sustainable Development: Linking Economy, Society, Environment*, Paris: OECD, 2008.
- Thompson, Paul B. and Patricia E. Norris, *Sustainability: What Everyone Needs To Kno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1.
- UNCT, *2020 DPR Korea Needs and Priorities*, Geneva: OCHA, 2020.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1994*,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 UNESCAP, *Statistical Yearbook for Asia and the Pacific 2017: Measuring SDG progress in Asia and the Pacific: Is There Enough Data?* United Nations Publication, 2017.
- _____. *Asia and the Pacific SDG Progress Report 2021*, Bangkok: UNESCAP, 2021.

- _____. *Asia and the Pacific SDG Progress Report 2022*. Bangkok: UNESCAP, 2022.
- UNICEF. *Analysis of the Situation of Children and Wome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yongyang: UNICEF Office, 2019.
- UN Women. *A Transformative Stand-alone Goals on Achieving Gender Equality, Women's Rights and Women's Empowerment: Imperatives and Key Components*. New York: UN Women, 2013.
- Ziai, Aram. *Development Discourse and Global History*. London: Routledge, 2015.

2. 논문

- 강채연·황인엽. “북한의 발전전략과 SDGs-NDGs 이행의 시사점: SDG1 (빈곤종식)과 SDG2(기아퇴치)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9집 3호, 2021.
- 고유환. “북한연구방법론의 쟁점과 과제.” 『통일과 평화』. 제11집 1호, 2019.
- 김경희·강은애·손명아.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국가가부장제의 재생산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제55집 1호, 2016.
- 김미자.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의 현실화를 위한 일고(一考).” 『21세기정치학회보』. 제15권 2호, 2005.
- 김병로. “북한의 시장화와 계층구조의 변화.” 『현대북한연구』. 제16권 1호, 2016.
- 김수진. “SDGs 지표 데이터 이용가능성(Data Availability) 분석.” 『국제개발협력』. 제2호, 2016.
- 김석진. “북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왜 실패했을까.” 통일연구원

- Online Series CO 21-06, 2021.2.24.
- 김윤배. “울릉도 오징어 어획량 변동 특징 및 울릉도 오징어 산업 발전 방안.” 『수산해양교육연구』. 제31권 6호, 2019.
- 김정원. “북한교사가 바라보는 북한 학교교육의 의미.” 『통일교육연구』. 제13권 2호, 2018.
- 김태균·김보경·심예리. “국제개발 규범의 국내화 과정에 관한 연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한국의 국내이행 정책수립에 관하여.” 『국제·지역연구』. 제25권 1호, 2016.
- 김판석·사득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해와 개념정립.” 『한국정치학회보』. 제32권 4호, 1998.
- 김화순. “고학력 북한이탈주민이 인지하는 차별과 직업계층 변화에 대한 인식.” 『통일과 평화』. 제2집 2호, 2010.
- 김화임. “지속가능성(Nachhaltigkeit) 개념의 형성사: 18세기 독일 산림학 이론과 실제에서의 의미내용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제72권 1호, 2015.
- 박경숙. “북한 사회의 국가, 가부장제, 여성의 관계에 대한 시론.” 『사회와 이론』. 제21-1집, 2012.
- 박환보. “지속가능발전목표 관점에서 본 북한교육: 북한개발협력에 주는 시사점.” 『교육연구논총』. 제41권 2호, 2020.
- 심영희. “북한여성의 인권: 실태와 요인.” 『아시아여성연구』. 제45집 2호, 2006.
- 안인해. “김정일체제의 경제와 여성.” 『한국정치학회보』. 제35권 2호, 2001.
- 우창빈·김태균·김보경.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의 글로벌 경향성 분석: UN 자발적국별리뷰(VNR)를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제15권 2호, 2020.
- 원재천·박소영.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에 나타난 북한여성 인권.” 『비교법학』. 제61권, 2020.

- 윤인주·최재선·진희권·허재영. “북한 노동신문 키워드 분석으로 본 해양수산 분야 시사점.” 『KMI 동향분석』. 제126호, 2019.
- 윤인주. “동해 수역 중국어선 남획저지 방안.” 『이슈페이퍼』. 2021.3.26.,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2021.
- 이대성. “광복 직후 북한의 문자 정책.” 『인문과학연구논총』. 제37권 1호, 2018.
- 이미경. “경제난 이후 북한여성의 삶과 의식의 변화: 탈북 여성과의 심층면 접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제47권 2호, 2004.
- 이정삼·류정곤·기해경. “중국어선의 북한 동해수역 입어동향과 대응방향.” 『수산경영론집』. 제48권 3호, 2017.
- 이철수. “북한의 ‘녀성권리보장법’에 대한 탐색적 분석: 기존 관련 법령과 비교를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제11권 1호, 2019.
- 임수호. “북한 ‘사회주의 전면 발전론’의 의미와 시사점.” 『INSS 전략보고』. no. 158, 2022.
- 임을출.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 새천년 개발목표(MDGs) 체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2권 2호, 2013.
- 장경섭. “중국 농촌개혁의 북한에 대한 함의.” 『한국사회과학』. 제22권 3·4호, 2000.
- 장은하·문유경·조혜승·김정수·김지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독자 목표의 국내이행을 위한 지표 연구.” 『여성연구』. 제98권 3호, 2018.
- 정병호. “주체사상과 북한외교정책: 사상적 기초가 외교정책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제4권 1호, 2013.
- 정영근·장민수.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논의전개.” 『한국동서경제연구』. 제19집 1권, 2007.
- 정지웅·이철수. “북한 장애인복지정책 분석.” 『한국장애인복지학』. 제34호, 2016.

- 조은정·김태경. “김정은 시대 북한 재난 거버넌스의 특징과 대북 정책에 대한 시사점.” 동아시아연구원 Global NK 논평, 2021.10.29.
- 조정아. “김정은 시대 북한 교육정책 방향과 중등교육과정 개편.” 『통일정책연구』. 제23권 2호, 2014.
- _____. “김정일 시대의 북한 교육 정책.” 『아시아교육연구』. 제5권 2호, 2004.
- 차승주. “김정은 시대 북한 교육의 변화에 관한 소고: 1970년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1호, 2018.
- 최규빈. “글로벌 개발 규범에 대한 북한의 수용과 변용: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중심으로.” 『수은북한경제』. 가을호, 2021.
- _____.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북한연구학회보』. 제24권 1호, 2020.
- 최규빈·홍제한. “북한의 SDGs 이행 동향: ‘자발적 국별 리뷰(VNR)’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1-22, 2021.7.20.
- 최용호. “코로나19 사태와 북한 식량수급 동향과 전망.” 『KREI 농정포커스(2020. 11. 27.)』. 2020.
- 한기호. “북한 내 취약계층의 SDGs 달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방안 모색: 제3차 북한-유엔전략계획 구상을 중심으로.” 『통일연구』. 제26권 1호, 2022.
- 허문영. “북한의 대외정책 이념: 형성과 적응.” 『통일연구논총』. 제5권 1호, 1996.
- Carant, Jane Briant. “Unheard voices: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evolution in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ird World Quarterly*, vol. 38, no. 1, 2016.
- Choi, Gyubin. “Sustainability of North Korean SDGs: Current

- Status and Challenges.” *Global NK: Zoom & Connect*. EAI, 29, July, 2022.
- Cuaresma, Jesús C., Olha Danylo, Steffen Fritz, Martin Hofer, Homi Kharas and Juan C. L. Bayasl. “What Do We Know about Poverty in North Korea?” *Palgrave Communications*, vol. 6, no. 40, 2020.
- Easterly, William. “The SDGs Should Stand for Senseless, Dreamy, Garbled.” *Foreign Policy*. September 28, 2015.
- _____. “The Trouble with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Current History*. vol. 114, no. 775, 2015.
- Fukuda-Parr, Sakiko. “From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hifts in purpose, concept, and politics of global goal setting for development.” *Gender & Development*, vol 24, no. 1, 2016.
- Mensah, Justice. “Sustainable Development: Meaning, History, Principles, Pillars, and Implications for Human Action: Literature Review.” *Cogent Social Sciences*, vol. 5, no. 1, 2019.
- Park, Jaeyoon *et. al.* “Illuminating Dark Fishing Fleets in North Korea.” *Science Advances*, vol. 6, no. 30, 2020.
- Pisani, Jacobus A. Du. “Sustainable Development - Historical Roots of the Concept.” *Environmental Sciences*, vol. 3, no. 2, 2006.
- Scoones, Ian. “Sustainability.” *Development in Practice*, vol. 17, no. 4~5, 2007.
- Temmink, Ralph J. M. *et. al.* “Recovering Wetland Biogeomorphic Feedbacks to Restore the World’s Biotic Carbon Hotspots.” *Science*, vol. 376, Issue 6593, 6 May 2022.

Weber, Heloise. "Politics of 'Leaving No One Behind': Contesting the 2030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genda." *Globalizations*, vol. 14, no. 3, 2017.

Winkler, Inga T. and Margaret L. Satterthwaite. "Leaving no one behind? Persistent inequalities in the SDG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ights*, vol. 21, no 8, 2017.

3. 북한 자료

김일성. 『김일성전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리진심. "해양환경과 그 보호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 제4호, 2010.

박우일 외. 『우리나라의 자연보호지역』.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마브민족위원회, 2005.

박현경. "환경산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 『경제연구』. 제3호, 2016.

조영남. "현시기 해양자원보호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 제3호, 2014.

현순일. "해양자원의 효과적인 개발리용은 경제의 지속적발전을 위한 필수적요구." 『경제연구』. 제1호, 2016.

4. 기타 자료

〈신문·방송〉

『로동신문』.

『연합뉴스』.

『중앙일보』.

『조선중앙통신』.

『KBS뉴스』.

『SPN서울평양뉴스』.

〈웹자료〉

국립통일교육원 북한 지식사전 <<https://www.uniedu.go.kr>>.

람사르 협약 <<https://rsis.ramsar.org>>.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https://amnesty.or.kr>>.

우리민족서로돕기 <<https://ksm.or.kr>>.

외교부 <<https://www.mofa.go.kr>>.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https://www.unilaw.go.kr>>.

표준국어대사전 <<https://ko.dict.naver.com>>.

푸른 아시아 <<https://www.greenasia.kr>>.

38 North <<https://www.38north.org>>.

CFR <<https://www.cfr.org>>.

CIA <<https://cia.gov>>.

Global Fishing Watch <<https://globalfishingwatch.org>>.

HLPF <<https://hlpf.un.org>>.

Human Development Reports <<https://hdr.undp.org/>>.

SDG Index <<https://sdgindex.org/reports>>.

Sustainable Development Knowledge Platform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https://dashboards.sdgindex.org>>.

UNESCAP <<https://data.unescap.org>>.

UN SDGs <<https://sdgs.un.org>>.

UN Statistics Division <<https://unstats.un.org>>.

UN System Staff <<https://unssc.org>>.

World Bank Open Data <<https://data.worldbank.org>>.

World Health Organization <<https://www.who.int>>.

〈유엔 문서〉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ur Common Future.” UN Doc. A/42/427 (4 August 1987).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UN Doc.
A/C.2/51/SR.15 (24 October 1996).

“The Future We Want.” UN Doc. A/RES/66/288 (27 July 2012).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Doc. A/RES/70/1 (25 September 2015).

“Economic and Social Council.” UN Doc. E/HLPF/2021/5 (6~15 July
2021).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t the Subregional Level.” UN Doc. ESCAP/RFS/2022/2
(28~31 March 2022).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June,
2021.

UN Country Team in DPRK. “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7–2021.”
Pyongyang, 2016.12.20.

UN Doc. A/47/PV.16 (29 September 1992).

UN Doc. A/54/PV.14 (25 September 1999).

UN Doc. A/55/PV.17 (15 September 2000).

UN Doc. A/C.2/56/SR.7 (3 October 2001).

- UN Doc. A/C.2/57/SR.34 (14 November 2002).
- UN Doc. A/65/PV.6 (21 September 2010).
- UN Doc. A/C.2/66/SR.5 (5 October 2011).
- UN Doc. A/67/PV.20 (1 October 2012).
- UN Doc. A/68/PV.23 (1 October 2013).
- UN Doc. A/69/PV.16 (27 September 2014).
- UN Doc. A/70/PV.12 (27 September 2015).
- UN Doc. A/71/PV.17 (23 September 2016).
- UN Doc. A/74/PV.13 (30 September 2019).
- UN Doc. A/75/PV.15 (29 September 2020).
- UN Doc. A/76/PV.17 (27 September 2021).
- UNESCAP. “72nd Session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15 to 19 May 2016.
- United Nations. *Progress toward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23 July 2021~22.
- UNSDG. “United Nations Development Assistance Framework Guidance.” June 2017.
- _____.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Cooperation Framework Guidance.” June 2019.
- _____. “In Brief: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Cooperation.” January 2020.

〈자문회의〉

- 김부열. 자문회의 발표자료 (2022.2.16., 통일연구원).
- 남상민. 자문회의 발표자료 (2022.2.25., 통일연구원).
- 맹준호. 자문회의 발표자료 (2022.2.16., 통일연구원).
- 박영실. 자문회의 발표자료 (2022.5.13., 통일연구원).

Kim Heewoong(JOINT SDG FUND Report & Evaluation Manager)
인터뷰 (2022.8.3., 미국 뉴욕).

Sibanda, Amson(Chief, National Strategies and Capacity Building
Branch, Divi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
DESA) 인터뷰 (2022.8.1., 미국 뉴욕).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보고서

2020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 | | |
|------------|--|---------|
| 2020-01 | 평화경제 실현방안: 국제협력을 중심으로 | 김석진·홍제환 |
| 2020-02 | 남북한 주민 왕래 및 이주와 혼인에 관한 법적 연구 | 이규창·문선혜 |
| 2020-03 |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에 관한 연구 | 김수암 외 |
| 2020-04 | 평화-인권-발전의 트라이앵글: 이론적 검토와 분석들 | 홍석훈 외 |
| 2020-05 | 중·러 협력과 한반도 평화·번영 | 현승수 외 |
| 2020-06 | 한반도 평화번영과 북일관계 연구 | 이기태 외 |
| 2020-07 |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정치적 배경과 법적 기반 분석 | 민태은 외 |
| 2020-08 | 남북기본협정 체결방향과 과제 | 도경옥 외 |
| 2020-09 | 남북연합 구상과 추진방안 | 이무철 외 |
| 2020-10 | 새로운 한반도 구상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 김갑식 외 |
| 2020-11 | 평화공감대 확산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 박주화 외 |
| 2020-12 |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 정성윤 외 |
| 2020-13 |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 정은이 외 |
| 2020-14 |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 나용우 외 |
| 2020-15 | 해외의 시각으로 본 신남방·신북방정책의 평가와 과제 | 나용우 외 |
| 2020-16 |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 박주화 외 |
| 2020-16-01 |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문항별 분석 | 박주화 |
| 2020-16-02 |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문항별 테이블 | 박주화 |
| 2020-17 | '통일에 대한 태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 박주화 외 |
| 2020-18 | 평화경제의 비전과 추진방향: 남북 육상·해양협력을 중심으로 | 서보혁 외 |
| 2020-19 | 국제 평화경제 사례와 한반도 | 조한범 외 |
| 2020-20 | 북한의 발전전략과 평화경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 홍 민 외 |
| 2020-21 | 강대국 경쟁과 관련국의 대응: 역사적 사례와 시사점 | 신중호 외 |
| 2020-22 | 북한의 인구변동: 추세, 결정요인 및 전망 | 홍제환 외 |
| 2020-23 |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인구구조 변화 연구 | 최창호 외 |
| 2020-24 | '지식경제시대' 북한의 대학과 고등교육 | 조정아 외 |
| 2020-25 | KINU 통일외식조사 2020: 주변국 인식 비교연구 | 이상신 외 |
| 2020-26 | 김정은 정권 통치담론과 부문별 정책 변화: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담화·연설 분석 | 오경섭 외 |

〈정책연구시리즈〉

- 2020-01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인도협력 이규창 외
- 2020-02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분석과 국내외 정책 전망 민태은 외

〈Study Series〉

- 2020-01 The Peace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Legal Issues and Challenges
Do, Kyung-ok · Ahn, Jun-hyeong
- 2020-02 Variables and Pathways of Changes in North Korea:
Focused on Different Combination of 'Nuclear Issues' and 'Reform · Opening'
Park, Young-Ja · Jeong, Eun Mee · Han, Ki Bum
- 2020-03 Daily Lives of North Korean Women and Gender Politics
Cho, Jeong-ah · Yee, Ji Sun · Yi, Hee Young
- 2020-04 2019 Annual Reports of Attitude of Koreans toward Peace and Reconciliation
Park, Juhwa et al.

2021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 2021-01 남북 민생협력의 효율적 추진방안: 추진체계, 사업기획 및 성과관리 김석진 · 홍제환
- 2021-02 북한의 사회불평등 연구: 건강 및 교육 불평등과 인권 최규빈 외
- 2021-03 국가상징의 문화적 형상과 북한의 브랜드 전략 이지순 외
- 2021-04 남북 지식협력: 현황 및 추진방향 김수암 외
- 2021-05 유네스코 공동등재를 활용한 남북 문화유산협력 이우태 외
- 2021-06 미국의 평화정책과 전망: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한미관계 민태은 외
- 2021-07 평화 · 통일 공공외교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의 역할과 개선방안: 주변 4국을 중심으로 전병근 외
- 2021-08 동아시아 평화 · 번영을 위한 비전통 안보 협력 이재영 외
- 2021-09 국제협력 성패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 연구 정성운
- 2021-10 북한의 정보화와 주민생활 변화 정은미 외
- 2021-11 김정은 지배체제 구축과 권력 안정화 오경섭 외
- 2021-12 김정은 정권의 핵 외교와 대외정책 변화 김진하 외
- 2021-13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경제정책, 대외무역, 주민생활 홍제환 · 김석진
- 2021-14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정책: 복지와 통제를 중심으로 정은미 외
- 2021-15 KINU 통일외식조사 2021: 통일 · 북한 인식의 새로운 접근 이상신 외
- 2021-16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의 SDGs 소개와 지표분석 황수환 외
- 2021-17 남북 재해재난 공동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추진방향 나용우 외

| | |
|--|-------|
| 2021-18 남북 접경지역 재해·재난 대응력 제고를 위한 ‘방재전이공간(TSDP)’ 조성방안 기본 연구 | 김형수 외 |
| 2021-19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I: 여성과 섹슈얼리티 | 박영자 외 |
| 2021-20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II: 모성과 양육 | 이윤진 외 |
| 2021-21 평화의 인권·발전 효과와 한반도 | 서보혁 외 |
| 2021-22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대응: 역사적 사례와 시사점 | 신중호 외 |
| 2021-23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주변국 협력 방안 | 이기태 외 |
| 2021-24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일본의 대한민국 협력 방안 | 최희식 외 |
| 2021-25 세계질서의 재편과 신한반도체제 | 박은주 외 |
| 2021-26 북한발전모델과 한반도 컨센서스 | 이재영 외 |
| 2021-27 한반도 군비경쟁과 평화정착 | 장철운 외 |
| 2021-28 한반도 생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협력 방향 모색 | 최지영 외 |
| 2021-29 북한 일상생활 공동체의 변화 | 최지영 외 |
| 2021-30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 김감식 외 |
| 2021-31-01 평화공감대 확산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 박주화 외 |
| 2021-31-02 2021 한국인의 평화의식 | 박주화 외 |
| 2021-32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 이무철 외 |
| 2021-33 한반도 신경제구상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 정은이 외 |
| 2021-34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 조한범 외 |

〈정책연구시리즈〉

| | |
|--|---------|
| 2021-01 2020년 미 대선 이후 한미관계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 | 이상신 외 |
| 2021-02 북한의 효과적인 SDGs 이행을 위한 공간전략 탐색: 접경지역 산림특구안을 중심으로 | 황진태·백일순 |
| 2021-03 한중 보건 협력과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활성화 방안 | 황태연 |
| 2021-04 통일공공외교 수요조사 | 이상신·이재원 |

〈Study Series〉

| | |
|---|--|
| 2021-01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 Suk-Jin Kim |
| 2021-02 North Korea’s Income-Population Puzzle | Jea Hwan Hong·Suk-Jin Kim |
| 2021-03 North Korea’s College and University and Higher Education System in an ‘Era of Knowledge Economy’ | Jeong-ah Cho·Choon Geun Lee·Hyun-suk Oum |
| 2021-04 A Study on the Access to In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People | Soo-Am Kim et al. |

2022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 | |
|---|---------|
| 2022-01 기후변화와 북한인권: 실태 및 협력방안 -SDGs 매개의 남북인권협력 관점에서- | 이규창 외 |
| 2022-02 북한 국영기업 현대화를 위한 남북협력 방안 | 김석진·홍재환 |
| 2022-03 북한 게임의 문화융합: 게임산업, 콘텐츠, 경험 | 이지순·최선경 |
| 2022-04 북한의 SDGs 이행 현황 및 지표 분석 | 최규빈 외 |
| 2022-05 해외사례를 통해 본 남북 접경협력의 추진 방향과 전략 | 나용우 외 |
| 2022-06 2022 접경지역주민 인식조사 | 나용우·이우태 |
| 2022-07 남북 지역교류 활성화 방안: 북한의 새로운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 정은이·이해정 |
| 2022-08 북한의 중산층 | 정은미 외 |
| 2022-09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정책: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 민태은·박동준 |
| 2022-10 북한의 코로나19 대응과 국제사회의 대북협력 | 황수환·권재범 |
| 2022-11 체제전환국 국가·종교 관계와 북한에 대한 함의 | 현승수 외 |
| 2022-12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전략 | 조한범 외 |
| 2022-13 한반도 외교안보 환경 변화와 평화·비핵 체제 모색 | 김상기 외 |
| 2022-14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남북관계 인식과 협력 모색 | 이무철 외 |
| 2022-15 포스트-코로나 시대 동북아 군비경쟁과 한반도 안보 협력 | 장철은 외 |
| 2022-16 북핵 도전요인과 국제협력 | 정성윤 외 |
| 2022-17 비핵화 합의와 이행의 법·제도적 문제: 주요 비핵화 사례를 중심으로 | 도경욱 외 |
| 2022-18 사진평 시대 중국의 핵심이익과 한반도 평화·번영 | 이재영 외 |
| 2022-19 발전의 평화·인권 효과와 한반도 | 서보혁 외 |
| 2022-20 KINU 통일인식조사 2022 | 박주화 외 |
| 2022-21 팬데믹 시대 정책 환경 변화와 북한의 대응 | 황진태 외 |
| 2022-22 동북아 정세 변화와 북한의 전략적 선택: 미중 경쟁구도의 전개와 북한의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 김진하 외 |
| 2022-23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재정금융 제도 변화 | 최지영 외 |
| 2022-24 북한의 전략국가론과 핵무기 고도화 | 홍 민 |
| 2022-25 북한 미래세대를 위한 개발협력 구상: 해외 사례와 시사점 | 홍재환 외 |
| 2022-26 미중 전략경쟁시대 한국의 복합대응전략 | 김갑식 외 |
| 2022-27 북한 주민의 생활세계(life-world): 이론과 방법론 | 박영자 외 |
| 2022-28 2022 북한 공식시장 현황 | 홍 민 외 |

<정책연구시리즈>

| | |
|--|-------|
| 2022-01 중국 20차 당대회 분석과 한반도에 주는 함의 | 전병곤 외 |
| 2022-02 동아시아 다중 안보 위기 속 북한의 비대칭전력 증강이 가지는 의미 | 박은주 |
| 2022-03 2022년 미국 중간선거와 정당별 정책 전망 | 민태은 외 |

| | |
|------------------------------------|-------|
| 2022-04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국정과제 추진방향 | 한동호 외 |
| 2022-05 북한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론과 대북안전보장 방안 | 홍 민 외 |

〈Study Series〉

| | |
|--|-------------------------|
| 2022-01 An Assessment of the Last Decade of the Kim Jong-un Regime | Hyeong-Jung Park et al. |
| 2022-02 The Cultural Meaning of North Korea's National Symbols and Its Branding Strategy | Ji Sun Yee et al. |
| 2022-03 The Restructuring of the World Order and a New Korean Peninsula System | Eun Joo Park et al. |
| 2022-04 The Arms Race and Peac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 Cheol-wun Jang et al. |
| 2022-05 Exploring Inter-Korean Cooperation for the Formation of a Life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 Ji Young Choi et al. |

KINU Insight

| | |
|---|-------|
| 2020-01 북한의 제7기 제5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분석과 정세 전망 | 홍 민 외 |
| 2020-02 평화의 경제적 가치: 2018 남북 간 주요 군사합의를 중심으로 | 장철운 |
| 2020-03 미국의 對北성공 관계정상화 프로세스와 대북정책 | 김유철 |
| 2020-04 대북제재 강화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 북중무역 감소의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 최지영 |
| 2021-01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 | 홍 민 외 |
| 2021-02 김정은 시대 주요 전략·정책용어 분석 | 홍 민 외 |
| 2021-03 2014~2020년 북한시장의 소비자물가 및 환율 변동: 추세, 특징, 시사점 | 최지영 |
| 2022-01 김정은 시대의 북한: 10년 평가와 2022년도 전망 | 홍제환 외 |
| 2022-02 2022 북핵 도전요인 전문가 인식조사 | 정성윤 외 |

북한인권백서

| | |
|---|-------|
| 북한인권백서 2020 | 이규창 외 |
|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0 | 이규창 외 |
| 북한인권백서 2021 | 오경섭 외 |
|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1 | 오경섭 외 |
| 북한인권백서 2022 | 이우태 외 |

연례정세보고서

| | | |
|------|----------------|-------|
| 2020 | 2021 한반도 정세 전망 | 통일연구원 |
| 2021 | 2022 한반도 정세 전망 | 통일연구원 |
| 2022 | 2023 한반도 정세 전망 | 통일연구원 |

정기간행물

| | |
|--|--|
| 통일정책연구, 제29권 1호 (2020) |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9, No. 1 (2020) | |
| 통일정책연구, 제29권 2호 (2020) |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9, No. 2 (2020) | |
| 통일정책연구, 제30권 1호 (2021) |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30, No. 1 (2021) | |
| 통일정책연구, 제30권 2호 (2021) |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30, No. 2 (2021) | |
| 통일정책연구, 제31권 1호 (2022) |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31, No. 1 (2022) | |
| 통일정책연구, 제31권 2호 (2022) |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31, No. 2 (2022) | |

기타

| | | |
|------|---|------------|
| 2020 | 동서 화해사상으로 본 통일공동체의 상과 과제 | 김범수 외 |
| 2020 | DMZ 접경지역의 비평화 실태에 관한 인문학적 연구: 전략촌을 중심으로 | 정근식 외 |
| 2021 | 국제 평화문서 번역집 | 서보혁·용혜민 엮음 |
| 2022 | 2022 KINU 북한도시포럼 발표집: 「육망의 모노리스, 김정은 집권 10년 북한도시변화」 | 홍 민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s://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kinu.or.kr

북한의 SDGs 이행 현황 및 지표 분석

